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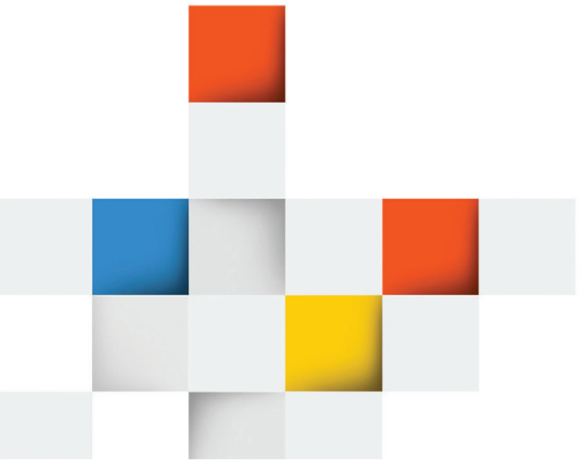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sri.kostat.go.kr

2019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9

http://sri.kostat.go.kr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를 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 국민 생활의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분야별 주요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종합사회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9」는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별 '주요 동향 1편'과 '시의성 있는 주제(issues)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주제는 우리 사회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별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가용한 사회지표와 승인통계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과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을 이야기 방식(story telling)으로 서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이며, 우리 삶의 질적 수준과 이를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 우리사회 현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의 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영역별 원고 작성을 맡은 집필진 및 편집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통계청장 강 신 욱

머 리 말

지난 2015년 미국 타임지는 표지기사로 그 해 태어난 아이들이 142년을 살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선 지난 142년을 돌아보자. 142년 전이면 신미양요(1871)와 강화도조약(1876) 사이 개화기에 해당한다. 이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망국과 식민지, 해방과 전쟁을 거쳐 본격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경험했으니,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인 셈이다. 앞으로 142년 후면 2157년이다. 이런 세상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익숙한 삶은 어떻게 바뀔까. 아마도 지금까지 겪은 142년보다 훨씬 격심한 변화가 놓여 있을 것이다. 미래는 더 이상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알면, 적어도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준비는 가능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고된 삶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삶의 질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변화의 동향이 그려낸 흔적을 정확히 읽어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읽고 대비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을 알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점증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빅데이터의 시대, 정보가 넘쳐나지만, 여전히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동향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일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는 「한국의 사회동향」이 현재의 형식과 내용으로 발간된 지 열두 해째다. 지난 12년간 「한국의 사회동향」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틀이 잡혔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동향 2019」는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 개관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에 집중하는 주제 논문을 2편씩을 수록했다. 예년과 같은 방식이다. 주요 동향 논문을 읽으면 해당 영역의 주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주제 논문을 읽으면 선정된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9」는 새로운 독자에게는 독립된 한 권의 보고서로 읽힌다. 주요 동향 논문의 내용은 틀을 바꾸지 않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했다. 한 해 만에 사회의 주요 동향이 크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제 논문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찾아 역동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게 했다. 주제 발굴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영역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제의 시의성, 타당성,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주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집필진을 섭외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구 영역에서는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와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를 주제로 선정했다. 가족과 가구 영역에서는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과 늘어나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주제로 삼았다. 건강 영역에서는 점증하는 '건강불평등'과 '흡연과 음주 실태'를,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 경쟁과 행복',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를 다루었다. 노동 영역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의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과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을 다루었다.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겨난 사회 · 복지재정의 수혜 분포와 소득재분배의 문제,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삼았다.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과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다루었다.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은 모두 흥미로운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제다. 올해 환경 영역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미세먼지의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지구환경과학의 관점에서 다루었고,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분석을 통해 온라인 공론장의 명암에 대해 조명하였다. 안전 영역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을 점검하고,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에 주목하였다. 사회통합영역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이 어떤 양상인지 검토했다.

연례 보고서가 12년차를 맞게 되면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과거에 다루었던 이슈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만큼 반복해서 다루더라도, 주제를 대하는 시각을 달리하거나, 포괄 영역을 확대하는 등으로 분석하여 내용상의 중첩을 피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객관적 통계치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변화의 이면에 자리 잡은 '사회동향'을 포착하여 드러내는 친절한 서술형 보고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보고서는 집필을 담당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평소 데이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왔고, 보고서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동의하고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제기된 연구진과 논평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고를 완성했다. 몇 몇 필자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분석틀을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과정을 수용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청이 산출하거나 승인한 자료 혹은 국제기구가 수집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료 등 가용한 최고 품질의 자료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서들과 차별화된다. 국가승인통계를 기본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기관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들만 활용하였다. 매년 확인되는 바지만, 경성자료보다는 연성자료가, 경제통계보다는 사회통계가 더 많이 수집되고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한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학계와 정부 모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고도성장과 민주화 이후 '풍요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을 겪는다고 이야기된다.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나, 다양한 삶의 질 관련 지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한경혜 교수(가족과 가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 영역 담당),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과 소비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문화와 여가 영역 담당), 서울대의 장수은 교수(주거와 교통 영역 담당),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의 김종호 연구위원(환경 영역 담당),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연구위원(안전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이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조환석 사무관과 최성은 주무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정병은 객원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최문희 실장과 이상운 실장이 하였고, 통계 검증 및 원고 교정은 동 자료원의 반미희, 한아름, 허혜옥 연구원이 하였으며, 동 자료원의 김혜진 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홍리안 연구원이 각각 연구간사직과 연구보조원을 맡았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욱 통계청장과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 재 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목 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유삼현 | 동국대학교 36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유정균 | 한양대학교, 김두섭 | 한양대학교 45

Ⅱ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56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한경혜 | 서울대학교 69

1인가구의 삶의 질 변미리 | 서울연구원 78

Ⅲ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0

건강불평등 강영호 | 서울대학교 101

흡연과 음주 실태 조병희 | 서울대학교 110

Ⅳ 교육 Education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22

교육 경쟁과 행복 김희삼 | 광주과학기술원 134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김경근 | 고려대학교 143

Ⅴ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56

노동시간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 165

권현지 | 서울대학교 174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

Ⅵ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86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 · 복지재정지출의 수혜분포 및 소득재분배 195

성명재 | 홍익대학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전영준 | 한양대학교 202

Ⅶ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12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0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정용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9

Ⅷ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40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박인권 | 서울대학교 250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 서울대학교 261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70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김정훈 | 서울대학교 279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이원재 | 한국과학기술원 286

Ⅹ 안전 Safety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 306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민수홍 | 경기대학교 313

Ⅺ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24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 준 | 연세대학교 337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석호 | 서울대학교 347

부록 용어해설 357

표 목차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8 25
표 Ⅰ-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29
표 Ⅰ-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31
표 Ⅰ-4 사망원인 순위, 2008–2018 32
표 Ⅰ-5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8 33
표 Ⅰ-6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 비율, 1960–2067 37
표 Ⅰ-7 초등학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1995–2018 41
표 Ⅰ-8 가구구조의 변화, 2017–2047 42
표 Ⅰ-9 사망원인 순위(1–10위)와 사망률, 1988–2018 48
표 Ⅰ-10 연령집단별 5대 사망원인 및 사망률, 2018 49
표 Ⅰ-11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 2015 50
표 Ⅰ-12 성 및 교육수준별 사망률, 2015 51
표 Ⅰ-13 중고령자의 연령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8 52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47 57
표 Ⅱ-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18 61
표 Ⅱ-3 지역별 주거취약 청년 1인가구 비율, 2016 84
표 Ⅱ-4 1인가구의 성 및 연령집단별 사회 활동 참여율, 2015 85
표 Ⅱ-5 전체 가구와 1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2017 86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8 94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7 95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수, 2000–2017 96
표 Ⅲ-4 OECD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 2016 100
표 Ⅲ-5 성 및 연령집단별 현재흡연율, 1998–2017 111
표 Ⅲ-6 성 및 연령집단별 고위험음주율, 2005–2017 115
표 Ⅲ-7 성별 간경변, 교통사고 및 암 사망의 알코올 기인도, 2016 118

표 Ⅳ-1 성별 중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8 130
표 Ⅳ-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7 132

표 Ⅴ-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8, 2019.2/4 157
표 Ⅴ-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8, 2019.2/4 158
표 Ⅴ-3 근속기간 및 사업체 규모별 계약만료자의 지위이동, 2018 159
표 Ⅴ-4 임금노동자의 월간 근로시간, 2011–2018 160
표 Ⅴ-5 취업시간별 취업자 구성비율, 2010–2019.2/4 160
표 Ⅴ-6 협약임금인상률, 2010–2018 161
표 Ⅴ-7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상대임금, 2017, 2018 162

표 V-8 임금노동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8 163
표 V-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노동조합 가입 자격별 분포, 2018 164
표 V-10 월평균 노동시간, 2011–2018 168
표 V-11 취업시간대별 노동자 분포, 2017.8 – 2018. 8 171
표 V-12 기업규모, 직종 및 고용형태별 초단시간 및 초장시간 노동자 비중, 2018 172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7 188
표 VI-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6, 2017 189
표 VI-3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1, 2017 194
표 VI-4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016–2018 206
표 VI-5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 2016, 2018 207

표 VII-1 문화예술시설수, 2010–2018 213
표 VII-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3–2017 213
표 VII-3 주요 여가활동 참여 여부별 행복점수, 2016, 2018 225
표 VII-4 여가자원별 충분도에 따른 행복점수, 2016, 2018 225
표 VII-5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별 행복점수, 2016, 2018 226
표 VII-6 일–여가 균형 정도별 행복점수, 2016, 2018 226
표 VII-7 여가생활 만족도별 행복점수, 2016, 2018 226
표 VII-8 연령집단별 하루 평균 TV와 스마트폰 이용시간, 2013, 2018 232
표 VII-9 연령집단별 필수 매체 인식, 2013, 2018 232
표 VII-10 연령집단별 매체이용 행태, 2014, 2018 233
표 VII-11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이용 장소, 2018 236

표 VIII-1 주택보급률, 2005–2017 241
표 VIII-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18 241
표 VIII-3 주택 만족도, 2012–2018 242
표 VIII-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18 243
표 VIII-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18 243
표 VIII-6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18 244
표 VIII-7 자동차 등록 대수, 2000–2018 244
표 VIII-8 도로연장, 2000–2018 245
표 VIII-9 버스업체 수, 보유 대수 및 종사자 수, 2000–2018 245
표 VIII-10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246
표 VIII-11 평균 통학시간, 2000–2015 246
표 VIII-12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18 247
표 VIII-13 소득분위별 교통비 지출액, 2017–2018 247
표 VIII-1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8 248
표 VIII-15 겨울 · 봄철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발령 횟수 및 발령 시간, 2015–2017 261
표 VIII-16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2008–2016 262
표 VIII-17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구성비율, 2016 262

표 Ⅷ-18 차량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263
표 Ⅷ-19 차종별 경유차 등록대수와 비율, 2019. 6. 265
표 Ⅷ-20 차종별 노후 차량 비율, 2019. 6. 265
표 Ⅷ-21 친환경 차량 신규 등록대수, 2014–2019 266
표 Ⅷ-22 차종별 친환경차 대수, 2019. 5. 266

표 Ⅸ-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7 271
표 Ⅸ-2 지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 및 횟수, 2017 272
표 Ⅸ-3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7–2016 273
표 Ⅸ-4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7 275
표 Ⅸ-5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7 275
표 Ⅸ-6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8 276
표 Ⅸ-7 환경분야 예산, 1995–2017 277
표 Ⅸ-8 환경보호지출, 2004–2016 277
표 Ⅸ-9 지역 및 성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278
표 Ⅸ-10 자동차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험 결과, 2009, 2015 284
표 Ⅸ-11 원자력 관련 트위터 주요 이슈와 글을 많이 작성한 상위 10개 계정 속성, 2016.11–2017. 5 288
표 Ⅸ-12 트위터에 원자력 관련 글을 많이 작성한 상위 10개 계정 속성 및 트윗 수, 2017.12 – 2018. 5 290

표 Ⅹ-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08–2017 303
표 Ⅹ-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4–2018 304
표 Ⅹ-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8 304
표 Ⅹ-4 연령집단별 사고 사망률, 2018 309
표 Ⅹ-5 연령 및 낙상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6 310
표 Ⅹ-6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 2012 310
표 Ⅹ-7 장애인 대상 사고유형별 구조 건수, 2009–2013 311
표 Ⅹ-8 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 2008–2017 314
표 Ⅹ-9 연령별 소년 형법범죄자율, 2008–2017 316
표 Ⅹ-10 흉악범죄유형별 소년 형법범죄자 수, 2008–2017 318
표 Ⅹ-11 소년 형법범죄자의 처분 결과, 2008–2017 320

표 Ⅺ-1 연령대별 정치적 비효능감, 2013, 2018 327

그림 목차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 2020, 2067 26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8 28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8 29
그림 I-4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2018 30
그림 I-5 연령집단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2018 32
그림 I-6 수도권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의 시도별 분포, 2010–2015 34
그림 I-7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35
그림 I-8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 37
그림 I-9 생산연령인구와 45–49세 인구, 1960–2067 38
그림 I-10 OECD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 2015, 2065 38
그림 I-11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2009–2017 39
그림 I-12 학교급별 학령인구, 1960–2067 40
그림 I-13 OECD 주요 국가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005, 2017 41
그림 I-14 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 비율, 2000–2047 43
그림 I-15 1인가구의 연령구성, 2000–2047 43
그림 I-16 OECD 주요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44
그림 I-17 성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83–2018 46
그림 I-18 성 및 연령별 사망자 구성비율, 1988–2018 46
그림 I-19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1996–2018 47
그림 I-20 OECD 주요 국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0, 2016 47
그림 I-21 성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1983–2018 49
그림 I-22 시도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8 51
그림 I-23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지역 편차, 2018 52
그림 I-24 중고령자의 성별 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3–2018 53
그림 I-25 중고령자의 성별 치매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3–2018 53
그림 I-26 중고령자의 성별 자살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3–2018 54

그림 II-1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8 57
그림 II-2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가구 구성, 1990–2018 58
그림 II-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8 59
그림 II-4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5–2015 60
그림 II-5 40–5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5–2015 60
그림 II-6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18 61
그림 II-7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62
그림 II-8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8 63
그림 II-9 성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8 63
그림 II-10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2008–2018 64
그림 II-11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18 64

그림 Ⅱ-1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18 65
그림 Ⅱ-13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2002–2018 66
그림 Ⅱ-14 성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998–2018 66
그림 Ⅱ-15 성별 부부 관계 만족도, 1998–2018 67
그림 Ⅱ-16 연령집단별 부부 관계 만족도, 1998–2018 67
그림 Ⅱ-17 노인의 부모 · 자녀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 제공 비율, 2017 70
그림 Ⅱ-18 중고령자의 부모 ·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공 비율, 2008–2016 71
그림 Ⅱ-19 중고령자의 연령집단별 부모 ·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공비율, 2016 71
그림 Ⅱ-20 지원대상별 노인의 간병 · 수발 · 병원동행 지원 제공 비율, 2017 72
그림 Ⅱ-21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 비율, 2006–2016 72
그림 Ⅱ-22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6 73
그림 Ⅱ-23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의 수발대상별 분포, 2016 73
그림 Ⅱ-24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의 성 및 수발대상별 분포, 2016 74
그림 Ⅱ-25 손자녀 돌봄 노인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7 75
그림 Ⅱ-26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손자녀 돌봄 비율, 2006–2016 75
그림 Ⅱ-27 손자녀 돌봄 중고령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6 76
그림 Ⅱ-28 중고령자의 주당 손자녀 돌봄시간, 2008–2016 76
그림 Ⅱ-29 1인가구 수와 비율, 1990–2018 79
그림 Ⅱ-30 한국, 일본, 미국 및 북유럽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79
그림 Ⅱ-31 1인가구의 성 및 연령 분포, 2000, 2018 80
그림 Ⅱ-32 1인가구의 혼인상태 분포, 2000, 2015 81
그림 Ⅱ-33 1인가구의 시도별 분포, 2018 82
그림 Ⅱ-34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 분포, 2018 82
그림 Ⅱ-35 1인가구의 취업상태, 2018.10. 83
그림 Ⅱ-36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 2018.10. 83
그림 Ⅱ-37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거처의 종류, 2000–2018 84
그림 Ⅱ-38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구원의 주관적 만족감, 2013–2017 86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7 90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8 92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건수, 2001–2018 92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7 92
그림 Ⅲ-5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7 93
그림 Ⅲ-6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7 95
그림 Ⅲ-7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8 96
그림 Ⅲ-8 종별 병원수, 2001–2018 97
그림 Ⅲ-9 인구 1,000명당 병상수, 2001–2017 97
그림 Ⅲ-10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횟수, 1990–2018 98
그림 Ⅲ-1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7 98
그림 Ⅲ-12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8 98
그림 Ⅲ-13 국내외 건강 분야 주요 논문DB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다룬 논문 수, 1990–2018 102

그림 Ⅲ-14 25–64세 성인 남녀의 교육수준별 사망률, 1970–2010 103
그림 Ⅲ-15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2004–2017 103
그림 Ⅲ-16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전망, 2018–2030 104
그림 Ⅲ-17 시군구별 기대수명, 2010–2015 105
그림 Ⅲ-18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2010–2015 105
그림 Ⅲ-19 시군구별 건강수명, 2008–2014 106
그림 Ⅲ-20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 2008–2014 107
그림 Ⅲ-21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 2015 107
그림 Ⅲ-22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 2010–2015 108
그림 Ⅲ-23 주요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수준 소득 5분위 간 격차, 2017 109
그림 Ⅲ-24 성별 현재흡연율, 1998–2017 111
그림 Ⅲ-25 성 및 소득계층별 현재흡연율, 1998–2017 112
그림 Ⅲ-26 시도별 현재흡연율, 2008, 2018 113
그림 Ⅲ-27 성별 청소년 현재흡연율, 2005–2018 113
그림 Ⅲ-28 OECD 주요국의 성별 매일흡연율, 2017 114
그림 Ⅲ-29 성별 월간음주율, 2005–2017 114
그림 Ⅲ-30 성별 고위험음주율, 2005–2017 115
그림 Ⅲ-31 성 및 소득계층별 고위험음주율, 2017 115
그림 Ⅲ-32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2008, 2018 116
그림 Ⅲ-33 월간 음주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주간 알코올 섭취량, 2018 116
그림 Ⅲ-34 OECD 주요국의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 2017 117
그림 Ⅲ-35 월간 음주자의 성별 과음 유발 음주 상황, 2018 117
그림 Ⅲ-36 남성 월간 음주자의 음주폐해 경험률, 2018 119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18 123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8 124
그림 Ⅳ-3 연령집단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0–2018 125
그림 Ⅳ-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8 126
그림 Ⅳ-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8 126
그림 Ⅳ-6 중 · 고등학생 교육내용 만족도, 2008–2018 127
그림 Ⅳ-7 중 · 고등학생 교육방법 만족도, 2008–2018 128
그림 Ⅳ-8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2018 128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 2017 129
그림 Ⅳ-10 PISA 수학 성취도의 학업탄력성, 2006–2015 131
그림 Ⅳ-11 '스트레스', '시험', '자퇴'의 인터넷 검색 빈도, 2016–2018 134
그림 Ⅳ-12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2017 135
그림 Ⅳ-13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인식별 행복도, 2017 136
그림 Ⅳ-14 중 · 고등학생의 생활영역별 스트레스 정도, 2012, 2018 137
그림 Ⅳ-15 중 · 고등학생의 자살 충동 이유, 2012, 2018 137
그림 Ⅳ-16 중 · 고등학생이 고민하는 주된 문제, 2012, 2018 138
그림 Ⅳ-17 중 ·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2012, 2018 138

그림 Ⅳ-18 중 ·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 목적, 2012, 2018 139
그림 Ⅳ-19 중 · 고등학생의 고민 상담 대상, 2012, 2018 140
그림 Ⅳ-20 중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영역별 만족도, 2012, 2018 141
그림 Ⅳ-2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2018 141
그림 Ⅳ-2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2018 142
그림 Ⅳ-23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2007–2018 144
그림 Ⅳ-24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2007–2018 145
그림 Ⅳ-25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18 145
그림 Ⅳ-26 부모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2012–2018 146
그림 Ⅳ-27 한국과 대만의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07–2018 147
그림 Ⅳ-28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율, 2011–2016 148
그림 Ⅳ-29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주지역별 학교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율, 2012–2016 149
그림 Ⅳ-30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성취동기, 2011–2016 149
그림 Ⅳ-31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삶의 만족도, 2011–2016 150
그림 Ⅳ-32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신체만족도, 2011–2016 150
그림 Ⅳ-33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주지역별 사회적 위축, 2012–2016 151
그림 Ⅳ-34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친한 친구 수, 2011–2016 152
그림 Ⅳ-35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국적에 대한 인식, 2011–2016 152
그림 Ⅳ-36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한국인 정체성, 2011–2016 153
그림 Ⅳ-37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주지역별 다문화 수용성, 2012–2016 154

그림 Ⅴ-1 임금근로자의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성비율, 2015–2018 159
그림 Ⅴ-2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 및 근로형태별 구성비율, 2015–2018 160
그림 Ⅴ-3 직종별 월 임금총액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17, 2018 161
그림 Ⅴ-4 성 및 임금분위별 임금근로자 분포, 2006–2018 162
그림 Ⅴ-5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04–2018 163
그림 Ⅴ-6 노사분규 건수, 2010–2018 164
그림 Ⅴ-7 국가그룹별 주당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분포, 2017 166
그림 Ⅴ-8 근로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및 증감, 2004–2018 167
그림 Ⅴ-9 특례관련 업종 및 기업규모별 주당 노동시간 및 초장시간 근로자 비율, 2017, 2018 168
그림 Ⅴ-10 산업 및 직종별 주당 노동시간, 2017, 2018 169
그림 Ⅴ-11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및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2017, 2018 169
그림 Ⅴ-12 임금근로자의 성, 종사상지위 및 임금분위별 주당 노동시간, 2017, 2018 170
그림 Ⅴ-13 취업시간대별 노동자 분포, 2015–2019 171
그림 Ⅴ-14 비임금노동자 수, 1963–2018 175
그림 Ⅴ-15 비임금노동자 비율, 1963–2018 175
그림 Ⅴ-16 OECD 국가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2018 176
그림 Ⅴ-17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수, 1980–2018 176
그림 Ⅴ-18 여성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 비율, 1981–2018 177
그림 Ⅴ-19 50세 이상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 비율, 1981–2018 177
그림 Ⅴ-20 고학력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 비율, 1981–2018 178

그림 V-21 자영업자의 산업구성, 1981–2018 178
그림 V-22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2000–2017 179
그림 V-23 자영업자 및 상용노동자의 월 소득 및 시간당 소득, 2000–2017 179
그림 V-24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소득분위별 소득 분포, 2017 180
그림 V-25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2000–2017 180
그림 V-26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의 건강상태, 2003–2017 181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7 187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7 188
그림 VI-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6 189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7 190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7 190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7 191
그림 VI-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7 192
그림 VI-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7 192
그림 VI-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0, 2018 193
그림 VI-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8 193
그림 VI-11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1995–2014 196
그림 VI-12 노인인구 비율, 1990–2067 197
그림 VI-13 소득분위별 노인가구 비율, 2007–2015 197
그림 VI-14 가구주 연령별 지니계수, 1982–2014 198
그림 VI-15 건강보험급여 및 교육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 기준), 2006–2014 199
그림 VI-16 소득분위별 사회 · 복지재정 급여 분포, 2014 200
그림 VI-17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2017 202
그림 VI-18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임금대체율, 2017 203
그림 VI-19 GDP 대비 공적연금보험료 부담 비율, 2016 203
그림 VI-20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률, 2018 204
그림 VI-21 연령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률, 2018 205
그림 VI-22 연령 및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급여, 2018 205
그림 VI-23 연령별 공무원연금 수급자 1인당 월급여, 2018 205
그림 VI-24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령 및 재직기간별 구성비율, 2018 205
그림 VI-25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2018 206

그림 VII-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18 214
그림 VII-2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7 215
그림 VII-3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3–2017 215
그림 VII-4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8 216
그림 VII-5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7 216
그림 VII-6 생활체육 참여율 2013–2018 217
그림 VII-7 신문 읽는 비율, 2000–2017 218
그림 VII-8 여가만족도, 1990–2017 218

그림 Ⅶ-9 행복점수, 2010–2018 221
그림 Ⅶ-10 연령집단별 행복점수, 2016, 2018 221
그림 Ⅶ-11 가구소득별 행복점수, 2016, 2018 221
그림 Ⅶ-12 도시규모별 행복점수, 2016, 2018 222
그림 Ⅶ-13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별 행복점수, 2018 222
그림 Ⅶ-14 OECD 국가별 일과 삶의 균형 지수 223
그림 Ⅶ-15 여가활동 지속 참여 여부별 행복점수, 2016, 2018 224
그림 Ⅶ-16 여가활동 가짓수별 행복점수, 2016, 2018 224
그림 Ⅶ-17 20대와 60대 이상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2018 227
그림 Ⅶ-18 20대와 60대 이상의 참여 여가활동 가짓수, 2018 227
그림 Ⅶ-19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별 참여 여가활동 가짓수, 2018 228
그림 Ⅶ-20 가구 및 개인 매체 보유율, 2010–2018 230
그림 Ⅶ-21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보유율, 2018 230
그림 Ⅶ-22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보유율, 2013, 2018 231
그림 Ⅶ-23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16, 2018 231
그림 Ⅶ-24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2018 234
그림 Ⅶ-25 성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234
그림 Ⅶ-26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234
그림 Ⅶ-27 가구소득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235
그림 Ⅶ-28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여가활동, 2018 236
그림 Ⅶ-29 연령집단별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 2018 237

그림 Ⅷ-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8 241
그림 Ⅷ-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18 242
그림 Ⅷ-3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7 243
그림 Ⅷ-4 철도연장, 2000–2017 245
그림 Ⅷ-5 자전거도로 노선 수와 연장, 2009–2017 246
그림 Ⅷ-6 교통약자 인구, 2010–2018 247
그림 Ⅷ-7 시도별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 2016–2018 248
그림 Ⅷ-8 제1~3기 수도권 신도시 현황 252
그림 Ⅷ-9 수도권 신도시 주택유형별 구성 253
그림 Ⅷ-10 수도권 신도시 인구 밀도(실시계획) 254
그림 Ⅷ-11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실시계획) 254
그림 Ⅷ-12 수도권 신도시 녹지율(실시계획) 255
그림 Ⅷ-13 신도시 주택 평균 주거면적, 2015 255
그림 Ⅷ-14 신도시 자가 거주율, 2015 255
그림 Ⅷ-15 신도시 거주자 평균 거주기간, 2015 256
그림 Ⅷ-16 신도시 거주자 평균 연령, 2005, 2015 256
그림 Ⅷ-17 신도시 거주자 학력수준, 2015 257
그림 Ⅷ-18 신도시 거주자 사회활동 참여율, 2015 258
그림 Ⅷ-19 신도시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 2015 258

그림 Ⅷ-20 도로교통 부문 유류 소비량, 2008–2018 264
그림 Ⅷ-21 차량 유종별 주행거리, 2012–2018 264
그림 Ⅷ-22 경유 승용차 등록대수의 변화, 2010–2018 265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6 271
그림 Ⅸ-2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7 272
그림 Ⅸ-3 계절길이 변화, 1912–2017 273
그림 Ⅸ-4 폭염 일수, 1980–2019 273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7 274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7 275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7 276
그림 Ⅸ-8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278
그림 Ⅸ-9 연령집단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278
그림 Ⅸ-10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크기 비교 280
그림 Ⅸ-11 미세먼지 관련 뉴스 횟수, 2010–2019.10. 281
그림 Ⅸ-12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18 281
그림 Ⅸ-13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18 281
그림 Ⅸ-14 서울시 초미세먼지($PM_{2.5}$) 일평균 농도, 2015 – 2019. 6 282
그림 Ⅸ-15 동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_x) 농도 변화, 2005–2014 283
그림 Ⅸ-16 황산화물(SO_x) 및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 1999–2016 283
그림 Ⅸ-17 미세먼지와 풍속의 상관관계, 2004–2015 284
그림 Ⅸ-18 북반구 및 동아시아 영역 지표면 풍속 변화 경향, 1979–2008 285
그림 Ⅸ-19 '후쿠시마, 아이돌, 방사선' 이슈 키워드 네트워크 289
그림 Ⅸ-20 원자력 포함 에너지 관련 이슈 언급량, 2018.12–2019. 3 291
그림 Ⅸ-21 2019년 3월 6일자 원자력 관련 언론보도 및 뉴스 댓글에 나타난 미세먼지 이슈의 네트워크 중심성 291
그림 Ⅸ-22 원자력 및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2004–2019. 8 292

그림 Ⅹ-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8 297
그림 Ⅹ-2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8 297
그림 Ⅹ-3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8 298
그림 Ⅹ-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1997–2018 298
그림 Ⅹ-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7–2018 299
그림 Ⅹ-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7–2018 299
그림 Ⅹ-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8 300
그림 Ⅹ-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7 300
그림 Ⅹ-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7–2018 301
그림 Ⅹ-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7–2018 301
그림 Ⅹ-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8–2017 302
그림 Ⅹ-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8–2017 302
그림 Ⅹ-13 OECD 국가의 살인범죄율, 2016 303
그림 Ⅹ-14 OECD 국가의 교도소 수감율, 2016 304

그림 X-15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6 305
그림 X-16 어린이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6–2018 307
그림 X-17 어린이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4–2018 307
그림 X-18 어린이 주요 사망사고의 세부 유형별 사망자 구성비율, 2014–2016 308
그림 X-19 OECD 국가의 어린이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 2015 308
그림 X-20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2012–2018 309
그림 X-21 OECD 국가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2016 310
그림 X-22 일반인과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311
그림 X-23 장애인의 연령집단 및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312
그림 X-24 전체 형법범죄자 중 소년 형법범죄자 비율, 2008–2017 315
그림 X-25 19세 형법범죄자율, 1998–2017 316
그림 X-26 여자 소년 형법범죄자 비율, 2008–2017 316
그림 X-27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8–2017 317
그림 X-28 경찰서장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 2008–2017 317
그림 X-29 범죄유형별 소년 형법범죄자율, 2008–2017 318
그림 X-30 소년형법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2008–2017 319
그림 X-31 소년 형법범죄자의 공범률, 2008–2017 319
그림 X-32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2008–2017 320
그림 X-33 소년 형법범죄자의 기소율, 구속률 및 보호송치율, 2008–2017 321

그림 XI-1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 2018 325
그림 XI-2 연령집단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3, 2018 326
그림 XI-3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 2018 328
그림 XI-4 본인과 타인의 준법 수준 평가, 2008–2018 329
그림 XI-5 도로에서의 공공질서 준수 평가, 2008–2018 329
그림 XI-6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준수 평가, 2008–2018 330
그림 XI-7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3, 2018 331
그림 XI-8 주요 국가별 정부에 대한 부패 인식 수준, 2008–2018 332
그림 XI-9 공공 제도들에 대한 신뢰, 2013, 2018 333
그림 XI-10 민간 제도들에 대한 신뢰, 2013, 2018 334
그림 XI-11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6–2017 평균 334
그림 XI-12 대인 신뢰, 2013, 2018 335
그림 XI-13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 2013–2018 338
그림 XI-14 연령대별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2013–2018 339
그림 XI-15 연령대별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 2012, 2016 339
그림 XI-16 학력별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 2013, 2015, 2018 340
그림 XI-17 주요 국가별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08–2018 341
그림 XI-18 OECD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06–2014 342
그림 XI-19 사회적 위기 상황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13–2018 342
그림 XI-20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2013, 2015, 2018 343
그림 XI-21 학력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2013–2018 344

그림 XI-22 사회적 접촉 결여 정도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345
그림 XI-23 사회적 지원 결여 정도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346
그림 XI-24 사회적 관계 및 지원 고립 유형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346
그림 XI-25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08, 2018 348
그림 XI-26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2–2018 349
그림 XI-27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인식, 2012–2018 350
그림 XI-28 성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350
그림 XI-29 연령집단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351
그림 XI-30 교육수준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351
그림 XI-31 소득수준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352
그림 XI-32 성 및 연령집단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352
그림 XI-33 교육 및 소득수준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353
그림 XI-34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내 내국인의 이주민/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5 354
그림 XI-35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08 355
그림 XI-36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중국 출신 이주민의 국내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6 355

Korean Social Trends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 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유삼현 | 동국대학교 36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45

유정균 | 한양대학교, 김두섭 | 한양대학교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 인구는 202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에는 1982년 인구와 비슷한 3,929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의 출산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조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자살과 아울러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등 퇴행성 질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였다.
-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의 이동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많았다.
-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들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하였다. 반면, 세종은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2028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로 초저출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력의 저하와 고령화 추세,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성장과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 규모는 2019년 현재 5,171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해당되며, 인구성장률은 0.20%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7년에 이르면 2019년 인구보다 1,242만 명이 줄어든 3,929만 명이 되어 1982년의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7년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19년 규모의 47.5%와 49.4%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9년의 2.4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60세 이상 인구가 두터워지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남녀 인구의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18

(%)

	1990	2000	2010	2018
성				
남자	50.2	50.2	49.7	49.9
여자	49.8	49.8	50.3	50.1
연령				
0-14세	25.7	21.0	16.2	13.0
15-64세	69.4	71.7	72.5	72.2
65세 이상	5.0	7.3	11.3	14.8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5
읍	8.3	8.1	8.6	9.6
면	17.3	12.2	9.3	8.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17.1
중학교	18.5	13.6	11.9	10.5
고등학교	34.0	34.6	31.2	30.8
대학 이상	14.1	26.1	36.6	41.7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31.3
유배우	59.1	60.6	57.7	55.9
사별	7.2	7.4	7.6	7.6
이혼	0.8	1.9	4.0	5.1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8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2018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에서 각각 49.7%와 50.3%로 집계되었고, 2018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각각 49.9%, 50.1%로 여자 인구의 비중이 약간 높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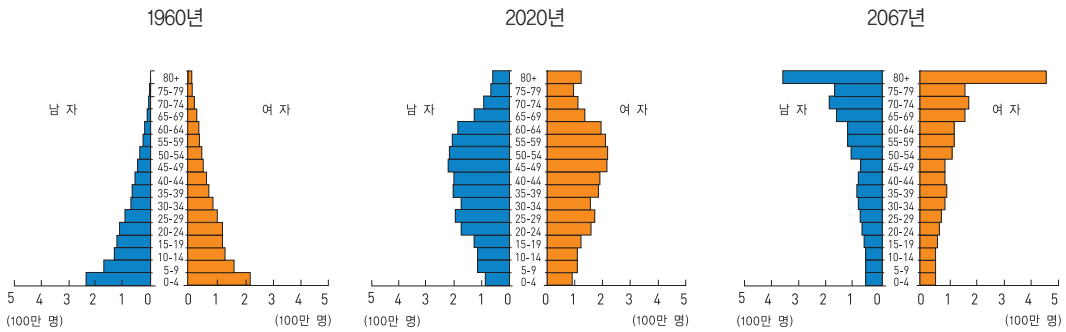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199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1960년에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으나 2018년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었고, 2050년대 이후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8년 13.0%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8년 72.2%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3.0배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18년에 각각 82.0%과 81.5%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그 비중이 두 해 모두 약 91%에 이른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9%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18년에 각각 9.3%와 8.9%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내국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변화추세, 1960, 2020, 206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2015년 17.1%로 꾸준히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그 비중이 각각 10.5%와 30.8%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5년의 기간에 14.1%에서 41.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0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15년에 각각 83.9%와 46.9%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15년 5.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0-54세에서 10.8%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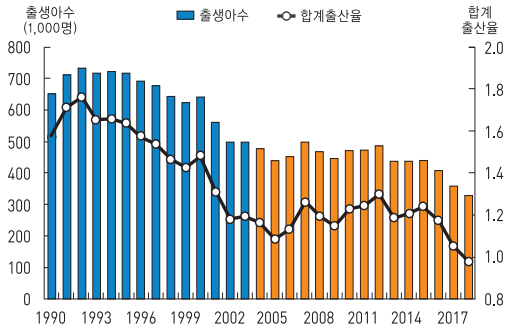
초저출산의 고착화

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제1차 출산력 변천에서와는 달리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인구성장 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9만 명과 1.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8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000년에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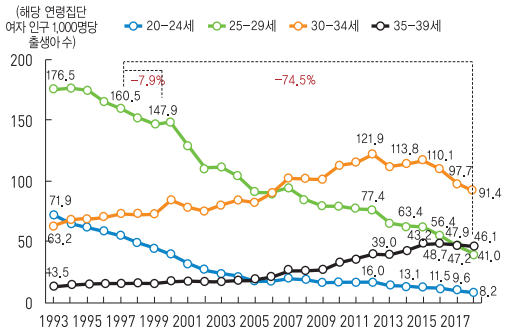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이나마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저하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년 45.2만 명, 2007년 49.7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에는 32.7만 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 2010년 1.23, 2015년 1.24, 2017년 1.05, 그리고 2018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98로 집계되었다. [그림 I-2]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 연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혼인신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 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30.4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각각 31.9세와 32.8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31.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3]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동안 7.9% 그리고 2018년까지 무려 74.5%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8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앞으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표 I-2〉에 제시된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5.7%와 3.6%로 상승하며, 2067년 각각 46.5%와 20.7%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연도	인구 (100만 명)	인구 구성률(%)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 인구	80+ 인구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20	51.8	15.7	3.6	43.7	21.7	129.0
2040	50.9	33.9	10.2	54.4	60.1	345.7
2060	42.8	43.9	19.2	61.3	91.4	546.1
2067	39.3	46.5	20.7	62.2	102.4	574.5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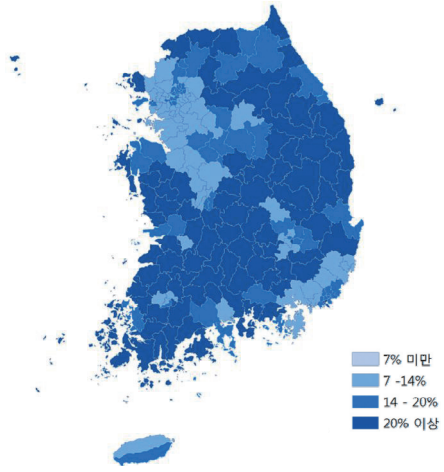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 〈표 I-2〉

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3.7세로 높아지며 2067년에는 무려 62.2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년 5.3 수준이었으나 2020년 21.7로 증가한다. 그리고 2067년에 이르면 102.4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활동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20년과 2020–2067년의 기간에 각각 18.7배와 4.5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I-4]에서 보는 것처럼, 경상북도(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합천군, 남해군, 의령군)과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신안군, 보성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화성, 세종, 오산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림 I-4]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2018



출처: 통계청,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19. 8. 28.

사망률의 변화와 지역 편차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력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8년 1,000명당 5.8명으

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 역시 2006년 24.4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29.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8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80세 이상 인구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망자수가 지난 15년간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 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3〉을 보면,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3.4년씩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8년 남자 16.1만 명, 여자 13.8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수는 각각 6.3명과 5.4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최근에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표 I-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조사망률 (인구 1,000명 당)	영아사망률 (인구 1,000명 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7.5	29.3	69.9	74.7
선진국	10.2	4.5	76.2	82.3
개발도상국	7.0	31.9	68.6	72.9
아시아	6.9	24.9	71.2	75.5
한국	5.9	2.1	79.6	85.7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사망력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18년에 경기도(6.0만 명), 서울(4.5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사망자가 12.1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4%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9.2)와 경상북도(8.4) 및 전라북도(7.9)가 높고, 세종(4.3), 울산(4.6)과 서울(4.7) 및 경기도(4.7)가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울산이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 대전과 세종의 순으로 낮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폐렴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비록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18년 26.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1997년의 13.2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 I-4〉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 이후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장 질환,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2-4위, 그리고 자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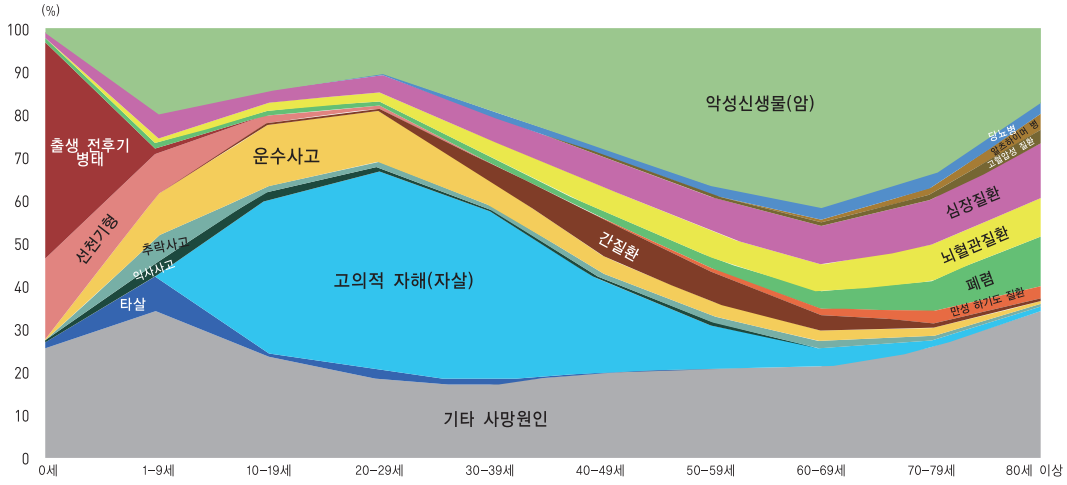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그림 I-5]에서 보는 것처럼, 20대와 30대에는 자살과 운수사고

〈표 I-4〉 사망원인 순위, 2008-2018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2008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2010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2012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2014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자살	폐렴	당뇨병
2016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2018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출처: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2019. 9. 24.

[그림 I-5] 연령집단별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2018



주: 연령집단별 사망원인 구성비=(해당 연령집단의 사망원인별 사망자수÷해당 연령집단의 총 사망자수)×1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가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고령집단에서도 자살의 비중이 높게 관찰되나 암이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하기도 질환에 의한 사망이 두드러진다.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8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5%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8.9%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5〉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5.2만 명이 감소한 97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로 전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17년 18.9%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는 2017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6%에 해당하는 2,552만 명에 이른다.

〈표 I-5〉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

〈표 I-5〉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8

(1,000명)

연도	서울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시(동)부	군(읍/면)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6,997	17,992	24,989
1970	5,433	6,327	8,730	12,710	18,173	30,882
1980	8,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411
2000	9,895	19,441	21,354	36,755	9,381	46,136
2005	9,820	20,960	22,767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39,823	8,758	48,580
2018	9,674	23,374	25,713	41,915	9,714	5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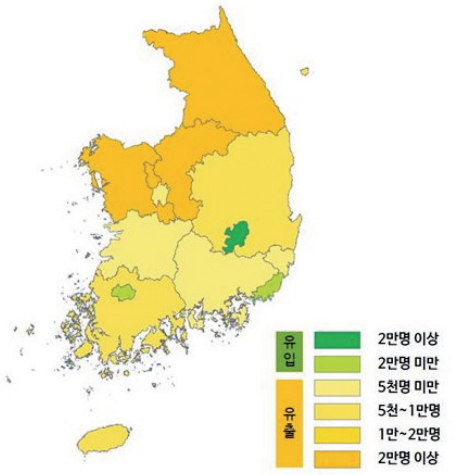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자료이며, 2018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전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와 4.3%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8년 기간에 93.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최근 수도권 인구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은 주목할 현상이다. 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전입한 인구보다 16.3만 명이 많았다. [그림 I-6]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의 이동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의한 순이동 인구에 의해서 변화한다. 우선 2017년 시도별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부산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졌다. 자연감소는 2042년에 이르면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권역별로는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역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해 2018년에는 중부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2년에 이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권역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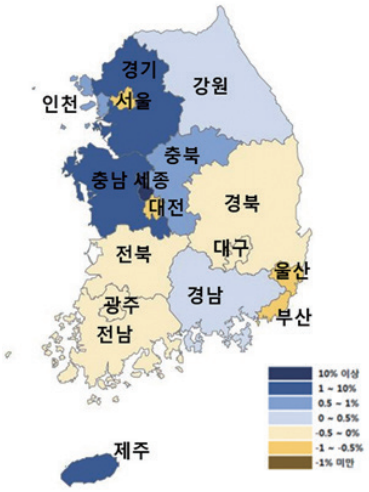
[그림 I-6] 수도권 순유입 및 순유출 인구의 시도별 분포, 2010–2015



출처: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보도자료, 2017. 4. 19.

인구의 자연증가와 이동을 감안한 성장률을 살펴보면, 부산(1996년)을 시작으로 서울(2010년), 대구(2012년), 대전(2015년), 광주(2016년)가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하였다. [그림 I-7]에 제시된 2017년 시도별 인구성장률을 보면, 세종은 12.46%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 반면, 서울(−0.78%), 부산(−0.66%), 울산(−0.64%), 대전(−0.55%), 광주(−0.45%), 전북(−0.37%), 경북(−0.31%), 전남(−0.18%), 대구(−0.14%)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참고로, 2017년

[그림 I-7]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2019. 6. 27.

의 전국 인구성장률은 0.28%였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18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8.0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8년 4,19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7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2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유삼현 (동국대학교)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67년 1,8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50년 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 학교급별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가구수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 감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수축사회' 등 인구문제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시사용어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관련 도서들이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구변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견해와 서적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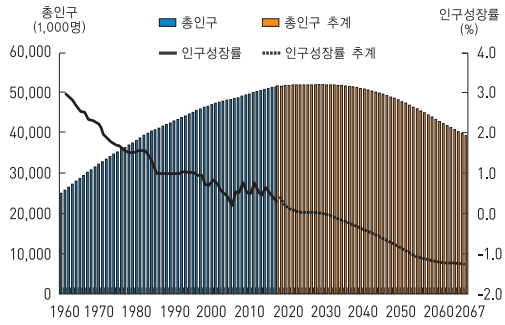
인구절벽, 지방소멸, 수축사회 등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의 토대 위에 전개되고 있다. 저마다 인구변동을 소비흐름, 지역불평등, 저성장 흐름과 연계시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한 사회의 인구변동은 주로 출산, 사망, 이동 등 세 가지 요소로 설명되며, 따라서 다른 사회변화에 비해 비교적 예측이 수월하다. 하지만 장래의 인구변동에 관한 전망은 항상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1968년 에를리히가 「인구폭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인구폭탄' 또는 '인구폭발'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었다(Ehrilch, 1968). 과거 우리도 즐겨 사용하던 '인구폭탄'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전개과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설명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언제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불확실한 가정 위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인구통계에 기초하여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령인구의 증가, 학령인구의 감소, 가구구조의 변동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교육통계」, 「고령자통계」 등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7년 현재 총 5,13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향후 약 10여 년간 증가한 후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그림 I-8). 그리고 2067년에는 총인구가 3,92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성장률 역시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67년에는 -1.26%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올해 2019년부터 전체 사망자 수가 전체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8]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인구의 증가와 감소는 연령계층별 인구의 구성 변화를 야기한다. 〈표 I-6〉을 보면, 지난 1960년 0-14세 유소년인구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각각 전체 인구의 42.3%와 54.8%를 차지하였다. 반면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50여년 만에 인구의 연령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7년 0-14세 유소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크게 감소한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각각 전체 인구의 73.2%와 13.8%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I-6〉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 비율, 1960-2067

(%)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1960	42.3	54.8	2.9	100.0
1980	34.0	62.2	3.8	100.0
2000	21.1	71.7	7.2	100.0
2017	13.1	73.2	13.8	100.0
2020	12.2	72.1	15.7	100.0
2040	9.8	56.3	33.9	100.0
2060	8.0	48.0	43.9	100.0
2067	8.1	45.4	46.5	10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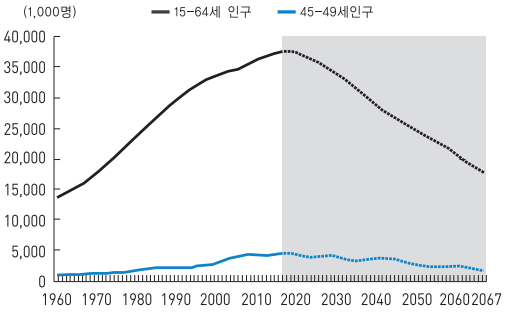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연령구성의 빠른 변화로 지난 2017년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 유소년인구를 초과하였다. 아울러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향후 2067년에 0-14세 유소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8.1%로 더욱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5.4%를 차지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학자 덴트(Dent, 2015)는 생애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의 인구의 감소를 '인구절벽'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소비흐름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45–49세 인구가 2018년 456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소비흐름도 절벽에서 떨어지듯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2018년은 생산연령인구 역시 3,76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I–9). 생산연령인구는 206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의 절반보다 적은 1,78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9] 생산연령인구와 45–49세 인구, 1960–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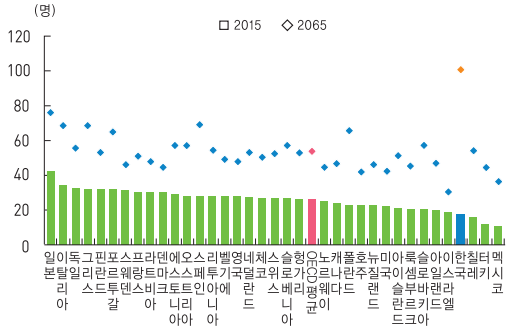


주: 1) 생산연령인구는 만15–6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변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특징이다. 노년부양비는 고령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는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I–10]은 2015년 노년부양비와 장래인구추계에 의해 예상되는 2065년 노년부양비를 OECD 국가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I-10] OECD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 2015, 2065



주: 1) 한국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그 외 OECD 국가들은 UN의 2019년 추계치임.
2)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15년 17.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17.5명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5년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탓에 50년 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100을

넘게 되는 사례로, 특히 같은 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년부양비를 갖게 되는 일본의 75.9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 15-64세 생산연령인구 약 6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부양비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들의 기대여명은 한 사회의 보건수준은 물론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예컨대 65세 기대여명이란 65세에 이른 사람이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될 경우 향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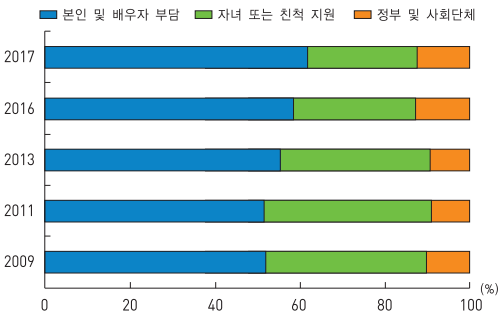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65세 기대여명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기대여명은 지난 1970년 12.9년에서 2017년 20.8년으로 7.9년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남성의 65세 기대여명은 10.2년에서 18.6년으로 8.4년, 여성의 65세 기대여명은 14.9년에서 22.7년으로 7.8년 각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7년 65세 기대여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같은 시기 OECD 국가 중 남녀 각각 17위와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고령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기준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2012년에 전체 9.3년, 남성 9.8년, 여성 9.0년에서 2016년 전체 10.8년, 남성 11.3년, 여성 10.5년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건강수준의 개선은 물론 일자리와 생활비 등 고령자의 생활에 좀 더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고령자의 연령별 고용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0-64세 고용률은 2009년 53.8%에서 2017년 60.6%로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17년 우리나라의 65-69세 고용률과 70-74세 고용률은 각각 45.5%와 33.1%를 기록하여 EU 28개국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고령자의 건강수준 개선으로 좀 더 많은 고령자들이 활발하게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

[그림 I-11]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 2009-2017



주: 1)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였으며, 그 중 60.2%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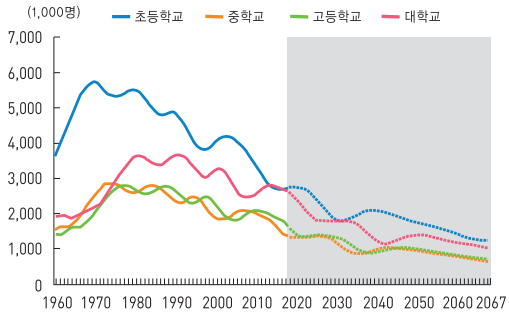
고령자들 중 생활비를 자녀 또는 친척에 의존하는 비율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자녀 또는 친척 지원'에 의존한다는 비율이 2009년에 37.6%였으나 2017년 25.7%로 감소하였다(그림 I–11). 반면,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1.9%에서 61.8%로 점차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삶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관련 제도들의 대응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 분야는 우리 사회의 인구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이며, 학령인구의 감소는 그 중 가장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I–12]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만 6–11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960년 363만 명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여 1969년 572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우하향하며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약 27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50년 후 2067년 약 125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67년 초등학교 추계학령인구 125만 명은 가장 많았던 1969년 572만 명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림 I-12] 학교급별 학령인구, 1960–2067



주: 1) 학교급별 학령인구의 연령기준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대학교는 만 18–21세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2019.

이처럼 괄목할만한 학령인구 감소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2017년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대학교(18–21세) 등 학교급별 학령인구는 각각 138만 명, 172만 명, 26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반세기 뒤 2067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령인구는 각각 65만 명, 71만 명, 104만 명으로 모두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

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당장 학급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예컨대, 과거 1995년 전국의 초등학생이 약 390만 명이었을 때 전국의 초등학교 전체 학급 수는 10만 7,183개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36.4명 수준이었다(표 I-7). 전국의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8년에 271만 명을 기록하여 1995년에 비해 약 119만 명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 학급 수는 오히려 1995년에 비해 1만 4,635개 늘어난 12만 1,818개 학급으로 확인된다.

〈표 I-7〉 초등학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199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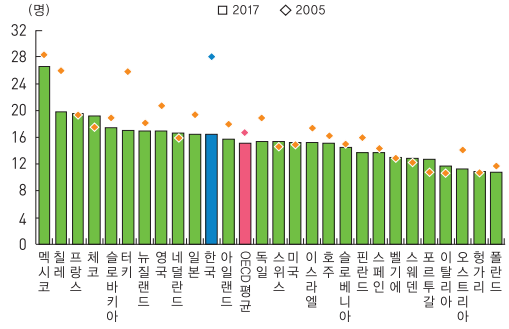
연도	학교 수 (개)	학급 수 (개)	학생 수 (명)	교원 수 (명)	학급당 학생 수 (명)
1995	5,772	107,183	3,905,163	138,369	36.4
2000	5,267	112,437	4,019,991	140,000	35.8
2005	5,646	126,326	4,022,801	160,143	31.8
2010	5,854	123,933	3,299,094	176,754	26.6
2015	5,978	120,063	2,714,610	182,658	22.6
2018	6,064	121,818	2,711,385	186,684	22.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초등학교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 수는 같은 속도로 줄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교 및 학급 수가 일부 감소한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학교와 학급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 교육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분야의 대응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1995년 36.4명에서 2018년 22.3명으로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의 학급 규모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통해 비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 2005년 28.0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인 16.7명에 비해 약 67%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I-13). 하지만 학급 수의 증가와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 10여 년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였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4명이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15.2명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의 매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의 평균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I-13] OECD 주요 국가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005, 2017



주: 1) OECD 회원국 중 두 시기의 자료가 모두 가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함.
2)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19.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원양성과 수급계획의 보완, 교육시설의 재배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학정원의 조정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구구조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혼인과 출산행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구구조의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지난 2017년 1,957만 가구에서 2025년 2,134만 가구, 2035년에는 2,25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8). 총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총가구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다 2041년에 비로소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48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도 꾸준히 감소하여 2047년 2.03명을 기록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8〉 가구구조의 변화, 2017-2047

구분	2017	2025	2035	2047
총가구수(1,000가구)	19,571	21,342	22,497	22,303
가구증가율(%)	1.50	0.81	0.32	-0.36
평균 가구원수(명)	2.48	2.29	2.15	2.03
주요 유형별 가구 수(1,000가구)				
부부	3,093	3,848	4,599	4,794
부부+미혼자녀	6,150	5,363	4,533	3,638
부+미혼자녀	516	611	671	677
모+미혼자녀	1,483	1,566	1,550	1,431
3세대 이상	951	793	648	505
1인가구	5,583	6,897	7,923	8,320
비친족 가구	307	390	383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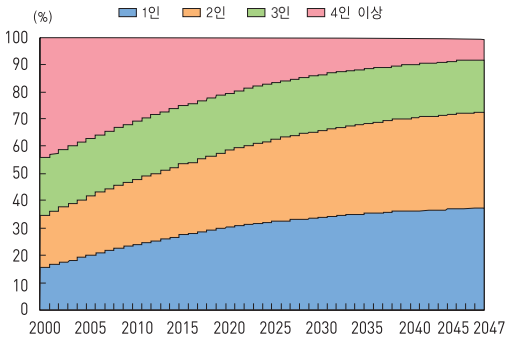
주: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가구구조의 변화를 주요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부로만 구성된 부부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부부가구는 2017년 309만 가구였으나 2047년 479만 가구로 약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1인가구 역시 2017년 558만 가구에서 2047년 832만 가구로 약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017년 615만 가구에서 2047년 364만 가구로 약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젊은 층의 결혼 전 분가 독립과 독신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부부가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가구수 변화는 주로 1인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1인가구는 지난 2000년 전체 가구 중 15.5%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28.5%로 17년 사이에 13.0%p가 증가하였다. [그림 I-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구성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2047년에는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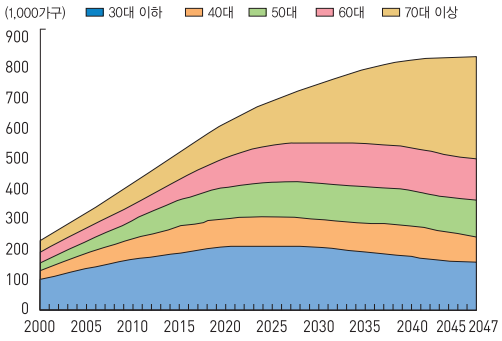
반대로 과거 우리 사회에서 흔히 관찰되던 4인 이상 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체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0년 44.5%를 차지하였지만, 2017년에 23.5%로 감소하였으며,

[그림 I-14] 가구의 가구원수별 구성 비율, 2000-2047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그림 I-15] 1인가구의 연령구성, 2000-2047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지난 2014년에 이미 4인 이상 가구의 수가 1인가구 보다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의 구성 비율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어 2047년에 8.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에서 가구규모의 변화에 따른 주택 크기의 수요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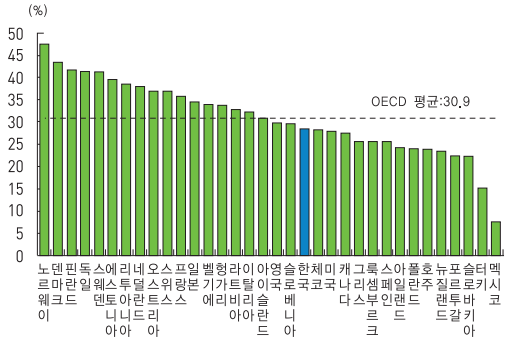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청장년층과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전개되고 있다. 우선 청년층의 1인가구 증가는 만혼과 비혼의 확대, 독신인구의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가구주가 30대 또는 그 이하인 1인가구는 지난 2000년 100만 가구였으나, 2017년 199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30대 또는 그 이하인 청년층 1인가구는 2025년 약 213만 가구까지 증가하며,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15). 하지만 30대 또는 그 이하 연령대의 1인가구의 증가는 향후 해당 청년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40대 또는 50대 등 중장년층의 1인가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령층의 1인가구 증가는 평균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에 의한 사별가구 증가,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 등을 주요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의 1인가구의 증가세는 청년층에 비해 더욱 빠른 편이다. 예컨대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1인가구의 경우 지난 2000년 36만 가구였으나, 2017년 99만 가구로 집계되어 약 2.8배 증가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70세 이상 1인가구는 2047년에 무려 33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2000년의 36만 가구에 비해 무려 9.4배 증가한 숫자다.

우리 사회 내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 중 구성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2017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28.5%로 비슷한

시기의 OECD 평균 30.9% 보다 2.4%p 낮다(그림 I-16). OECD 국가 중에는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주로 북유럽에 위치한 국가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같은 아시아 지역의 일본 역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은 물론 주거, 소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1인가구의 구성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16] OECD 주요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주: 1) 한국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이용, 유럽은 「EU-SILC survey」 자료, 미국과 일본은 센서스 자료, 그 외 국가들은 OECD 자료임.
2) 캐나다, 호주, 멕시코는 2011년 자료, 뉴질랜드는 2013년 자료, 일본은 2015년 자료, 그 외 국가는 모두 2017년 자료임.
3) OECD 평균은 비교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2019.
European Commission,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9.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en/).
U.S. Census Bureau.(https://www.census.gov/).

참고문헌

덴트(Harry Dent). 권성희(역). 2015.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
Ehrlich, Paul R. 1968. The Population Bomb. Ballantine Books.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유정균 (한양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 사회의 사망력 수준은 남녀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사망의 3대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며, 폐렴, 자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은 증가 추세이다.
- 사별자의 사망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혼자, 유배우자, 미혼자의 순으로 확인된다. 대학 학력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으며, 교육수준과 사망률은 부적 관계를 보인다.
-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은 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다.
- 암과 치매로 인한 중고령자(50세 이상)의 사망률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70세를 기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망력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동시에 사망력 지표들은 성 및 연령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령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표준화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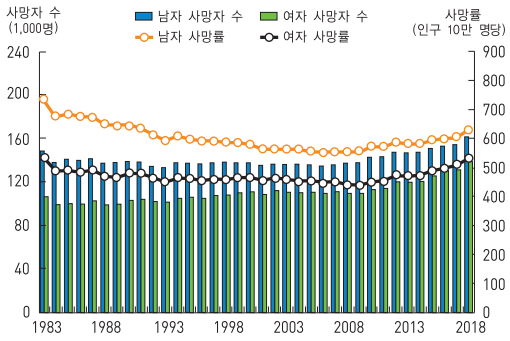
사망력의 감소 추세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 발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망률의 수준은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지역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그리고 사망률이 저하하는 과정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가 수반된다.

이 글은 사망 수준의 변화 추이와 사망원인의 구조를 분석한다.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망률의 편차를 살펴보고, 암, 자살과 치매에 의한 중고령자의 사망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사망원인통계」 및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의 변화와 특성

우선 사망자 수와 사망률의 변화를 [그림 I-17]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사망자 수는 1983년의 25.5만 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3년 23.4만 명의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그 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 29.9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남자 사망자는 16.1만 명으로 53.9%를 차지하였다.

[그림 Ⅰ-17] 성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8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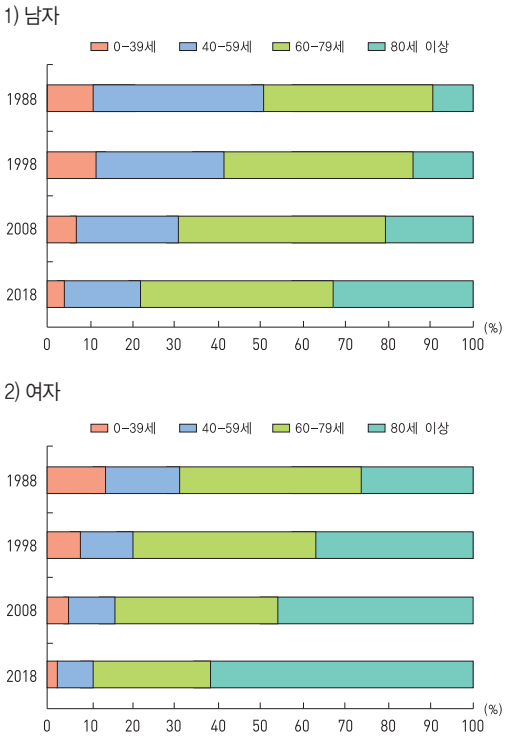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측정되는 사망률은 1983년 남자 735.8명, 여자 538.2명으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8년에 남자 629.6명, 여자 535.6명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남녀의 사망률 편차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 사망률의 성비는 1985년 1.39의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 1.18까지 낮아졌다.

사망률은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견된다. 남자 사망자의 경우, 1988년에는 60-70대의 사망자가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Ⅰ-18]에서 연령별 구성의 변화 추세를 보면, 50대 이하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 노인 사망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18년 78.1%에 도달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30대 이하 사망자의 비중은 16.7%p가 감소하였고, 60세 이상의 비중은 29.2%p 증가하였다.

[그림 Ⅳ-18] 성 및 연령별 사망자 구성비율, 198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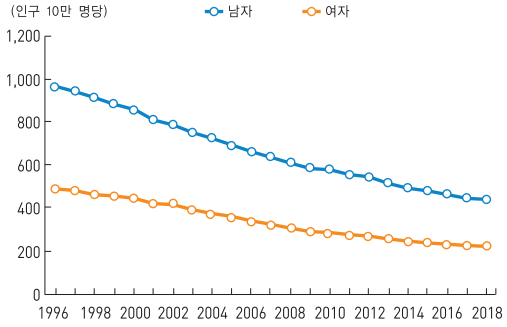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전체 사망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자보다 여자 사망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여자 사망자의 비중은 1988년 68.6%에서 2018년 89.1%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 80세 이상 여성이 차지하는 사망자 비중은 남성보다 1.9배 많다.

연령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효과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흔히 활용된다. [그림 Ⅰ-19]를 보면, [그림 Ⅰ-17]에서 살펴본 사망률의 변화와는 달리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이는 연령구조의 효과가 보정되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996년의 961.6명에서 2018년 441.6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여자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같은 기간 494.9명에서 227.3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그림 I-19]에서는 남자의 사망 수준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률의 성비는 2018년 1.94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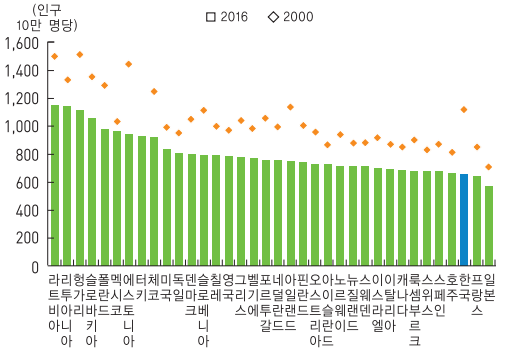
[그림 I-19]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1996-2018



주: 1)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한국 사회의 낮은 사망 수준은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I-20]에는 OECD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된 2000년과 2016년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한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0년 1,119.5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에서 9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의 사망 수준은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 654.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본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 I-20] OECD 주요 국가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0, 2016



주: 1)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OECD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2) 터키는 2000년 자료 없음.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일반적으로 사망 수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주요 질병들도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표 I-9〉는 1988년 이후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를 시기별로 보여준다. 지난 30년간 암에 의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988년에는 뇌혈관 질환 62.4명, 심장 질환 39.7명, 고혈압성 질환 33.9명, 간 질환 28.6명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도 7.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이 새롭게 6위에 포함되었다.

자살에 의한 사망은 1998년 7위에서 2008년 4위로 높아졌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자살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I-9〉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에는 암, 심장 질환, 폐렴이 사망원인 1-3위를 차지하였으며, 뇌혈관 질환과 자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고혈압성 질환이나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 반면, 폐렴, 알츠하이머병 등에 의한 사망의 순위가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폐렴에 의한 사망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아울러 항생제 내성 및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I-21]에서 남자 사망률의 변화추이를 보면, 암에 의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2011년을 기점으로 순위가 서로 바뀌면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더 많아졌다. 자살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I-21]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의 경우, 사망원인의 시기별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암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1990년대 후반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암에 의한 사망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부터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2003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3위로 하락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심장 질환이 2위가 되었다. 또한,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2018년 43.5명으로 1997년의 4.2명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4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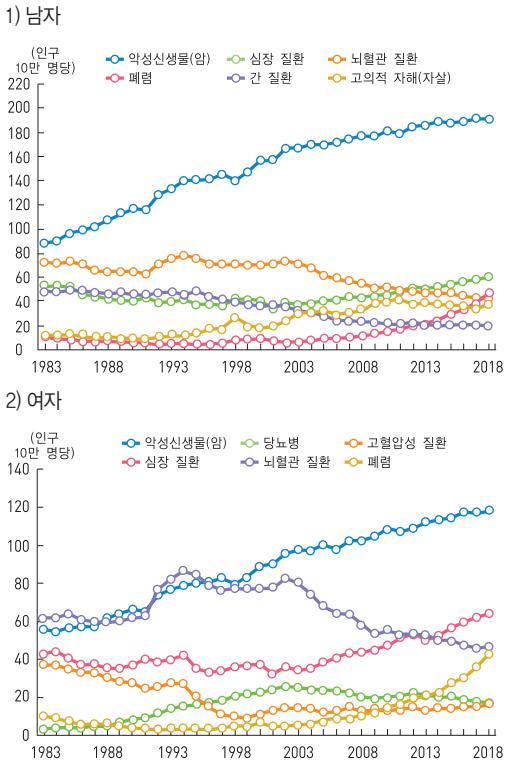
〈표 I-9〉 사망원인 순위(1-10위)와 사망률, 1988-2018

(인구 10만 명당)

순위	1988		1998		2008		2018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1	암	84.3	암	109.5	암	139.5	암	154.3
2	뇌혈관 질환	62.4	뇌혈관 질환	74.1	뇌혈관 질환	56.5	심장 질환	62.4
3	심장 질환	39.7	심장 질환	38.9	심장 질환	43.4	폐렴	45.4
4	고혈압성 질환	33.9	운수 사고	25.8	자살	26.0	뇌혈관 질환	44.7
5	간 질환	28.6	간 질환	24.8	당뇨병	20.7	자살	26.6
6	운수 사고	20.3	당뇨병	21.2	만성 하기도 질환	14.9	당뇨병	17.1
7	호흡기 결핵	11.5	자살	18.6	운수 사고	14.7	간 질환	13.4
8	만성 하기도 질환	7.7	만성 하기도 질환	12.7	간 질환	14.5	만성 하기도 질환	12.9
9	낙상(추락)	7.4	고혈압성 질환	8.5	폐렴	11.1	알츠하이머병	12.0
10	폐렴	7.3	호흡기 결핵	7.2	고혈압성 질환	9.6	고혈압성 질환	11.8

주: 1)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을 합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Ⅳ-21] 성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1983-2018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표 Ⅰ-10〉 연령집단별 5대 사망원인 및 사망률, 2018

(인구 10만 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0세	출생전후기 병태	선천 기형	영아돌연사 증후군	심장 질환	암
	(142.0)	(52.5)	(22.3)	(3.9)	(3.3)
1-9세	암	운수 사고	선천 기형	가해 (타살)	심장 질환
	(2.0)	(0.9)	(0.9)	(0.7)	(0.6)
10-29세	자살	운수 사고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12.4)	(3.4)	(3.2)	(1.1)	(0.5)
30-39세	자살	암	심장 질환	운수 사고	뇌혈관 질환
	(27.5)	(13.4)	(4.2)	(4.0)	(2.7)
40-59세	암	자살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
	(80.3)	(32.4)	(19.1)	(18.4)	(13.9)
60세 이상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
	(595.5)	(262.8)	(208.1)	(188.8)	(73.1)

주: 1) 연령별 사망률 = (특정연령의 사망자수÷특정연령의 연앙인구) × 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사망원인은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 Ⅰ-10〉을 보면, 영아에게는 출생 전후기에 비롯된 병태들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이며, 다음으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영아돌연사 증후군 등의 순서이다. 그리고 1-9세 연령집단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 운수사고, 염색체 이상, 가해(타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사망률 수준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살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암, 운수사고, 심장 질환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중장년층(40-59세)과 노인(60세 이상) 집단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9세 집단에서는 자살, 심장 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암을 포함한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당뇨병이 5대 사망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특성에 따른 사망률

사망수준은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편차를 나타낸다.

〈표 I-11〉을 보면, 남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유배우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다. 이는 결혼이 지니는 선택적 효과와 아울러 결혼을 통해 건강을 보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별자를 제외하면, 이혼상태인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가 사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때, 미혼자의 사망률은 50-59세에서 높고, 이혼자는 20-29세, 사별자는 30-3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1〉 성 및 혼인상태별 사망률, 2015

(인구 10만 명당)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남자				
전체	206.6	815.4	1,615.7	4,756.7
20-29세	51.8	48.7	477.2	233.6
30-39세	129.2	47.9	372.4	333.6
40-49세	436.5	136.2	687.9	497.4
50-59세	1,232.3	367.8	1,397.9	843.8
60세 이상	3,022.0	2,366.2	3,477.1	5,843.9
여자				
전체	120.2	249.9	451.9	2,991.3
20-29세	28.9	22.0	138.1	47.9
30-39세	86.7	36.0	207.1	164.7
40-49세	171.8	79.1	208.6	181.8
50-59세	328.3	155.1	298.1	239.3
60세 이상	3,088.7	835.4	1,312.4	3,497.4

주: 1) 사망신고자료의 사망자수와 센서스 자료의 혼인상태별 인구를 활용하여 계산한 혼인상태별 사망률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5.

유배우자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은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사별자, 50-59세에서는 미혼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혼인상태별 사망수준을 비교하면, 미혼자는 60세 이상, 이혼자는 20-29세, 그리고 사별자는 30-39세에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높았다.

교육수준과 사망률의 관계는 〈표 I-12〉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남자의 사망률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개연성을 지닌다.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의 차이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망수준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남자의 경우, 무학자의 사망률이 4,817.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학력자 4,231.5명, 중학교 학력자 2,423.7명 등의 순서이다.

교육수준과 사망률의 부적인 관계는 여자의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60세 이상 무학자의 사망률이 3,707.3명으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학력자가 2,324.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30-39세 무학자와 초등학교 학력자가 각각 1,359.9명과 1,105.5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I-12〉에서 대학 이상 학력자를 기준으로 비교한 교육수준별 사망수준을 보면, 남녀 모두 30-39세 연령집단에서 가

〈표 I-12〉 성 및 교육수준별 사망률, 2015

(인구 10만 명당)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남자					
전체	4,386.6	3,540.4	1,519.9	487.9	269.5
20-29세	1,000.0	765.5	296.3	36.6	66.4
30-39세	1,196.5	1,006.2	457.1	128.4	58.1
40-49세	1,636.7	1,168.4	901.3	270.1	118.7
50-59세	2,115.0	1,438.3	432.9	465.5	267.7
60세 이상	4,817.8	4,231.5	2,423.7	1,872.7	1,717.9
여자					
전체	3,590.8	1,906.7	572.4	187.5	78.5
20-29세	541.3	592.8	211.3	23.4	26.6
30-39세	1,359.9	1,105.5	387.4	77.2	37.0
40-49세	918.6	515.6	280.2	106.2	64.8
50-59세	700.1	349.6	192.3	152.3	117.7
60세 이상	3,707.3	2,324.0	972.6	799.4	6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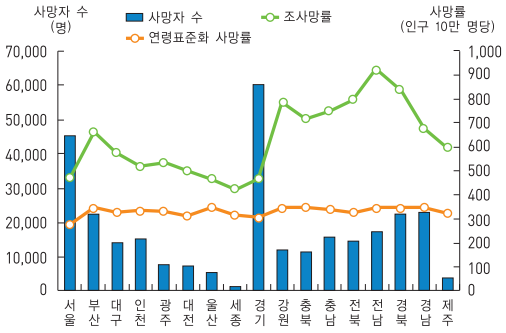
주: 1) 사망신고자료의 사망자수와 센서스 자료의 교육수준별 인구를 활용하여 계산한 교육수준별 사망률임.
2) 무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재학이나 중퇴는 그 아래 학력으로, 수료는 졸업한 것으로 정의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5.

장 큰 차이가 발견된다. 한편,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사망률의 편차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사망수준은 거주지역의 환경에 따라서도 편차를 보인다. [그림 I-22]에는 사망자 수, 조사망률 그리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각 시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망자 수를 보면, 경기 지역 사망자 수가 6.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4.5만 명), 경남(2.3만 명), 부산(2.3만 명), 경북(2.2만 명)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사망자 수는 해당 지역 인구 규모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를 보정한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그림 I-22] 시도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8



주: 1) 조사망률은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임.
2)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5년 주민등록연앙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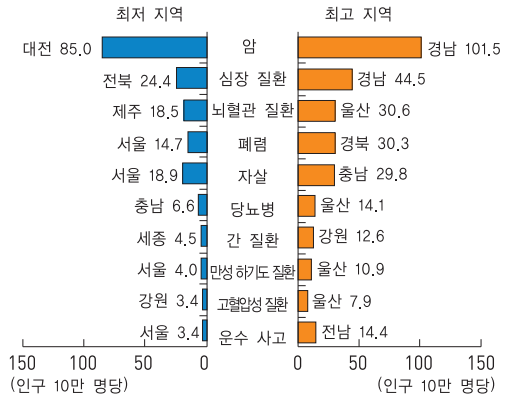
계산하여 보면, 전남(917.3명), 경북(835.8명), 전북(793.6명), 강원(781.2명) 등의 순으로 높다. 이는 대체로 고령화지수의 시도별 순위와 일치한다. 노인 인구의 비중과 사망률이 강한 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세종(425.3명), 울산(463.4명), 경기(466.9명), 서울(468.9명) 등은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연령구조의 영향을 제거하면 각 지역별 편차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울산이 355.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북(352.6명), 부산(350.8명), 경남(349.7명)의 순이다. 한편,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에는 서울(283.3명), 경기(306.8명), 대전(316.2명), 세종(318.2명)이 포함된다.

사망원인구조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그림 I-23]의 왼쪽에는 해당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 그리고 오

른쪽에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시되어 있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경남(101.5명)이 가장 높고, 대전(85.0명)이 가장 낮다.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경남(44.5명), 뇌혈관 질환은 울산(30.6명), 폐렴은 경북(30.3명), 자살은 충남(29.8명)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는 서울, 전북, 제주, 세종 지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 지역은 폐렴(14.7명), 자살(18.9명), 만성 하기도 질환(4.0명), 운수사고(3.4명)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전북은 심장 질환(24.4명), 제주는 뇌혈관 질환(18.5명), 세종은 간 질환(4.5명)에 의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23]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지역 편차, 2018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중고령자의 주요 사망원인

중고령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이들의 주요 사망원인이 각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I-13〉에는 2018년의 암, 치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연령집단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암에 의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 치매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특히 80세 이상 연령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60-64세 집단에서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3.5명에 불과하지만, 75-79세 집단 66.0명, 그리고 80세 이상 집단에서는 490.7명으로 현저하게 높아진다.

〈표 I-13〉 중고령자의 연령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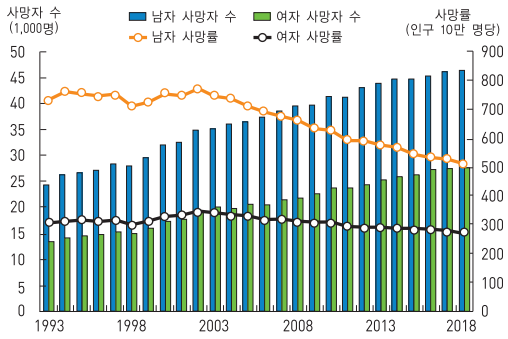
	암		치매		자살	
	사망자 수 (명)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명)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명)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0-54세	3,775	90.9	10	0.2	1,348	32.4
55-59세	6,341	148.4	45	1.1	1,464	34.3
60-64세	7,725	228.8	117	3.5	1,098	32.5
65-69세	8,618	367.4	156	6.7	782	33.3
70-74세	10,119	557.8	293	16.1	724	39.9
75-79세	14,205	896.0	1,046	66.0	940	59.3
80세 이상	23,441	1425.8	8,067	490.7	1,147	69.8

주: 1) 치매 사망은 혈관성 치매(F01),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에 의한 사망을 집계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8; 「주민등록연앙인구」 2018.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령과 U자형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50대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연령의 상승과 함께 점차 감소하다가 75세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망률의 경우에는, 50-6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75세를 기점으로 현저하게 높아진다.

[그림 I-24]는 암에 의한 중고령자의 사망수준을 성별로 보여준다. 남자와 여자 모두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사망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견된다. 남자 사망률은 2002년 770.5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 512.4명으로 낮아졌다. 한편 여자 사망률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의 감소폭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암으로 인한 남자와 여자의 사망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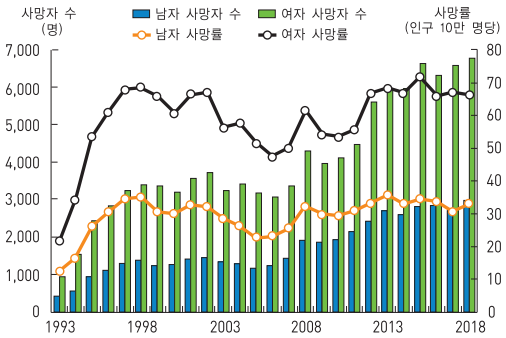
[그림 I-24] 중고령자의 성별 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3-2018



주: 1)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그림 I-25]에는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제시되어 있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남자와 여자 모두 시기별로 변화가 큰 편이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 여자의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치매 유병률이 남자보다 높은 것은 남녀의 호르몬, 교육수준, 평균 수명의 차이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찬녕, 박건우, 2012). 치매에 의한 사망률은 1993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8년 남자 35.0명, 여자 68.5명의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 후 사망률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여 남자는 2005년, 여자는 2006년에 각각 22.7명과 47.7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2018년에는 남자 32.9명, 여자 66.6명의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I-25] 중고령자의 성별 치매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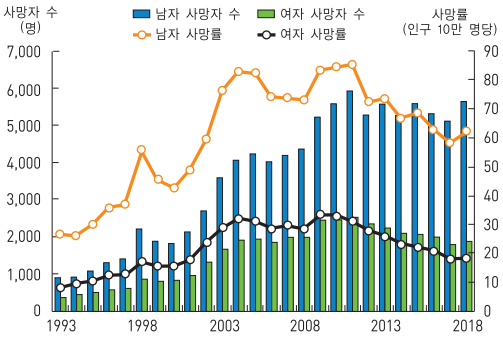
주: 1)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마지막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을 [그림 I-26]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가 가용해진 1993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던 사망수준은 90년대 후반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사망자는 남녀 각각 2,193명과 841명, 그리고 10만 명당 남녀의 사망률은 각각 55.7명과 17.0명으로, 특히 남자의 자살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00년대 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남자는 2011년 85.1명, 여자는 2009년 33.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I-26]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에 이르러 감소 추세가 관찰되며, 2018년 남녀의 사망률은 각각 62.2명과 18.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상 살펴본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살로 인한 한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7년 현재 23.0명으로, 리투아니아의 24.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림 I-26] 중고령자의 성별 자살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3-2018



주: 1)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참고문헌

이찬녕, 박건우. 2012. "치매의 위험인자".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Sep;13(3):129-132. https://doi.org/10.4093/jkd.2012.13.3.129.

2019 Family & Household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 서울대학교 56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한경혜 | 서울대학교 69

1인가구의 삶의 질 변미리 | 서울연구원 78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경혜 (서울대학교)

- 가족규모의 축소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와 1세대 가구의 증가, 노인부부 가구와 노인독거가구의 비율 증가와 관련이 있다.
- 연령대별 미혼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만혼화와 미혼율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에 따라 변화 추이가 달라서 20대 미혼율의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큰 반면, 30대부터 50대의 미혼율의 증가폭은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중년기 이혼의 증가로 평균 이혼연령은 꾸준히 높아졌다. 이혼은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들다가 2018년 증가하였다. 40-50대의 이혼의 경우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결혼과 재혼을 당위적으로 보는 시각이 약화되고 동거, 이혼에 대한 허용적 시각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혼외출산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근래에 올수록 전통적 성역할이 약화되고 가사노동이 남녀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일반화되었지만 가사노동 분담에서 실제 행동의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고 있다.
- 부모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감소하고, 가족, 사회, 정부 등 사회 전반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 부양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비율이 과거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부부 관계 만족도는 남편이 아내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부부 관계 만족도는 연령이 낮은 결혼초기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국 가족의 광범위한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족의 주요 변화 추이와 현주소를 가족구조, 가족의 형성과 해체, 가족관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족구조 영역에서 가장 괄목할 추세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슈페이퍼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구규모의 축소와 노인가구의 증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가족 형성과 해체 영역에서는 결혼 지연 경향, 이혼율의 변화,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 태도 및 양상, 노부모 부양 태도,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한국가족 구조의 변화로는 가구구성의 변화 및 소규모화, 노인가구의 증가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구구성의 변화 및 규모 축소

가구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90년 3.7명에서 2017년 2.5명으

로 크게 감소하였다. 통계청은 2019년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서 2047년에는 평균 가구원 수가 2.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규모의 축소는 출산자녀수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지만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1세대 가구나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과거 30여 년간 60%대를 유지해 오던 핵가족 가구의 비율이 2017년에는 47.5%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7년 28.5%로 27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47년에는 전체 가구 중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Ⅱ–1).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층에서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난 결과이다.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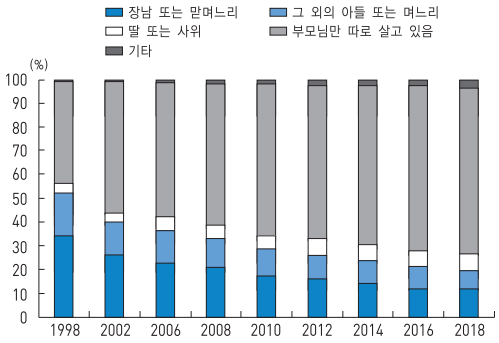
연도	평균 가구원수 (명)	세대별 구성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3	1.1
2005	2.9	19.9	16.0	55.7	6.9	1.4
2010	2.7	23.9	17.1	51.6	6.2	1.2
2015	2.5	27.2	17.3	48.9	5.4	1.1
2017	2.5	28.5	17.6	47.5	4.9	1.6
2025	2.3	32.3	19.9	42.3	3.7	1.8
2035	2.2	35.2	22.3	37.9	2.9	1.7
2047	2.0	37.3	23.3	35.5	2.3	1.7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2017년까지는 집계 자료이며, 이후 2045년까지는 추계치임.
5)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2015; 「장래가구추계」, 2019.

노인가구의 증가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만 따로 거주하는 비율이 1998년 43.1%에서 2018년 70.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이 노부모를 모시는 직계가족 유형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진행되었다. 1998년에 장남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노부모가 52.1%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는 19.3%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딸과 함께 사는 비율의 경우 1998년 4.4%에서 2018년

[그림 Ⅱ–1]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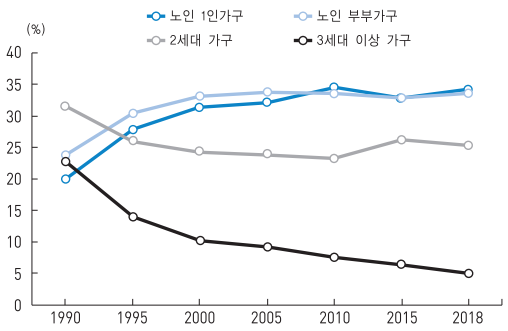


주: 1)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3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6.9%로 크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Ⅱ-1).

노인 가구 내에서의 가구구성 변화추이를 살펴보아도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 65세 이상 가구주 중 1인가구의 비율이 20.0%,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이 23.8%였지만, 2018년에 이르러서는 1인가구가 34.1%, 노인 부부가구가 33.9%로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는 감소하였다. 특히 노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1990년 65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구성에서 2세대 가구는 31.4%, 3세대 이상은 22.8%였지만, 2018년에는 2세대 가구가 25.3%, 3세대 이상 가구가 5.0%였다(그림 Ⅱ-2).

[그림 Ⅱ-2]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가구구성, 1990-2018



주: 1) 그 외 1세대 가구는 노인1인가구와 부부가구를 제외한 부부+친인척 등의 가구의 총합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2018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3) 통계치는 해당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로 자녀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가족의 세대관계가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정서적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들이 3세대 확대가족을 이루고 살기보다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2세대 가족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노인도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치 않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가 하면 건강과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노인들이 독립주거를 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가구의 약 2/3가 자녀의 결혼이나 상황에 의한 비자발적 별거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노인 독거가구 중 36.2%, 노인 부부가구 중 19.7%가 생활비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을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만 생활할 때 생기는 큰 어려움으로 17.3%의 노인이 경제적 불안감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실정임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2017년에 가구주가 18-65세인 가구의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3.5%인데 비하여 노인가구의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58.3%에 이른다.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도 근로연령 가구는 12.7%인 반면, 노인가구는 43.8%로 확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노인

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001년과 2018년 각각 14.7%와 24.7%이지만, 여성 수급자 중 고령 수급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1.0%와 39.5%에 이른다. 여성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남성 노인보다 훨씬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독거가구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함뿐 아니라 이외에도 아플 때 간호 문제(19.0%)와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10.3%) 등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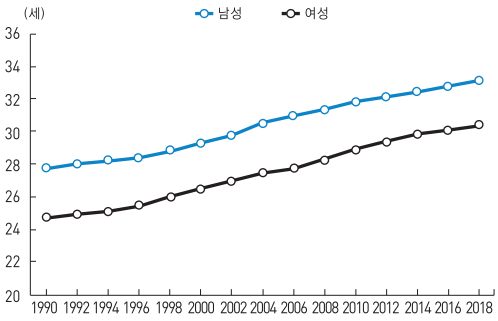
가족의 형성과 해체

최근 한국 가족의 가족형성 및 해체에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만혼화와 미혼율의 지속적 증가현상 및 이혼 양상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만혼화 경향과 미혼율의 증가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혼화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현상이지만 특히 지난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2018년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3.9세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3).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 실업과 취업난이 가중되어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미루게 된 것이 이러한 최근 초혼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결혼적령기 규범이 약화된 것 또한 초혼연령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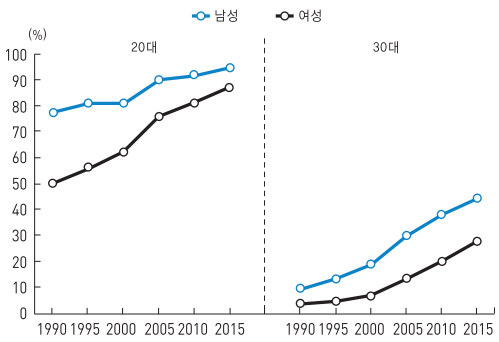
[그림 Ⅱ-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8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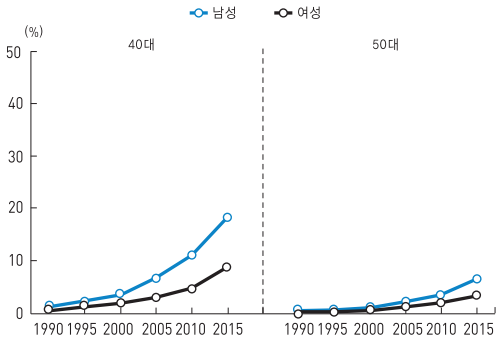
초혼연령의 상승과 만혼화는 20-30대 연령집단의 미혼율 증가로 나타난다. 이 연령층의 미혼율 증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미혼율은 1995년 39.2%에서 2015년 61.9%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2015년 기준 20-30대의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29세의 미혼율은 91.3%에 달한다. 30-39세의 미혼율은 2015년 36.3%로 1995년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35-39세의 미혼율은 1995년 5.0%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26.2%로 증가하여 30대 후반까지도 결혼하지 않은 인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Ⅱ-4).

[그림 Ⅱ-4] 20-3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0-2015



주: 1) 미혼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등록 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Ⅱ-5] 40-50대 연령층의 성별 미혼율, 1990-2015



주: 1) 미혼율은 해당 집단 인구 중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은 등록 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연령집단별 미혼율의 증가 추세는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 2015년 기준 20대 남성과 여성의 미혼율은 각각 94.7%와 87.5%로 남성의 미혼율이 7.2%p 더 높다. 그러나 20대 미혼율의 증가폭은 여성이 더 크다. 이와 달리 30대의 미혼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1995년 13.1%에서 2015년 44.2%로 31.1%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5.0%에서 28.1%로 23.1%p 증가하는데 그쳤다(그림 Ⅱ-4). 결혼연령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에 대한 압박이 여성에게 더 큰 것이 미혼율 증가 추세에서 이러한 남녀 차이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40대와 50대의 미혼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증가폭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크다. 40대 남성의 미혼율은 1995년 2.1%에서 2015년 18.2%로 9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50대 남성은 같은 기간 0.6%에서 6.4%로 5.8%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40대 여성의 미혼율은 1.5%에서 8.8%로 7.3%p 증가하였고, 50대 여성은 0.5%에서 3.3%로 2.8%p 증가하는데 그쳤다(그림 Ⅱ-5). 40-50대 남성의 미혼율이 여성에 비하여 급증한 이유로는 결혼적령 규범의 압박이 남성에게서는 여성보다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경제적 자원 등이 결혼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남성에게 더 큰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혼율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만혼화 경향이 가족형성의 지연을 나타낸다면, 이혼율은 형성된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조이혼율과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혼건수는 10만

8,684건으로 2017년 10만 6,032건에 비해 2,652건 증가하였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율도 2018년 4.5건으로 2010년 4.8건보다는 0.3건 감소하였지만 2017년 4.4건에 비해 0.1건 증가하였다(표 Ⅱ-2).

〈표 Ⅱ-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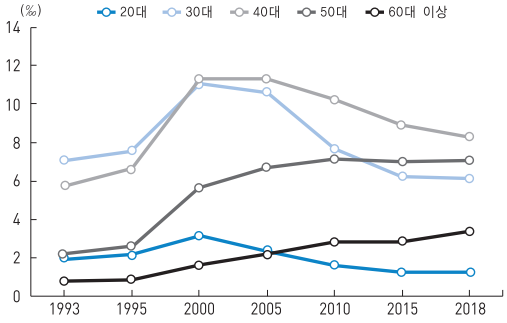
연도	이혼 건수 (1,000건)	조 이혼율 (‰)	일반 이혼율(‰)		평균 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0	45.7	1.1	2.9	2.8	36.8	32.7
1995	68.3	1.5	3.9	3.9	38.3	34.5
2000	119.5	2.5	6.4	6.3	40.1	36.5
2005	128.0	2.6	6.6	6.5	42.1	38.6
2010	116.9	2.3	5.6	5.6	45.0	41.1
2015	109.2	2.1	5.0	5.0	46.9	43.3
2018	108.7	2.1	4.9	4.8	48.3	44.8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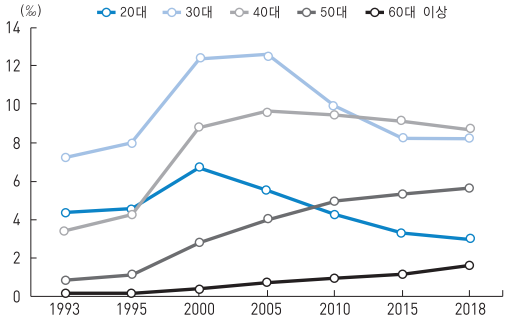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것은 이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각각 48.3세, 44.8세로 2000년에 비해서 8.2세씩 증가하였다(표 Ⅱ-2). 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림 Ⅱ-6]을 보면, 2005년까지는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 40대 이하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이혼율은 증가하였다. 2005년 30대와 40대 남성의 이혼율은 각각 해당 연령 남자 인구 1,000명당 10.7건과 11.3건이었으나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6.1건과 8.3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이혼율은 2005년 4.4건에서 2018년 5.1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30대와 40대 2005년 각각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12.6건과 9.6건에서 2018년 각각 8.2건과 8.7건으로 이혼율이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5년 2.1건에서 2018년 3.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6]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18

1) 남성



2) 여성



주: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결혼과 가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중년세대의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위하여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이혼억제 요인인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난 후에 중년세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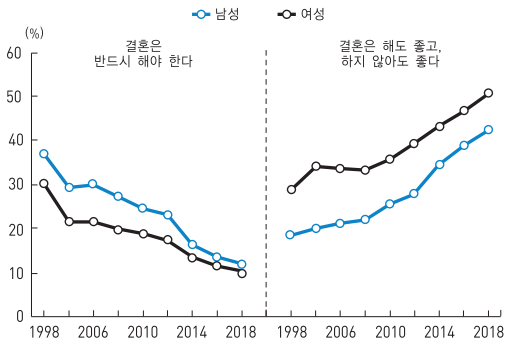
결혼, 이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

만혼화 경향과 미혼율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결혼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아니고 선택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8년–2018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남성의 36.9%와 여성의 30.5%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12.0%와 10.3%로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그림 Ⅱ–7).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비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998년에는 남성의 18.4%와 여성의 28.9%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018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42.3%와 50.8%로 증가하였다. 2018년 현재 남성의 40.8%, 여성의 33.2%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 제도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Ⅱ–7).

[그림 Ⅱ–7]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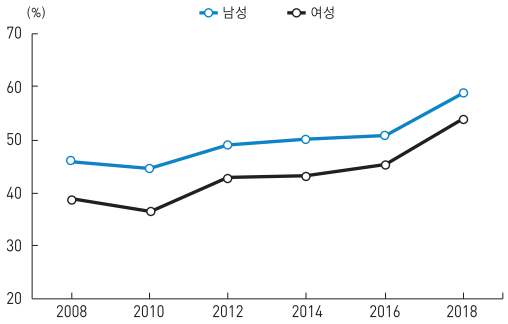


주: 1) 1998–2008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0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렇다면 동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만혼화와 미혼율의 증가현상이 반영되어 동거에 대한 태도가 더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의 58.9%와 여성의 53.9%가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하

였다(그림 Ⅱ-8). 일반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통념과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거에 대한 가치관은 남녀 모두 과거에 비해 보다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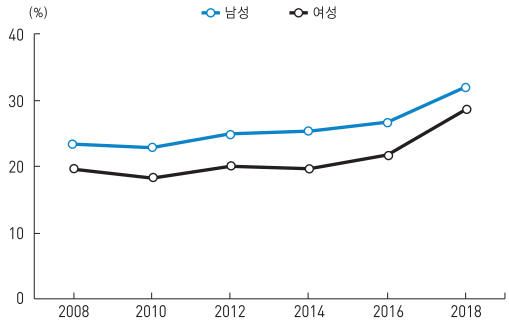
[그림 Ⅱ-8]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18



주: 1) 2008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0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동거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으로 변화된 것과 달리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는 그다지 허용적이지 않고 큰 변화도 없다. 혼외출산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8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남녀 모두 그 증가폭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혼외출산에 대한 허용적 태도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한 남녀가 각각 31.9%와 28.7%였다. 이는 2016년의 응답인 26.7%와 21.8%에 비해 불과 2년 사이에 각각 5.2%p와 6.9%p 증가한 수치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혼외출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9).

[그림 Ⅱ-9] 성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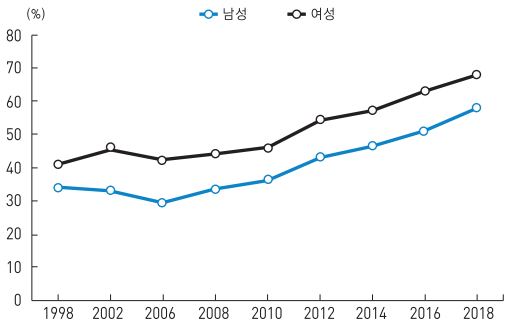


주: 1) 2008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0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1998년 이혼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남녀는 각각 34.0%와 41.1%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남녀가 각각 57.8%와 68.1%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

도를 가진 것이다. 또한 남녀의 차이가 상당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남녀 차이는 지속적으로 관찰된다(그림 Ⅱ-10).

[그림 Ⅱ-10] 성별 이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주: 1) 1998-2008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0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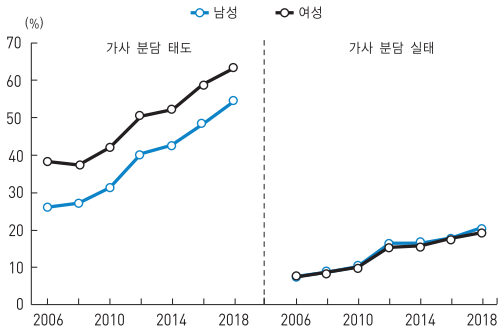
가족구조 및 가족형성의 변화와 함께 가족 내 전반적인 관계도 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함께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약화되면서 가족 내 젠더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 태도 및 양상의 변화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은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남성 54.6%, 여성 63.4%에 이른다(그림 Ⅱ-11). 하지만 실제 가사분담 행동은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18년 현재 남성 20.2%, 여성 19.5%에 그친다. 부부가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2006년에 남성 7.5%, 여성 7.9%에서 2018년에 남녀 각각 12.7%p, 11.6%p 증가했지만 공평한 가사분담을 지지하는 태도만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그림 Ⅱ-11).

[그림 Ⅱ-11]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18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2006-2008년은 만 15세 이상, 2010-2018년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19세 이상의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도 5년 전에 비해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불과 하루 5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미약하지만 남편의 가사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갈 길 또한 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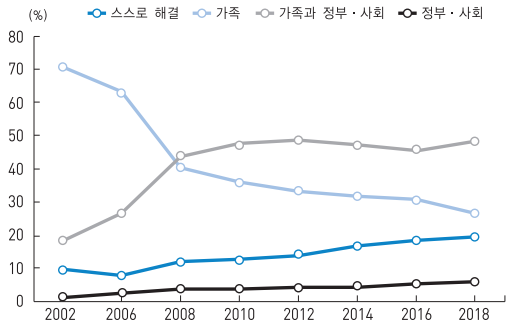
노부모 부양 태도 변화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세대관계의 지형도 크게 바뀌었다. 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부양 의식은 약화되었다. 최근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까지 생존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노인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과 며느리가 주로 노부모를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다. 그러나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청소, 빨래, 장보기 등 일상에서의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08년 40.5%에서 2017년 34.5%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세대가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대신 돌봄 제공자로서 배우자의 존재가 중요해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배우자와 거주하는 비율이 2008년 39.4%에서 2017년 48.4%로 증가하여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08년 79.1%에서 2018년 76.7%로 크게 차이가 없었다. 2008년,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배우자로부터 수발지원을 받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배우자의 돌봄의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요양보험의 확산과 요양센터의 확장 등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 사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또한 확대되었다.

[그림 Ⅱ-1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18



주: 1) 2002-2008년은 만 15세 이상, 2010-2018년은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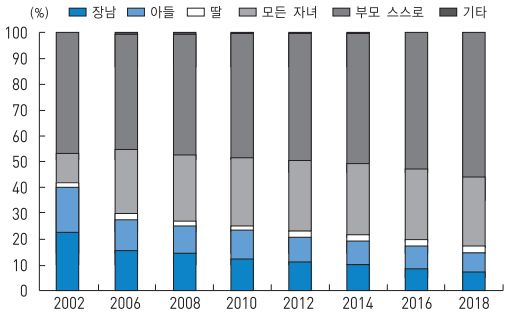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2002년과 2018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노부모 돌봄이 가족책임이라는 견해는 70.7%에서 26.7%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18.2%에서 48.3%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정부·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는 2002년 1.3%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7%로 늘어났다(그림 Ⅱ-12).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를 반영하듯이 노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부모 세대의 절반 이상인 55.5%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아들이나 딸 등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노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은 줄어들고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2002년 40.2%의 부모가 장남을 포함한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 2018년에는 14.9%만이 아들에게 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모든 자녀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27.2%로 장남이 책임지는 비율 7.5%와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 7.4%를 합한 것보다 더 높다(그림 Ⅱ-13).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아들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관계 만족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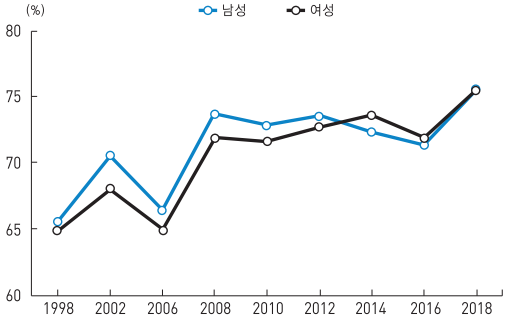
가족 관계 만족도를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1998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지만 그 변화가 일관되지 않았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 자녀와의 관계에

[그림 Ⅱ-13]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2002-2018



주: 1)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Ⅱ-14] 성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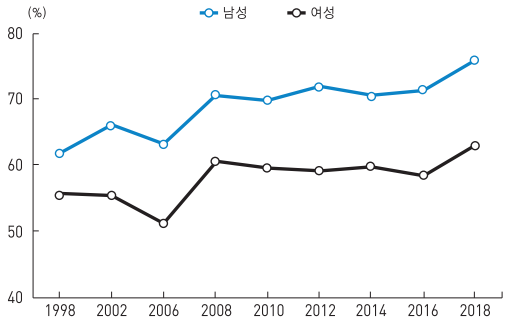
주: 1) 2002-2008년은 만 15세 이상, 2010-2018년은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자녀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65.5%, 여성이 64.9%였지만, 2018년에는 남성이 75.5%, 여성이 75.6%로 증가하였다(그림 Ⅱ-14). 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도 등락이 있어 꾸준한 증가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부부 관계 만족도는 지난 20년간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1998년 부부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61.8%, 여성이 55.7%였지만 2018년에는 남성이 75.9%, 여성이 63.0%로 부부 관계 만족도가 20년 전에 비하여 나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은 추세는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Ⅱ-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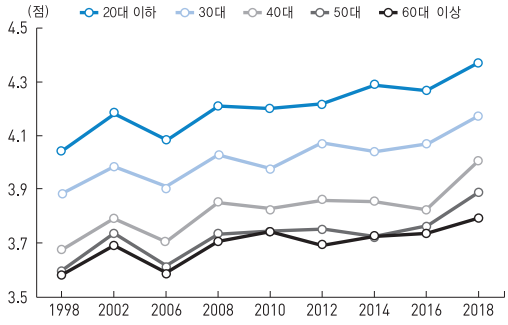
부부 관계 만족도는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부부 관계 만족도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관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변환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1998년 29세 이하의 부부 관계 만족도는 4.0점으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은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년간 지속되어 2018년에도 29세 이하 부부의 부부 관계 만족도가 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3.8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6). 이는 한 인구집단을 추적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관계 만족도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는 신혼기 부부가 중노년기 부부에 비하여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혼초기에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다가 결혼이 지속되면 점차 감소한다는

[그림 Ⅱ-15] 성별 부부 관계 만족도, 1998-2018



주: 1) 2002-2008년은 만 15세 이상, 2010-2018년은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부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부부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Ⅱ-16] 연령집단별 부부 관계 만족도, 1998-2018



주: 1) 2002-2008년은 만 15세 이상, 2010-2018년은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연령집단별 부부 관계 만족도는 해당 연령집단의 조사대상자가 부부 관계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1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경우를 5점으로 변환하여 평균을 계산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기존의 논의와 일치한다. 중노년층의 부부 관계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최근의 중노년층 이혼율 증가현상과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과 가구영역의 주요 변화들은 한국가족 구조와 행동의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 직계가족 및 핵가족의 비율 저하, 비혼, 미혼, 이혼의 증가 등 다양한 양상으로 구체화된 한국가족의 다양화는 가족규범의 억압력의 약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가족관련 가치관이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변화영역의 확대와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한경혜 (서울대학교)

-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2.3%가 지난 1년 동안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하였다.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28.4%에 그친 반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69.7%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노인의 63.2%는 배우자에게, 39.3%는 부모에게, 그리고 7.7%는 자녀에게 간병수발, 병원 동행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4.9%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의 제한으로 수발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으며, 이 중 28.4%가 이러한 가족원을 직접 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우자를 수발한 경우가 56.6%, 부모를 수발한 경우가 36.4%였으며 자녀를 수발한 경우는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가족원을 직접 수발한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58.6%가 70대 이상이었으며, 50대는 18.2%, 60대는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63.6%가 여성 중고령자였다.
- 10세 미만 손자녀를 직접 돌본 노인의 비율은 분석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6년 기준 1.4–3.8%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시간은 주당 평균 50.6시간으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손자녀 돌봄에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돌봄과 지원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돌봄'이 관심을 받으면서 노인을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여기서는 노인을 의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이 가족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의 복지에 있어서 가족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감안할 때, 부모가 노년기에 진입해서도 여전히 자녀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편, 수명의 연장과 함께 초고령기까지 생존하는 노인이 늘어났지만 초고령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초고령의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 역시 노년기의 자녀, 즉 노인의 몫인 경우가 많다.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06–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이 세대 관계의 위아래에 걸쳐 가족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도움, 지원 및 돌봄 행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대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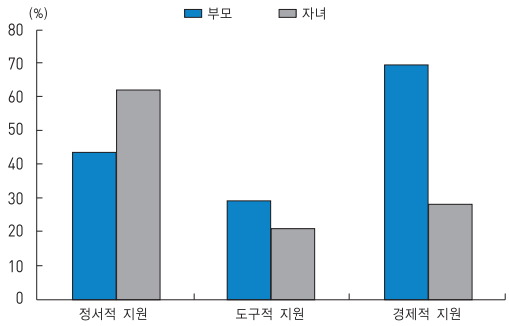
먼저,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위로 부모세대, 그리고 아래로 자녀세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양상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 노인 1만 299명 중 5.6%는 현재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부모가 생존해 있는 노인의 연령대는 65세에서 83세까지 분포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 노인의 97.3%는 현재 1명 이상의 생존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제공한 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Ⅱ-17]과 같다. 먼저 자녀에 대한 지원 정도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노인이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62.3%가 자녀에게 고민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지난 1년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노인의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의 경우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이 29.2%, 자녀에게 제공한 비율은 20.8%로 자녀보다는 부모에게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이 좀 더 빈번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흥미롭게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28.4%에 그친 반면, 69.7%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 위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부양의 전통적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초고령 노인에 대한 경제적 정책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종합하면 노인은 고민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Ⅱ-17] 노인의 부모·자녀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 제공 비율, 2017



주: 1) 65세 이상 노인 중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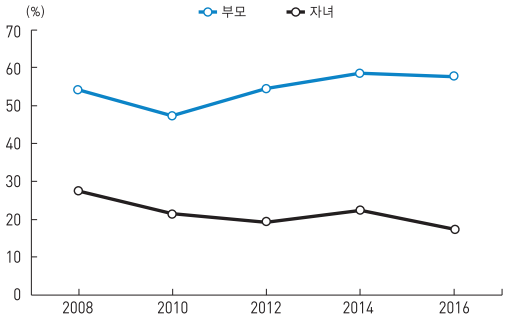
다음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세대 간 금전적 지원 제공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Ⅱ-18). 이 자료는 동일한 응답 대상을 매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노인세대가 자신의 부모 또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분석 결과, 부모가 생존해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2010년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57.7%가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세 이상 중고령자 5명 중 3명은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은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17.4%가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명 중 1명꼴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공 비율은 17–28% 수준에서 조금씩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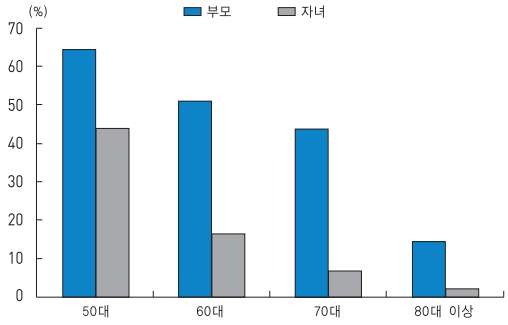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연령집단별로 자녀 또는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Ⅱ–19]와 같다. 먼저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60대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50대는 43.8%가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반면, 60대는 16.5%, 70대는 6.8%, 80대 이상은 2.2%가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8] 중고령자의 부모·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공 비율, 2008–2016



주: 1)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Ⅱ–19] 중고령자의 연령집단별 부모·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제공비율, 2016



주: 1)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2016.

다음으로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비율을 연령집단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의 감소 추이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50대는 64.2%, 60대는 50.8%, 70대는 43.6%, 80대 이상은 14.3%가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그림 Ⅱ–19).

간병 · 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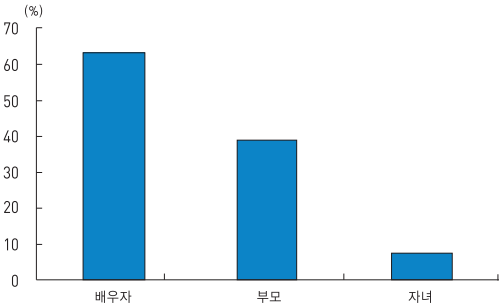
다음으로 노인이 가족원에게 간병·수발을 제공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은 일상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비교적 가벼운 지원 행동이라고 한다면, 간병·수발은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이 간병, 수발 또는 병원동행 등의 지원을 제공한 대상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연령 집단의 특성상 배우자에게 제공한 노인의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고,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은 39.3%, 자녀에게 제공한 비율은 7.7%로 나타났다(그림 Ⅱ-20).

다음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나타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족에게 제공하는 간병·수발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지, 즉 수발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2016년 기준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편한 가족원이 있는 경우는 4.9%였다. 이 중 28.4%는 이러한 가족원을 지난 1년간 직접 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가족을 직접 수발한 중고령자 중 2.0%는 2명 이상의 가족원을 동시에 수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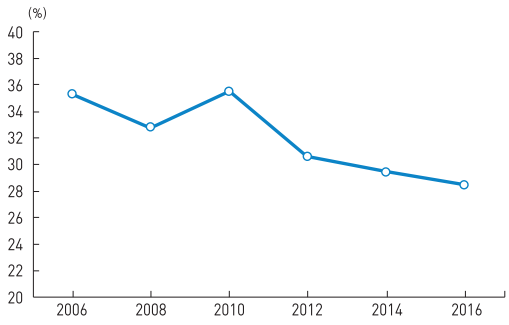
[그림 Ⅱ-21]에 제시된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가족을 직접 수발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6년에 가족을 직접 수발한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율은 35.3%였던 반면, 2016년에는 28.4%로 감소하였다. 즉, 아픈 가족원을 직접 수발하기보다는 간병인을 통해 수발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그림 Ⅱ-20] 지원대상별 노인의 간병·수발·병원동행 지원 제공 비율, 2017



주: 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17.

[그림 Ⅱ-21]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 비율, 2006-2016



주: 1)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직접 가족원을 수발하는 중고령자의 비율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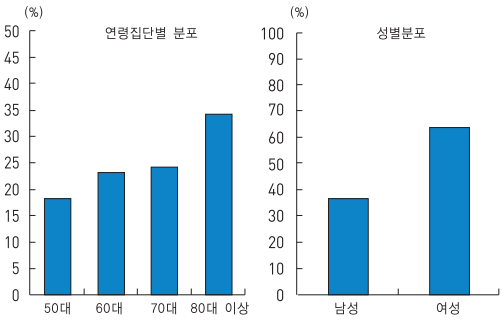
이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것과 함께 동일 응답자를 반복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보인다.

가족원을 직접 수발한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Ⅱ-22). 2016년 자료를 보면, 50대가 18.2%, 60대가 23.2%, 70대가 24.2%, 80대 이상이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은 것은 배우자 수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을 수발한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63.6%는 여성, 36.4%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수발한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배우자를 수발한 경우였고, 다음으로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Ⅱ-23). 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족을 수발한 중고령자의 56.6%가 배우자를 수발한 경우로 나타났고, 25.3%는 본인의 부모, 11.1%는 배우자의 부모, 9.1%는 자녀를 수발한 경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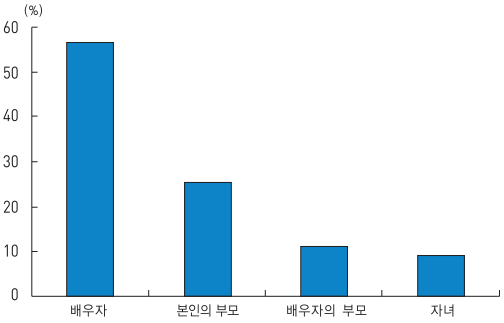
성별로 수발대상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족 수발은 주로 여성 노인의 몫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Ⅱ-24).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수발한 경우 여성 노인이 수발한 비율이 남성 노인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체 수발자 중 배우자를 수발한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은 33.3%, 남성은 23.2%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수발한 중고령자는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부모를 수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성 수발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수발자 중 본인의 부모를 수발한 남성은 13.1%였고, 여성은 12.1%로 나타났다.

[그림Ⅱ-22]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6



주: 1)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가족원을 직접 수발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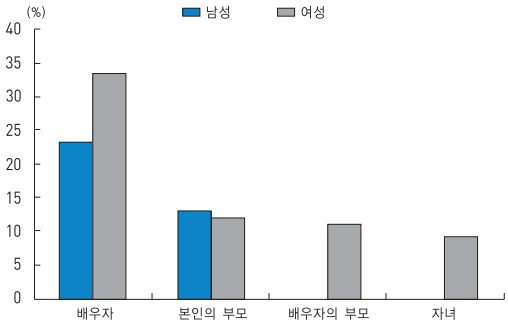
[그림Ⅱ-23]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의 수발대상별 분포, 2016



주: 1)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가족원을 직접 수발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2) 둘 이상의 가족원을 수발한 중고령자가 있어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를 넘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2016.

2016년에 지난 1년간 가족을 수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발시간을 살펴본 결과, 일주일에 평균 29.5시간 정도를 가족을 수발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대 주당 168시간을 가족 수발에 쓴 경우도 있었다. 수발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10시간 미만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20시간 미만인 경우가 22.4%로 많았다. 수발시간의 백분위 수를 살펴보면, 상위 25%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가족 수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하루 중 5-6시간 정도를 가족원 수발에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24] 가족원 수발 중고령자의 성 및 수발대상별 분포, 2016



주: 1)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가족원을 직접 수발하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2) 둘 이상의 가족원을 수발한 중고령자가 있어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를 넘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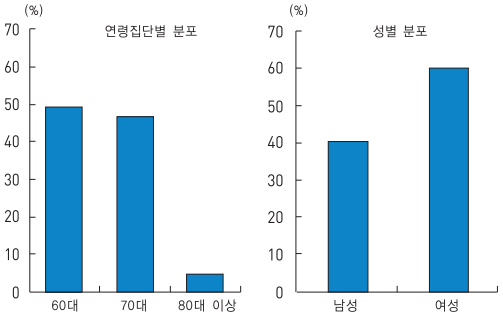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직접 수발하는 중고령자와 간병인 등 다른 사람에게 수발을 맡기는 중고령자의 연간 가구소득을 비교해 보았다. 이때, 연간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로 나누어 보정하였다. 그 결과, 직접 수발하는 노인의 가구소득이 더 낮게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가족을 직접 수발한 중고령자의 연간 가구소득은 900여 만 원, 간병인 등 다른 사람에게 수발을 맡긴 중고령자의 연간 가구소득은 1,700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간병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손자녀 돌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손자녀 돌봄 양상은 [그림 Ⅱ-25]와 같다. 2017년 기준 전체 응답 노인의 3.8%가 지난 1년간 10세 미만의 손자녀를 직접 돌봐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본 노인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대는 49.1%, 70대는 46.3%, 80대 이상은 4.6%였다. 그리고 손자녀를 돌본 노인 중 여성 노인의 비율은 63.5%로 남성 노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손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 남성노인이 36.5%에 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들 남성 노인의 특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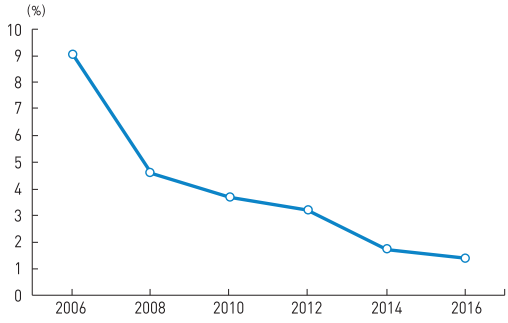
한편,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50대 및 60대 초반의 조부모가 제공하는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보는 빠져 있다. 직접적 양육을 가장 필요로

[그림 Ⅱ-25] 손자녀 돌봄 노인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7



주: 1)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적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17.

[그림 Ⅱ-26]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손자녀 돌봄 비율, 2006-2016



주: 1) 손자녀가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직접 돌본 적이 있는 중고령자의 비율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는 10대 미만의 어린 손자녀를 둘 가능성이 높은 50-60대 초반 연령집단이 빠지게 되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 50-60대 초반 연령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살펴보았다.

2016년 기준 손자녀를 둔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의 양육을 도와준 적이 있는 중고령자의 비율은 1.4%로 나타났다(그림 Ⅱ-26). 손자녀 양육에 조부모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매우 낮은 비율이 나타났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의 10.4%가 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에서 손자녀 돌봄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패널조사를 시작한지 10년이 경과하여,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자와 손자녀의 연령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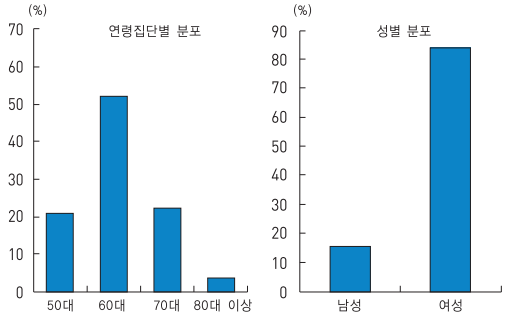
[그림 Ⅱ-26]은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중고령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2006년의 경우 9.0%의 중고령자가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봤지만, 2016년에는 1.4%의 중고령자만이 손자녀를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이는 지난 10년간 영유아 보육지원이 확대되어 보육의 사회화가 진행된 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손자녀의 성장에 따른 돌봄 필요의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중고령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Ⅱ-27). 그 결과 60대일 때 손자녀를 돌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손자녀를 돌본 중고령자 중 52.6%는 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70대가 22.4%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대 또한 21.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손자녀를 돌본 중고령자 중 8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손자녀를 돌본 중고령자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그림 Ⅱ-27). 그 결과, 여성 중고령자가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손자녀를 돌본 노인 중 여성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4.2%, 남성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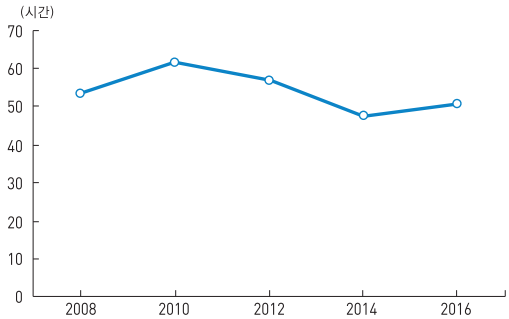
[그림 Ⅱ-27] 손자녀 돌봄 중고령자의 연령집단 및 성별 분포, 2016



주: 1)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직접 돌본 적이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2016.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 중고령자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손자녀 돌봄에 쏟은 시간을 살펴보면 손자녀 돌봄에 쏟고 있는 시간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간 10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경우 2016년 기준 주당 평균 50.6시간 정도를 손자녀 돌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28).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손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양상에서는 특별한 추세를 관찰할 수 없고, 50-60시간 내외에서 약간의 등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28] 중고령자의 주당 손자녀 돌봄시간, 2008-2016



주: 1) 지난 1년간 10세 미만 손자녀를 직접 돌본 적이 있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손자녀를 돌보는 데 소요된 주당 평균 시간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맺음말

이 글에서는 노인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 및 돌봄 양상을 살펴보았다. 수명의 연장으로 위로는 초고령 노부모가 생존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은 초고령부모 돌봄 뿐 아니라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필요시 지원을 제공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돌봄 및 지원의 종류에 따라 제공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이 단순히 지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의 주체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효(孝) 규범의 약화와 가족가치의 변화로 자녀로부터의 돌봄보다 배우자 간 돌봄이 증가한

측면은 노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노노케어'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한편,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현실은 이들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돌봄(self care)'의 주체로서 적극적 돌봄의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을 사회적 지원의 수혜자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다.

1인가구의 삶의 질

변미리 (서울연구원)

- 1인가구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부상했으며, 우리 사회는 1인가구와 2인가구 중심의 '축소가구'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전체 1인가구 중 30-40대 1인가구가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50-64세 1인가구는 25.1%로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인가구는 경제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와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이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분야이다.
- '스스로 선택한' 1인가구보다 '비자발적' 1인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향후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와 가구 특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감소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구 규모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타당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가구구조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유형이 4인가구에서 1인가구와 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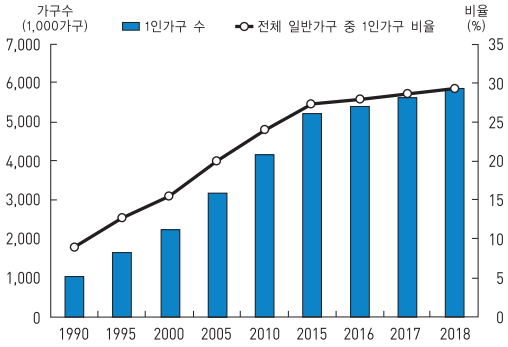
기억해보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우리 사회의 캠페인이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혼자 살아간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집단별로 이질적인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슈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자리 잡은 1인가구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1인가구, 우리 사회의 '보통가구'로 성장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1인가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일반가구의 27.2%를 차지해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으며, 2018년 현재 585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1990년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의 9.0%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222만 가구로 증가하여 전체 일반가구의 15.5%를 차지하였고, 불과 5년 후인 2005년에는 전체 일반가구의 20.0%에 달했다.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 가구 중 한 가구인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그림 Ⅱ-29).

[그림 Ⅱ-29] 1인가구 수와 비율,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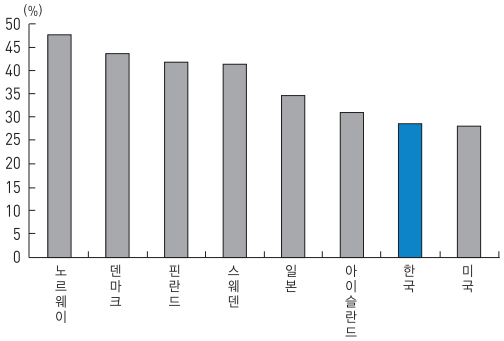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유형은 부모와 2명의 자녀로 이뤄진 4인가구였다. 2010년에는 2인가구가 24.3%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해 소형가구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5년에 1인가구가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일반화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사회 전반적인 만혼 현상,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경제환경의 변화, 교육환경 요인으로서의 기러기 가족 현상, 중장년 이혼율의 증가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이른 많은 세계 주요 도시나 국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로 2017년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1인가구 비중은 각각 47.5%, 43.5%, 41.7%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도 34.5%에 달하며,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27.9% 수준이다(그림 Ⅱ-30). 통계청이 2019년에 추정한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47년 37.3%까지 증가해 832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때가 되면 1인가구와 2인

[그림 Ⅱ-30] 한국, 일본, 미국 및 북유럽 국가의 1인가구 비율, 2017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국가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북유럽 국가의 경우 「EU-SILC survey」 자료 이용, 그 외 국가는 각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함.
3) 일본은 2015년 자료이고, 아이슬란드는 2016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7.
European Commission,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Statistics of Japan, e-Stat(https://www.e-stat.go.jp/en/).
U.S. Census Bureau.(https://www.census.gov/).

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7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혹은 둘이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모습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다.

1인가구의 특성

성별 · 연령별 분포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남성은 291만 가구, 여성은 294만 가구로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1인가구의 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남성 95만 가구, 여성 128만 가구로 10여 년 전에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많아, 지난 10여 년 사이 남성 1인가구의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2000–2018년 사이 남성 207.5% 증가, 여성은 130.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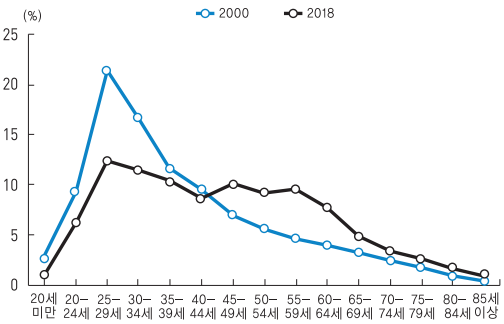
2018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의 31.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64세의 1인가구가 25.1%,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24.7%, 20대 이하 1인가구가 18.4%를 차지한다.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Ⅱ–31]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58.6%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2018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40대부터 60대 초반의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60–70대 고령층과 20대 청년층 비중이 높았는데, 2018년에는 60–70대 비중이 줄고, 40대 후반과 50대의 중장년층과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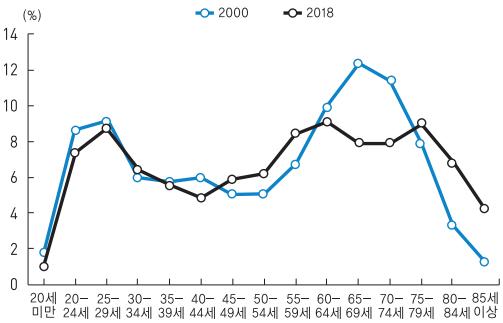
남녀 모두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증가는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 가족의 해체, 기러기 가족으로 대표되는 교육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Ⅱ–31] 1인가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2000, 2018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혼인상태별 분포

1인가구의 혼인상태 분포를 통해 1인가구 증가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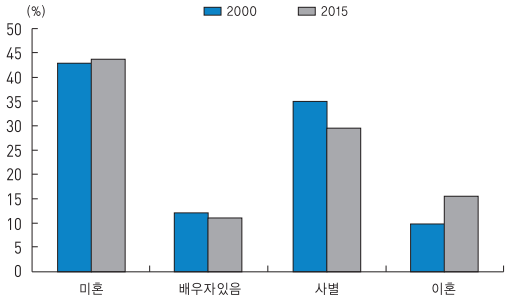
르면,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43.8%, 이혼이 15.5%, 사별이 29.5%, 배우자있음이 11.1%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2000년과 비교하면 이혼은 5.7%p 증가했고, 사별은 5.6%p 감소했으며, 미혼과 배우자있음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그림 Ⅱ-32-1).

1인가구의 연령집단별 미혼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5-34세 94.7%, 35-44세 74.4%, 45-54세 36.3%로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晩婚) 혹은 하지 않는 비혼(非婚)으로 인해 1인가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5-44세, 45-54세 집단의 2000년 기준 미혼 비율이 각각 48.3%, 15.5%로 이들 연령층에서 지난 15년 동안 미혼이 빠르게 증가했다(그림 Ⅱ-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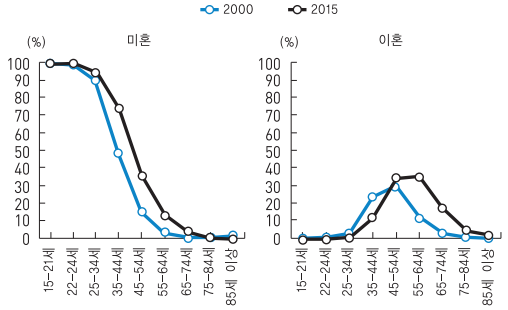
1인가구의 연령집단별 이혼가구 비율은 44세 이하는 감소하고 45세 이상은 증가했다. 2015년 이혼가구 비중이 가장 큰 연령집단은 55-64세로 35.2%가 이혼가구이며, 45-54세의 34.1%, 65-74세의 16.2%, 35-44세의 12.1%가 이혼가구이다. 2000년에 65-74세에서 이혼가구는 3.0%에 불과했다. 이렇듯 혼인상태의 변화, 즉 가족형성의 지체나 비혼, 이혼 등의 이유가 고령화 요인과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32-2).

[그림 Ⅱ-32] 1인가구의 혼인상태 분포, 2000, 2015

1) 혼인상태별 구성비율



2) 연령집단별 미혼 및 이혼 가구 비율



주: 1) 2000년 자료는 미상 제외, 2015년 자료는 20% 표본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2018.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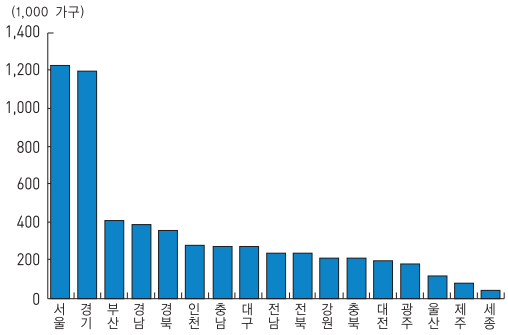
지역별 분포

발전된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1인가구 규모에 비해 도시지역의 1인가구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1인가구 비율과 서울 등 대도시의 1인가구 비율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1인가구의 규모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성이 뚜렷하다.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1인가구 규모가 가장 큰데, 2018년 서울 1인가구는 122만 9,421가구, 경기도는 119만 7,586가구로 두 지역의 1인가구를 합하면 전체 1인가구의 41.5%를 차지한다(그림 Ⅱ-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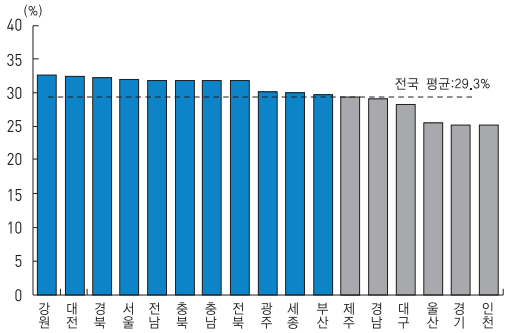
시도별로 전체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지역은 강원, 대전, 경북, 서울, 전남북, 충남북, 광주, 세종 등이다(그림 Ⅱ-33-2).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인

[그림 Ⅱ-33] 1인가구의 시도별 분포, 2018

1) 시도별 1인가구 수



2) 시도별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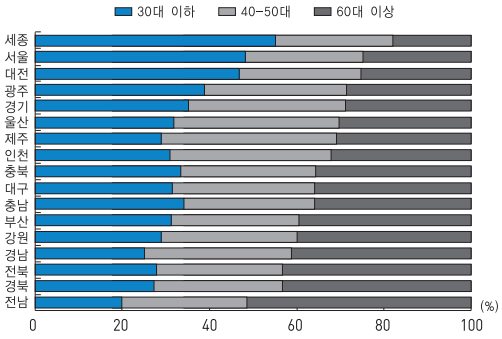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시도 전체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구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림 Ⅱ-34]에 제시된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강원, 경남북, 전남북 등은 주로 고령층 1인가구 비중이 높지만, 대전, 서울, 세종 등은 젊은 연령층 1인가구 비중이 더 높다. 1인가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남녀 모두 20대 중후반의 비중이 가장 크다. 대전의 경우 젊은 연령층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세종시 형성과 함께 직업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북, 전남북 등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 1

[그림 Ⅱ-34] 시도별 1인가구의 연령 분포, 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8.

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청년 1인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 고령 1인가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1인가구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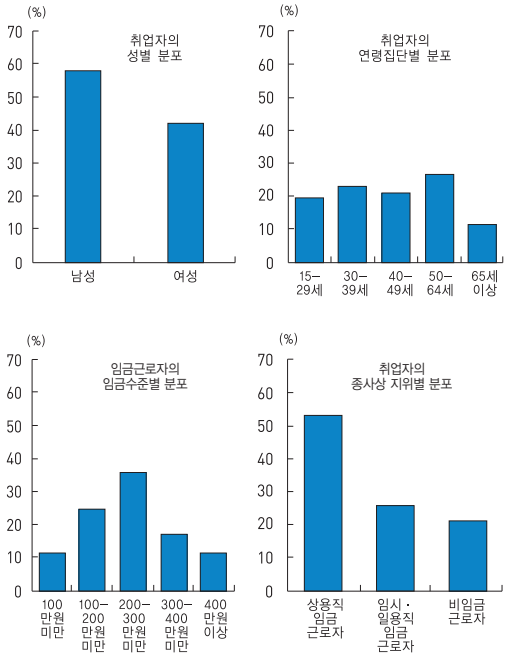
경제활동과 주거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중 61.1%가 취업상태에 있다. 특히 취업자 중 50-64세 중장년층 비중이 26.6%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57.7%, 여

성 42.3%로 남성 취업자가 여성에 비해 15.4%p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인가구의 월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이 11.3%, 100–200만 원 미만이 24.6%, 200–300만 원 미만이 35.7%, 300–400만 원 미만이 17.1%, 400만 원 이상이 11.3%로 임금근로자 1인가구의 35.9%가 200만 원 미만 소득자이다. 취업자 1인가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3.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가 25.8%, 비임금근로자가 21.0%로 나타난다(그림 Ⅱ–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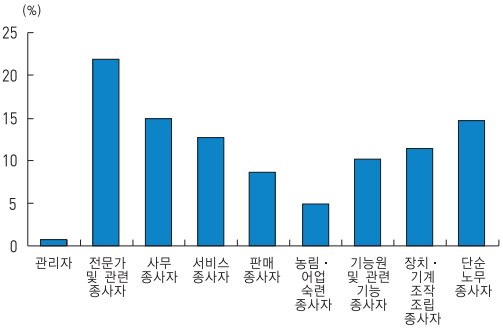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9%, 사무 종사자 14.9%, 단순노무 종사자 14.7% 순으로 1인가구 내부에 이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인가구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는 '빈곤'이지만, 1인가구 중 일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누리는 '자발적 1인가구'도 있다(그림 Ⅱ–36).

[그림 Ⅱ–35] 1인가구의 취업상태, 2018. 10.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 25.

[그림 Ⅱ–36]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 2018. 10.



출처: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 25.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문제 중 한 축이 '빈곤'으로, 위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에서 1인가구의 경제환경의 질이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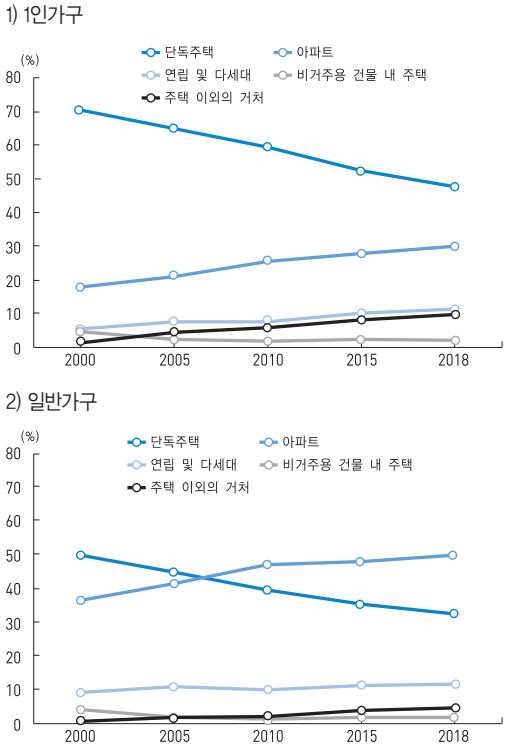
1인가구의 삶의 질에서 주거환경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도시에서 1인가구의 주거는 거처의 종류와 점유형태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 1인가구가 많이 느끼는 안전의 문제, 청년 1인가구의 정주성 등은 주거환경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다.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거처

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단독주택이 47.2%, 아파트가 29.9%,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0.9%이다. 일반가구는 단독주택이 32.1%, 아파트가 50.1%,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11.6%이다. 물론 1인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2000년 70.2% → 2010년 59.4% → 2018년 47.2%) 여전히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그림 Ⅱ-37).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주거의 질은 더욱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9-34세 청년 1인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6.2%, 전세 21.8%, 보증부 월세 56.8%, 보증금 없는 월세 9.8%, 무상 5.4%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일반가구(20.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선 외, 2017). 또한 이들은 원룸이나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등 주거취약 형태로 분류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2016년 기준 청년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원룸(68.9%)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은 6.7%로 일반가구 평균(3.9%)보다 높다(표 Ⅱ-3). 이러한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는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높아 대도시 지역 청년 1인가구의 주거의 질이 열악하다(박미선 외, 2017).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의 관련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

[그림 Ⅱ-37]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거처의 종류, 2000-2018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Ⅱ-3〉 지역별 주거취약 청년 1인가구 비율, 2016

(%)

구분	원룸	주거취약	지하·반지하·옥탑방	쪽방
일반가구	9.4	3.9	3.1	0.4
청년 1인가구	68.9	6.7	5.4	1.1
서울	69.0	15.7	12.3	3.5
수도권	70.4	11.6	9.7	2.0
지방	67.0	0.4	-	-

주: 1) 청년 1인가구는 19-3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주거취약에는 지하·반지하·옥탑방과 쪽방 그리고 3인 이상 쓰는 단칸방 등을 포함. 3인 이상 단칸방은 그 비율이 낮아 따로 표기하지 않음.
3)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박미선 외, 2017.

난다. 특히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진다. 2017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17.6%, 전세 22.9%, 보증금 있는 월세 45.9%, 보증금 없는 월세 10.2%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다인가구(2인, 3인 이상)는 자가 비중이 50%를 넘으며, 보증부 월세는 2인가구가 21.8%, 3인 이상 가구는 12.3%로 나타나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서울시, 2018).

사회활동과 주관적 만족감

1인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한 또 다른 한 축은 '고립'의 문제이다. 대개 사람들은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이 형성된 가구의 경우 혈연으로서의 가족 연결성이 존재하며 종교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와 연계해 고립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1인가구의 사회활동도 일반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까?

〈표 Ⅱ-4〉에 제시된 2015년 기준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6.8%로 전체 인구(20세 이상)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인 69.0%보다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75.0%, 여자 78.3%가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다.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2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장 낮았으며,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를 보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등이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라는 결과가 많다. 1인가구의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활동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고립'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표 Ⅱ-4〉 1인가구의 성 및 연령집단별 사회활동 참여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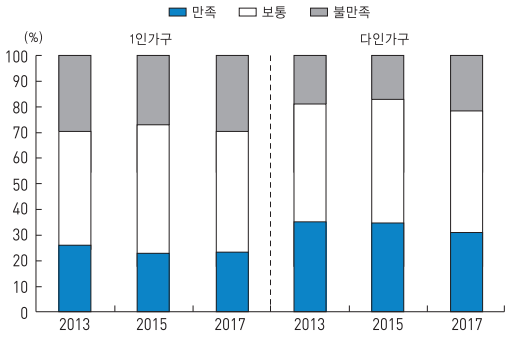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참여함	25.0	22.8	25.7	27.2	26.8	24.5	19.6
참여 안함	75.0	77.2	74.3	72.8	73.2	75.5	80.4
여성							
참여함	21.7	19.0	21.4	24.7	28.0	27.2	16.5
참여 안함	78.3	81.0	78.6	75.3	72.0	72.8	83.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1인가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까?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1인가구의 23.3%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보통 47.1%, 불만족 29.7%로 나타났다. 이러한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다인가구 가구원의 30.8%가 만족하다고 응답). 또한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그림 Ⅱ-38).

[그림 Ⅱ-38]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가구원의 주관적 만족감, 2013-201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비와 여가, 일상생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은 1인가구를 부러워한다. 1인가구는 혼자 벌지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모든 걸 소비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1인가구의 소비 양상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들여다보자. 〈표 Ⅱ-5〉에 제시된 것처럼, 1인가구는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및 음식·숙박비의 지출 비중이 높다. 1인가구의 소비 지출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본 생활비(음식, 숙박, 주거, 교통)에 대부분을 소비한다. 특히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경우 먹고(식료품) 사는(주거, 수도, 광열) 항목이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1인가구는 혼자 사는 자유로움을 누리고자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기개발 교육이나 오락문화 등의 항목에 기꺼이 비용을 지출할 여유가 없다.

〈표 Ⅱ-5〉 전체 가구와 1인가구의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2017

(%)

	전체 가구	1인가구					
		전체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14.1	12.7	7.1	8.3	9.9	13.8	25.0
주류·담배	1.4	2.2	1.7	2.4	2.8	2.8	1.5
의류·신발	6.2	6.0	6.5	6.9	6.7	5.2	4.4
주거·수도·광열	11.1	18.1	19.8	15.9	16.1	17.1	21.4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4	3.4	2.3	3.0	3.4	4.4	4.2
보건	7.1	6.6	3.0	4.5	5.0	8.3	12.6
교통	14.4	12.9	12.2	16.6	15.9	12.8	7.0
통신	5.4	4.6	5.3	5.1	4.7	4.3	3.4
오락·문화	6.8	6.9	8.7	8.5	6.6	5.6	4.6
교육	7.4	3.1	7.6	1.0	3.2	3.1	0.2
음식·숙박	13.9	16.6	20.0	21.1	18.2	15.0	8.2
기타 상품·서비스	7.9	7.0	5.8	6.8	7.5	7.6	7.4

출처: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보도자료, 2018. 5. 30.

1인가구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주중 주요 여가활동은 TV시청이 과반이 넘는 56.4%로 나타났으며, 휴식활동(14.7%), 컴퓨터·게임 등(9.4%), 취미·자기개발활동(6.7%), 스포츠활동(5.7%)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여가 불만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4.4%),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19.7%), 시간 부족(15.1%),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1인가구 일상생활과 관련해 서울시의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중 '혼자 여가를 즐긴다'는 비율이 46.4%에 이르며, 혼자 사는 것에서 가장 큰 고충은 주거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과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관계적, 감정적 측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밥 먹기', '집 구하기' 등이다. 특히 1인가구의 일상에서 불편한 것 중 하나는 '밥 먹기'인데, 1인가구의 71.9%는 아침을 거르고, 62.2%는 아침이나 저녁 등을 대충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2015). 이렇듯 1인가구의 일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1인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경제활동, 주거, 사회활동, 소비와 여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1인가구를 둘러싸고 있는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가 1인가구를 '탈 1인가구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회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1인가구의 증가가 사회 공동체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생애사 전체를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1인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한 1인가구들은 스스로 선택한 1인가구의 삶보다는 어쩔 수 없는 외부 조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화 된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3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로 살아갈 만큼 증가했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사람'들을 향한 '비정상성(非正常性)'에 대한 시선이 존재한다.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삶의 질이 열악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원과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주거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대안적 주거모델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은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과 공동체 연결성이 약한 편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중장년기에 느끼는 삶의 불안정성과 고립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중심의 연결망을 통한 지원서비스 정책은 중장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1인가구는 중고령자와 유사한 낮은 경제 지위, 고립감,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 삶의 마무리 단계로의 이행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개선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맞이할 죽음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영역은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 속도에 조응할 만한 준비를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서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과 정책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1인가구의 문제는 온전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미선 외. 2017.「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서울시, 2018.「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의회. 2015.「서울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2019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 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0

건강불평등 강영호 | 서울대학교 101

흡연과 음주 실태 조병희 | 서울대학교 110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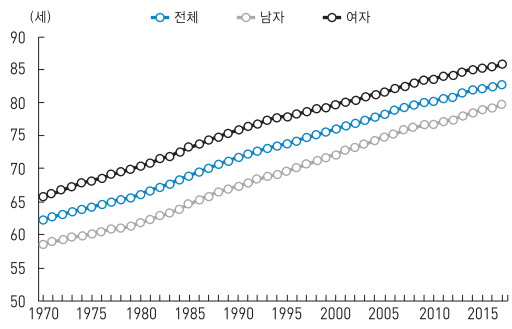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OECD 선진국 국민들과 대등한 수준이다.
-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암과 자살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 흡연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은 상승하고 있다.
-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
-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고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 의료서비스 대기시간, 치료결과,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이 많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기대수명 등 사망과 유병 지표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과 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이용도 등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건강과 질병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로 기대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기대수명이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7년 70세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82.7세가 되었다(그림 Ⅲ-1).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은 미국 78.6세, 영국 81.3세, 네덜란드 81.8세, 프랑스 82.6세, 독일 81.1세, 이탈리아 83.0세 등의 분포를 보인다.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80.7세로 우리나라가 2.0년 더 길다.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7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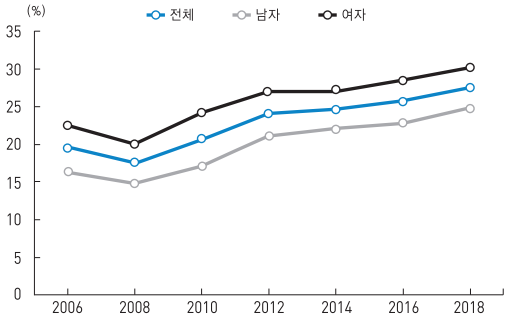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8세로 7.1세 차이가 났고 이후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남녀 간 수명 차이가 6.0세로 줄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 차이는 2017년 기준 독일 4.7세, 스웨덴 3.3세, 아이슬란드 3.2세, 덴마크 3.9세, 영국 3.6세, 미국 5.0세, 프랑스 6.0세 등으로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할수록 수명의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노년기의 삶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만성퇴행성 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으로 인해 와병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고려하여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측정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0세(남자 70.7세, 여자 75.1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2.7세)과 약 9.7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의 경우 기대수명은 84.2세이고 건강수명은 74.8세로 약 9.4세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독일 71.6세, 프랑스 73.4세, 영국 71.9세, 미국 68.5세 등의 건강수명을 보였다. 건강수명의 측면에서도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15세 이상 국민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8년 43.7%, 2010년 37.6%, 2014년 32.5%, 2017년 29.5%로 계속 하락해왔다. 2017년 OECD 국가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67.9%인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 측면에서 한국인이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건강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는 2018년 48.7%가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과반에는 미달한다.

질병상태의 총괄적 지표는 유병률이다. 유병률 측정에는 통상 조사 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이 사용된다. 지난 10여 년간 2주간 유병률은 1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상승하였다. 2018년의 2주간 유병률은 27.5%이며, 와병일수는 0.5일이었다.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그림 Ⅲ-2). 사망률은 남자가 높지만 유병률은 여자가 높은 것이 선진 산업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즉 활동제한율은 2017년 기준 5.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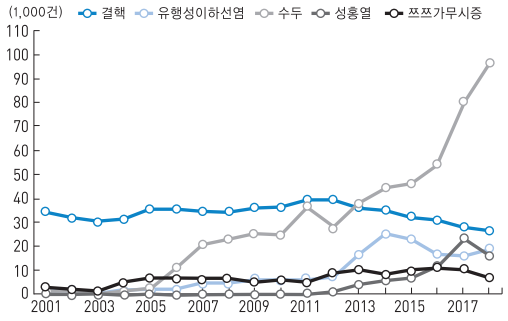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8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요 감염성 질환의 발생건수(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높은 발생률을 보이던 결핵이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쯔쯔가무시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Ⅲ-3).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공기 전파로 집단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건수, 200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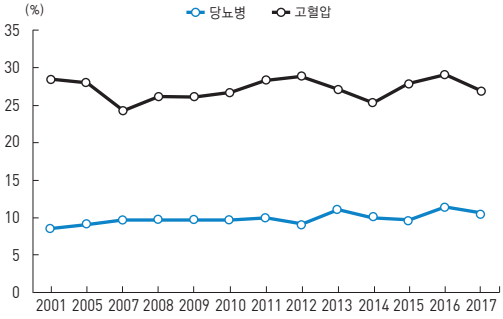


주: 1)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연보」, 각 연도;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각 연도.

다음으로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5%, 2005년 9.1%, 2013년 11.0%, 2015년 9.5%, 2016년 11.3%, 2017년 10.4%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Ⅲ-4).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5%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8.9%까지 높아진 후 2013년 27.2%, 2014년 25.4%로 낮아졌다가 2015년 27.8%, 2017년 26.9%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7



주: 1)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2018.

림 Ⅲ-4). 당뇨병은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당뇨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 유병률의 증가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2015년 기준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7.2%로 OECD 국가 평균 7.0%을 약간 상회한다. 특히 선진국보다는 터키,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성장 국가들에서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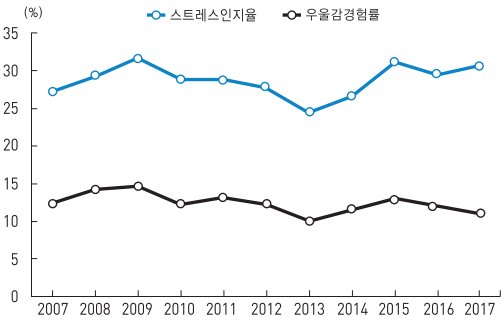
암 발생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립암센터의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수, 즉 암 조발생률은 2001년 232.3명에서 2005년 302.2명, 2010년 417.0명, 2012년 452.5명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 448.4명이 되었다. 한 시점에서의 인구 대비 암 환자수를 의미하는 암 유병률은 2016년 기준 3.4%(남자 3.0%, 여자 3.8%)이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된 한국의 연령표준화 암 발생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9.0명(남자 298.0명, 여자 254.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00.3명(남자 338.7명, 여자 271.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고령층일수록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정신건강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7년 27.1%에서 2009년 31.5%로 높아진 후 2013년 24.4%, 2015년 31.0%, 2017년 30.6%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Ⅲ-5).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자가 40.8%, 직장 스트레스 경험자 71.8%,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자 54.4%로 다수의 한국인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과거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로 측정하는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12.5%, 2009년 14.7%, 2011년 13.2%, 2013년 10.2%, 2017년 11.2%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남자 9.1%, 여자 13.4%로 여자가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표 Ⅲ-1〉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총 사망

[그림 Ⅲ-5]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7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2) 우울감 경험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에 2주 이상 연속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임. 2014년과 2016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2018.

률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8년 582.5명을 기록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지만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629.6명, 여자 사망률은 535.6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8배 높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순환기계 질환, 폐렴, 자살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18년 154.3명으로 증가하였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순으로 높다.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2.7명이 되었다. 한편, 사고와 손상에 의한 외인 사망 중에서 운수사고 사망은 1995년 38.7명에서 2018년 9.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은 1995년 10.8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8년 26.6명이 되었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평균이 11.5명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순위의 외인사는 낙상(추락)에 의한 사망인데 2003년 인구 10만 명당 7.3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여 2012년 4.2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 5.2명이 되었다. 세대별 사인을 살펴보면 1-9세에서는 암과 운수사고, 10-30대는 자살, 암, 운수사고 등이 주요 사인이며, 40대와 50대는 암과 자살, 60대 이상은 암과 심장 질환이 주요 사인이 된다.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8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전체	532.1	523.3	505.1	512.0	541.5	582.5
악성신생물(암)	110.5	122.4	134.6	144.4	150.8	154.3
내분비질환	18.8	25.0	25.6	22.3	22.9	20.1
순환기질환	138.9	123.8	116.5	112.5	116.9	122.7
호흡기질환	24.4	34.0	29.4	37.1	54.6	73.6
소화기질환	39.2	31.5	23.2	22.2	23.0	24.2
운수사고	38.7	25.5	16.4	13.7	10.9	9.1
자살	10.8	13.7	24.8	31.2	26.5	26.6
낙상(추락)	5.3	5.8	6.5	4.3	4.6	5.2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 병'이라고 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17년 2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Ⅲ-2). 여기에서 흡연율은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를 합한 수치이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은 평균 18.0%인데,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흡연인구 비율은 17.5%이다. 한국의 흡연율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은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크다. OECD 국가들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22.5%와 13.8%인데, 한국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31.6%와 3.5%이다. OECD 국가들은 흡연율 자체가 낮고 남녀 간 차이도 작은 반면,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 간 차이도 크다.

성인의 음주율은 큰 변화 없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17년 기준 남자 86.1%, 여자 75.0%로 흡연과 달리 음주는 여자들도 하는 경우가 많다(표 Ⅲ-2).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측정한 고위험 음주율은 2017년 남자 21.0%, 여자 7.2%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 수준을 측정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7ℓ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8.9ℓ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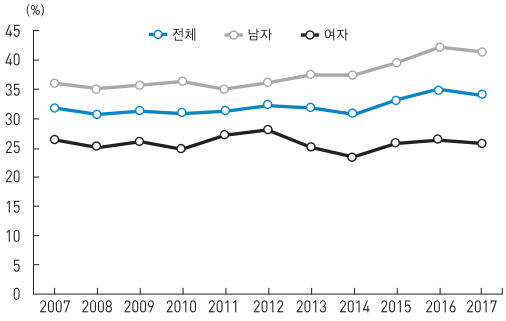
(%)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흡연율							
전체	28.8	25.3	27.2	27.0	24.1	22.6	22.3
남자	51.6	45.0	46.9	47.3	42.1	39.3	38.1
여자	5.7	5.3	7.1	6.8	6.2	5.5	6.0
음주율							
전체	78.4	74.8	77.0	79.2	77.0	78.5	80.3
남자	86.4	85.0	86.0	88.0	85.9	86.6	86.1
여자	70.9	65.1	68.4	71.1	68.7	70.8	75.0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술을 1회 이상 마신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2018.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31.7%가 되었고, 2017년에는 34.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6]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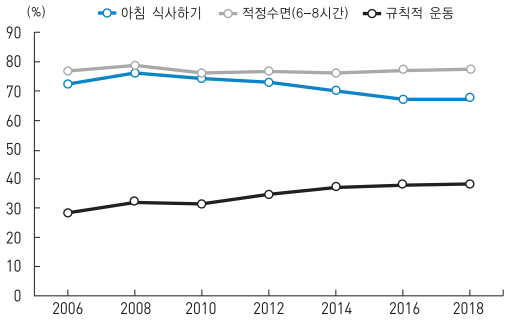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국민건강통계」, 2018.

2017년 기준 비만율은 남자 41.6%, 여자 25.6%로 남자가 더 높다(그림 Ⅲ-6).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7년

5.4%로 OECD 국가 평균 24.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건강실천의 방법으로 아침식사 여부, 적정수면 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아침식사 실천율은 2008년 76.2%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67.3%로 낮아졌다. 하루 6-8시간의 적정수면 실천율은 큰 변화 없이 7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06년 28.3%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38.3%로 높아졌다(그림 Ⅲ-7). 아침식사는 초졸 86.2%, 대졸 61.1%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한다. 반면 규칙적 운동은 초졸 34.2%, 대졸 41.7%로 학력이 높을수록 규칙적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수면은 학력 간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Ⅲ-7]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8



주: 1) 각 실천율은 만 13세 이상 인구(2006년은 만 15세 이상) 중 해당 건강관리행동을 평소 실천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의 지표는 의사 수와 간호사 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7년 1,090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7년 237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도 341명에서 73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3).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7

	2000	2005	2010	2015	2017
면허 의료인					
전체	578	715	857	1,010	1,090
의사	154	177	205	227	237
간호사	341	443	545	664	730
활동 의료인					
의사	130	163	198	224	234
간호사	298	384	461	594	691

주: 1) 전체 면허 의료인 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2) 활동의사 수와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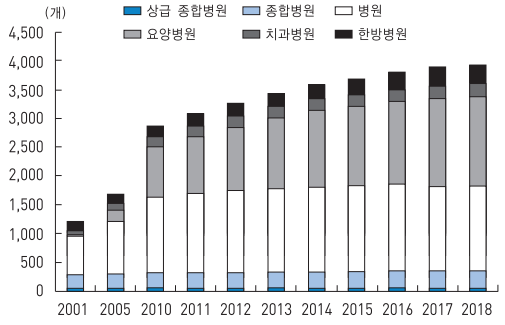
의사인력은 증가하였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practic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임상의사 수는 234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44명보다 훨씬 적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더 부

족하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임상간호사 수는 평균 920명인데, 한국은 691명에 불과하다. 의료인력의 부족은 인력분포의 지역적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과부담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규모로는 수천 병상의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일반병원 이외에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 요양병원도 있다. 2001년에 1,194개이던 병원 수가 2010년 2,859개, 2018년 3,92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는 같은 기간에 25.2개에서 76.0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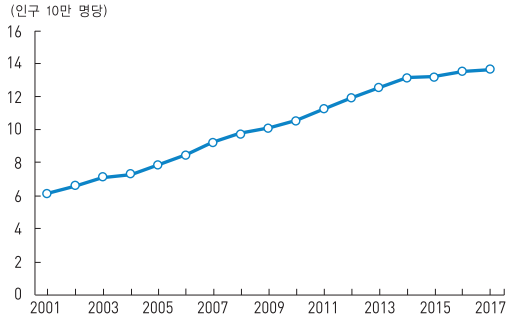
[그림 Ⅲ-8]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상 수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001년 6.1개에서 2017년 13.7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Ⅲ-9). 종합병원 병상은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종합병원 병상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Ⅲ-8] 종별 병원 수, 2001-2018



주: 1)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시설규모와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구분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Ⅲ-9]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7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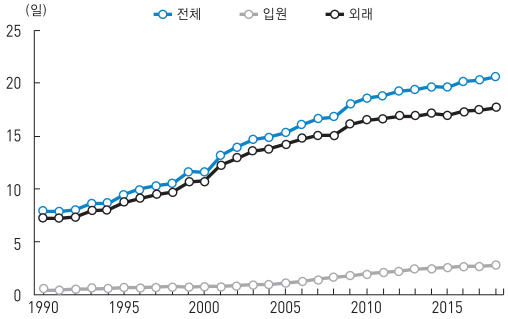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3.2일, 2010년 18.6일, 2018년 20.6일이 되었다(그림 Ⅲ-10). 국민 1인당 연 2.9일 입원하고 17.7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 국제통계를 보아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7년 기준 한국은 16.6회로 OECD 국가 평균 6.8회의 약 2.4배나 된다.

예방보건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각각 78.5%와 50.4%에 달한다. 2010년에 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약 10.3%p 상승하였고 암검진 수검률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그림 Ⅲ-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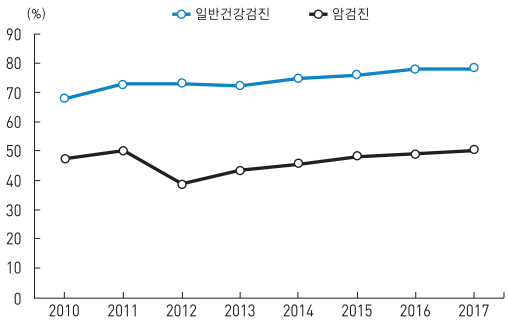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144조 원이 되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는 매우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8년 기준 한국이 8.1%로 OECD 국가 평균 8.8%보다 낮다. 그렇지만 [그림 Ⅲ-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0]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 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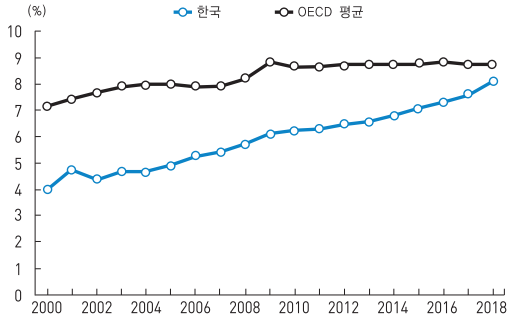
주: 1)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횟수=연간내원일수÷연평균건강보험적용인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그림 Ⅲ-1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7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1차 검진 기준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건강검진통계연보」, 2018.

[그림 Ⅲ-12]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8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공적 부담의 비율이 40.1%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18년 기준 59.8%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율이 평균 73.8%와 비교하면 한국은 공공 부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병 치료비는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법정 급여비,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질병치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급여비의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 한다. 이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의 개인적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체로 8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에 65.0%이던 것이 2017년에 62.7%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가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문재인 케어는 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자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끝으로 의료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 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유방암 환자 5년 생존율은 86.3%로 OECD 국가 평균 84.7%보다 높다. 대장암 환자 5년 생존율도 한국이 71.6%로 OECD 국가 평균 62.4%에 비해 크게 높다. 급성심근경색 30일 치명률이 한국 10.4, OECD 10.1로 비슷한 수준이다. 불필요한 입원율은 1차 보건의료가 취약하여 만성적 증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구 10만 명당 천식 입원률이 한국 94.5, OECD 47.4로 한국이 매우 높다. 당뇨병 입원자 수도 한국 281.0명, OECD 국가 평균 140.5명으로 한국이 약 두 배나 많다. 즉, 의료기술의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분야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관리가 아직 미흡한 부분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는 의료이용자의 평가 또는 서비스 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에는 만족 57.8%, 보통 31.6%, 불만족 10.6%로 나타난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불만족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로 파악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51.5%), 비싼 의료비(49.1%), 치료 결과 미흡(45.9%), 과잉진료(35.8%), 진료 불성실(27.4%) 등이 주요 불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전문의료인력 부족(15.4%)이나 의료시설 낙후(10.3%)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시설과 인력 같은 의료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고, 진료대기시간이나 의료진의 태도, 치료 결과, 의료비 같은 제도적 요인이 불만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그 자체로 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최근 OECD는 '환자경험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

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였는지를 묻는다. OECD 몇몇 국가들이 보고한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환자경험으로 측정한 만족도가 뒤처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의사와 충분한 상담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유럽 국가들은 모두 우리보다 만족도가 10% 이상 높다.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가에 대해서도 비교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사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Ⅲ-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표 Ⅲ-4〉 OECD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 2016

(%)

	충분한 진료시간	의사설명 이해용이	의사에게 질문기회	치료방법 결정참여
한국	77.9	87.1	81.7	81.8
일본	39.0	93.4	92.3	-
이스라엘	85.4	89.4	88.0	82.2
에스토니아	86.7	85.8	86.8	79.5
포르투갈	89.6	96.3	91.8	90.9
호주	90.1	-	-	-
뉴질랜드	92.6	89.9	-	86.6
룩셈부르크	95.5	97.4	95.3	95.6
체코	97.2	96.2	94.0	81.8
벨기에	97.5	97.8	97.7	95.1

주: 1) 각국 만 16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진료 시 해당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환자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건강불평등

강영호 (서울대학교)

-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된 양극화와 함께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격차 크기는 유지 또는 증가하였다.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는 증가하였고, 향후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낮았다.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낮은 시군구에서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소득 간 격차가 컸다.
- 시군구 지역 간 기대수명의 격차보다 지역 내 소득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큰 양상이다.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관적 건강수준에서의 소득 5분위 간 건강불평등 크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큰 편이다.

건강불평등이란 건강에서 평등하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 건강불평등은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지역에 따른 건강지표의 차이로 표현된다. '저승사자도 차별 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위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현상을 건강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과 같은 의미로 '건강격차'가 사용되기도 하며 건강형평성은 건강불평등이 없는 상태이다.

건강불평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고학력, 비육체직에 종사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고 육체직에 종사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시 평균 체중이 낮다.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 문제를 지닌 아동의 비율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각종 사고(교통사고, 익수사고 등)로 사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담배를 끊을 가능성은 작아진다. 낮은 계층의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직장에서 좋지 않은 노동환경과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 이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일찍 허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진다. 모든 사람이 장수를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사회계층 사다리에 비례하여 평균적으로 사는 기간이 달라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우리나라 연구를 통해 보고된 결과이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펼쳐질 건강상태의 궤적이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이처럼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을 아기의 개별적 신체 특성이나 아이

의 부모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이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건강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공정하지 않은 건강이라는 문제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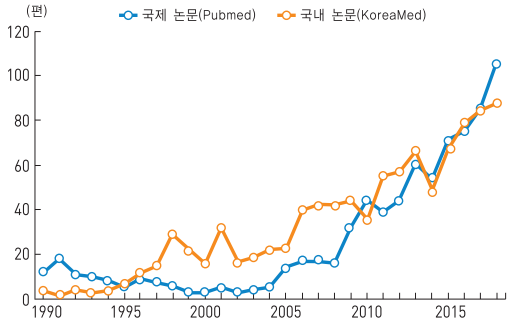
건강불평등 수준은 사망률,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건강수준 지표, 흡연과 음주 같은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등의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사망률,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수준과 같은 지표는 대표적인 건강수준 지표로 건강불평등을 기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사망률,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수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의 시계열 추이, 현황,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본다.

건강불평등의 추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불평등은 최근 현상인가? 건강불평등은 언제부터 보고되었나? 우리나라에서 건강불평등 현상은 1950년대부터 보고되어 왔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영아사망률이 차이가 난다든지, 교육수준이나 직업에 따라 아동과 성인 사망률에 차이가 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건강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림 Ⅲ-13]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 분야 국제 논문과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다룬 논문 수는 2000년대 이후에 큰 증가세이다. 특히 국내 연구는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양극화, 소득불평등 증가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에 조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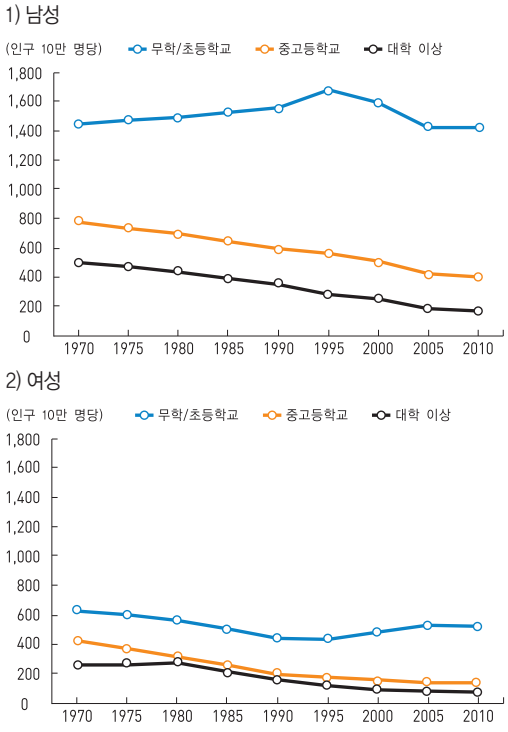
[그림 Ⅲ-13] 국내외 건강 분야 주요 논문DB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다룬 논문 수, 1990-2018



주: 1) 국제 논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검색 사이트(PubMed)에서 'Korea', 'socioeconomic'을 제목이나 초록에서 사용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임.
2) 국내 논문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KoreaMed)에서 'socioeconomic'를 주제어로 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임.
출처: KoreaMed(https://koreamed.org/).
PubMed(https://www.ncbi.nlm.nih.gov/pubmed/).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크기는 증가하고 있는가? [그림 Ⅲ-14]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25-64세 성인 남녀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제시한 것으로 건강불평등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남녀 모두에서 1970년에 비해 2010년에는 대학 이상의 학력자와 무학/초등학교 학력자 간 사망률의 차이가 커졌다.

[그림 Ⅲ-14] 25-64세 성인 남녀의 교육수준별 사망률, 197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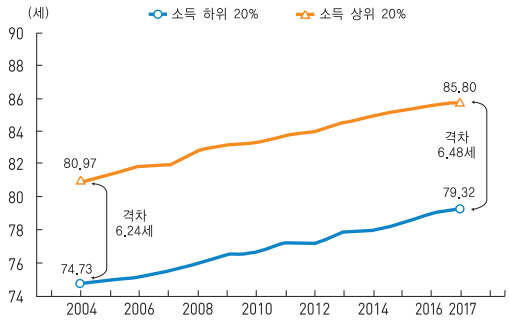
주: 1) 사망률은 2005년도 센서스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임.
출처: Bahk et al., 2017.

우리나라의 사망률에서 교육수준별 불평등 크기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무학/초등학교 학력자들을 배려한 의미 있는 고용정책과 소득정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무학/초등학교 학력자들이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발전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1970년에는 무학/초등학교 학력자가 25세 이상 성인 남성의 61.0%, 여성의 84.6%를 차지했고, 2010년에는 각각 5.1%, 9.8%로 감소하였다. 지난 40년간 무학/초등학교 학력자가 사회적으로 주변화한 집단이라는 점을 해석에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력별 인구분포의 시계열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불평등의 크기를 시기별로 비교하였는데, 건강불평등 크기가 감소하는 양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근의 건강불평등 추이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그림 Ⅲ-15]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소득지표로 삼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기대수명의 소득 5분위 간 격차를 살펴본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가 2004년 6.24세에서 2017년 6.48세로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통계청의 「2017년 생명표(전국 및 시도) 작성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을 모두 제거했을 때 상승 가능한 기대수명 증가분이 6.84세이고, 암 사망만을 없앴을 때에는 기대수명이 3.78세 증가한

[그림 Ⅲ-15]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2004-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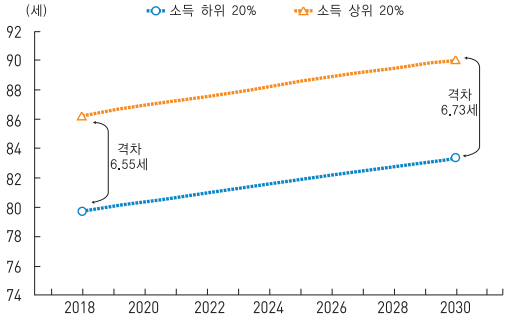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로 소득 5분위별 0세 기대여명을 제시함.
출처: Khang et al., 2019.

다. 즉, 소득 하위 20%에서 아무도 암으로 사망하지 않더라도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그림 Ⅲ-16]은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의 격차가 2030년까지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준다. [그림 Ⅲ-16]과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가 6.73세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Ⅲ-16]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전망, 2018-2030



주: 1) 2004-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전수자료)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사망률 자료를 활용하여 'Lee-Carter Method'를 활용하여 2018-2030년 기간을 예측함.
출처: Khang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 건강불평등의 크기가 모든 지표에서 증가하고 있다고는 결론 내릴 수 없다. 지역의 박탈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이 발견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흡연율은 지난 20여 년간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증가하였다. 다양한 건강지표에서의 불평등 추이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요 건강지표에서 건강불평등의 크기는 유지 또는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망률과 기대수명에서의 교육 및 소득 계층 간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였을까? 이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건강불평등 추이의 결정요인은 상세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크기가 증가해왔고,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도 소득불평등의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불평등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 확대와 관련성이 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부분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은 질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으로의 노출에 영향을 미쳐 차별적 건강결과를 낳게 하는 데, 이에 비해 건강보험이 강조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은 대체로 질병 발생 후에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의료서비스가 건강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불평등의 현황: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한 사회의 건강수준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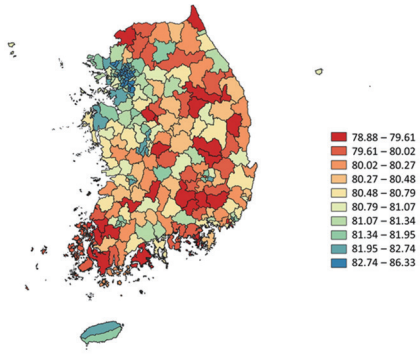
정부가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도 건강수명이 건강수준 총괄지표로 쓰인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불평등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7]부터 [그림 Ⅲ-20]까지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로서 지역별, 소득수준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에서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그림 Ⅲ-17]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252개 시군구별 기대수명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강남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과 경기도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등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기대수명이 높은 반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군 지역에서는 기대수명이 낮은 양상이다.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간에 기대수명 격차가 존재하지만,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는 기대수명 전국 평균값보다 높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대수명이 높은 반면,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대수명은 낮은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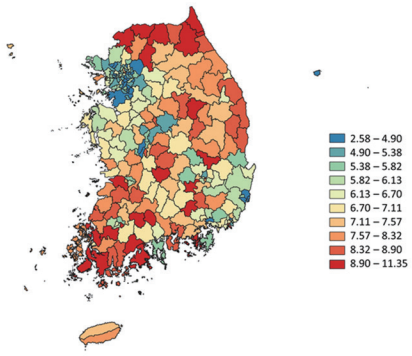
[그림 Ⅲ-18]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개별 시군구 내에서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기대수명 격차를 보여준다.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기대수명 격차가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2.58세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 간 기대수명의 차이보다 지역 내 소득 5분위 간 격차가 큰 양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가장 낮은 자치

[그림 Ⅲ-17] 시군구별 기대수명, 2010-2015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252개 시군구별 출생 시 기대여명을 산출함.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2010-2015년 자료를 합하여 산출함.
2) 붉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이 낮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이 높음.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2018.

[그림 Ⅲ-18]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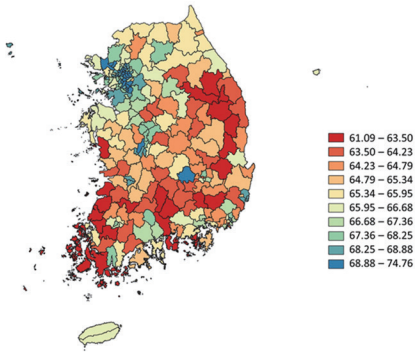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252개 시군구별 출생 시 기대여명을 산출함. 자료의 안정성을 위해 2010-2015년 자료를 합하여 산출함.
2) 파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 격차가 작고, 붉은색이 진할수록 기대수명 격차가 큼.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2018.

구의 기대수명 차이는 3.1세이지만, 한 자치구 내의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3.1세보다 큰 값을 보인다. 이는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역 내 낮은 소득계층의 기대수명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국적으로는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서 기대수명의 소득 5분위 간 격차도 큰 양상을 보여준다. 한 시군구의 기대수명 평균값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의 기대수명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작은 울산시 동구와 북구는 근로자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특성이 상대적으로 균질하기 때문에 기대수명의 소득 5분위 간 격차가 작지만, 이 두 지역의 평균 기대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림 Ⅲ-19]는 2008-201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252개 시군구별 건강수명을 보여준다. 건강수명은 사망지표는 물론 유병지표도 반영하기 때문에 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기대수명의 전국 순위와 건강수명의 전국 순위에 차이가 비교적 큰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수명이 높은 지역이 건강수명도 높은 양상이다. 그 이유는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강남 지역과 경기도 일부 시 지역(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경기도 과천시)의 건강수명이 높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일부 군 지역에서 건강수명이 낮은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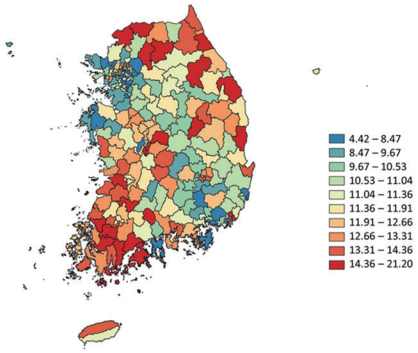
[그림 Ⅲ-19] 시군구별 건강수명, 2008-2014



주: 1) 2008-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252개 시군구별 사망률 자료를 산출하고, 2008-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유병률 자료를 산출한 후, 'Sullivan method'로 건강수명을 계산함.
2) 붉은색이 진할수록 건강수명이 낮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건강수명이 높음.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2018.

[그림 Ⅲ-20]은 2008-2014년 동안 개별 시군구 내에서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건강수명 격차를 나타낸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전국 252개 모든 시군구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건강수명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건강수명 격차는 4.42세이다.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기대수명 격차보다 건강수명 격차가 더 컸다. 그 이유는 전국 252개 모든 지역에서 유병지표(자가 평가 건강수준)에서의 소득 5분위 간 불평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수명이 낮은 지역에서 건강수명의 소득 5분위 간 격차가 큰 양상이다. 특정 시군구의 건강수명 평균값이 낮은 주된 이유는 기대수명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저소득층의 건강수명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즉, 한 시군구의 기대수명 평균값과 건강수명 평균

[그림 Ⅲ-20]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 2008-2014



주: 1) 2008-201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252개 시군구별 사망률 자료를 산출하고, 2008-2014년도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유병률 자료를 산출한 후, 'Sullivan method'로 건강수명을 계산함.
2) 파란색이 진할수록 건강수명 격차가 작고, 붉은색이 진할수록 건강수명 격차가 큼.
출처: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건강격차 프로파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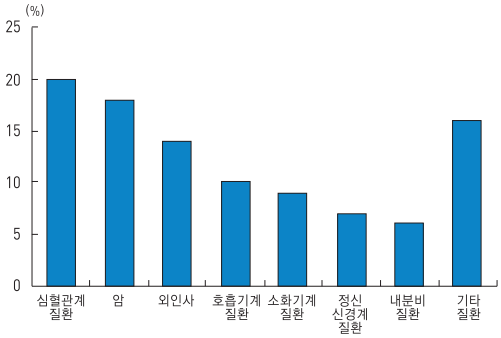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

건강불평등의 기여요인: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

건강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건강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대수명의 소득계층 간 격차의 경우, 소득계층 간 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Ⅲ-21]에서는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에 기여하는 사망원인을 제시하였다. 2015년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격차는 6.59세인데, 심혈관질환은 전체 격차의 20%(1.34세), 암은 18%(1.20세), 외인사는 14%(0.89세)를 차지하였다. 호흡기계질환(10%), 소화기계질환(9%), 정신신경계질환(6%), 내분비계질환(6%)이 전체 기대수명 격차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달리 해석하면 만약 심혈관질환에서 소득 5분위 간 사망률 격차가 없었다면, 기대수명 격차가 6.59세에서 20% 감소한 5.25세가 되었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암과 외인사가 기대수명 격차에 크게 기여하였고, 여성은 심혈관계질환이 기대수명 격차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부 사망원인별로 보면 심혈관계질환 중에서는 뇌졸중과 허혈성심질환, 암 중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외인사 중에서는 자살이 기대수명 격차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망원인이었다. 그 외 폐렴, 당뇨, 알코올성 간질환, 치매 등이 기대수명의 소득계층 간 격차에 의미있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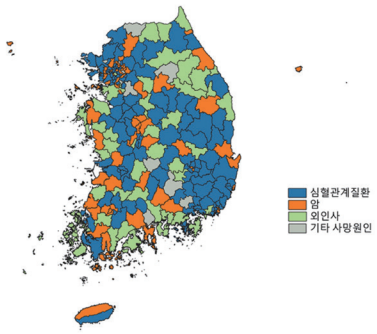
[그림 Ⅲ-21]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 2015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를 'Arriaga's method'를 활용하여 사망원인별로 분해 분석한 결과임.
2) 2015년도 소득 5분위별 기대수명 격차(6.59세)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를 %로 표시함. 예를 들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기대수명 차이는 1.34세였는데, 이는 전체 소득5분위별 격차(6.59세)의 20%에 해당함.
출처: 강영호 등, 2016.

[그림 Ⅲ-22]는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에 기여하는 1위 사망원인을 전국 시군구별로 표시한 것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6개 시군구에서 심혈관계질환이 기대수명 격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암이 68개 시군구에서, 외인사가 46개 시군구에서 기대수명 격차에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사망원인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암과 외인사가 1위인 시군구가 많은 반면, 여성은 심혈관계질환이 1위인 경우가 많았다.

[그림 Ⅲ-22] 시군구별 소득 5분위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에 대한 사망원인별 기여도, 2010-2015



주: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통계청 사망자료와 연계 후, 시군구별로 소득 5분위 간 기대수명 차이를 'Arriaga's method'를 활용하여 사망원인별로 분해 분석한 결과임.
2) 252개 시군구별로 기대수명 격차에의 기여도가 1위인 사망원인을 색으로 표시하였음.
출처: 강영호 등, 2016.

건강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크기는 외국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서 건강불평등 크기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건강불평등 국제비교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다. 사망률, 흡연, 주관적 건강수준 등의 지표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건강불평등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크기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크다는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앞으로 건강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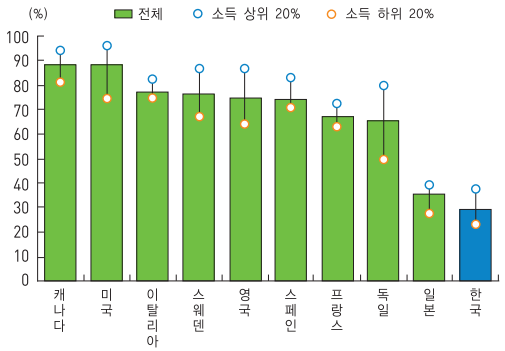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대수명, 건강수명의 불평등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률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건강수준 지표인 주관적 건강수준을 통해 국가 간 불평등 현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Ⅲ-23]은 2017년 기준 OECD 주요 10개국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수준이 '좋음' 이상인 분율을 나타낸 것으로, 각 국가별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에서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에서 상위 20%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하위 20%보다 나은 양상이다. 소득 5분위 간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는 절대적 차이(분율 차)와 상대적 차이(분율의 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의 소득계층 간 절대 차이는 14.4%p로 10개국 중 중간 수준이지만, 상대비(소득 하위 20% 대비 소득 상위 20%의 비)는 1.62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은데, 그 이유로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거나 의료이용 횟수가 많아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림 Ⅲ-23] 주요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수준 소득 5분위 간 격차, 2017



주: 1) 통계치는 각 국가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계층 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 문항이 상이하여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게 측정되었음.
3) 일본은 201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맺음말

건강불평등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지표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일부 지표(기대수명 등)에서는 건강불평등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불평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강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기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8년도에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기(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라는 건강불평등 완화 대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유럽과 미주지역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소에서도 건강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국가 단위 건강불평등 대책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에 '건강형평성 제고'가 2006년도부터 총괄목표로 설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영호 등. 2016.「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HP2020 평가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지원 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8.「건강격차 프로파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
Bahk et al., 2017. "Forty years of economic growth and plummeting mortality: the mortality experience of the poorly educated in South Korea."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71:282–288.
Khang et al., 2019. "Trends in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t birth between 2004 and 2017 and projections for 2030 in Korea: Multiyear cross–sectional differences by incom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MJ Open 9:e030683

흡연과 음주 실태

조병희 (서울대학교)

-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 성인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20대와 30대 여성의 흡연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 남성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여성의 흡연율은 최하 수준이다.
- 남성 음주율은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고위험음주율의 경우 남성은 소득계층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은 하위계층에서 가장 높았다.
- 음주는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타인에 대한 폐해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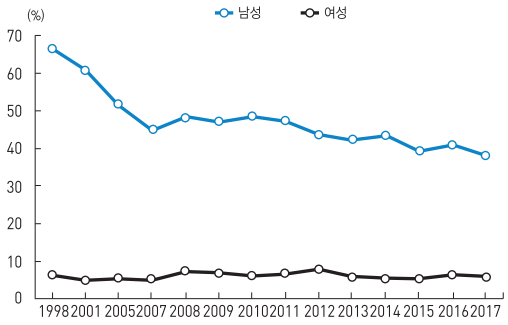
흡연과 음주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면서 동시에 건강습관 행동이다. 흡연과 음주의 건강 위해성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흡연과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흡연의 경우 1980년대에는 회사, 식당, 영화관에서는 물론 비행기 안에서도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등 흡연 규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공공장소 금연이나 담배가격 인상, 흡연 장면의 미디어 노출금지 등 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방지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흡연율은 점차 감소되었으나 아직 OECD 국가 중 남자 흡연율은 상위권 수준이다. 음주의 경우에는 흡연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주류는 거대한 산업이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주류가격 인상이나 판매규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는 흡연보다 음주행위에 더 관대한 경향이 있어 과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 글은 흡연과 음주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할 것이다.

흡연율의 추이

우리나라 흡연행위의 특징은 남성 흡연율은 높지만 여성 흡연율은 아주 낮다는 것이다. [그림 Ⅲ-24]에 의하면 남성 흡연율은 1998년에 66.3%에 달하던 것이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경에 5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40%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38.1%를 기록하였다. 여성 흡연율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흡연율 통계는 기본적으로 흡연 유무를 질문하여 응답자가 작성하는 '자기-보고식(self reporting)' 조사통계이다. 여성의 경우 흡연행위를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흡연율이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여성 흡연율은 7%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4] 성별 현재흡연율, 1998-2017



주: 1)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현재흡연율을 성 및 연령집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이 〈표Ⅲ-5〉다. 1998년에는 남성 20대와 3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20대의 흡연율이 30대의 흡연율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30대보다 40대는 더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결국 2017년 현재 남성의 경우 20대, 30대, 40대 순으로 흡연율이 높아지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1998년에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였는데, 2000년 이후 노년층 흡연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현재 2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약하면 현재 남성은 30, 40대 경제활동 군에서 흡연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여성은 젊은 여성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Ⅲ-5〉 성 및 연령집단별 현재흡연율, 1998-2017

(%)

	1998	2005	2010	2015	2017
남성					
19-29세	70.7	55.5	47.3	38.7	37.3
30-39세	71.6	60.2	60.9	48.0	42.7
40-49세	67.9	55.2	53.6	45.8	46.3
50-59세	62.2	47.7	45.0	36.5	37.0
60-69세	58.2	38.3	30.8	26.1	26.6
70세 이상	50.5	27.5	24.7	17.0	18.2
여성					
19-29세	5.1	6.0	7.4	6.9	9.7
30-39세	4.5	4.4	7.6	6.7	6.8
40-49세	4.4	5.7	6.6	4.9	5.7
50-59세	7.2	6.7	5.2	5.4	3.3
60-69세	12.0	3.5	2.9	2.8	2.8
70세 이상	14.5	9.3	5.0	3.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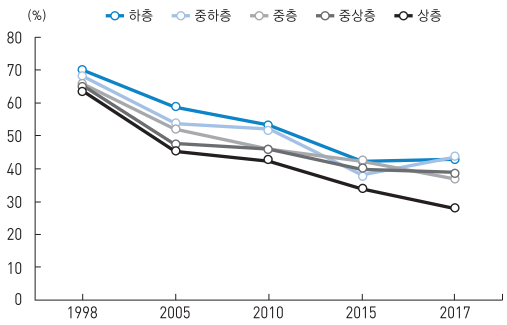
주: 1)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Ⅲ-25]는 성 및 소득계층별 흡연율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1998년에 남성의 소득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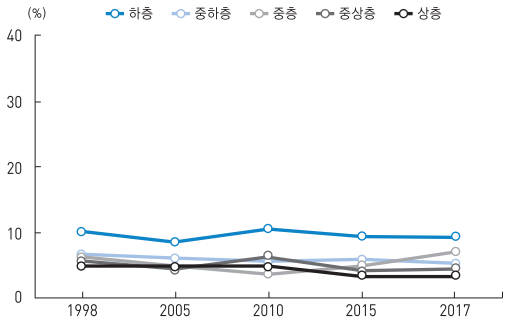
현재흡연율은 하층 70.0%, 중층 65.1%, 상층 63.7%로 계층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상층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흡연을 하고 있고 소득계층 간 흡연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 흡연은 계층적 지위를 넘어서는 남성문화의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모든 계층에서 흡연율의 감소가 진행되었으며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흡연율의 감소량은 상층이 35.7%p인데, 중상층 이하는 25-28%p에 불과하였다. 즉, 이제 상층 남성에게 흡연은 계급적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기피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층과 중간층, 그리고 중간층과 하층 간에 흡연율 격차가 과거보다 크게 벌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20년 사이에 남성의 흡연문화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25] 성 및 소득계층별 현재흡연율, 1998-2017

1) 남성



2) 여성



주: 1)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소득계층은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 및 연령별(5세 단위) 5분위로 분류하였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여성의 경우에는 계층 간 흡연율 격차가 뚜렷하지 않다. 여성의 흡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계층 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년간 여성의 계층별 흡연율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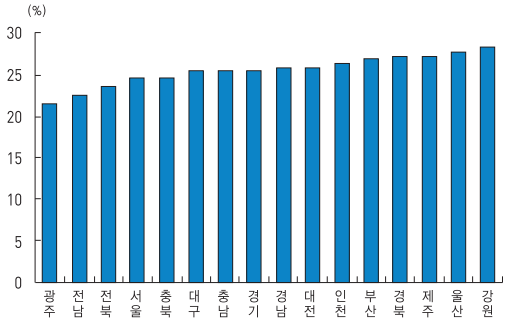
[그림 Ⅲ-26]의 시도별 흡연율 분포를 보면 2008년에는 광주, 전남, 전북 등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서울, 충북 등의 순이었다. 강원, 울산, 제주 등이 가장 높았다. 흡연율이 가장 낮은 광주와 가장 높은 강원의 흡연율 차이는 6.8%p나 되었다. 10년 후인 2018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흡연율이 하락하였다. 세종과 서울의 흡연율이 가장 낮았고, 강원, 충북, 충남 등이 가장 높았다. 세종과 강원의 흡연율 차이는 7.3%p였다.

그런데 시군구별로 나누어보면 기초자치단체별 흡연율의 차이는 시도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흡연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중구 30.2%, 전남 완도군 28.3% 인천 미추홀구 27.7% 등이고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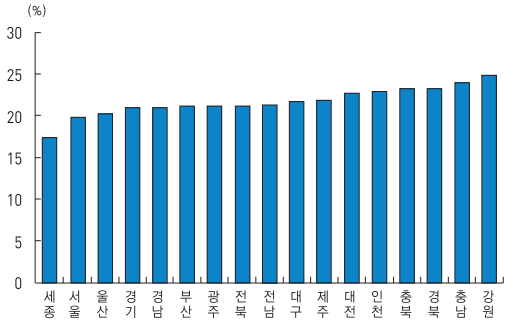
남 산청군 13.2%, 전남 장흥군 15.4%, 전남 고흥군 15.7% 등이다. 부산 중구와 경남 산청군의 흡연율 차이는 무려 17.0%p에 달한다.

[그림 Ⅲ-26] 시도별 현재흡연율, 2008, 2018

1)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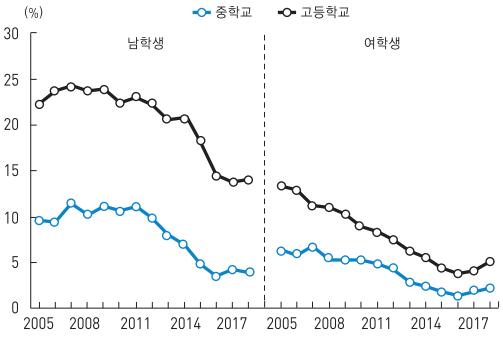
2) 2018년



주: 1) 현재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연도.

청소년 흡연율도 [그림 Ⅲ-27]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다.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6-2009년 시기에 약 24%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 14.1%가 되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약 11%이던 흡연율이 3.9%로 감소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약 11%에서 5.1%로 감소하였고,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약 6%에서 2.1%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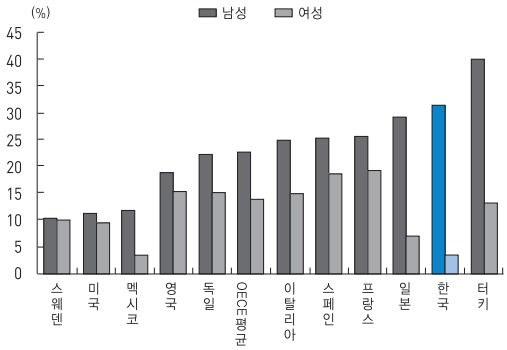
[그림 Ⅲ-27] 성별 청소년 현재흡연율, 2005-2018



주: 1) 청소년 현재흡연율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학생의 비율임(단, 2005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함).
출처: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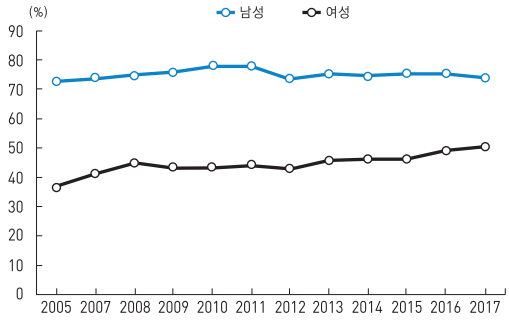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건강지표를 구분하여 산출하지만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비율을 흡연지표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2017년 현재 남성의 경우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흡연율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Ⅲ-28).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 역할에 수반되는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낙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28] OECD 주요국의 성별 매일흡연율, 2017



주: 1) 매일흡연율은 각국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그림 Ⅲ-29] 성별 월간음주율, 2005-2017



주: 1) 월간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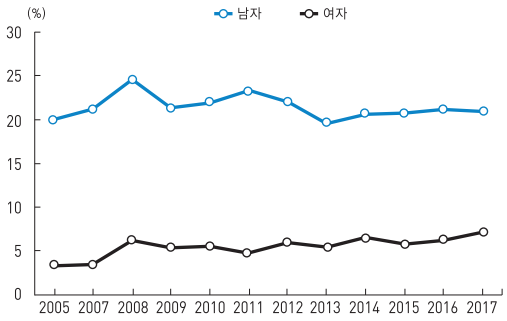
음주율의 추이

음주율은 월간 1회 이상 음주여부를 나타내는 월간음주율이 기본적 지표이다. 2005년 이후 월간음주율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 [그림 Ⅲ-29]다. 남성의 경우에는 월간음주율이 약 75%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에 37.0%이던 것이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7년에 50.5%에 이르렀다. 월간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성인의 약 40%는 술을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월간음주율은 국민 전체 중 음주자의 비율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음주량이나 음주빈도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음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표가 필요한데 고위험음주율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위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의 경우 1회 음주량이 7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할 경우 고위험 음주에 해당된다. 높은 도수의 주류는 잔이 작고 낮은 도수의 주류는 잔이 커서 대략 1잔에 담긴 알코올 함량은 같은 것으로 본다. 7잔의 음주량은 대략 소주 1병에 해당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고위험 음주의 기준이 1회 5잔 이상이면서 주 2회 이상 음주일 경우에 해당된다.

고위험음주율의 추이는 [그림 Ⅲ-30]과 같다. 남성의 경우 2005년 이후 고위험음주율이 약 21%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2005년에 3.4%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 7.2%에 달하였다. 남성의 경우 월간음주율과 고위험음주율 모두 현상유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두 지표 모두

[그림 Ⅲ-30] 성별 고위험음주율, 2005-2017



주: 1)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상승세를 보여 주었다. 여성이 남성만큼 음주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음주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고위험음주율을 성 및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표 Ⅲ-6〉이다. 남성의 경우 40대까지 고위험음주율이 상승하다 이후 고연령대에서 하락한다. 시기별 추세에서는 큰 등락이 없다. 여성들은 20대에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고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기별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Ⅲ-31]에서 성 및 소득계층별 고위험음주율의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하층이 가장 낮으며, 중하층이 가장 높은데 계층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흡연과 달리 음주의 경우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다같이 술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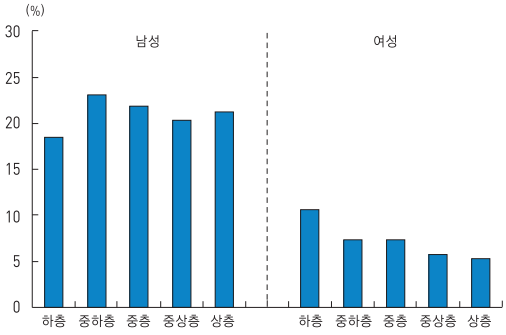
〈표 Ⅲ-6〉 성 및 연령집단별 고위험음주율, 2005-2017

(%)

	2005	2010	2015	2017
남성				
19-29세	13.0	17.8	14.6	17.0
30-39세	19.3	27.1	25.1	24.1
40-49세	28.1	26.7	27.6	27.2
50-59세	23.6	25.2	23.1	23.5
60-69세	17.8	13.7	16.7	15.2
70세 이상	12.8	8.6	5.8	7.2
여성				
19-29세	6.2	7.8	10.6	11.1
30-39세	3.1	8.3	6.2	9.0
40-49세	3.4	6.6	4.7	6.4
50-59세	2.5	2.5	4.7	5.5
60-69세	1.0	0.3	2.0	3.4
70세 이상	0.9	0.4	0.3	0.5

주: 1)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Ⅲ-31] 성 및 소득계층별 고위험음주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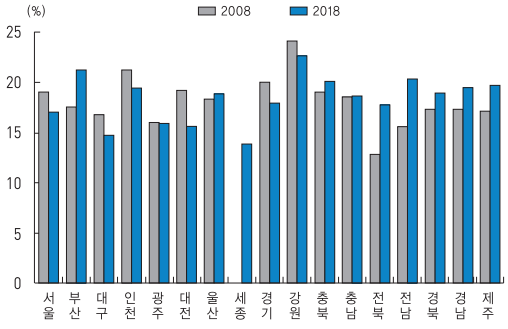


주: 1)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소득계층은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 및 연령별(5세 단위) 5분위로 분류하였음.
출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홈리스 같은 주변부 집단의 경우에는 음주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Collins, S. E., 2016). 여성의 경우에는 고위험음주율이 하층에서 가장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계층 간 차이는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위험음주율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2008년에는 전북이 가장 낮았고, 강원이 가장 높았다. 두 지역의 고위험음주율 차이는 11.3%p였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전남 영광군이 6.1%로 가장 낮았고, 경북 울릉군이 31.0%로 가장 높았다. 두 지역 간 차이는 24.9%p였다. 지역에 따라 음주행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2]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200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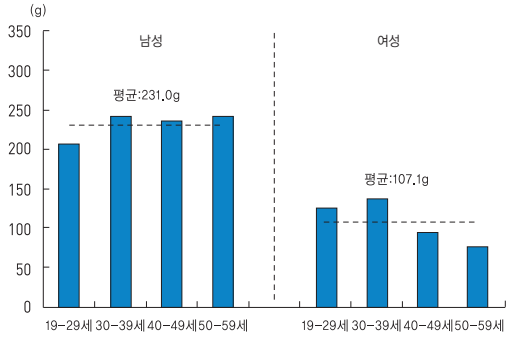


주: 1)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간 음주한 사람(만 19세 이상) 중 남성의 경우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의 경우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연도.

2018년은 2008년에 비하여 부산, 울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경기, 강원 등은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하였으나 여타의 도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Ⅲ-32).

월간음주율과 마찬가지로 고위험음주율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음주자의 비율을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음주의 총량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주류의 경우 주종에 따라 알코올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총량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온라인패널에서 표집한 3,000명의 월간 음주자를 대상으로 최근 1주일간 일별로 음주의 주종과 음주량을 조사하여 알코올 음주 총량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림 Ⅲ-33]이다.

[그림 Ⅲ-33] 월간 음주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주간 알코올 섭취량, 2018



주: 1) 조사대상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중 월 1회 이상 음주 경험자임.
2) 주간 알코올 섭취량은 최근 1주간 일별 음주 주종과 음주량을 파악하고 주종별 알코올 함유량을 고려하여 알코올 총량을 계산함.
출처: 보건복지부,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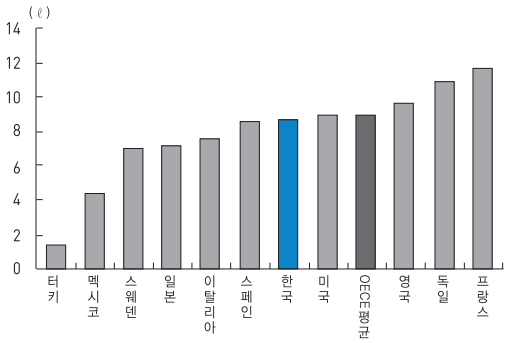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주간 알코올 섭취 총량이 200g을 넘고 있다. 소주 1병이 약 49g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매주 소주 4-5병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는 120g을 넘고 있었고 40대도 94.2g을 섭취하고 있었다. 고위험음주의 기준이 주당 알코올 섭취량이 남자 100g, 여자 70g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전 연령 집단에서 음주량 평균이 고위험음주 기준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OECD 국가 간 음주량을 비교를 하면 [그림 Ⅲ-34]와 같다.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란 연간 국내에서 소비된 모든 주류를 포괄하여 순수 알코올 섭취량을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한다. 즉 1인당 알코올 섭취량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중부 유럽 국가들이 높고, 멕시코나 터키 같은 국가들이 낮은데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지표는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 과음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을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문화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점, 친목과 업무상 관계 유지가 음주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점, 언제나 술을 살 수 있고 어디서나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술의 접근성이 높은 점, 음주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약한 점,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두루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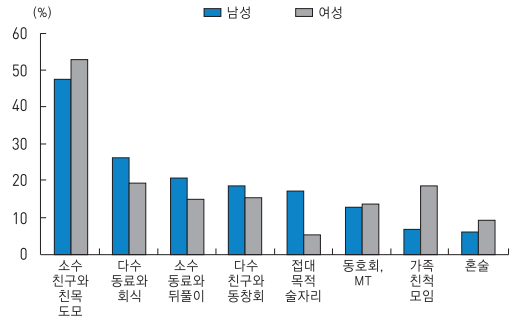
어떤 상황에서 과음을 하게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림 Ⅲ-35]와 같다. 남녀 모두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할 때 과음을 가장 많이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동료들과 회식이나 뒤풀이를 할 때였다. 동창회나

[그림 Ⅲ-34] OECD 주요국의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 2017



주: 1) 알코올 섭취량은 각국 만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그림 Ⅲ-35] 월간 음주자의 성별 과음 유발 음주 상황, 2018



주: 1) 조사대상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중 월 1회 이상 음주 경험자임.
2) 다중 응답(1-2순위)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8.

동호회 등 다수의 회원들의 회합하는 경우도 다음 순위로 과음을 유발하였다. 여성들은 접대 목적 술자리 경험은 적었지만 가족모임에서 과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아울러 여성들은 '혼술'에 의한 과음도 꽤 많은 편이었다.

음주의 건강영향과 폐해

음주가 과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알코올의 작용의 영향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어려운 인간관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주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 음주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 언쟁이나 폭력을 유발하거나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음주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결과를 인용하면 〈표 Ⅲ-7〉과 같다. 간경변의 경우 남성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5명인데 그 중 음주의 기여도가 74.5%나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간경변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4.5명인데 음주 영향이 56.3%나 된다. 교통사고 사망에서도 음주의 영향은 남성 38.5%, 여성 24.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암 사망의 경우에도 남성 8.3%, 여성 3.1%가 음주의 영향으로 보인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음주의 영향력이 다르지만 음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은 알코올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3.5명이 음주로 사망하는 셈이다.

〈표 Ⅲ-7〉 성별 간경변, 교통사고 및 암 사망의 알코올 기인도, 2016

사망원인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 기인도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간경변	18.5	4.5	74.5	56.3
교통사고	15.9	5.2	38.5	24.8
암	204.0	91.2	8.3	3.1

주: 1) 사망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해당 사망원인 사망자 수임.
2) 알코올 기인도는 해당 원인 사망자 중 음주에 기인한 사망자의 비율임.
출처: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8*, 2018.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질환 역학조사를 통하여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추정하는데 그 중 알코올 사용장애도 포함된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부적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진단되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남성 18.1%, 여성 6.4%였고, 1년 유병률은 남성 5.0%, 여성 2.1%로 약 139만 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추정되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치료가 필요

한 중증의 중독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당사자들의 인식도 부족하여 실제 치료경험률은 12.1%에 불과하다. 과음이 곧 알코올 사용장애는 아니다. 그러나 과음자가 많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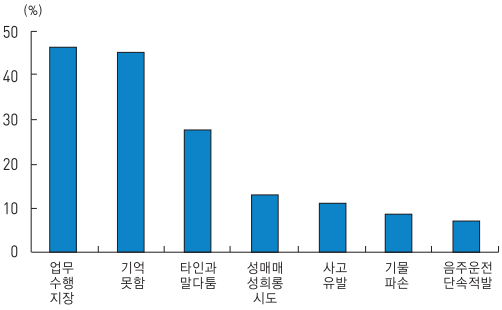
과거에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량의 음주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흡연의 경우에는 건강위험인식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음주의 경우에는 위험인식이 약한 편이라 향후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음주의 폐해는 본인에게는 건강의 악화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남성 음주자들의 음주폐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날 숙취로 업무수행을 못하여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가 46.3%였고, 기억을 못하거나, 타인과의 다툼, 사고유발, 기물파손,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본인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자 중 이러한 경험을 한 가지 이상 가졌던 경우가 70%를 넘었다(그림 Ⅲ-36).

흡연과 음주는 이제 개인적 기호식품의 단계를 넘어서 건강 영향이 큰 위험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보다 현저히 높은 남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금연과 절주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의 흡연과 음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적절한 제도적 대응을 통하여 증가세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담배는 흡연율 감소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이글에서는 전통적인 궐련형 담배만을 다루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Ⅲ-36] 남성 월간 음주자의 음주폐해 경험률, 2018



주: 1) 조사대상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중 월 1회 이상 음주 경험자임.
2) 경험률은 남성 조사대상자 중 최근 1년 사이에 음주로 인해 해당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2018.

참고문헌

Collins, S. E. 2016. "Associations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alcohol outcomes." *Alcohol Research,* 38(1): 83-94.

Korean Social Trends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Educ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Ⅳ 교 육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22

교육 경쟁과 행복 김희삼 | 광주과학기술원 134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김경근 | 고려대학교 143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특성화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년 전까지 꾸준히 하락했던 사교육 참여율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다.
- 최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OECD 평균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탄력성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한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교육은 지대한 기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민주적 평등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이동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교육은 사회 구성원 간에 평등한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교육은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한다. 아울러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가 계층상승을 위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이동을 촉진한다(Labaree, 1997).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육은 이러한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간 한국에서 교육은 민주적 평등성의 제고를 통해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교육은 눈부신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하는 데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광범한 사회이동이 발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 교육 전반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추이와 연령대별 교육기회 충족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육단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만족도를 살펴보고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도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성취도에서 드러난 학업탄력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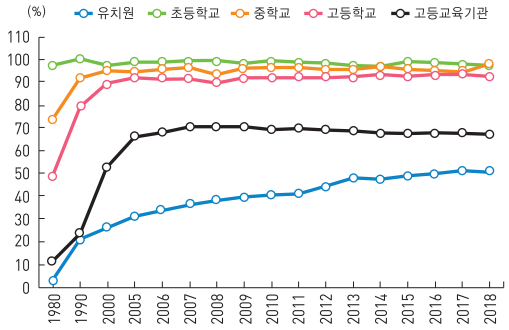
교육기회

교육기회 관련 지표들은 국민들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는지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 진학률, 연령집단별 교육기회 충족도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교육성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까닭에 계층별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연령대별 교육기회 충족도,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의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는 취학률을 들 수 있다.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림 Ⅳ-1]에는 각 교육단계별로 1980년 이후의 취학률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이미 97.7%로 실질적으로 완전 취학에 가까운 수준에 다다른 후 1990년에는 100.5%까지 높아지기도 하였고 2018년 현재는 97.6%로 보고되고 있다. 1990년에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취학했던 학생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이었지만 1990년에 91.6%가 되었다가 2011년에는 96.7%까지 높아졌다. 이후 취학률이 다소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2017년에 94.3%로 낮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져 98.0%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18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3) 취학 적령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9)를 기준으로 하였음(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 될 수 있음).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이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머물렀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교육기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루어져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가 되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2017년에는 93.8%까지 높아졌다. 2018년 현재는 고등학교 취학률이 92.4%로 보고됐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실질적인 보편교육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더라도 취학률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1년에 시행된 졸업정원제 및 1995년에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에 취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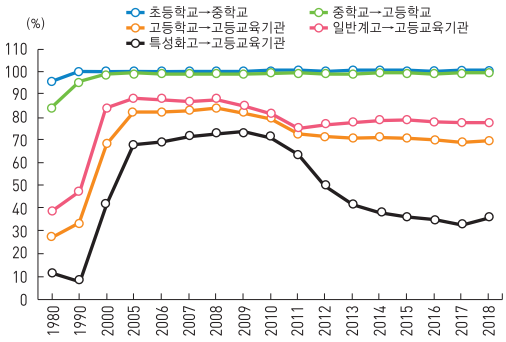
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에는 취학률이 52.5%까지 상승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뒤로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70.6%로 정점에 다다른 후 최근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6.9%로 보고됐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상당히 낮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그쳤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50%의 벽을 돌파하여 50.8%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중 상당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다고 해서 많은 아동들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한국의 만 3세와 만 4세 취학률은 2017년 기준 각각 93.7%, 97.3%로 OECD 평균인 79.3%와 88.1%보다 높았다(OECD, 2019).

취학률과 더불어 진학률도 교육기회 향유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분류된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진학률은 취학률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나 입시제도 개혁과 같은 사회변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Ⅳ-2]에는 각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가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100%와 다름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8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연도 졸업자)×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5)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없는 상태에 있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에 줄곧 99.6-9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약적인 상승을 거듭해 2000년에는 68.0%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83.8%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8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9.7%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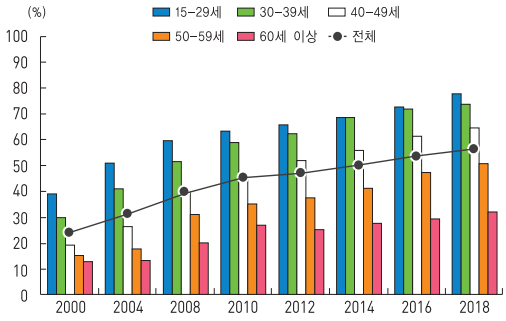
2010년까지는 매년 2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산출한 바 있다.

최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추세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게 된 데는 무엇보다 이전과 달리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가 대학에 많이 진학하지 않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여 2018년 현재 77.7%에 이르러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다다른 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8년 현재 36.0%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때 학생들이 대학에 보다 쉽게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특성화고를 선택하던 행태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기회 향유 정도는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교육기회 충족도라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교육기회 충족도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무척 강한 한국인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지표라 하겠다. [그림 Ⅳ-3]은 2000년 이후 연령대별 교육기회 충족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대체로 모든 세대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기회 충족도는 높아진다. 또한 모든 시점에서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보다 교육기회 충족도가 더 높았다. 다만 2014년과 2016년에는 15-29세와 30-39세 연령집단 간에

[그림 Ⅳ-3] 연령집단별 교육기회 충족도, 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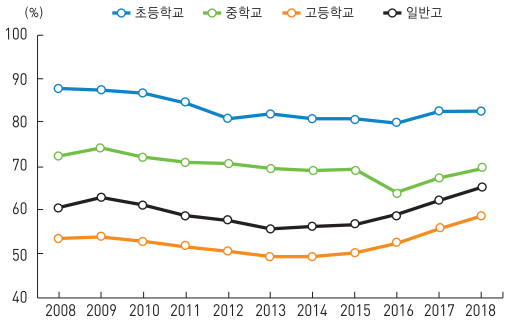


주: 1) 교육기회 충족도는 현재 학생(휴학생 및 재수생 포함)이 아닌 만 15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귀하는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육기회 충족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가 2018년에 다시 30-39세 집단보다 15-29세 집단이 더 높은 교육기회 충족도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들이 두루 반영된 결과 2000년에 24.5%이던 국민 전체 교육기회 충족도는 2018년에는 56.2%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최근 들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나 대학 진학 성과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 정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회 영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교육 참여율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의 원흉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림 Ⅳ-4]에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4]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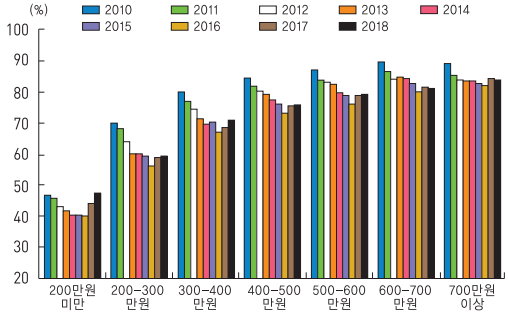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전반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자유학기제 도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특히 일반고)의 경우 2013년까지는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2018년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2.5%)이 가장 높고, 중학생(69.6%), 고등학생(58.5%)이 뒤를 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65.2%)이 전체 고등학생 대비 6.7%p 높은데,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학생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교육 참여율은 부모 경제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Ⅳ-5]는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사교육 참여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잘 드러나 있는데,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 폭은 저소득층 집단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특히 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의 경우 2017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47.3%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림 Ⅳ-5]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8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그간 계속 확대됐던 계층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도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례로 2014년에 소득수준 700만 원 이상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83.5%였던 반면,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40.5%로 두 집단 간에 43.0%p의 참여율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소득수준 700만 원 이상 집

단은 83.9%가 사교육에 참여한 반면,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집단은 47.3%가 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두 집단 간 참여율 격차가 36.6%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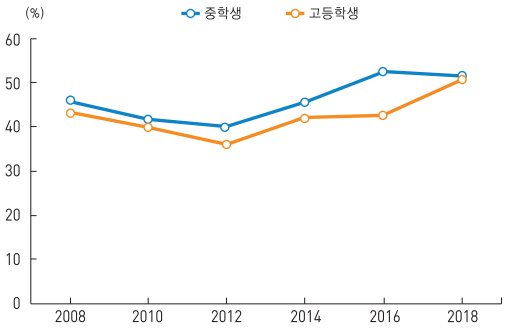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 지표들은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대별된다. 대표적인 학생수준 지표로는 학습시간, 학교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등이 있고, 학교수준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6]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나타나 있다. 대체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두 집단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2012년까지 나란히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6년까지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두 집단 간 만족도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중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하락한 반면,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크게 상승해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 만족도 격차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최근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점이 교육내용 만족도를 떨어뜨릴 공산이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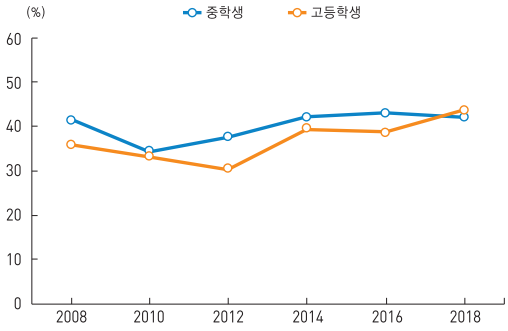
[그림 Ⅳ-6] 중·고등학생 교육내용 만족도, 2008–2018



주: 1) 교육내용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7]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사의 수업과 평가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에 비해 개별 교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림 Ⅳ-7] 중·고등학생 교육방법 만족도,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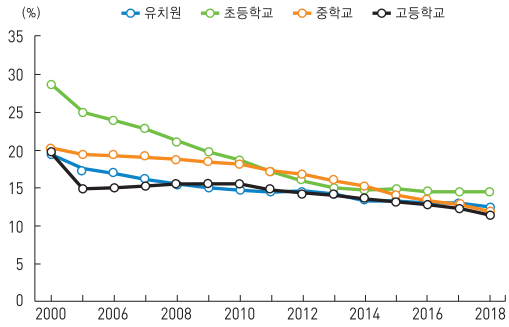
주: 1) 교육방법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육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앞서 살펴본 교육내용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방법 만족도 역시 대체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더 높았다. 다만 두 집단 간에 교육방법 만족도의 변화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2008년에 41.7%이던 교육방법 만족도가 2010년에 34.4%로 급락했다가 이후 점차 반등하여 2016년에 43.1%에 다다른다. 2018년 현재는 2016년에 비해 교육방법 만족도가 약간 하락해 42.3%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8년에 36.1%이던 교육방법 만족도가 점차 하락해 2012년 30.7%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2018년에는 43.6%까지 높아졌다. 이로써 2018년 처음으로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미세하나마 교육방법 만족도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방법에 개선의 여지가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 대표적 학생 수준 지표인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 대표적 학교 수준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수·학습의 질,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가 최근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8]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교육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가

[그림 Ⅳ-8]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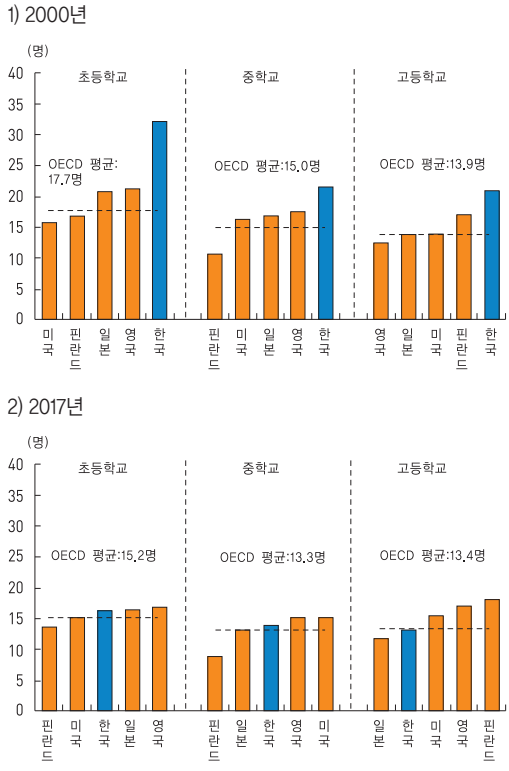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교원 수.
2) 교원 수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파르게 감소한 학교급은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8.7명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출생아 감소 때문에 학령기 아동이 격감하면서 2018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5명으로 낮아졌다. 2018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급은 고등학교(11.5명)이고, 중학교(12.1명), 유치원(12.3명), 초등학교(14.5명)가 뒤를 이었다. 이로써 모든 학교급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열악했음을 지적했는데, 국제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Ⅳ-9]에는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나타나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는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7년 현재 거의 모든 학교급에서 일부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적다. 중학교의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고,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핀란드, 영국, 미국보다 훨씬 적다. 심각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머지않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000, 2017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교원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2019.

교육효과

교육효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파악된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로 측정하는가 하면 노동시장에서 얻은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를 보여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과 PISA 수학 성취도의 학업탄력성을 고찰한 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요구되는 수준의 학력을 말한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가 저하되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확대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표 Ⅳ-1〉 성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8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4	2.1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2017년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3) 2017년도 통계치는 2018년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값으로 수정하였음.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8.

전체적으로 중학교(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14년 3.7%까지 상승했다가 조정 기간을 거친 뒤 2017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2018년 현재 6.9%에 다다랐다. 성별로 살펴보아도 시계열적 변화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예컨대 2012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남학생은 3.0%이었고 여학생은 1.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6%p 높았다. 그런데 2018년에는 남학생 8.7%, 여학생 5.0%로 그 격차가 3.7%p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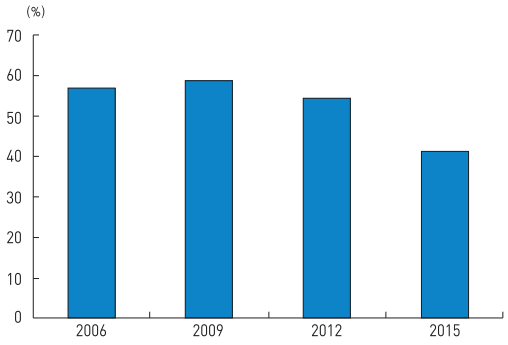
고등학교(2학년)의 사정도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0%에서 시작하여 매년 조금씩 상승한 끝에 2018년에 6.7%가 되었다. 성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변화 추이도 중학생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3.7%에서 시작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8.6%에 다다랐다. 여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 2.1%에서 점차 상승해 2014년 2.9%가 되었다가 이듬해 2.6%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2018년에 4.6%까지 올랐다.

전체적으로 다음 단계 학습을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특히 최근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에 우려가 배가 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태반은 저소득층 학생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도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림 Ⅳ-10]은 한국 학생들의 PISA

수학 성취도에서 학업탄력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PISA에서 매우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계층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역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취도를 거두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그림 Ⅳ-10] PISA 수학 성취도의 학업탄력성, 2006-2015



주: 1) 학업탄력성은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PISA에 참여한 OECD 전체 학생 기준으로 수학 성취도 상위 25% 이내에 포함된 비율로 측정함.
2) 사회경제적 배경(ESCS)은 부모의 직업지위, 교육수준 및 보유자산의 합성지표임.
출처: OECD. *PISA dataset*, 2006-2015.

여기에서 학업탄력성은 한국에서 하위 25%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 가운데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PISA에 참여한 OECD 전체 학생 중 수학 성취도가 상위 25% 이내에 포함된 비율로 측정되었다. 전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PISA 수학 성취도에서 한국 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은 2006년에 57.0%이었다가 2009년에 58.9%로 높아지지만 2012년에는 54.4%로 떨어진 후 2015년에 41.3%로 급락했다. 제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표 Ⅳ-2〉에는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교육효과를 측정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 취업률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67%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양상이 관찰된다. 즉 남성의 경우 2011년 70.7%이던 취업률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조금씩 하락해 2017년 현재는 67.8%가 되었다. 반면 여성 취업률은 2011년 64.5%에서 2016년 66.4%까지 높아졌다가 2017년에 다시 64.8%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녀 간 취업률 격차도 다소간에 감소하게 되었다.

취업률 추이를 고등교육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취업률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순으로 높았다. 4년제 대학과 일반대학원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7년의 취업률이 더 낮았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 상황이 좀 더 호전된 탓인지 2011년에 비해 2017년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문대를 마친 남성의 경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률의 변화가 별로 크지 않아 줄곧 68%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전문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3.5%p 상승했다. 4년제 대졸 남성의 경우

〈표 Ⅳ-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7

(%)

	전체	전문대학	4년제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2011	67.6	67.8	65.5	79.2
2012	68.1	68.1	66.0	79.1
2013	67.4	67.9	64.8	78.5
2014	67.0	67.8	64.5	77.5
2015	67.5	69.5	64.4	77.8
2016	67.7	70.6	64.3	78.3
2017	66.2	69.8	62.6	77.7
남성				
2011	70.7	68.3	69.1	86.1
2012	70.6	68.5	68.9	84.6
2013	69.9	68.2	67.7	84.7
2014	69.0	67.5	67.2	83.3
2015	69.0	68.8	66.4	83.1
2016	69.0	69.5	66.3	83.0
2017	67.8	68.5	64.9	82.9
여성				
2011	64.5	67.3	61.7	68.7
2012	65.7	67.8	63.0	71.1
2013	65.1	67.8	61.8	70.3
2014	65.2	68.0	62.0	69.9
2015	66.1	70.0	62.4	70.9
2016	66.4	71.4	62.3	72.4
2017	64.8	70.8	60.4	71.3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인정자))}×100.
2) 조사시점 기준일은 해당연도 12월 3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2011년과 2017년 사이에 취업률이 계속 하락했다. 하지만 여성 취업률은 2011년 61.7%에서 2016년까지는 별다른 하락의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2017년에야 60.4%로 낮아졌다. 일반대학원을 마친 남성의 취업률도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011년 68.7%이던 취업률이 2016년에는 72.4%까지 높아졌다가 2017년 현재는 71.3%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현재 남녀 간 취업률 격차는 일반대학원 졸업자 사이에서 가장 크고, 4년제 대학 졸업자 사이에서는 좀 더 작았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014년 이래 남녀 간에 취업률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2017년 현재는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2.3%p 더 높았다.

맺음말

그간 우리 교육은 국민의 계층상승 욕구를 충족하는 데 골몰했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을지언정 현실적으로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던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선발과 변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 번창이라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교육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대두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이 국민의 계층상승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사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급증이나 학업탄력성 하락 추이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는 간단치 않다. 교육이 국민의 계층상승 욕구 충족에

충실히 복무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은 설자리를 잃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시급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더디기만 하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Labare, David F. 1997. *How to Succeed in School without Really Learning: The Credentials Race in American Education*. New Haven, NJ: Yale University Press.
OECD.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교육 경쟁과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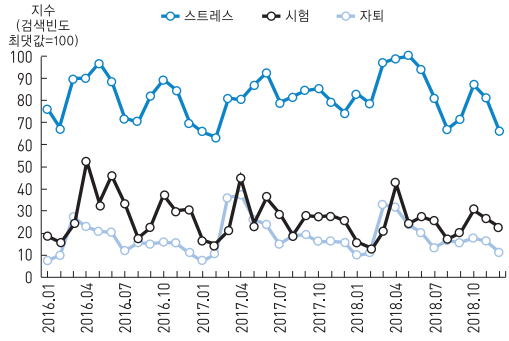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 한국 사회는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이에 따라 행복감도 낮게 나타난다.
-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살 충동과 고민 사유도 성적 및 진학 문제가 많았으나, 2012년보다는 나아졌다.
- 학생과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이 하향조정되는 등 학력지상주의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 성적으로 인한 수치심이 주된 학습 동기인 교육 현실에서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북돋우기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OECD의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설문조사 결과,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만 15세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52.8%로 OECD 평균 71.3%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삶의 만족도(0-10점) 평균 역시 한국 학생은 6.36점으로 OECD 평균 7.31점에 훨씬 못 미쳤다(OECD, 2017).

그런데 한국 사회의 교육 영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은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Ⅳ-11]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검색 엔진(네이버)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검색된 월별 빈도가 표시되어 있다. 1년 주기로 봤을 때, '스트레스' 검색 빈도는 봄과 가을에 상대적으로 높고, 겨울과 여름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보다 쾌적한 날씨를 가진 계절에 '스트레스' 검색 빈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 경쟁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검색 빈도를 겹쳐보면, '스트레스' 검색 빈도의 주기와 상당히 동기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4월과 6월에는 '시험' 검색 빈도가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확연히 줄어든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반영될 수 있는 '자퇴'라는 단어의 검색 빈도를 포개어 보면 '스트레스'

[그림 Ⅳ-11] '스트레스', '시험', '자퇴'의 인터넷 검색 빈도, 2016-2018



주: 1)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 및 클릭된 월별 횟수를 합산한 후 조회기간 내 검색빈도 최댓값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 변화를 표시한 것임. 모바일과 PC 합계이며, 전체 연령대와 성별을 대상으로 함.
2) 검색일은 2019년 6월 28일임.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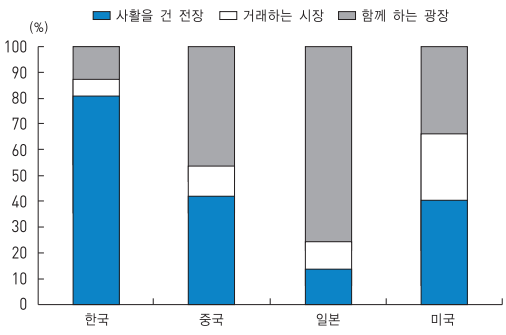
및 '시험'의 검색 빈도와 상당한 상관성을 보인다. '자퇴'의 검색 빈도가 학년 초인 3-4월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데는 자퇴 사유로서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불만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참고로 세 단어의 월별 검색 빈도 간의 상관계수는 스트레스와 시험 간에 0.50, 시험과 자퇴 간에는 0.45, 스트레스와 자퇴 간에는 0.63이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험 점수와 내신 등급, 입시 등을 둘러싼 교육 경쟁의 병폐는 한국 국민들의 연간 스트레스 주기를 학사일정과 상당히 동기화시킬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다른 나라도 이 정도일까?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교육 경쟁은 행복감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나아질 전망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필자가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의 교육 항목 설문 결과를 분석한다.

교육 경쟁 체감도와 행복감의 국제비교

한국 교육 특유의 경쟁적 성격은 대학생들이 자국의 고등학교를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는지를 비교해보더라도 드러난다. 김희삼(2017)의 연구에서 수행한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1]에서는 자국 고등학교의 이미지가 '함께 하는 광장'(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거래하는 시장'(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사활을 건 전장'(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중에 무엇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림 Ⅳ-12]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 2017



주: 1) 설문문항은 "귀국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함께 하는 광장'(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거래하는 시장'(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사활을 건 전장'(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등으로 구성되었음.
2)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김희삼,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 2017」, 원자료, 2017.

이 질문에 대해 [그림 Ⅳ-12]에서처럼 한국 대학생은 무려 81%가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했다. 중국 대학생은 '함께 하는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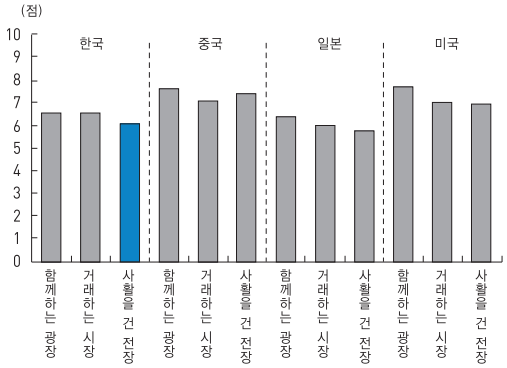
1) 이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각 국 대학생 1,000명(총 4,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교육·문화 전반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임.

장'과 '사활을 건 전장'이 비슷한 비율로 높았고, 일본 대학생은 '함께 하는 광장'이 훨씬 우세했다. 미국 대학생의 응답에서는 '거래하는 시장'을 포함한 세 가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왔다.

그렇다면 자국 고등학교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행복도(매우 불행 0점–매우 행복 10점)의 차이가 있을까? [그림 Ⅳ–13]은 그런 경향성이 적어도 한국과 일본 대학생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과 같은 경쟁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기에, 국가별 행복도 평균 점수는 한국이 가장 낮았다(한국 6.1점, 일본 6.2점, 미국 7.2점, 중국 7.5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 경쟁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교육 경쟁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이 분석은 이에 대해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이 분석은 교육 관련 설문이 포함된 2018년 조사와 조사대상(만 13세 이상 가구원) 및 설문이 동일한 2012년 조사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이 두 연도의 비교는 2010년대의 사회적 흐름뿐 아니라 해당 조사시기의 정권 성격(보수와 진보)과 그에 따른 교육정책 기조의 차이를 일부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Ⅳ–13]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인식별 행복도,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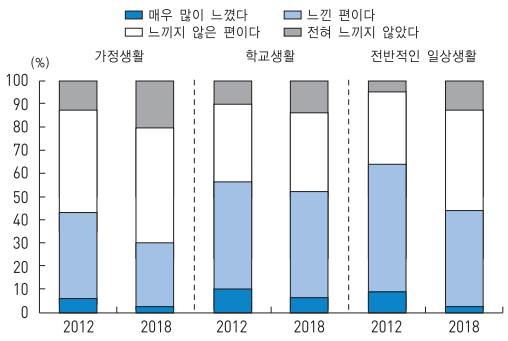
주: 1) 행복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불행'부터 '매우 행복'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김희삼, 「사회자본과 교육에 관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 2017」, 원자료, 2017.

교육문제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과 추이

먼저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를 생활영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Ⅳ–14]에서처럼 가정생활보다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2년의 경우 중·고등학생 10명 중 4.3명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학교에서는 5.6명이 스트레스를 느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학생 10명 중 3.0명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느꼈고 5.2명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느꼈다. 이처럼 학생들은 여전히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스트레스 정도는 6년 전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2012년에는 10명 중 약 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4명 남짓한 비율로 줄었다. 더욱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꼈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10.2%에서 2018년 6.2%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10.3%에서 2018년 14.0%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스트레스 측면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6년 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Ⅳ-14] 중·고등학생의 생활영역별 스트레스 정도, 2012,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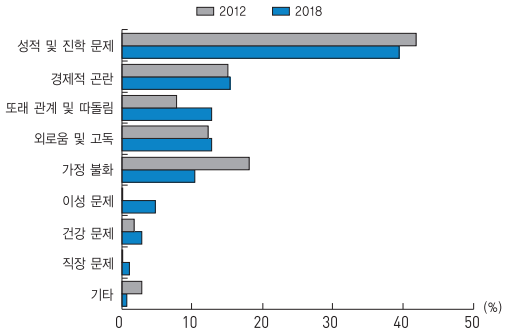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지난 2주일 동안 해당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느꼈다'부터 '전혀 느끼지 않았다'까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각 응답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비율도 낮아져, 2012년 12.8%에서 2018년 4.9%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서 중·고등학생들 중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청소년 자살시도율'이 2012년 4.1%에서 2018년 3.1%로 낮아진 것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그림 Ⅳ-15]에서처럼 학생에게 자살 충동이 있었던 이유 중에서 교육 경쟁과 관련 있는 '성적 및 진학 문제'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곤란'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성적 및 진학 문제의 비중은 2012년 41.8%에서 2018년 39.4%로 감소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성 문제나 또래 관계 및 따돌림 등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Ⅳ-15] 중·고등학생의 자살 충동 이유, 2012,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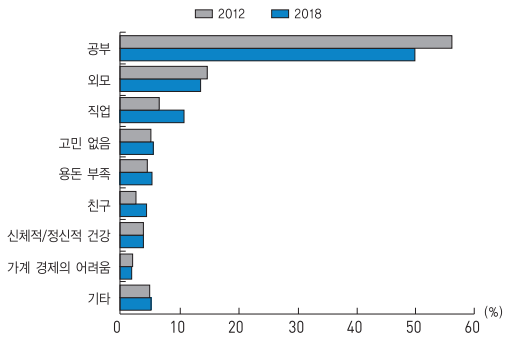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학생 중 해당 자살 충동 이유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중·고등학생이 고민하는 주된 문제는 [그림 Ⅳ-16]에서 보듯이 역시 '공부(성적, 적성 등)'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외모', '직업'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공부 문제가 주된 고민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6.0%에서 2018년 49.8%로 줄었다.

대신 직업 문제의 비중이 6.5%에서 10.7%로 높아져, 이제 학생들이 성적과 진학 문제 못지않게 직업과 진로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2012년 5.0%에서 2018년 5.5%로 조금 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Ⅳ-16] 중·고등학생이 고민하는 주된 문제, 2012,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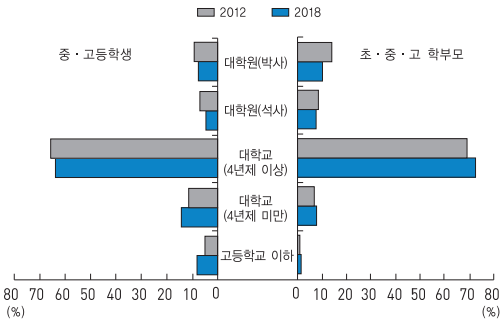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요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1순위 응답률임.
3) 기타에는 응답률이 2% 미만인 '가정환경', '인터넷중독', '이성교제', '학교학원폭력', '흡연음주', '기타' 등을 포함시켰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교육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인식과 추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학업에 대한 개인적 적성과 가정환경뿐 아니라 그 시대의 평균적인 교육수준, 학력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수익의 차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면 상위 학력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육 경쟁의 강도는 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Ⅳ-17]은 중·고등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과 초·중·고 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에는 4년제 대학 미만(고등학교 이하나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을 기대하는 학생의 비율이 11.7%였는데, 2018년에는 14.5%로 증가했다. 반면 대학원 석사 이상의 고학력을 기대하는 학생은 2012년 17.0%에서 2018년 13.1%로 감소했으며, 4년제(6년제 포함) 대졸 학력을 기대하는 학생도 66.1%에서 64.0%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학생의 기대 교육수준이 하향 조정된 것은 1990년대에 크게 높아져 2008년에 83.8%까지 치솟았던 대학 진학률이 2010년대 들어와 하향세를 보여 2017년에 68.9%까지 낮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 73.5%까지 찍

[그림 Ⅳ-17]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2012, 2018



주: 1) 분석대상은 학생의 경우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이고(휴학생 포함), 학부모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시켰음.
2) 기대 교육수준은 학생과 학부모 각각 "귀하는 어느 정도까지 교육받고 싶으십니까?", "귀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 교육받기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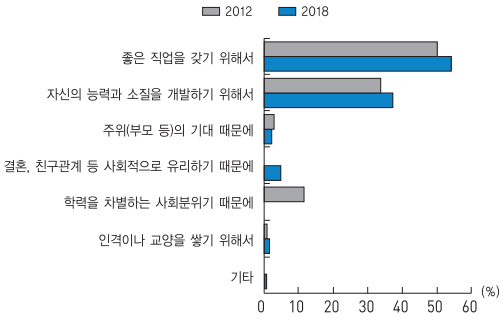
었던 특성화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2017년 32.8%까지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2018년에 학생의 기대 학력에서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납득할 만하다.

한편 2018년에 초·중·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 역시 6년 전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모습을 보였다.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력을 기대했던 학부모가 2012년에는 22.5%였으나 2018년에는 17.9%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에게 4년제 대졸 미만의 학력을 기대하는 비율이 동 기간에 8.1%에서 9.4%로 1.3%p 증가하는 데 그쳐 학생 대상의 설문(5.9%p 증가)에서만큼 늘지는 않았다. 대신 자녀에게 4년제 대학교 학력을 기대하는 비율이 69.4%에서 72.7%로 3.3%p 증가해 학생 설문(2.1%p 감소)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교 학력을 기대하는 비율은 2018년에 학부모가 학생보다 8.7%p나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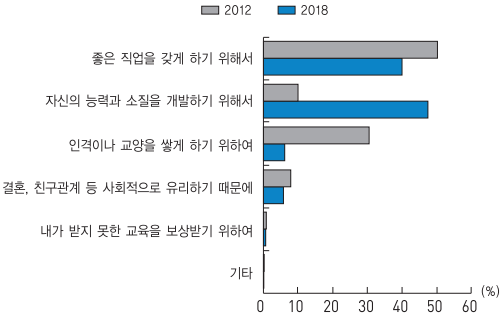
이처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2010년대 들어 진정세를 보이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 학력은 일정부분 조정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학력은 학생 당사자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및 경력별 구성의 변화를 통제하면 2000년대 들어 34세 이하 청년 노동인구 중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전문대 졸업자의 하위 50%가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저하를 동반하면서 이른바 '교육거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주호 외, 2014). 교육수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학생의 기대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는 노동시장 분석과 함께 개별 학생 당사자의 특성 파악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학력에 대한 희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18]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기대 교육 목적, 2012, 2018

1) 중·고등학생



2) 초·중·고 학부모



주: 1) 분석대상은 학생의 경우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이고(휴학생 포함), 학부모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시켰음.
2) 기대 교육 목적은 기대 교육 수준이 대학 이상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귀하는 대학 이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하가 자녀를 대학 이상 가르치려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경우 2012년 '학력을 차별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라는 응답범주가 2018년에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로 변경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그림 Ⅳ-18]은 중·고등학생이 대학 이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목적과 초·중·고 학부모가 자녀를 대학 이상 가르치려는 주된 목적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생 설문의 경우 2012년과 2018년에 선택지가 달라져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두 해 모두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직업을 갖거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8년에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 인맥 형성이나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에 대한 보상심리는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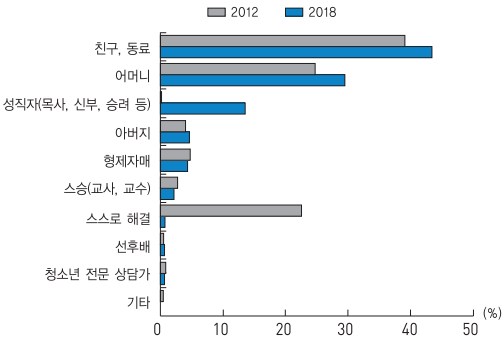
적어도 2018년 시점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목적에 있어 학생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견해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부터 차이가 크다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 고양의 필요성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부모는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예컨대 희망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1위는 부모였는데, 부모를 꼽은 비율은 초등학생 29.2%, 중학생 24.2%, 고등학생 22.0%였다(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그러면 부모가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으로는 어떨까? [그림 Ⅳ-19]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친구나 동료와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Ⅳ-16]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주된 고민 문제가 공부 문제였던 것을 떠올리면, 부모는 친구만큼 학업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Ⅳ-19] 중·고등학생의 고민 상담 대상, 2012,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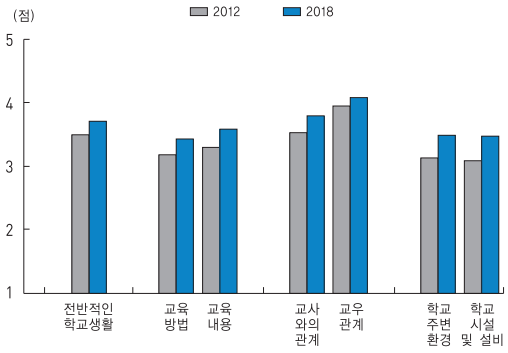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고민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민이 있는 경우 주로 누구와 상담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그러나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는 고민 상담 대상으로 부모(특히 어머니)를 꼽은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줄고 성직자에게 상담한다는 비율이 늘어난 것도 혼자 고민을 안고 괴로워할 가능성이 낮아진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중·고등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개선된 모습이었다. [그림 Ⅳ-20]에서처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 전반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보다 2018년에 모두 높아졌다. 특히 보통 수준에 그쳤던 교내외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아져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교육환경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18년에는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교수학습법과 평가제도의 개선 등 교육 본령에서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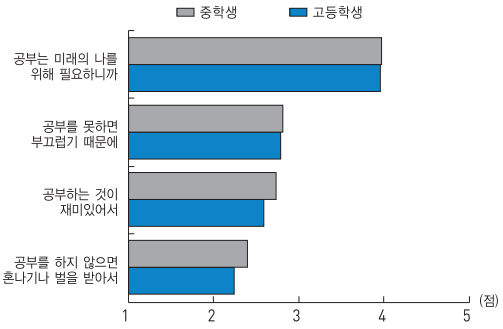
[그림 Ⅳ-20]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영역별 만족도, 2012,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만족도는 해당 학교생활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2, 2018.

2018년 「사회조사」에는 공부를 하는 이유에 관한 학생 설문이 포함되었다. [그림 Ⅳ-21]에서 보듯이 '공부는 미래의 나를 위해 필요하니까'라는 데 동의한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를 못하면 부끄럽기 때문'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혼나거나 벌을 받아서'가 가장 적은 동의를 받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와 같은 내재적 학습 동기가 고등학생 때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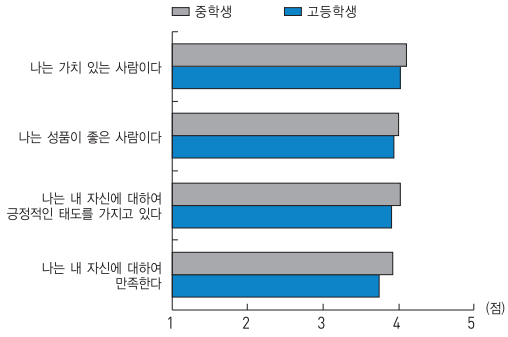
[그림 Ⅳ-2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해당 학습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8.

교육 경쟁에서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외부적 평가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성품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존심은 타인에게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를 맡겨 남이 세워줘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은 자기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라는 점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르다. [그림 Ⅳ-22]는 중·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인데,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응답이 많았지만, '그런 편이다'에 가까운 수준일 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더욱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자신과 자기 삶을 사랑하는

[그림 Ⅳ-2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2018



주: 1) 분석대상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 학생임(휴학생 포함).
2) 통계치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해당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8.

능력을 가진 긍정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때(김희삼 외, 2019), 학교급이 올라가도 자아존중감이 신장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이 목표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대학입시에 가까워질수록 소수만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경쟁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자기비하감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대화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과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교육 영역의 경쟁에 대한 정책적 성찰이 필요하다. 과도한 순위 경쟁은 학생과 가족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동시에 신뢰와 협력 등 사회자본의 함양을 저해할 수 있다(김희삼, 2017). 학생의 정신건강과 진학 및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의 성숙한 조언과 관여, 배움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학교 교육, 그리고 학력과 학벌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을 중시하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 등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김희삼. 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김희삼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연구기획팀. 2019.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교육의 대전환」. 학예연구보고서. 기획재정부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한국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이주호 · 정혁 · 홍성창. 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분석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OECD. 2017.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김경근 (고려대학교)

-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 부모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계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본계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로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취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더 강해지는데, 발달 양상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 다문화가정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상승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급증이라 할 수 있다. 20여 년 전부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국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율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서게 됐다.

다문화가정 출생아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면서 초·중등학교도 빠르게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매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급 학교가 다문화적 공간으로 급속하게 변모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은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차별이나 편견에 노출되기 쉽다. 이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반 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상급학교로 올라가면서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크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평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 및 발달과정을 심도있게 이해하여 적절한 교육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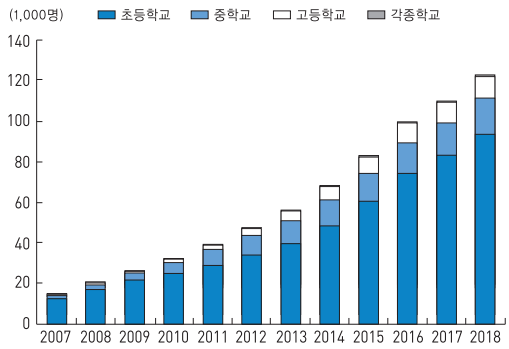
리·사회적 발달 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중 비율을 살펴보고, 부모 출신국별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게 된 배경에서 한국과 많은 유사점을 가진 대만과 비교를 통해 양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차례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및 다문화 수용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반적 실태

다문화가정 학생은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한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가 그들이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공식 통계가 집계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Ⅳ-23]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어떤 양상으로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2007년에만 해도 초등학생 1만 2,199명, 중학생 1,979명, 고등학생 476명 등 총 1만 4,65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초등학생 9만 3,027명, 중학생 1만 8,068명, 고등학생 1만 688명, 각종학교 429명 등 총 12만 2,212명에 이르고 있다.

[그림 Ⅳ-23]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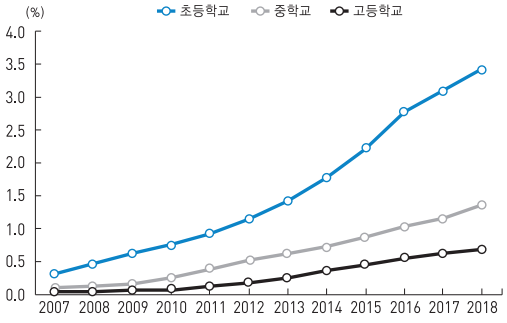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수=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외국인가정 자녀.
2)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저출산 여파 때문에 국내에서 학령기 아동은 매년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두드러진다. [그림 Ⅳ-24]에는 각 학교급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2007년에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0.19%에 불과했다. 이를 각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0.32%, 중학교, 0.10%, 고등학교 0.03%로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 비율들은 해가 갈수록 괄목할 만한 속도로 높아져 2018년 현재 초등학교 3.43%, 중학교 1.35%, 고등학교 0.69%에 달한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 처음으로 2% 벽을 돌파해 2.1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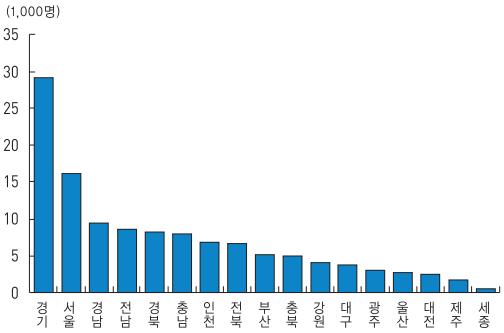
[그림 Ⅳ-24]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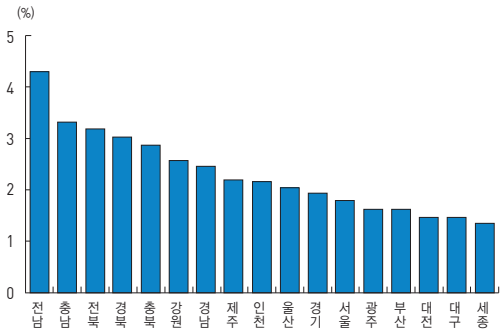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다문화가정 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그림 Ⅳ-25]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18

1) 다문화가정 학생 수



2)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다문화가정 학생 수÷재적학생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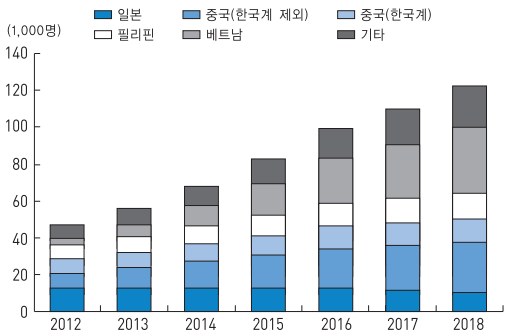
[그림 Ⅳ-25]는 각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2만 9,099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서울(1만 6,219명), 경남(9,461명), 전남(8,572명), 경북(8,225명), 충남(8,054명) 순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았다.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29%)이고, 충남(3.32%), 전북(3.19%), 경북(3.02%), 충북(2.86%), 강원(2.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26]에는 2012년 이후에 부모 출신국적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타나 있다. 2012년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4만 6,954명이었는데, 부모 출신국적별로는 일본(1만 2,933명)이 가장 많아서 전체 학생 가운데 27.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한

국계)(8,173명; 17.4%), 중국(한국계 제외)(7,709명; 16.4%), 필리핀(7,553명; 16.1%), 베트남(3,408명; 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부모 출신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학생들은 총 7,178명으로 전체의 15.3%에 달했다.

[그림 Ⅳ-26] 부모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2012-2018



주: 1) 기타에는 대만,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하지만 2018년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모 출신국적별 분포 자체도 크게 달라졌다. 2018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2만 2,212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베트남 출신 부모를 둔 학생인데, 총 3만 5,568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29.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한국계 제외)(2만 7,200명; 22.3%), 필리핀(1만 4,093명; 11.5%), 중국(한국계)(1만 2,522명; 10.2%), 일본(1만 363명, 8.5%) 순으로 많았다. 부모 출신국적이 기타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만 2,466명으로 전체의 18.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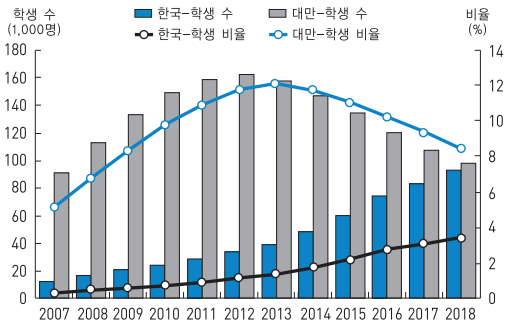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변동 추이와 관련해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본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가장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한국계)이나 필리핀 출신 부모 밑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베트남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 출신 부모를 둔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부모 출신국적이 기타로 분류된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2012년 15.3%에서 2018년 18.4%로 3.1%p 상승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출신국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다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배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국가로는 대만을 꼽을 수 있다. 대만은 한국보다 국제결혼에 따른 인구 유입을 좀 더 일찍부터 경험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가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한 시기도 한국보다 빨랐다.

[그림 Ⅳ-27]은 한국과 대만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변화는 장차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나타날 일들의 전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교육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감 추이를 살펴

보면 나중에 중등교육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Ⅳ-27] 한국과 대만의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07-2018



주: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다문화가정 학생 수 ÷재적학생 수)×100.
2) 대만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를 가리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China (Taiwan), Number of Students with Foreign Parent i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2007-2018.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 초등학교에서는 2007년 이래 매년 큰 폭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했고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만 초등학교에서는 2007년에 9만 959명이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 16만 1,970명에 다다른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2018년에는 9만 7,846명이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도 2013년에 12.2%로 정점에 도달한 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2년 이후 대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격감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다문화가정의 출산 행태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대만 정부가 위장결혼 급증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2003년에 본토 출신 결혼이주 희망자에게, 2005년부터는 동남아시아 출신에게도 엄격한 사전 면접을 실시한 것도 시차를 두고 다문화가정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일반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율이 더 낮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대만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일들은 시간이 좀 더 경과한 후에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유입이 줄고 이주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 초등학교부터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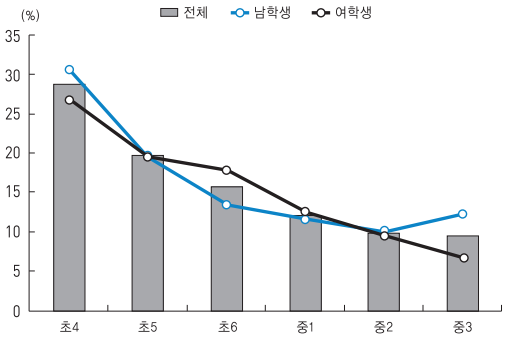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엇보다 부모가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많아 언어 습득이 원활하지 않아 교과 공부를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다.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정체성 혼란, 집단 괴롭힘 등에 노출될 개연성도 높다(오인수, 2014). 아래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를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자료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1,63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6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최근 다문화가정 학생 구성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조사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28]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의 비율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28.9%에 달했지만, 이후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해 중학교 3학년 때는 9.5%가 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나 그 변화 추이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달랐다. 대체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더 느끼는 편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일관되게 감소했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2학년 때에 비해 2.3%p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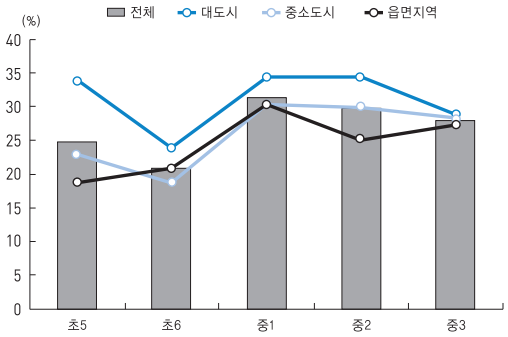
[그림 Ⅳ-28]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율, 2011-2016



주: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은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다음 10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로 측정함: 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것, ② 나의 외모를 가지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 ③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④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⑤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⑥ 친구들이 나를 흉보는 것, ⑦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⑧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⑨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것, ⑩ 다문화가족 출신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2)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율은 각각의 사유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단순 합산한 수치임.
3)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은 1~3순위로 중복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시된 비율은 응답 총화가 100%가 되도록 계산한 결과임.
4) '기타'에 응답한 사례는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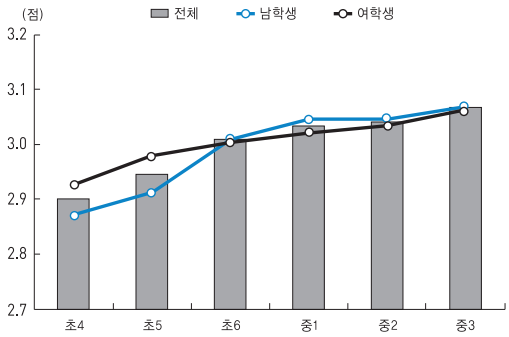
[그림 Ⅳ-29]에는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지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어려움을 토로한 비율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에서 낮았는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9]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주지역별 학교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율, 2012-2016



주: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공부 어려움은 "학생이 학교공부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다음 6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로 측정함: 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②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③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④ 공부 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⑥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2) 대도시에는 특별시와 6개 광역시가 포함됨.
3) 학교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비율은 각각의 사유별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단순 합산한 수치임.
4) '기타'에 응답한 사례는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30]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성취동기, 2011-2016



주: 1) 성취동기는 다음 7가지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임: ①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②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③ 나는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④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⑥ 내가 관심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⑦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학년별 변화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학교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다시 크게 높아진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에 학교공부에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지만 3학년 때는 그 어려움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교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한 비율이 5.2%p 감소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그 비율이 다시 2.3%p 상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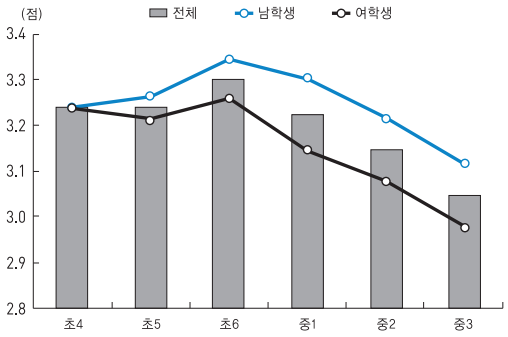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는 성취동기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림 Ⅳ-30]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취동기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나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취동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상승 정도는 초등학교 때 좀 더 컸고 중학교 진학 후에는 상당히 완만했다. 초등학교 4학년 및 5학년 때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취동기가 더 강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취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은 우울, 낮은 자존감, 심리적 위축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그림 Ⅳ-31]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기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31]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삶의 만족도, 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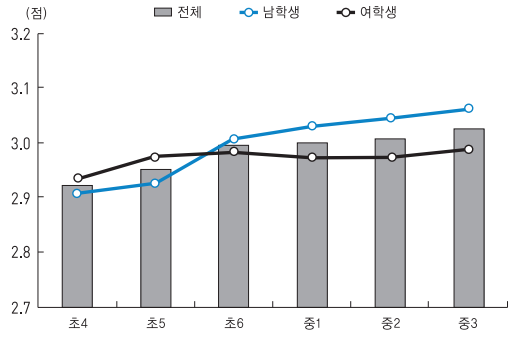


주: 1) 삶의 만족도는 다음 3가지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임: ①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②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③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점에 다다른 후에 중학교 진학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 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 감소가 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차이가 있었다(연보라, 2017). 성별 차이도 존재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줄곧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외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Ⅳ-32]는 이에 대한 실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신체만족도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Ⅳ-32]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신체만족도, 201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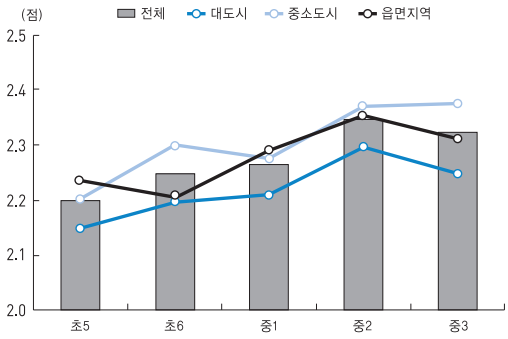
주: 1) 신체만족도는 다음 6가지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임: ①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신체모습 중 몇 군데를 바꾸고 싶다*, ④ 나는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⑤ 나는 현재의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⑥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괴롭다*.
2) 별표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응답을 역코딩한 항목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떼서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줄곧 신체만족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상승폭은 상당히 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매년 신체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중학교 진학과 함께 다시 하락한다. 중학교 3학년 때 신체만족도가 다소 반등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와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중학생 시절 내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훨씬 높은 신체만족도를 유지한다.

[그림 Ⅳ-33]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회적 위축이 점차 심화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사회적 위축이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사회적 위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엿보였다.

먼저 대도시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학생 전체의 사회적 위축 추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중소도시 거주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위축이 상당히 심화했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다시 약간 완화하지만 2학년 때부터 다시 상황이 나빠져 3학년 때에 최악의 지경에 다다른다. 읍면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회적 위축의 저점이 발생하며 중학교 진학 후에 계속 상황이

[그림 Ⅳ-33]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주지역별 사회적 위축,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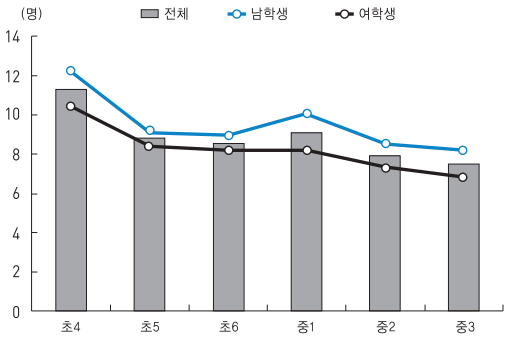


주: 1) 사회적 위축은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임: ①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②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③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④ 나는 수줍어한다, 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2) 대도시에는 특별시와 6개 광역시가 포함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악화하다가 3학년 때에 사회적 위축이 상당 부분 완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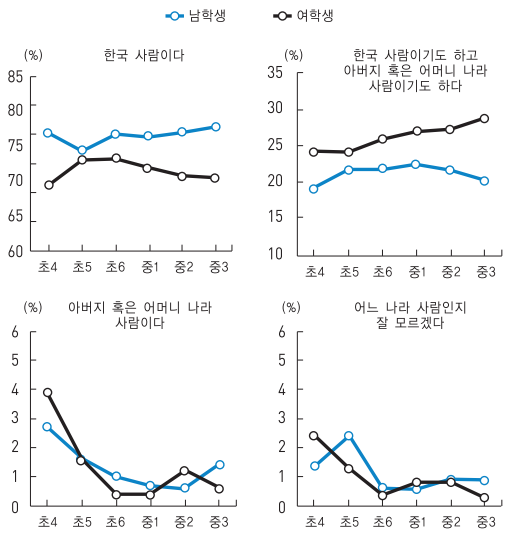
[그림 Ⅳ-34]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친한 친구 수가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친한 친구 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가장 많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학생이 특히 더 그렇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친구 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다시 평균 1.1명 정도 증가한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다시 친구 수가 감소세를 나타낸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친한 친구 수가 더 많았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4]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친한 친구 수, 2011-2016



주: 1) 친한 친구의 수는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응답한 결과이며, 한국에 있는 친구 기준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35]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국적에 대한 인식, 2011-2016



주: 1) 국적에 대한 인식은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응답한 결과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및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자신의 국적이나 정체성과 관련해 혼란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희정(2018)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동태적으로 형성되며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학생과는 다소 다른 다문화 수용성의 발달 궤적을 보일 공산도 있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적에 대한 인식, 한국인 정체성, 다문화 수용성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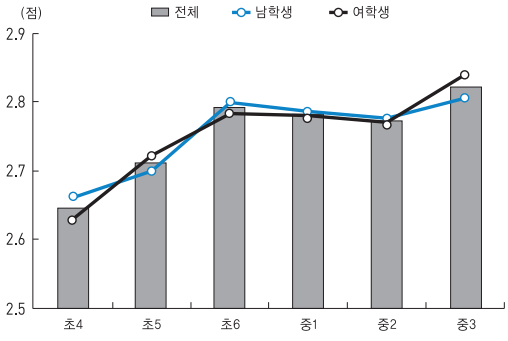
[그림 Ⅳ-35]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시기에든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70%가 넘는 비율로 자신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에 비해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다'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점차 약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하나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신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거나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닌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비율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73.3%까지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점차 하락하여 중학교 3학년 때에는 70.4%로 낮

아진다. 반면 자신이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닌 여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24.1%에 불과하지만 이후 점차 높아져 중학교 3학년 때에는 28.7%에 다다른다.

[그림 Ⅳ-36]은 청소년기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인 정체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인 정체성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큰 폭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과 함께 2학년 때까지는 한국인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다가 3학년 때에 다시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져 정점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학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한국인 정체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림 Ⅳ-36]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한국인 정체성, 2011-2016



주: 1) 한국인 정체성은 한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임: ①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②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③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④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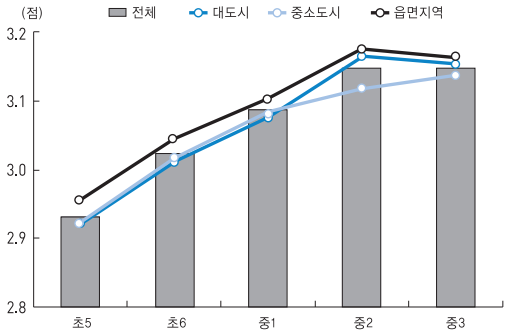
[그림 Ⅳ-35]와 [그림 Ⅳ-36]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국적에 대한 인식 및 한국인 정체성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안정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학생은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일례로 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닌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인 정체성도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유추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문화 친화적 환경이나 문화가 조성된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림 Ⅳ-37]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발달 추이가 지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증가폭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다. 일반 학생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초등학교 때에는 감소하다가 중학교 때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보라, 2017).

지역별로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읍면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을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그림 Ⅳ-37] 다문화가정 학생의 거주지역별 다문화 수용성, 2012-2016



주: 1) 다문화 수용성은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한 값임: 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②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④ 이성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귈 수 있다, 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2) 대도시에는 특별시와 6개 광역시가 포함됨.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까지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다문화가정 학생들 사이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다문화 수용성이 목도되지만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수용성의 지역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최근 한국의 각급 학교는 다문화적 공간으로 급변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체성 등은 상당히 역동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배경 및 속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례가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 때문에 다문화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변변한 준비도 없이 다문화교육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교육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사회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초입 단계에서 다문화교육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해 관용의 덕목을 내면화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김경근 · 심재휘, 2016). 그래야만 집단 간 갈등 완화와 사회통합이 좀 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경근 · 심재휘. 2016. "한국인의 다문화적 태도: 상대적 수준, 영향요인 및 과제." 「한국교육학연구」 22(1), 283-310.
연보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인수. 2104.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5(4), 219-238.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77-115.

2019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 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56

노동시간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 165
권현지 | 서울대학교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 이승렬 | 한국노동연구원 174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남성과 여성 간 약간 차이가 있다. 2019년 2/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남성은 0.4%p 감소했고, 여성은 0.5%p 증가했다.
- 실업률도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여성 청년 실업률이 전년대비 약간 높아졌다. 한편, 고용률이 다소 낮아진 중장년 남성의 실업률이 전년대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비정규직 고용이 계약만료와 함께 종료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10.7%, 계속 고용은 16.0%에 불과하다.
-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된 2003년 이래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잠시 주춤했으나 52시간 상한 노동제 시행으로 감소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시간 취업자 비중도 줄었다. 단,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 증가에는 정책적 주의를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전반적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상대적으로 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노동 관련 굵직한 제도변화가 다수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상한 노동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2018년 7월, 10.9% 인상된 2019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논란과 비판이 이어졌고, 2019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인상률을 2.87% (8,590원)로 크게 낮추었다.

한편 주당 총 52시간 상한 노동제의 단계적 시행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정책 역시 궤도 안으로 진입한 한해다. 이에 시간 단축의 여파를 완화할 유연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그 일환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2019년 2월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축소를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 내용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제도 및 환경 변화 속에서 관찰되는 주요 노동 동향의 추세적 변화를 통해 노동세계의 변화 조짐과 방향을 감지해 본다.

고용률과 실업률

한국 사회의 15세 이상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4,449만 5천 명으로 2018년 6월 4,416만 1천 명에 비해 33만 4천 명 증가했다. 그중 경제활동인구는 2,854만 5천 명(64.2%; 남성 1,623만 8천 명, 74.2%; 여성 1,230만 7천 명, 54.4%)으로 역시 전년 동월보다 38만 4천 명 늘었다. 취업자는 2018년 6월 2,712만 6천 명에서 2019년 6월 2,740만 8천 명으로, 실업자는 103만 4천 명에서 113만 7천 명으로 각기 증가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6월 1,600만 명에서 2019년 6월 1,595만 명으로 약 5만 명 감소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에 집중해 주요 노동시장 성과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자. 2018년 전년 대비 통계와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통계는 노동 공급에 있어 유동이 심한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할 때 대체로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2019년 2/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전체 고용률은 0.1%p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0.4%p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 0.5%p 증가했다(표 Ⅴ–1).

〈표 Ⅴ–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8, 2019. 2/4

	2018						2019. 2/4		
	고용률(%)			전년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0.7	70.8	50.9	-0.1	-0.4	0.1	0.1	-0.4	0.5
15-19세	7.4	6.4	8.5	-1.0	-1.2	-0.8	0.7	1.6	-0.3
20-29세	57.9	56.1	59.6	0.3	0.5	0.2	-0.2	0.6	-0.8
30-39세	75.7	89.7	60.7	0.4	-0.5	1.3	0.1	-0.6	0.8
40-49세	79.0	91.9	65.7	-0.4	-0.7	-0.3	-0.7	-1.2	-0.3
50-59세	75.2	86.9	63.5	-0.1	-0.8	0.6	0.2	-1.3	1.5
60세 이상	40.1	51.7	30.7	0.2	0.2	0.1	1.2	0.5	1.7

주: 1) 고용률은 만 15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연령 및 성별 통계는 최근 변화를 잘 드러낸다. 저임금근로자가 몰려 있는 20대 남성과 여성, 60세 이상 남성, 그리고 50대 여성 고용률은 각각 56.1%, 59.6%, 51.7% 63.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대 여성을 제외하고 대체로 소폭의 고용증가를 나타낸다. 20대 여성도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2%p 고용률이 증가했으므로 2019년 2/4분기 고용변화를 결정적 감소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20대 남성의 경우는 2018년 전년 대비 0.5%p, 2019년 2/4분기 전년 동 기간 대비 0.6%p 증가로 고용률 개선이 확연하다.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일 대목은 중년(특히 40–50대) 남성 노동시장의 변화다. 연령대별로 30대 89.7%, 40대 91.9%, 50대 86.9%를 기록한 남성 고용률은 전년 대비 각기 0.5%p, 0.7%p, 0.8%p 하락했다. 이런 하락세는 2019년 2/4분기에도 0.6%p, 1.2%p, 1.3%p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표 Ⅴ–2〉에 제시된 실업률을 살펴보자. 역시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유동성이 매우 강한 15–19세 연령집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현저한 변화는 없다. 역시 30대 이상 연령층은 실업률이 2.5–3.4%로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2/4분기에 4–50대 남성 실업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중년층 남성의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년 남성의 고용률 하락 및 실업률의 증가와 관련, 평생교육훈련 및 노동시장 재진입 도움 등 고용서비스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편, 10–20대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 노동력이 여전히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빠른 상승을 거듭해 2017년 11.5%에 이르렀던 20대 남성 실업률이

1.1%p 낮아진 10.4%로 꺾였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20대 여성의 경우 2018년 전년 대비 0.2%p, 2019년 2/4분기 0.9%p 실업률이 증가했다. 남성과 비교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빠르고 저임금 시장 진입 비중이 큰 20대 여성의 노동시장이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2〉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8, 2019. 2/4

	2018						2019. 2/4		
	실업률(%)			전년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8	3.9	3.7	0.1	0.1	0.2	0.2	0.2	0.1
15-19세	9.3	10.4	8.4	0.6	0.6	0.7	-0.7	2.1	-3.6
20-29세	9.5	10.4	8.6	-0.4	-1.1	0.2	0.6	0.2	0.9
30-39세	3.4	3.4	3.3	0.1	0.1	0.0	0.2	0.1	0.3
40-49세	2.5	2.4	2.5	0.4	0.4	0.2	-0.1	0.2	-0.4
50-59세	2.5	2.7	2.3	0.3	0.4	0.3	0.0	0.1	-0.1
60세 이상	3.1	3.6	2.5	0.2	0.2	0.3	0.6	0.7	0.4

주: 1) 실업률은 만 15세 인구 및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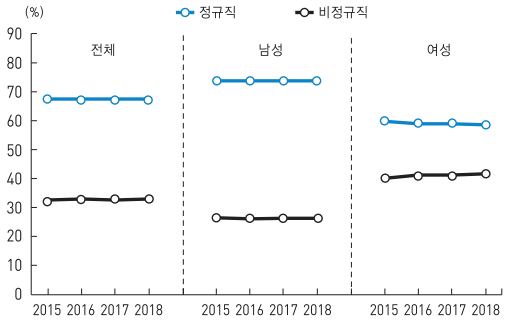
취업자 구성

우선 산업 및 직업별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자. 2019년 6월 「경제 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각각 12만 5천 명(6.0% 증가), 7만 4천 명(4.0% 증가), 6만 6천 명(2.9% 증가) 증가했다. 반면 감소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각각 7만 6천 명(6.5% 감소), 6만 6천 명(1.5% 감소), 5만 명(5.9% 감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각각 13만 3천 명(4.4% 증가), 6만 8천 명(2.9% 증가), 5만 5천 명(1.5%) 증가했으나,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사무종사자는 각각 6만 8천 명(2.2% 감소), 2만 3천 명(0.5% 감소)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2018년 6월 1,377만 2천 명에서 2019년 6월 1,416만 1천 명으로 38만 9천 명 증가했다. 고용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499만 9천 명에서 491만 3천 명으로 8만 6천 명 감소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는 147만 5천 명에서 148만 1천 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다음으로 [그림Ⅴ-1]에 제시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정규직 비중은 추세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 정규직 비중은 73.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여성의 경우 58.5%로 0.3%p 소폭 하락하는 작은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도 2017년 67.1%에서 2018년 67.0%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그림 Ⅴ-1).

[그림 Ⅴ-1] 임금근로자의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구성 비율, 2015-201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비정규직 비중 역시도 지난 4년간 33%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1]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드라이브가 아직 민간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음을 시사한다.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의 전환 여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표 Ⅴ-3〉을 보면 비정규직 대다수의 고용이 계약만료와 함께 종료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체 계약만료자의 73.3%가 이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은 10.7%, 계속 고용은 16.0%에 불과하다. 정규직 전환율은 근속기간과 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데, 양질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장기계약자의 전환율이 높지만(24.2%),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단기 계약자와 장기계약자의 전환율이 각각 8.2%와 17.2%로 낮은 편이다.

1) 이 글은 2019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가 수집 및 배포되기 전 작성되어,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2019년 8월 조사결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 해당 변화는 2020년 주요 동향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Ⅴ-3〉 근속기간 및 사업체 규모별 계약만료자의 지위 이동,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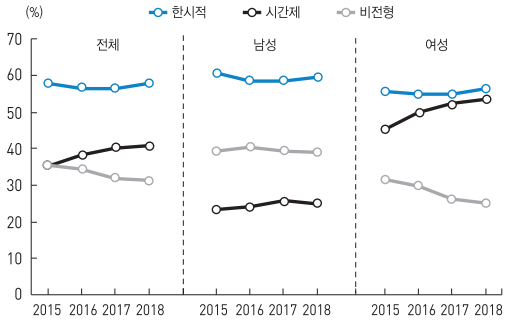
근속기간	규모별	계약만료자(명)	전환 비율(%)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 고용
전체	전체	75,891	73.3	10.7	16.0
	5-299인	46,995	70.7	11.2	18.1
	300인 이상	28,897	77.5	10.0	12.5
1년 6개월 이하	전체	62,851	76.5	8.6	15.0
	5-299인	39,612	75.1	8.8	16.1
	300인 이상	23,238	78.8	8.2	13.0
1년 6개월 초과	전체	13,041	57.9	21.2	20.9
	5-299인	7,383	47.0	24.2	28.8
	300인 이상	5,658	72.2	17.2	10.5

주: 1) 반기별 조사결과를 통합 계산함.
2) 전환 비율에서 '기타(방침미정)'는 그 비중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기간제노동자현황조사」, 2018.

한편 [그림 Ⅴ-2]에 제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구성 변화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한시적 노동자의 비중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전체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57-58% 수준(남성 59-61%, 여성 55-56%)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했고, 비전형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41.0%로 5.5%p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여성으로 2015년 45.6%에서 2018년 53.6%로 지난 4년간 8.0%p의 빠른 증가폭을 보였다. 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 및 가내 노동자, 일일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비전형 노동자는 최근 하락세를 보

[그림 Ⅴ-2]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 및 근로형태별 구성비율, 2015-2018



주: 1)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이는데, 2015년 35.3%에서 2018년 31.3%로 4.0%p 낮아졌다. 특히, 여성의 비중이 2015년 31.7%에서 2018년 25.1%로 줄어들어 이러한 하락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시간제 근로유형에 속해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 내 고용형태 유형 간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된 2003년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Ⅴ-4). 2012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었지만,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들어섰다.

월간 총 근로시간을 보면, 2012-2017년 기간 동안 전년 대비 평균 2.1시간씩 줄어든 반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2.1시간이 줄어들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1.5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0.7시간 줄어들었다.

〈표 Ⅴ-4〉 임금노동자의 월간 근로시간, 2011-2018

(시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근로시간	180.8	173.7	167.9	165.5	173.5	171.1	168.5	156.4
소정실근로시간	169.5	162.1	156.2	154.6	167.0	161.6	159.4	147.9
초과근로시간	11.3	11.6	11.6	10.8	6.5	9.5	9.2	8.5

주: 1)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특수형태 제외).
2) 소정실근로시간이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에서 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Ⅴ-5〉에 제시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54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취업자 비중이 2010년 27.3%에서 2018년 16.4%로 감소했다. 2019년 2/4분기에도 2018년에 비해 약 1.2%p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2019년 2/4분기에도 여전히 15.2%

〈표 Ⅴ-5〉 취업시간별 취업자 구성비율, 2010-2019. 2/4

(%)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4
1-17시간	4.4	4.4	4.5	4.7	4.8	5.1	5.7	6.6
18-35시간	10.7	10.2	10.9	10.7	12.2	11.4	13.8	11.4
36-44시간	30.3	32.7	34.9	35.2	35.8	37.3	39.5	42.0
45-53시간	25.7	25.9	25.3	26.0	25.3	25.4	23.2	23.5
54시간 이상	27.3	25.1	22.8	21.9	20.3	19.4	16.4	15.2
일시휴직자	1.6	1.7	1.6	1.6	1.6	1.4	1.5	1.3

주: 1) 2000-2018년은 연간 자료, 2019년은 2/4분기 자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의 취업자가 법적 상한시간 이상인 주 54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경향이 초단시간 취업자의 비율 증가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7시간의 초단시간 취업자 비율은 2010년 4.4%에서 2018년 5.7%로, 그리고 2019년 2/4분기 6.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금수준

최근 10년간 부문별 협약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등에 제약을 받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협약 임금이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Ⅴ-6). 특히 2018년에는 그간 약 3%대에서 타결되었던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4.2%(민간 4.3%, 공공 3.1%)로 협약임금인상률이 결정되었다.

〈표 Ⅴ-6〉 협약임금인상률, 2010-20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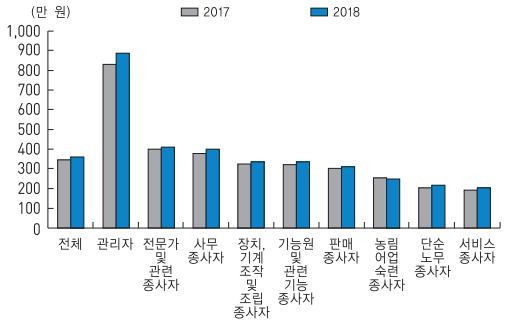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4.8	5.1	4.7	3.5	4.1	3.7	3.3	3.6	4.2
민간부문	5.0	5.2	4.7	3.5	4.2	3.7	3.3	3.7	4.3
공공부문	1.1	4.6	3.0	2.3	1.9	3.3	3.4	3.0	3.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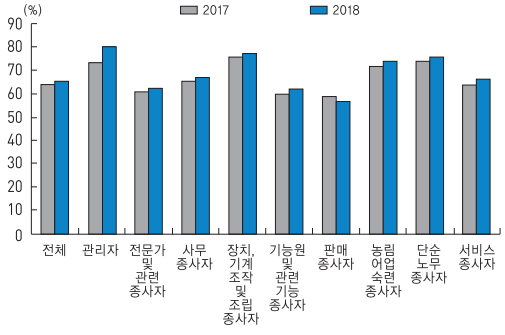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345만 원에서 359만 원으로 증가했다. 남성 임금은 398만 원에서 414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은 남성의 65.2%에 해당하는 270만 원을 받았다. [그림 Ⅴ-3]은 직종별 월 임금총액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나타낸다. 관리직 임금이 가장 높고 서비스종사자 임금이 가장 낮다. 2017년과 비교할 때 2018년에는 특히 고임금 직종인 관리직과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단순노무직의 임금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역시 2017년 63.9%에서 2018년 65.2%로 약간 높아졌다. 거의 모든 직종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이 높아졌으나, 판매직은 예외였다.

[그림 Ⅴ-3] 직종별 월 임금총액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17, 2018

1) 월 임금총액



2)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주: 1)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는 임금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임금근로자 특성별 상대임금을 통해 살펴보자. 〈표 Ⅴ-7〉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대임금 추이와 각 형태별 근로자들의 전년 대비 임금 증감률을 보여준다.

〈표 Ⅴ-7〉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상대임금, 201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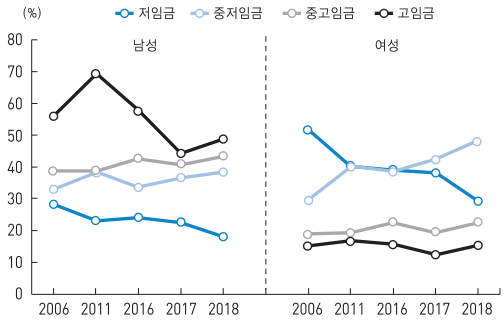
	2017		2018	
	월평균 임금 (만 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월평균 임금 (만 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정규직	285.1 (100.0)	1.9	300.9 (100.0)	5.5
비정규직	156.9 (55.0)	4.7	164.4 (54.6)	4.8
한시적	174.2 (61.1)	4.3	181.8 (60.4)	4.4
시간제	80.3 (28.2)	8.1	86.7 (28.8)	8.0
비전형	170.3 (59.7)	8.3	174.7 (58.1)	2.6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해당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비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전년 대비 증감률은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컸던 2018년 비전형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서 같거나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시간제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분위별 분포를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컸던 2018년, 중위임금의 2/3선 아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지난 10여 년에 걸쳐 가장 낮은 20.9%로 떨어졌다. 반면, 저임금 선에서 중위임금 사이의 중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0년간 가장 높은 38.3%로 높아졌다. 이 현상은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서 두드러진다.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 38.3%에 달했던 것이 2018년 29.1%로 낮아졌고, 중저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42.4%에서 48.1%로 늘었다. 중위임금 이상 여성 근로자의 증가분이 저임금 여성 근로자의 감소분보다 작아, 앞에서 살펴본 임금의 젠더 격차의 축소는 상당 부분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Ⅴ-4).[2)]

[그림 Ⅴ-4] 성 및 임금분위별 임금근로자 분포, 2006-2018



주: 1) 임금분위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중위임금의 2/3 이상 중위임금 미만을 '중저임금', 중위임금 이상 중위임금 3/2 미만을 '중고임금',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으로 정의하였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나 그림에서 수치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임금분포상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2) 다만 이는 시급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불완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 20%의 평균 임금 격차도 2017년 5.06배에서 2018년 4.67배로 줄었다(고용노동부, 2019). 하지만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한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311만 명). 2017년 13.3%였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에 15.5%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19). 따라서 저임금근로자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최저임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율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시장소득뿐만 아니라 비시장소득의 격차에도 기인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가입 여부는 생애 위험과 직결되어 있어 중요하다. 〈표 Ⅴ-8〉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여준다.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 수준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다. 특히, 시간제와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노조조직률과 노사분규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를 살펴보자. 최근 조직화 움직임이 정규직을 중심으로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그림 Ⅴ-5]에 제시된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률을 보면 2010년 8월 11.4%였던 것이 2018년 8월에는 12.5%로 약간 높아졌다. 이 중 정규직만 보면, 2010년 8월 15.7%이던 노조 가입률은 2018년 8월 17.1%로 상승폭이 크다. 즉 비교적 조직화가 용이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확대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조 가입률 격차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시간제와 비전형 근로자 가입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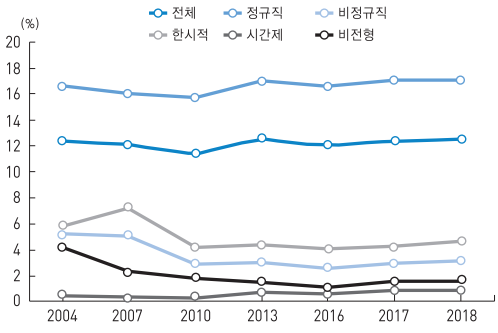
〈표 Ⅴ-8〉 임금노동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8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전년 대비 증감률	가입률	전년 대비 증감률	가입률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69.8	0.7	75.5	1.3	71.6	0.4
정규직	86.2	1.2	90.1	1.7	87.0	1.1
비정규직	36.6	0.0	45.9	0.6	43.6	-0.5
한시적	50.6	-1.8	62.9	-1.9	57.9	-3.6
시간제	18.6	1.3	25.0	3.2	24.8	1.7
비전형	19.8	-0.6	32.1	-1.2	29.9	-0.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8. 8.

[그림 Ⅴ-5]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04-201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더 낮다. 〈표 Ⅴ-9〉는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률 차이가 개별 근로자의 가입 의사보다는 사업체 노조 유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단위 내 가입 자격에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최근 노동자들의 단체행동도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노사분규 건수가 134건으로 상대적으로 분규가 적었던 2017년 101건에 비해 약 33% 증가했다(그림 Ⅴ-6). 50인 미만과 1,000인 이상을 제외한 전 규모의 사업장에서 분규가 늘었다. 분규 내용이 임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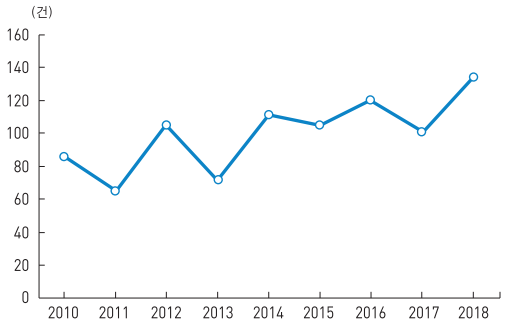
〈표 Ⅴ-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노동조합 가입 자격별 분포, 2018

(%)

	가입가능자		가입 대상 아님	노동조합 없음
	가입	미가입		
전체	12.5	6.0	6.8	74.8
정규직	17.1	7.9	5.5	69.5
비정규직	3.1	2.0	9.4	85.5
한시적	4.6	3.1	13.9	78.4
기간제	4.3	3.4	16.0	76.3
비기간제	5.8	2.1	6.3	85.9
시간제	0.9	0.8	8.9	89.3
비전형	1.6	0.5	3.5	94.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8. 8.

[그림 Ⅴ-6] 노사분규 건수, 2010-2018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9. 4. 24. 「'18.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도설명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9.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른 근로조건 차이". 「월간 노동리뷰」 제169호.

노동시간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노동시간 감소세는 2003년 주 40시간 노동제의 단계적 시행이 마무리된 2011년까지 급격했으나 그 후 지난 5-6년간 정체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총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즉 주 52시간 상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감소세가 회복되고 있다.
- 제도도입과 함께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차이가 있다. 제도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제도적용이 일찍 시작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반면, 중간 규모 사업체의 노동시간은 변화가 더디다.
- 제도 변화와 함께 54시간 초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줄었지만, 동시에 단시간 노동자, 특히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층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다. 이들 취약노동자군이 집중된 노인, 여성 등 특정 인구집단이 초단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시간 축소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방지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상한 근로시간제(이하 주 52시간 상한제)와 특례업종 범위의 대폭 축소는 최근 실시된 가장 중요한 노동관련 제도 변화 중 하나이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휴일 근로 포함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례업종 범위 축소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보편적인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고도의 과학기술혁신이 가져올 일의 미래에 대응하는 한편, 노동생활의 질 제고, 일-생활양립, 노동시장 젠더격차 축소 등에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일부에서는 기업조직의 일하는 방식 효율화와 축소된 시간 분에 대한 고용 증대 효과를 예측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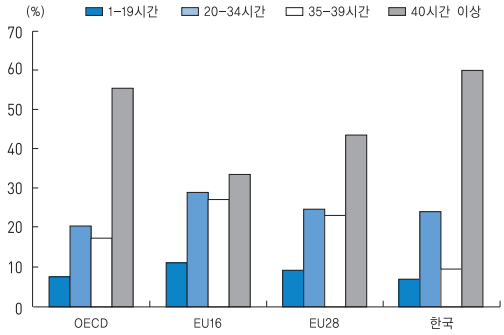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에 가장 익숙한 유연성 확보방식인 초과근무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 비용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노동자 집단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방식인 초과노동시간 제한은 임금을 감소시키고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다. 보완제도 도입의 난점도 제기되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주는 조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논쟁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52시간 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후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직 본격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관련 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2018년 2월을 전후해 변화에 맞춰 이미 자체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으므로 제도 시행 초기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웠던 제도 개정 전후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8년 중반 노동시간 관련 자료를 이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제도 시행 시점 전후의 노동자 특성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노동시간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한국의 장시간노동과 법제도의 변화

한국은 선진산업국 중 이례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최근(2017년) 통계에 기초한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일인당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국가로 나타난다.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분포를 보아도, 2017년 현재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9.9%로 OECD 평균(55.3%)보다 높다. OECD 국가와 EU 16개국에서 각각 17.1%, 26.9%의 노동자가 주 35-39시간 일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해당 노동시간에 속한 노동자는 9.4%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4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44.8%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보편화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준다(그림Ⅴ-7).

[그림Ⅴ-7] 국가그룹별 주당 노동시간별 임금노동자 분포, 2017



출처: OECD, OECD.Stat(https://stats.oecd.org/).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짧은 기간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근면과 성실은 가족과 사회를 가난에서 탈출시킨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통했고 장시간 노동은 이를 상징했다. 그러나 단단히 굳어져 온 장시간 노동관행은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족, 사회, 노동의 질, 고용 문제와 얽힌 주요 문제가 되었다. 장시간 노동을 떠받치던 한국인의 노동 규범도 '일 우선'에서 '일-가족 양립'으로 변하면서 장시간 노동은 한국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국제경제에 통합되었고, 노동시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노동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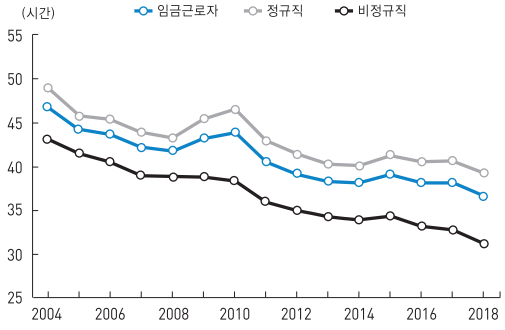
문 국제기준 준수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 역시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2000년대 초반 시작되었다. 한국 사회에 주 40시간 노동 규범을 뿌리내린 2003년 법정 노동시간 변경은 핵심적인 제도 변화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 주 40시간 노동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2011년까지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6시간 이상 단축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추세는 2015년 오히려 노동시간이 반등하기도 해, 팽배한 초과노동 관행에 대한 규제 없이 주 40시간 노동제만으로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그림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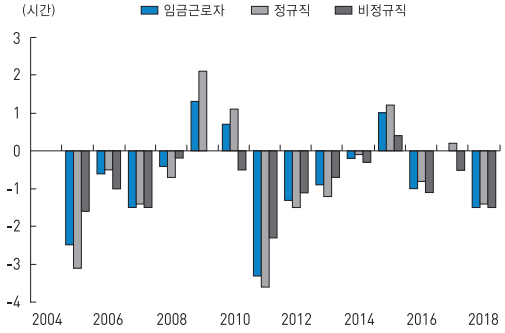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는 2003년 이후 가장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은 2011년 이후 주춤해진 노동시간 단축과 지지부진하던 총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입이며,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노동시간 단축이 관찰된 2018년 통계로 일부 확인된다. 최근 법제도 개정의 주요 사항은 ① 실근로시간 단축과 특별 연장근로 허용, ②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③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④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2020년부터 발효), ⑤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핵심인 실근로시간 단축, 즉 52시간 상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등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하게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률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범위 축소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을 이번 법개정의 취지로 밝히고 있다.

[그림Ⅴ-8] 근로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및 증감, 2004-2018

1) 주당 노동시간



2) 전년 대비 증감



주: 1) 2004년, 2009년, 2015년의 경우 광복절 요일 이동으로 공휴일이 감소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주 52시간 상한제 전후 노동시간의 변화

제도 변화 전후 노동시간 및 관련 노동조건의 변화를 살펴보자. 〈표Ⅴ-10〉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정착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월평균 총노동시간 및 그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 7년간 월평균 총노동시간은 24.4시간 줄었으며, 소정노동시간은 21.6시간, 초과노동시간은 2.8시간 축소되었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된 2011년 직후 1-2년간 큰 폭의 노동시간 축소가 있었지만, 그 후로는 축소 경향이 둔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법개정이 발표된 2018년은 주춤했던 노동시간 축소 경향이 회복된 시점으로, 법개정은 회복 추세를 분명히 한 전기로 평가할 수 있다.

〈표Ⅴ-10〉 월평균 노동시간, 2011-2018

(시간)

연도	총노동시간	소정실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2011	180.8	169.5	11.3
2012	173.7	162.1	11.6
2013	167.9	156.2	11.6
2014	165.5	154.6	10.8
2015	173.5	167.0	6.5
2016	171.1	161.6	9.5
2017	168.5	159.4	9.2
2018	156.4	147.9	8.5
2011-2018년 증감	24.4	21.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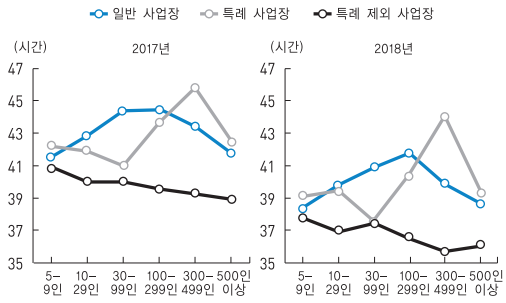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기업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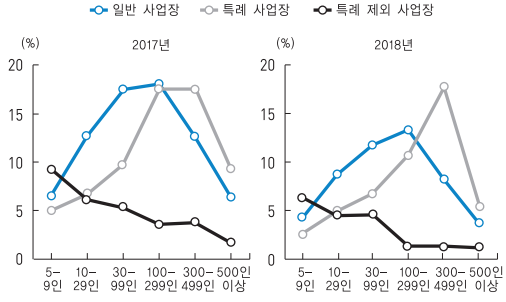
노동시간의 변화를 2017-2018년 규모별, 특례관련 업종별로 살펴보자.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동시간이 주당 40시간 이하로 떨어졌다. 300인 이하 기업군 내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시간도 길어지지만, 300인 이상 기업군 내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이 짧다. 대개 사업장의 주당 노동시간이 2017-2018년 사이 감소했으나, 특례유지 사업장 중 300-4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타 부문에 비해 여전히 현

[그림Ⅴ-9] 특례관련 업종 및 기업규모별 주당 노동시간 및 초장시간 근로자 비율, 2017, 2018

1) 주당 노동시간



2) 초장시간 근로자 비율



주: 1) 특례 사업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등임.
2) 법개정 후 특례제외 사업장 중 보관 및 창고업(521), 우편업(611),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건물 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전기통신업(612)은 자료의 한계로 일반 사업장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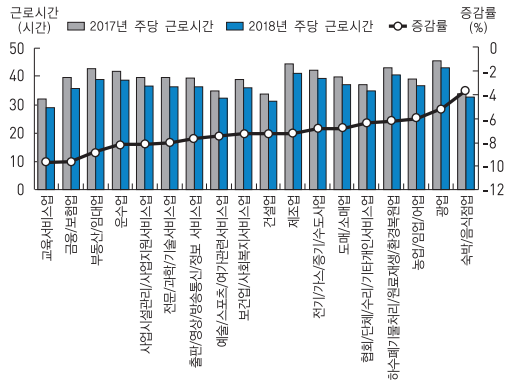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6월.

저하게 길다. 한편, 이번 제도 변화로 특례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이 크게 짧아졌다. 기업규모별로만 보면,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3.0시간이 줄어들어, 2018년 7월 제도 적용을 앞두고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0-299인의 중간 규모 사업장의 경우 2017년 42시간에서 2018년 39시간으로 7.1%가 줄어들었다(그림 V-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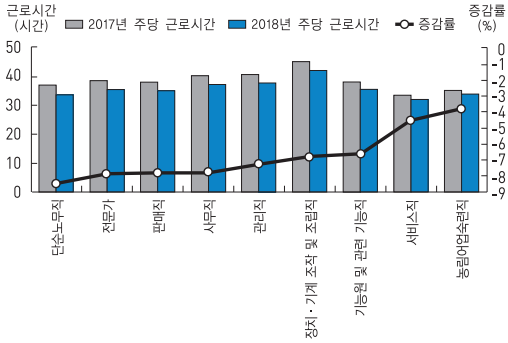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축소 폭이 크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뒤를 전문직, 판매직, 사무직 등이 뒤따르고 있다. 서비스직과 제조업 오퍼레이터 및 기능직의 시간 축소는 크지 않았다(그림 V-10).

[그림 V-10] 산업 및 직종별 주당 노동시간, 2017, 2018

1) 산업별 주당 노동시간



2) 직종별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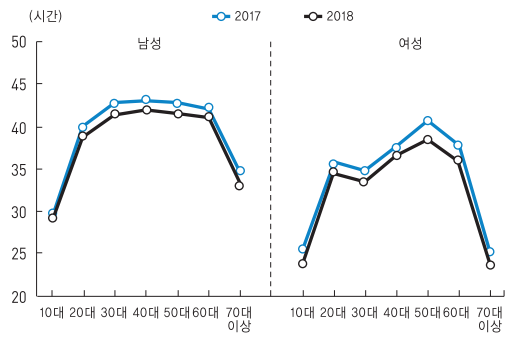
주: 1) 자료의 한계로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6월.

노동자 특성별 주당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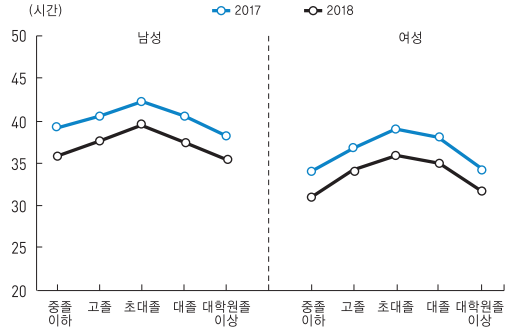
먼저 [그림 V-11]에 제시된 성·연령과 성·학력에 따른 노동자 집단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대에서 2017년에 비

[그림 V-11]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및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2017, 2018

1) 성 및 연령별



2) 성 및 학력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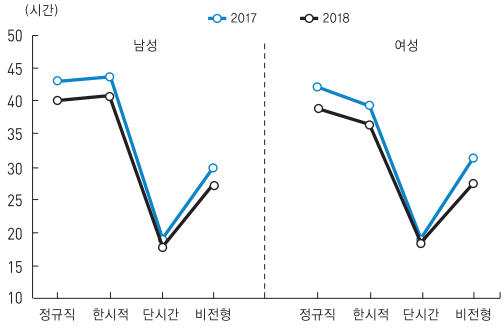
해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학력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중졸 이하 저학력자와 대졸자의 노동시간이, 여성의 경우 대졸자와 초대졸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초대졸 및 대졸 여성, 10-30대 및 50-60대 여성은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남성에 비하여 더 큰 노동시간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중졸 이하 저학력,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 40대와 70대 이상인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노동시간 감소폭이 작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여성 비전형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1년 사이 3.8시간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남성과 여성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이 3.1시간 줄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단시간 여성 노동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0.57시간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다. 임금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의 노동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분위와 4분위의 경우 3.2시간 줄어들었으며, 1분위는 3.0시간가량 줄어들었다(그림 Ⅴ-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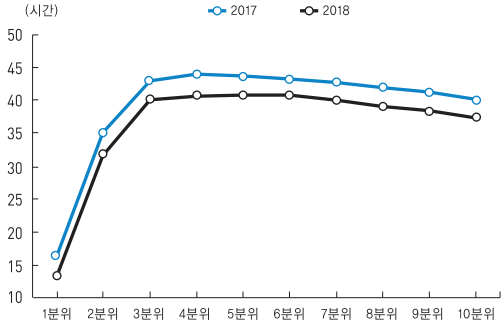
그런데, 위와 같은 주당 노동시간 증감 통계는 전반적인 변화추세를 보여주지만, 노동시간 취약계층, 즉 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빈곤 집단과 (비자발적) 초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소득빈곤 집단의 변화를 보여주기에 부족하다. 노동시간은 노동자 구성상의 변화, 특히 시간제 노동자의 증감 및 시간제 노동의 길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서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실노동시간의 감소가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 증가에 의존한다면 실제 전일제 노동자의 실노동시간 감소는 [그림 Ⅴ-12-1]이 드러내는 것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범주(range)별 노동자 분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Ⅴ-12] 임금근로자의 성, 종사상지위 및 임금분위별 주당 노동시간, 2017, 2018

1) 성 및 종사상지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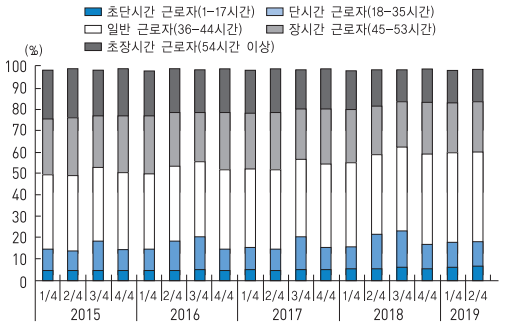
2) 임금분위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6월.

[그림 Ⅴ-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 노동자의 증가, 초장시간 노동자의 비중 감소,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 증가 경향 등이다. 주 52시간 상한제 논의가 활발

[그림 V-13] 취업시간대별 노동자 분포, 2015-2019. 2/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분기.

했던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반 사이에 초장시간 노동자의 감소 경향이 급격해졌다. 반면,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던 초단시간 노동의 기울기도 2018년 가팔라졌다. 〈표 V-11〉에 제시된 2017, 2018년 8월 관련 통계 역시 단시간 노동이 1년 사이 많이 늘고(초단시간과 단시간 각기 16.1%, 16.3% 증가) 45-53시간 구간과 54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크게 줄었다(각기 10.3%, 16.0% 감소). 2018년 현재 36% 이상의 취업자가 35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일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파트타임 노동자 비중이 작았던 것을 상기하면 노동시장에 아주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최근 노동시간 축소가 이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11〉 취업시간대별 노동자 분포, 2017.8-2018.8

(1,000명)

	노동자 수(1,000명)		증감률(%)
	2017.8	2018.8	
전체	26,904	26,907	0.0
1-17시간	1,576	1,830	16.1
18-35시간	6,831	7,945	16.3
36-44시간	8,336	8,200	-1.6
45-53시간	5,180	4,648	-10.3
54시간 이상	4,363	3,666	-16.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8월.

초장시간(주 54시간 이상)과 초단시간(주 17시간 이하) 노동의 특성

〈표 V-12〉는 기업규모별로 직종 및 고용형태별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노동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정규직은 규모와 직종을 막론하고 초단시간과 초장시간 노동에 속한 노동자가 소수이다. 다만 대기업의 정규 생산직(6.4%), 중소기업의 정규 생산직(7.5%),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규 판매직(6.1%)은 초장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다.

한편, 한시적, 단시간, 비전형을 아우르는 비정규노동의 경우 초장시간 노동에 속한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훨씬 더 많다. 한시적 생산직의 경우 초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각각 4.8%, 18.4%로 상대적으로 높다. 비정규직의 경우 초단시간에 연루될 가능성도 한층 높다. 대기업에서 일하더라도 한시적 판매직의 경우 10.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직(5.2%)과 판매직(15.3%)의 경우도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다. 시간제 노동자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기업에 종사하더라도 시간제 사무직의 경우 38.4%, 시간제 판매직의 경우 27.6%가 초단시간 일하고 있다.

〈표 Ⅴ-12〉 기업규모, 직종 및 고용형태별 초단시간 및 초장시간 노동자 비중, 2018

(%)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관리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전문관리	사무직	생산직	판매직
정규직	초단시간	0.0	0.2	0.4	0.2	0.0	0.4	0.5	0.7
	초장시간	1.1	0.9	6.4	0.1	2.2	2.7	7.5	6.1
한시적	초단시간	0.0	0.3	1.0	10.7	0.3	2.6	5.2	15.3
	초장시간	0.4	0.4	4.8	0.4	4.1	1.7	18.4	6.2
단시간	초단시간		38.4		27.6		43.7	25.4	43.1
	초장시간		0.1		0.0		0.0	0.0	0.0
비전형	초단시간		1.4	6.5	11.9		13.4	40.5	19.0
	초장시간		0.4	11.6	0.0		1.6	3.1	1.5

주: 1) 공란은 각 셀의 해당하는 사례수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을 경우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부문 원자료, 2018.

중소기업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하다. 시간제 사무직(43.7%)/생산직(25.4%)/판매직(43.1%)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자. 대기업의 경우 비전형 생산직(6.5%)과 판매직(11.9%)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낮지 않지만, 한시적, 시간제 노동자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중소기업 비전형 생산직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40.5%로 매우 높다. 중소기업 비전형 사무직(13.4%)과 판매직(19.0%)도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도 변화 후 나타난 한국 사회 노동시간의 전반적 감소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은 노동시간 축소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2018년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제도 개정, 특히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주 52시간 상한제 시작 시점 전후 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1년 주 40시간 노동제 전면화 이후 주춤하던 노동시간 단축 경향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온 새로운 노동시간 규제와 함께 다시 눈에 띌만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노동자 집단에서 총노동시간이 현저히 줄었다. 반갑게도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동자 생활상의 변화

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간 축소 경향에 대한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노동자 경험은 크게 다르다.

또 글 말미에 제시한 분석과 같이 초과노동시간 축소와 초단시간노동 증가 경향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의를 요한다. 특히 초단시간노동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비중이 높다는 점과 관련, 취약계층에 몰려있는 고령자와 여성의 초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빈곤화 우려를 초기단계에서 방지하는 정책도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긴밀히 연계되는 유연근로시간제도 (flexible work arrangements)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유연근로시간제도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찰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노동자 수는 1963년의 517만 8천 명에서 2018년 673만 9천 명으로 늘어났으나 취업자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5%에서 25.1%로 줄어들었다.
-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 50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 자영업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은 자영업자가 상용노동자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아울러 직업과 생활에 만족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 2018년 기준 종속적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는 160–21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과 유사한 플랫폼노동자 규모는 취업자의 1.7–2.0% 수준으로 추정된다.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미용실 원장, 분식집 주인, 개인택시기사 등 혼자서 일을 하거나 노동자 몇 사람을 고용하면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영업자라 부른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가족을 무급가족종사자라 하는 데 이들은 대체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묶어 '비임금근로자'라 정의한다. 한국의 비임금노동자(이 글에서는 '근로' 대신에 '노동'으로 바꿔 쓴다)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주로 자영업을 하는지, 그들의 노동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임금노동자란?

먼저 비임금노동자의 정의를 정리해보기로 하자. 통계청에서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라 정의한다. 취업자는 임금, 봉급, 일당 등의 대가를 받고 일한 사람을 뜻하는 '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가 아닌 '비임금노동자'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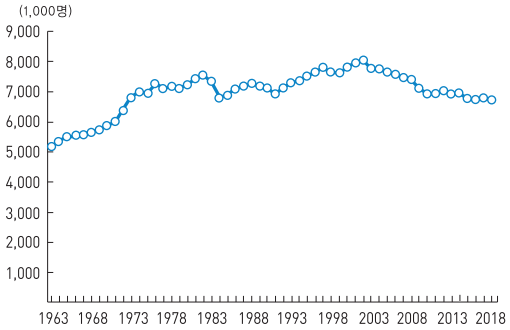
비임금노동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뉘는데 먼저 무급가족종사자란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일

하는 사람이다. 무보수라서 '무급'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혼자서 전문적인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 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 하고, 중국집 주인처럼 음식을 배달하고 그릇을 회수하는 배달원을 고용하기도 하는 자영업자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라 한다.

비임금노동자는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림 Ⅴ-14]는 196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비임금노동자 규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63년 517만 8천 명이던 비임금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802만 6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줄어드는 양상으로 바뀌어 2013년에 693만 4천 명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 현재 673만 9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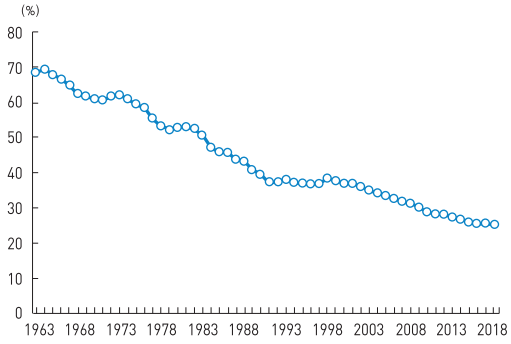
[그림 Ⅴ-14] 비임금노동자 수, 1963-2018



주: 1) 농림어업 포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임금노동자 수가 7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비임금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취업자)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노동자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Ⅴ-15]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 중 비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에 68.5%였다. 말하자면 취업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은 비임금노동자였다는 것이다. 당시에 농림어업에서 가족경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경제 성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Ⅴ-15] 비임금노동자 비율, 1963-2018



주: 1) 비임금노동자 비율=(비임금노동자 수÷취업자 수)×100.
2) 농림어업 포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1964년에 69.3%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져, 1975년 59.4%, 1984년 47.1%, 1990년 39.5%로 경제성장과 함께 하락을 거듭하였다. 외환부족사태가 초래한 경

제적 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38.3%를 기록하여 그 비율이 약간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다시 떨어져 2010년 28.8%가 되었고 2018년 현재 25.1%까지 떨어졌다. 이제는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비임금노동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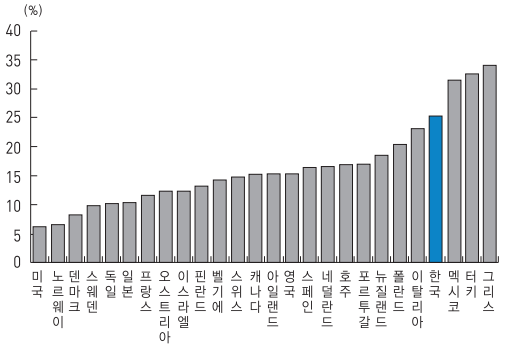
[그림 Ⅴ-1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다. 특히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아도 높은 편이다. 대체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비임금노동자 비율은 낮아지는데,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중에서도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임금노동자로 흡수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용한(self-employed)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조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임금노동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점도 하나의 배경이다. 최근에는 정년퇴직자가 자영업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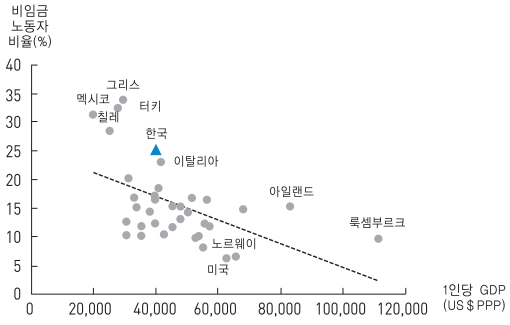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자영업자로 일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부터 무급가족종사자는 논외로 하고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영업자의 보조적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림 Ⅴ-17]에 제시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02년의 459만 8천 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1981년에 268만 5천 명의 수치를 보인 뒤로는

[그림 Ⅴ-16] OECD 국가의 비임금노동자 비율, 2018

1) 비임금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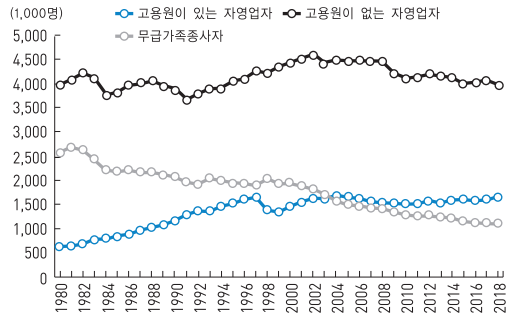


2) 1인당 GDP와 비임금근로자 비율



주: 1) 비임금노동자 비율=(비임금노동자 수÷취업자 수)×100.
2)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지수(PPP)로 조정한 수치임.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

[그림 Ⅴ-17]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수, 198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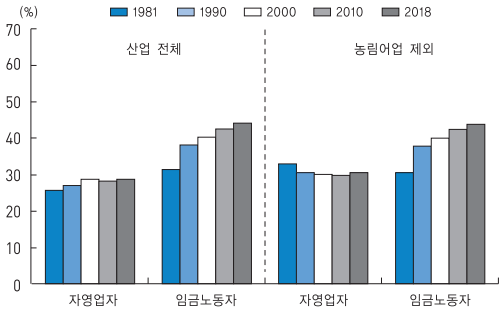
주: 1) 농림어업 포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대체로 감소하였다. 2018년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1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 7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10만 1천 명이다.

어떤 사람이 자영업자로 일하는가?

먼저 자영업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임금노동자의 경우 1981년에 31.5%에서 2018년 44.1%로 계속 증가하였다(그림 Ⅴ-18). 같은 기간 자영업자도 25.8%(1981년)에서 28.9%(2018년)로 3.1%p 증가하였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12.6%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여성 자영업자 비율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다.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오히려 1981년 32.8%보다 감소해 2018년 현재 30.7% 수준이다. 즉,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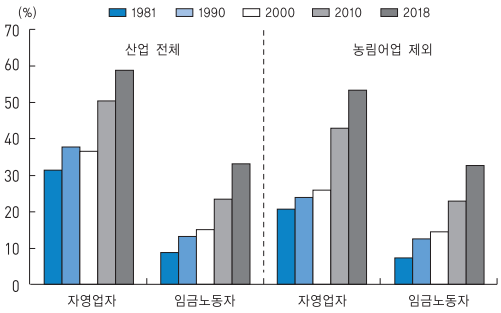
[그림 Ⅴ-18] 여성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 비율, 1981-2018



주: 1) 해당 종사상 지위별 전체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의 비율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 4차(1981), 5차(1990), 8차(2000), 9차(2010), 10차(2018)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취업자 비율과 달리 5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높고,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그림 Ⅴ-19). 임금노동자는 1981년 8.8%에서 2018년 33.1%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1.3%에서 58.9%로 증가하였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더라도 2018년 현재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53.3%로 절반을 넘어선다.

[그림 Ⅴ-19] 50세 이상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 비율, 198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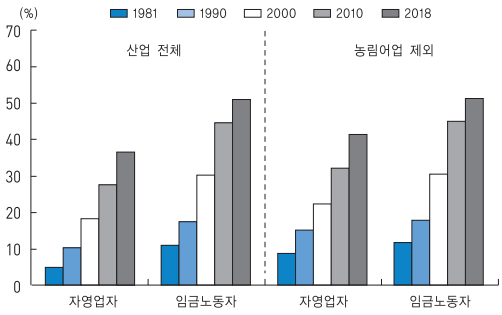


주: 1) 해당 종사상 지위별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율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 4차(1981), 5차(1990), 8차(2000), 9차(2010), 10차(2018)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학력 취업자 비율은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그림 Ⅴ-20). 하지만 자영업자도 농림어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2018년 41.2%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의 분포를 보면, 1981년에는 비농림어업이 52.0%, 농림어업이 48.0%였으나 2018년에는 비농림어업이 84.9%로 늘어났고, 농림어업은 15.1%로 줄어들었다.(그림 Ⅴ-21-1). 농림어업을 제외한 산업별 구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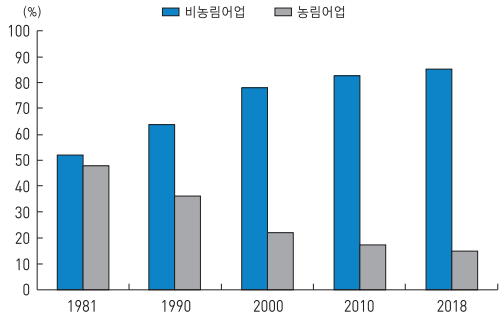
[그림 Ⅴ-20] 고학력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 비율, 198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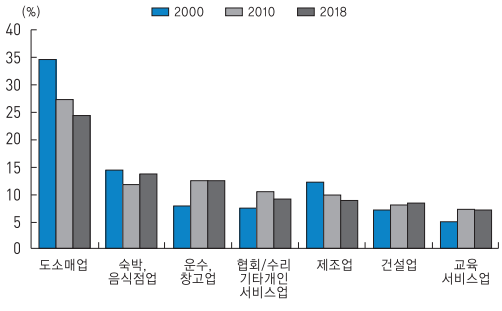
주: 1) 해당 종사상 지위별 전체 취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율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 4차(1981), 5차(1990), 8차(2000), 9차(2010), 10차(2018)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Ⅴ-21] 자영업자의 산업구성, 1981-2018

1) 비농림어업 및 농림어업 구성비율



2) 주요 산업별 구성비율(농림어업 제외)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4차(1981), 5차(1990), 8차(2000), 9차(2010), 10차(2018)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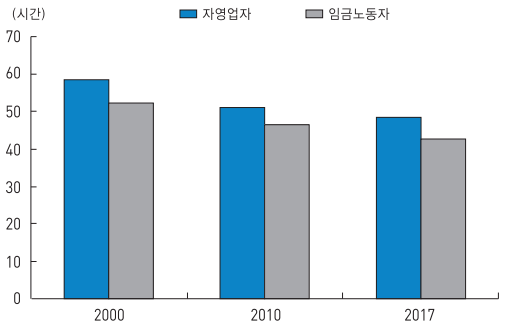
보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업,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Ⅴ-21-2). 도소매업의 경우에 온라인쇼핑, 모바일쇼핑 등 이커머스(e-commerce)의 확산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도소매업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2000년 158만 명에서 2018년 11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체 자영업자 수가 2000년 457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약간 늘어난 결과와 대비된다.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소득·생활·건강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노동시간, 소득, 직업 및 생활 만족도, 건강상태 등 노동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그림 Ⅴ-22). 임금노동자는 2000년에 주당 52.3시간이었으나 주 40시간제 도입의 영향으로 2010년 46.4시간, 2017년 42.7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2000년 68.5시간, 2010년 51.2시간, 2017년 48.5시간으로 줄어드나 여전히 임금노동자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에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차이가 5.8시간으로, 주 5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1일 1.2시간 정도 더

[그림 Ⅴ-22]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2000-2017



주: 1) 무응답 제외.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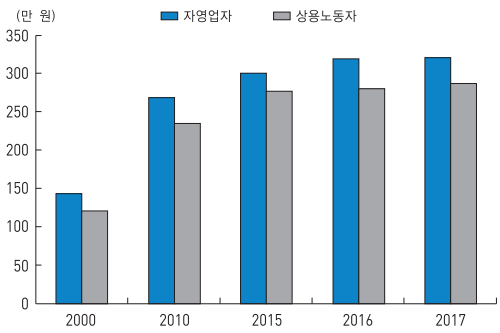
일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영업자는 1주일에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상용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23). 2017년의 경우에 자영업자의 월 소득은 322만 원이고, 상용노동자는 287만 원으로 35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이 더 긴 편임을 고려하여 시간당 소득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상용노동자보다 여전히 높지만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자영업자 소득은 상용노동자 대비 1.12배였으나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06배로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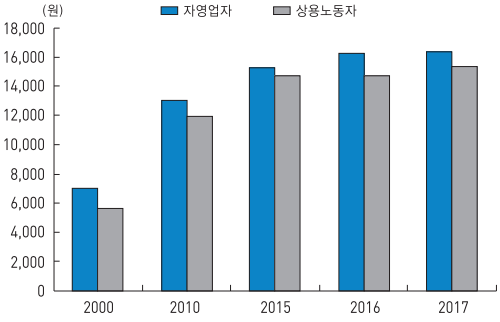
소득 5분위별 분포를 보면, 흥미롭게도 월 소득 중앙값(median)은 2017년의 경우에 자영업자와 상용노동자 모두 250만 원으로 동일하였으며, 소득 1분위(하위 10%)와 소득 2분위(하위

[그림 Ⅴ-23] 자영업자 및 상용노동자의 월 소득 및 시간당 소득, 2000-2017

1) 월 소득



2) 시간당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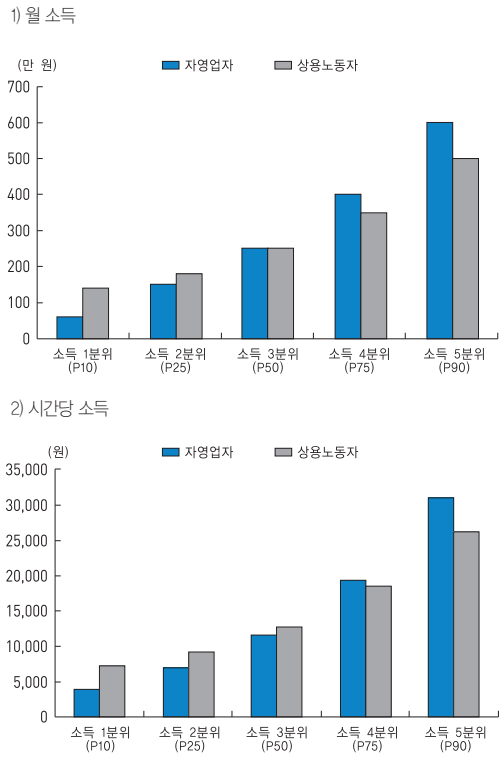
주: 1) 무응답 · 결측치 제외.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3) 세금공제 후 소득.
4)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상용노동자 제외.
5) 적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제외.
6) 시간당 소득 = 월평균소득 ÷ (주당 총노동시간 × 4.3).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25%)의 소득은 자영업자가 상용노동자보다 낮았다(그림 Ⅴ-24). 이는 소득이 적자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결과이다. 참고로 2017년의 경우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1.6%였다. 그런데 반대로 소득 4분위(상위 25%)와 소득 5분위(상위 10%)의 월 소득은 상용노동자보다 자영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의 경우에 중앙값이 동일하였던 것과 달리 시간당 소득의 중앙값은 상용노동자가 1만 3,000원 수준으로 자영업자보다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10%)와 소득 2분위(하위 2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소득 4분위(상위 25%)와 소득 5분위(상위 10%)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상용노동자보다 높았다. 특히 소득 5분위(상위 10%)의 경우에는 월 소득과 시간당 소득 모두 자영업자가 상용노동자보다 1.2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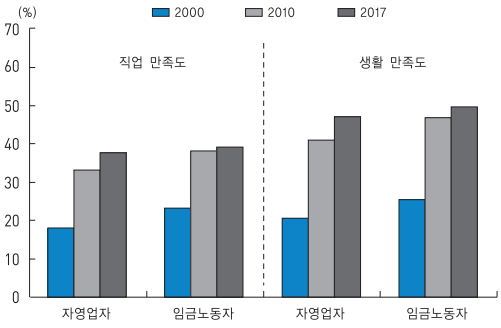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직업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상태를 살펴보자. [그림 Ⅴ-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과 생활에 만족한다는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금노동자와 비교할 때, 낮은 비율을 보이나 이 차이는 2017년에 꽤 줄어들고 있다.

[그림 Ⅴ-24]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소득분위별 소득 분포, 2017



주: 1) 무응답 · 결측치 제외.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3) 세금공제 후 소득.
4)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는 상용노동자 제외.
5) 적자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포함(소득을 0으로 처리).
6) 시간당 소득 = 월평균소득 ÷ (주당 총노동시간 × 4.3).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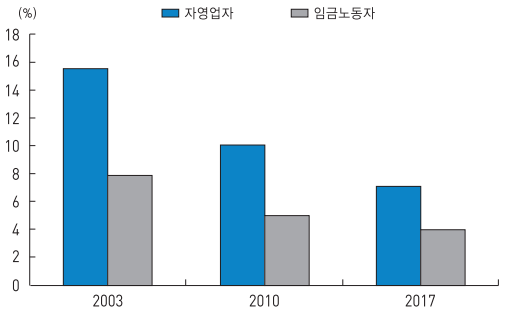
[그림 Ⅴ-25]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2000-2017



주: 1) 무응답 제외.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3) 만족도는 현재 직업과 생활에 대해 각각 '매우 만족스럽다' 또는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도 나아지고 있다. [그림 Ⅴ-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그림 Ⅴ-26] 자영업자 및 임금노동자의 건강상태, 2003-2017



주: 1) 무응답 제외.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3) 건강상태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또는 '건강이 안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라 하면, 스스로 고용하였기에 자유롭게 일을 하고, 적절한 수입으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영업자는 여러 고객을 상대하기에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다.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은 어느 한 사업주와 전속으로 계약하여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독립적인 자영업자와 구별하여 한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른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이들을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ment)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는 한국에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다름없이 한 사업주에 종속된 채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도 불완전하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들을 위장된 고용(disguised employment)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한국은 2008년 7월부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조만간 고용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한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파악할 수 없었다. 취업자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도 지금까지는 임금노동자인 경우에 국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확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략 50만 명 내외로 확인되며, 이전의 연구에서는 130만 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흥준·장희은(2018)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에 섞여있다고 보고, 임금노동자에서 진성(순수) 임금노동자를, 1인 자영업자에서 진성(순수) 자영업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임금노동자 영역에 있는 경우는 74만 5천 명, 1인 자영업자 영역에 있는 경우는 91만 4천 명이었다.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는 종속성이 떨어지는 새로운 직업군은 55만 명이었다.

또한 정흥준·장희은(2018)은 새로운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5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 속에는 '플랫폼 노동'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았다. 플랫폼 노동이란 소비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배달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주문한 피자를 배달기사가 배달해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요즈음은 저녁에 약속이 생겨 집을 비워야 하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돌볼 사람을 앱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에 한국에 플랫폼 노동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활동하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김준영(2019)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경제 종사자수를 47–54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이는 취업자 전체의 1.7–2.0% 정도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맺음말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자영업 비율을 보이는 국가이다. 최근 이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고령화의 영향으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퇴직자도 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함께 플랫폼을 통한 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이전과 달리 임금노동자라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취업자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바쁜 주부가 틈틈이 크라우드 노동(crowd work)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크라우드 노동은 예를 들어 프랑스 헌법 번역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를 플랫폼에 시간당 가격을 정하여 올리면, 프랑스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각자 어느 조문을 번역하고, 분량만큼 수입을 얻는 방식이다. 이들도 적어도 주당 1시간 이상 노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통계청의 분류기준에 따른다면 '취업자'이며, 이들이 누군가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자영업은 자신을 고용하여 일을 하기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위험, 일을 못하게 되는 위험, 건강 이상의 위험,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위험 등등 많은 위험이 자영업자에게 닥칠 수 있으며, 이 위험은 자영업자와 더불어 가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노후 소득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건강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도 가입한다. 소득과 재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보험료는 자영업자 스스로 감당하여야 하다 보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아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앞으로 이처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도 마땅히 각종 위험을 기피하거나 분산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김준영. 2019.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고용동향브리프」 Vol.2. 한국고용정보원. 2–7.
정흥준·장희은. 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Korean Social Trends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Income & Consumpt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Ⅵ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86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 · 복지재정지출의 수혜분포 및 소득재분배 195
성명재 | 홍익대학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전영준 | 한양대학교 202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가구소득 증가율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소득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의 소득비가 하락하고 있다.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교육지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 고소득층에서 조세부담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고 2016년에는 국내외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가계소득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계층, 연령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득 공식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표본가구의 약 80%가 전년도와 기준년도에 동시에 응답하고 있어 동일 가구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 자료는 경상소득만을 제공하고 있어 총소득의 일부분인 비경상소득이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이다.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공식통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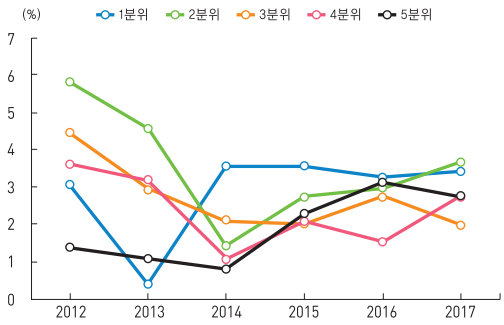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점차 벗어나 2012년 2.9%에서 2015년 3.8%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2016년 3.2%, 그리고 2017년에는 2.7%로 다소 감소하였다.[1)]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단,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우선 [그림 Ⅵ-1]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가구의 소득분위는 연도별로 달라지므로 연도별로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는 매년 상당부분 교체된다. 그러므로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의 실질증가율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아니라 매년 각 소득분위가 점유한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전년도에 낮은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는 다음 해에 더 높은 소득분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다음 해에 소득이 낮게 실현된 가구로 새롭게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분위의 점유소득 증가율은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득증가율 보다 낮게 계산된다. 반대의 논리로 고소득층의 경우 점유소득증가율이 고소득가구의 평균소득증가율보다 높게 계산된다.

[그림 Ⅵ-1]을 보면 1분위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의 평균 실질소득은 2014년까지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그 이후 2017년까지 증가율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실질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난 7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Ⅵ-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한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11-2017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소득비는 27.6이고 5분위 소득비는 208.8이다. 2011-2017년 기간 동안 4분위 이하 소득비에 유의미

1)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중 2개년도 연속으로 응답한 가구들을 기초로 연도별 평균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고, 가구가중치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소득연도 2016년 자료부터(조사연도 2017년) 소득·지출 항목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변화는 볼 수 없으며 다만, 고소득층인 5분위의 소득비가 2015년까지 유의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이후 다소 반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6년 이후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수치이므로 그 이전과 시계열 비교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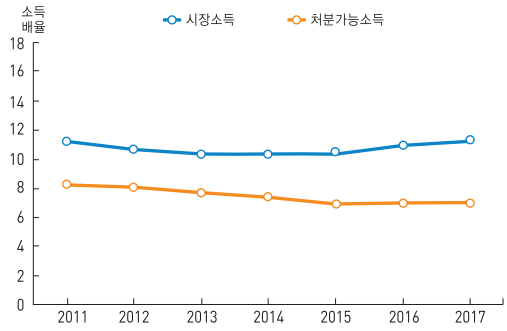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7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7.8	58.2	85	117.5	211.5
2012	27.4	58.7	85.9	117.6	210.5
2013	26.6	60.7	86.4	118.7	207.6
2014	27.5	60.6	87	118.5	206.4
2015	28	61.1	86.9	118.4	205.6
2016	27.7	57.8	85.5	118.7	210.3
2017	28.1	58.8	85	118.2	209.9
2011-2017 평균	27.6	59.9	86.2	118	208.3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3) 저자 분석결과로 통계청 공식 발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Ⅵ-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에서 2013년 10.3으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점차 상승세를 보여 2017년 11.3을 기록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8.3배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5년 6.9를 기록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다가 다시 심화되어 갔으나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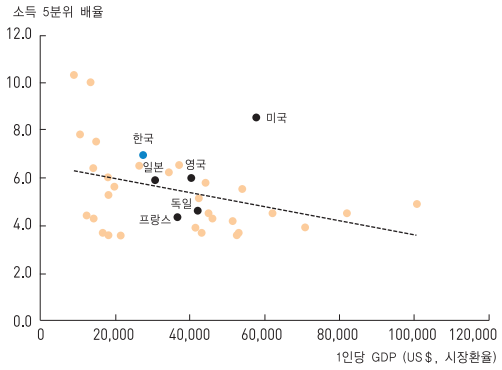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Ⅵ-3]에서는 36개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을 각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5분위 배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한국, 일본 및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보아도 높은 소득 5분위 배율을 보이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득수준을 감안해 볼 때 소득 5분위 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

은 7.0으로서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림 Ⅵ-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6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이고 1인당 GDP는 시장환율 기준 미국 달러임.
2) 일본은 2015년 자료이며,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201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구가 얼마만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소득계층 이동가능성은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2〉는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행렬을 보여준다. 각 가구의 소득분위를 2016년 기준으로 정하고 해당 가구가 2017년에 어느 소득분위로 이동했는지 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2] 그 결과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들은 다음 해에 40%이상이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고 1분위와 5분위는 약 20%의 가구

2)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체가구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 이동성 측정을 위해서는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전년도 기준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표 Ⅵ-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6, 2017

(%)

		201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6년	1분위	79.4	15.8	3.4	1.0	0.4
	2분위	17.1	57.9	19.2	4.9	0.9
	3분위	3.2	19.2	53.6	21.1	2.9
	4분위	1.3	4.6	18.6	58.4	17.0
	5분위	0.5	1.0	3.6	14.1	80.8

주: 1)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16년 소득분위에서 2017년 소득분위의 이동확률을 측정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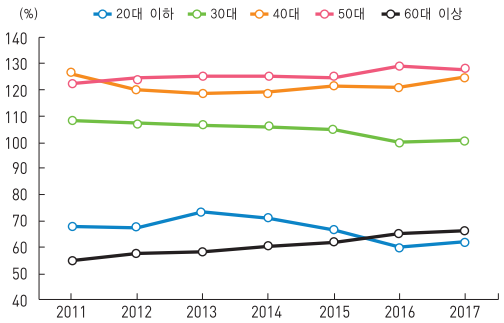
가 다른 분위로 이동한다. 분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동성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로 장기적인 소득계층 이동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여기서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Ⅵ-4]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며 최근 20대 이하의 소득비가 하락하여 60대 이상의 소득비 아래로 떨어졌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30대, 40대, 50대의 소득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2015년에서 2017

년까지 30대는 105.4에서 100.9로 낮아졌으며, 40대는 121.5에서 124.6으로 50대는 125.0에서 127.8로 다소 상승했다. 20대 이하의 소득비는 2011년 68.0에서 2017년 61.9로 크게 낮아졌고, 같은 기간 60대 이상의 소득비는 55.4에서 65.9로 높아졌다. 이처럼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소득비 격차는 점차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과 기존 고용이 보장된 중·장년층의 임금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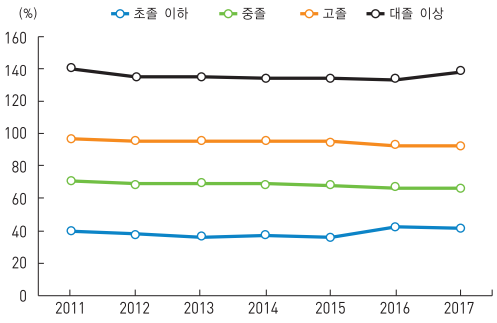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Ⅵ-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중졸 집단과 고졸 집단의 소득비는 2011년과 2017년 사이에 중졸 집단은 71.7에서 65.9로, 고졸 집단은 96.6에서 92.2로, 그리고 대졸 이상 집단은 140.7에서 137.7로 낮아졌다. 그러나 초졸 이하 집단의 소득비는 2011년 39.8에서 41.3으로 소폭 증가되었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의 소득비 하락 추이는 최근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하던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는 반면 새로운 산업에서 고학력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Ⅵ-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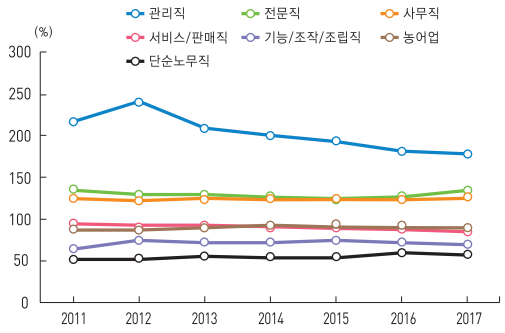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Ⅵ-6]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1-2017년 기간에 관리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하락한 반면 기능·조작·조립직과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소득비는 높아지고 있

고, 전문직과 사무직의 소득비는 큰 변화가 없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대상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84.3%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57.8%, 그리고 2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23.6%가 1인가구이므로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1인가구로 파악된다.

2011-2017년 기간 동안 1인가구의 20대와 3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9.0%, 14.2%에서 6.6%, 11.1%로 감소한 반면 60대 가구주는 50.4%에서 55.2%로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중은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 40대,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20대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3.6%에서 2017년 57.3%로 증가하여 청년층의 혼인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대비 1인가구 소득비는 2011년 66.1에서 2017년 61.7로 점차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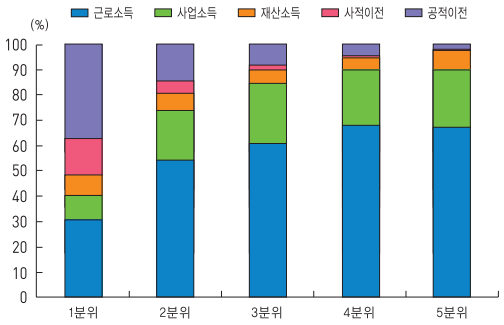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가족 간 이전과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1년과 2017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에서 63.8%로 다소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6.8%에서 21.8%로 감소하였다. 두 소득 비중의 합은 2017년 85.6%에 이른다. 사업소득 비중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2000년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7]에 제시된 2017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

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31.1%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7.9%와 67.1%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은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1분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11년 28.5%에서 2017년 37.1%로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서 국민연금 수급 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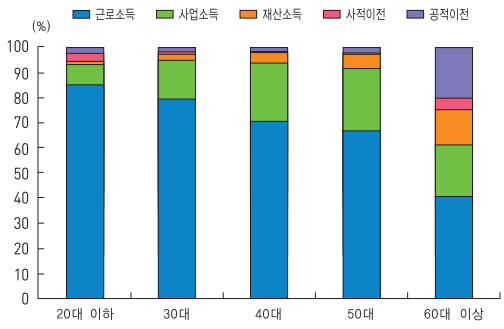
[그림 Ⅵ-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8.

[그림 Ⅵ-8]의 2017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고 사업소득 비중은 높다.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이 8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50대의 경우 67.0%,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40.8%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이는 고령층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사적이전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20.0%를 차지해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Ⅵ-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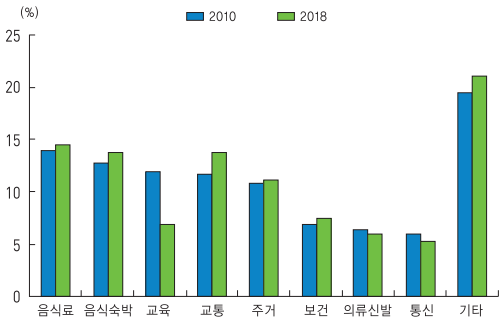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8.

가구지출 구성의 변화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떤 항목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Ⅵ-9]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보여준다.[3]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 음식 및 숙박, 교육, 교통, 주거지출 순으로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과 2018년 사이 교육지출 비중이 12.0%에서 6.8%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에 교통지출 비중은 11.7%에서 13.7%로, 음식숙박지출 비중은 12.7%에서 13.8%로, 보건지출 비중은 6.8%에서 7.5%로 증가하였다. 교육지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전체 인구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보건지출 비중은 고령층 비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0,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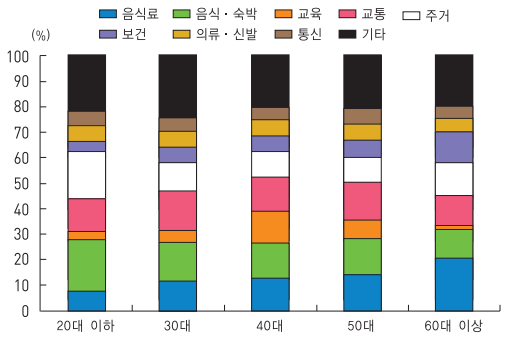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0, 2018.

[그림 Ⅵ-10]에는 2018년 기준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중 의식주지출(음식료, 주거, 의류·신발) 비중은 40대가 28.7%로 가장 낮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2.7%와 39.1%로 매우 높다. 보건지출 비중은 60대가 11.9%로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인 5.8%보다 두 배 가량 높다. 교육지출 비중은 대체로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가 12.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식주지출 비중은 평균 31.7%였고 1분위는 45.6%로 나머지 분위에 비해서 높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Ⅵ-10]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8.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Ⅵ-3〉을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2017년 18.2%로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비소비지출 중 세금 및 과징금을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2011년 4.4%에서 2017년 6.0%로 완만하게 증가

3)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8년 결과는 전용표본설계,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변경, 연간통계로의 개편에 따라 2017년 이전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였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17년 기준 2분위가 2.0%, 3분위가 2.6%, 4분위가 3.6%, 5분위가 9.5%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져 조세의 누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1–2017년 중 조세부담률은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6.2%에서 9.5%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17년 5.7%로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표 Ⅵ–3〉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1, 2017

(%)

	비소비지출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1년						
전체	17.9	4.4	5.6	1.8	1.8	4.3
1분위	10.3	1.7	3.3	0.5	1.6	3.2
2분위	14.4	2.0	5.0	1.3	1.6	4.5
3분위	16.1	2.5	6.0	1.6	1.7	4.2
4분위	17.2	3.3	6.2	1.8	1.9	4.0
5분위	20.1	6.2	5.5	2.0	1.9	4.5
2017년						
전체	18.2	6.0	5.7	2.2	1.2	3.1
1분위	13.3	2.0	4.0	2.7	1.5	3.2
2분위	14.6	2.0	5.2	2.6	1.2	3.6
3분위	16.0	2.6	6.0	2.4	1.3	3.7
4분위	16.5	3.6	6.3	2.3	1.2	3.2
5분위	20.8	9.5	5.5	2.0	1.1	2.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2, 2018.

가구자산의 변화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 현재 전체 가구의 63.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2년 65.2%에서 감소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3.4%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7.0%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2.0%이며, 1분위 149.4%, 2분위 141.8%인 반면 5분위 124.8%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19.5%이며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2–2018년 기간 동안 26.7%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33.0%와 40.0%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28.1%와 17.3% 증가에 그쳤다.[4]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6.9%이고 5분위는 43.3%이다. 두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2년 7.1배에서 2015년 5.9배로 낮아졌다가 2018년 6.3배로 다시 높아졌다.

4)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소득분위 등)는 2017년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했기 때문에 조사자료로만 작성된 2016년 이전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재정지출의 수혜분포 및 소득재분배

성명재 (홍익대학교)

- 저출산·고령화는 빠르게 조세와 사회·복지 제도의 재분배 기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반면, 교육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감시킨다.
- 인구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세입여건을 열악하게 하고 재정 소요를 증가시킨다.
-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 제도의 부담·수혜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득분배구조와 조세 및 사회·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수혜)와 교육급여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급여(수혜)와 교육급여는 전통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제도들이다. 건강보험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교육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최근 오히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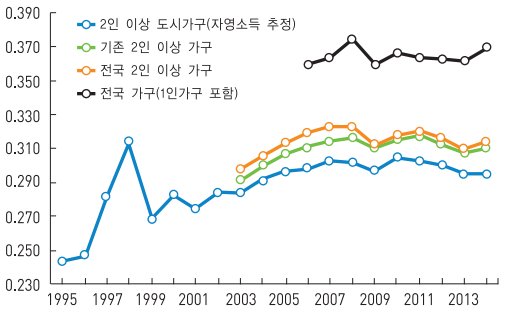
소득분포의 추이

한국의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2010년대 초까지 소득불평등도가 소폭 축소되었다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추세적으로는 소득불평등도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 Ⅵ-11]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완만하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전국 가구(1인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할 때 지니계수는 2006년 0.360이었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4년 0.369에 도달했다.

다만 1인가구를 제외하고 전국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2006년 0.319에서 2010년 0.318, 2014년 0.314로 조금씩 낮아졌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분배구조가 개선(즉, 소득불평등도가 축소)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분배 격차가 조금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2인 이상 가구의 표본특성이 변화하면서 착시현상이

[그림 Ⅵ-11]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1995-2014



주: 1) 시장소득 기준임.
2)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성명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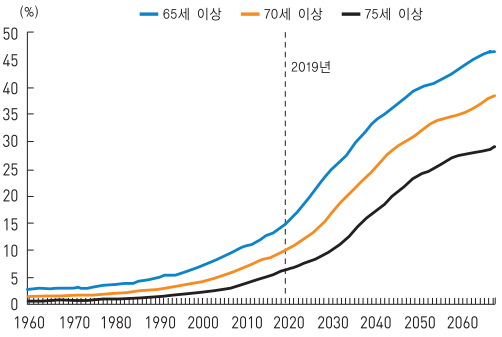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빈곤가구들 중 일부가 1인가구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혼·별거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개의 1인 가구로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집단은 이전 기간보다 저소득·빈곤가구층이 엷어진 상태로 변한다. 한국 가구 전체로는 소득분배 상태가 더 나빠졌지만 2인 이상 가구집단만을 대상으로 보면 지니계수가 낮아져 마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고령 배우자의 사망 등에 따라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이혼·별거 등에 따라 가구해체 현상이 늘어났으며, 추세적으로 젊은 미혼 독립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학적 측면에서 가구특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성명재(2016)는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구는 가구해체 과정을 거쳐 2인 이상 가구범주에서 탈락하고, 따라서 2인 이상 가구 범주에는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가구들이 계속 잔류하게 되면서 마치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그림 Ⅵ-11]에서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가 2010년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해체된 가구는 여러 개의 열악한 단독가구로 분화되기 때문에, 1인가구를 포함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소득불평등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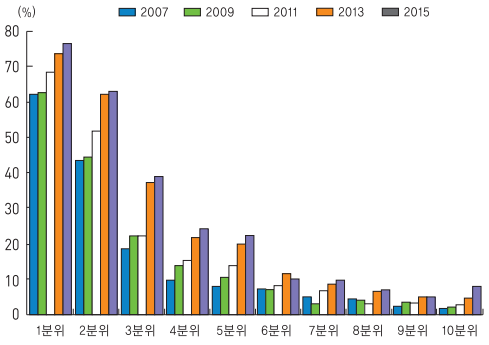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연장되었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림 Ⅵ-12]에서 보듯이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2%였다. 불과 20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9년에는 14.9%에 이를 정도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전되어 2067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6.5%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Ⅵ-12] 노인인구 비율, 1960-206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그림 Ⅵ-13] 소득분위별 노인가구 비율, 2007-2015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임.
2)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인구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 비중이 상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배론적 관점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Ⅵ-13]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에서 노인(가구)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소득 하위 10%를 나타내는 소득 1분위의 경우 70% 이상이 노인가구이다. 2분위의 경우에는 대략 3가구 중 2가구가 노인가구일 정도로 노인 비율이 높다(성명재, 2015).

저소득층일수록 노인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생애주기상 은퇴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퇴직이나 은퇴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더라도 대부분 임금과 소득수준이 낮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소득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앞의 [그림 Ⅵ-11]에서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도 인구고령화와 관련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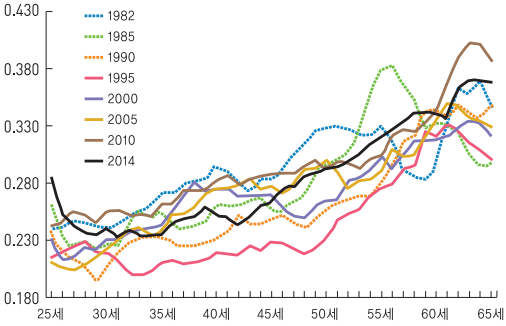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빈곤층 비율을 두텁게 하면서 지니계수를 상승시킨다.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연구는 성명재·박기백(2009), 홍석철·전한경(2013), 윤희숙(201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홍석철·전한경(2013)은 1990-2010년 동안 소득불평등도가 약 60% 정도 확대되었는데 그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에 의한 기여도가 약 1/4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여 인구고령화에 의한 불평등도 확대를 추정하였다. 윤희숙(2017)도 기술 습득 속도와 생산성 증가 속도가 계층별·세대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Chu and Jiang(1997)과 Zhong(2011) 등은 인구고령화가 개발도상국의 소득불평등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서로 다른 분석대상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연령분포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율 등이 급변하고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커진다는 것은 [그림 Ⅵ-14]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림 Ⅵ-14]는 1세 단위로 구분된 각 연령대별 지니계수 추정치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니계수도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인구고령화는 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상승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을 [그림 Ⅵ-14]에 결부시키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높은 인구 또는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연령대별 소득계층의 구성분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림 Ⅵ-13]에서 보듯이 저소득분위일수록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생애주기상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지 않고 생산성이 청·중·장년층보다 낮기 때문에 노년층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인구고령화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년층 비율이 두터워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연령층과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커지는 결과로 귀결된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실업가구'의 의미가 컸으나, 최근에는 인구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저소득층≒노인가구'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Ⅵ-14] 가구주 연령별 지니계수, 1982-2014



주: 1)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임.
2) 1982-2002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이고,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이며, 2006-2014년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가구 기준임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재분배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득·소비패턴은 물론이고 계층별 세원분포와 사회·복지재정지출의 수혜분포를 변화시킨다. 특히 재정지출의 주된 수혜대상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급여와 교육급여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이들 제도의 주된 수혜대상은 각각 노년층과 청소년층(또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장

년층)에 집중된다. 저출산·인구고령화는 청소년층 인구비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이 노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 결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위의 두 가지 재정수혜의 계층별 분포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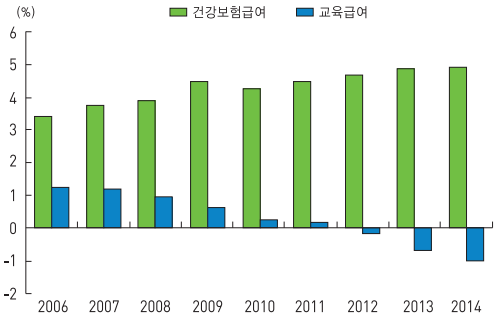
본래 국민건강보험과 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특성이 강하다. 수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차별적으로 혜택이 배분되기 때문에 균등수혜에 가까운 수혜분포를 지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 두 제도는 전통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재정지출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수혜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림 Ⅵ-15]의 첫 번째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교육수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이를 나타낸다. 2006-201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3.4%에서 4.9%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교육급여는 2006년 1.25%에서 2011년 0.18%로 위상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2년부터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부(-)로 반전되었다. 교육급여를 통해 오히려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4년에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0.98%에 이를 정도로 절대크기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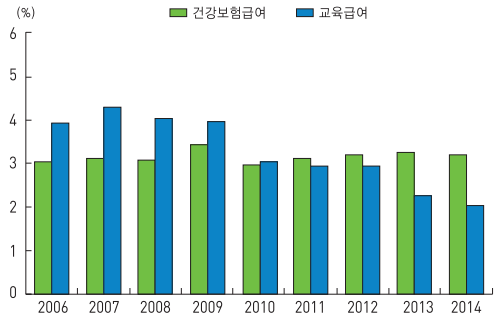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 역시 노년층의 수혜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그림 Ⅵ-15] 건강보험급여 및 교육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계수 하락률 기준), 2006-2014

1) 전체 가구



2) 2인 이상 가구(가구주 연령 16-64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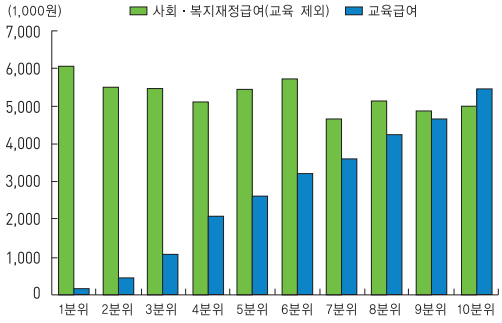
주: 1) 저자 추정치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저소득구간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빠르게 상승하였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노인인구로 채워질수록 취학연령 자녀를 둔 가구들은 점차 중·고소득층으로 재편·귀속되었다. 그 결과 교육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림 Ⅵ-16]에서 보듯이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수혜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 없이 거의 평탄(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반면에 교육급여는 저소득구간에서는 수혜액이 미미하다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급여수혜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바로 이런 구조적 차이로 인해 인구고령화는 건강보험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해 서로 상반된 효과를 초래한다.

[그림 Ⅵ-16] 소득분위별 사회·복지재정 급여 분포, 2014



주: 1)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성명재, 2016.

그런데 인구고령화 영향을 배제하면 건강보험급여와 교육급여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Ⅵ-15]의 두 번째 그림은 인구고령화 요인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두 항목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재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인가구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급여와 교육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모두 2006-2014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Ⅵ-15]의 두 그림은 건강보험과 교육급여를 통한 복지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인구고령화에 의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인구고령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복지재정수혜 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맺음말

조세 및 복지재정지출은 항목에 따라 부담·수혜 분포가 비대칭적인 분포구조를 보이고, 부담·수혜분포의 구조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된다. 흔히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단기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제도의 구조 못지않게 재정수혜자들의 분포구조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며, OECD나 세계은행 등의 연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경향이다.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진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급여와 교육수혜를 통한 재분배 효과의 크기와 방향이 크게 급변하였다. 2019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약 15%에 이른다. 2060년 이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향후 조세·재정정책의 귀착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현재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역으로 조세·재정제도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을 낮추므로 장기적으로 세입여건을 열악하게 하는 반면 재정소요는 크게 증가시킨다. 정부 재정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재정기조를 확보하면서 보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제도의 부담·수혜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18.「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2」. 협동연구총서 18–34–01.

성명재. 2015. "인구 · 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2권. 제2호. pp. 215–236.

_____. 2016.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 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1호. pp. 1–79.

_____. 2017.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 제93호). pp. 111–154.

_____. 2018.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3호. pp. 1–58.

성명재 · 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pp. 5–37.

윤희숙. 2017.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의 대비."「응용경제」. 제19권. 제4호. pp. 5–41.

홍석철 · 전한경. 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pp. 71–112.

Chu, C. Y. C. and L. Jiang. 1997. "Demographic Transition, Family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9. No. 4. pp. 665–669.

Park, K. B. and M. J. Sung. 2016.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n Intra–familial Transfer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22. No. 3. pp. 1–30.

Zhong, H.. 2011.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 Vol. 22. pp. 98–107.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전영준 (한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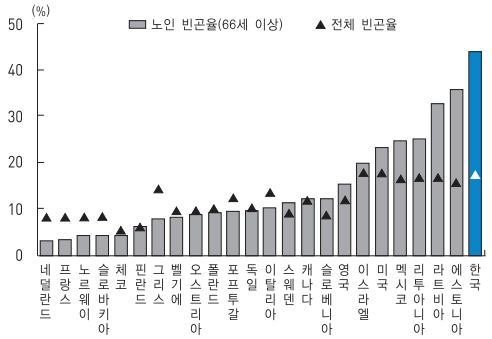
-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수혜율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 향후 연금제도의 개편은 저소득층 및 고용 불안계층에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확충과 민간금융시장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도 현재 43.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 Ⅵ-17).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빈곤율(17.4%)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속하나, 노인빈곤율은 이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여타 OECD 국가와의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감소, 은퇴를 대비한 자산 축적의 부족이 그 원인이다.

노후소득의 부족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공적연금이라는 강제저축 수단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청년기에 연금보험료를 징수하여 은퇴 후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을 확충하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도입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늦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도입 시기는 OECD 주요국에 비하여 늦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노인 인구 중 많은 부분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이 제도로부

[그림 Ⅵ-17] 주요국의 노인빈곤율, 2017



주: 1) 빈곤율은 해당 인구집단 중 소득이 전 국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Poverty rate (indicator)*, 2019.

터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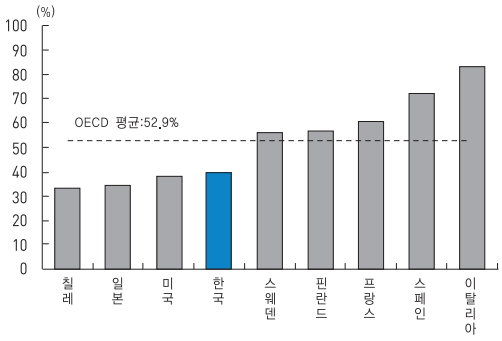
본 자료에서는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그 문제점, 그리고 이들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구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로 분류된다.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연금급여와 연금보험료 수준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연금급여 수준은 임금대체율이라는 지표로 평가된다. 임금대체율은 은퇴 전 노동소득 혹은 사업소득 대비 연금급여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현재 39.3%로서 OECD 평균(52.9%)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그림 Ⅵ-18). OECD 평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이유는 유럽 국가들의 임금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017년 현재 스웨덴 55.8%, 핀란드 56.6%, 프랑스 60.5%, 스페인 72.3%, 이탈리아 83.1%). 미국(38.3%), 일본(34.6%), 칠레(33.5%) 등의 연금급여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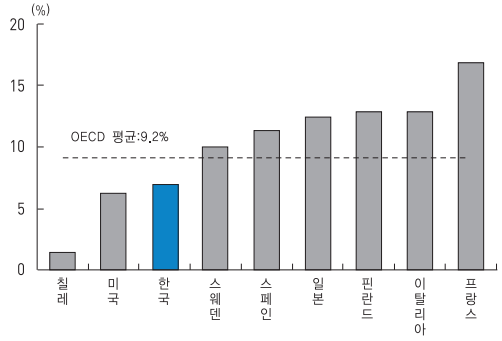
공적연금급여 지출의 주요 재원이 되는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도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편에 속한다(그림 Ⅵ-19). GDP 대비 연금보험료 수입 규모는 2017년 현재 6.9%로서 OECD 평균(9.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보다 연금급여 수준이 높은 스웨덴(10.0%), 핀란드(12.8%), 프랑스(16.7%), 스페인(11.3%), 이탈리아(12.8%) 등에 비하여 낮으며, 우리나라보다 연금급여 수준이 낮은 미국(6.2%), 칠레(1.4%)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 임금대체율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으나 연금보험료 수입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12.4%이다. 일본의 연금보험료 수준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일본의 노인 인구

[그림 Ⅵ-18]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 임금대체율, 2017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2017.

[그림 Ⅵ-19] GDP 대비 공적연금보험료 부담 비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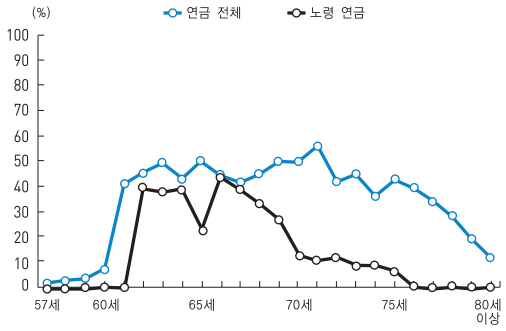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2018.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는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과 같이 높은 연금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공적연금의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금급여 수급자의 구성과 연금급여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일부 직역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을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연금급여[1]를 받고 있는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급자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연령대가 많다. 특히 70대의 수급률이 60대보다 현저히 낮으며 80대의 수급률은 10% 정도이다(그림 Ⅵ-20). 이러한 낮은 수급률은 연금급여의 근간이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70세 이상 인구의 수급률은 매우 낮으며 75세 이상 인구의 수급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이들 연령집단의 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부과방식(pay-as-you-go)이 아닌 적립방식(funded)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노년층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아니라, 가입자가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온전한 연금

[그림 Ⅵ-20]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률, 2018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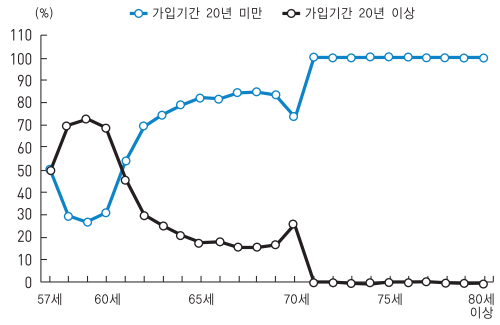
급여(완전노령연금)를 받을 수 있는 적립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8년 당시 40세(2018년 시점의 70세 이상) 이상 인구집단은 국민연금 급여 개시 연령인 60세까지 2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의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높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노령연금 급여수급자들 중에서도 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Ⅵ-21). 현행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연금가입기간이 연금급여 수준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급여 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Ⅵ-22).

국민연금에 비하여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급여 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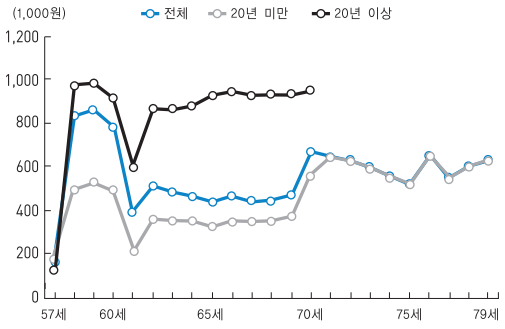
1) 국민연금급여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 시점에 은퇴 후 수급하는 노령연금, 60세 이전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 그 이외 가입기간이 짧은 (5년 이상 10년 미만) 특례노령연금,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등이 있다.

[그림 Ⅵ-21] 연령 및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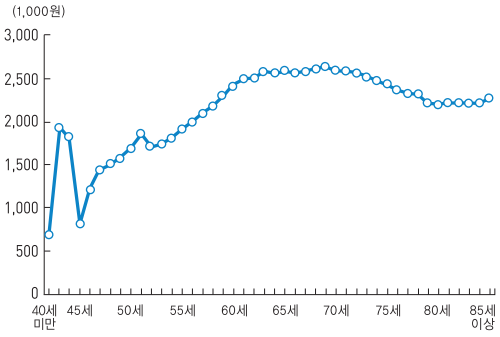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그림 Ⅵ-22] 연령 및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급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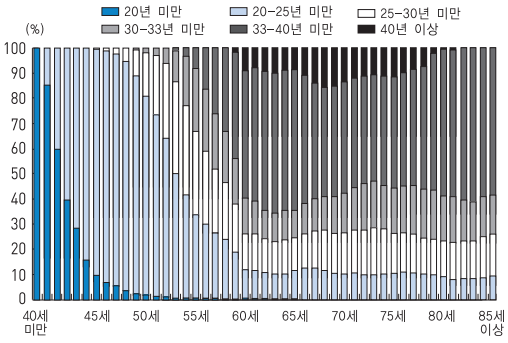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8.

[그림 Ⅵ-23] 연령별 공무원연금 수급자 1인당 월급여, 2018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2018.

[그림 Ⅵ-24]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령 및 재직기간별 구성비율, 2018



출처: 공무원연금관리, 「공무원연금통계」, 2018.

현저히 높다(그림 Ⅵ-23). 공무원연금급여가 동일한 재직기간(가입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제도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이전에 도입되어 공무원연금 급여수급자의 재직기간이 국민연금보다 긴 것도 양제도 간 연금급여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Ⅵ-24).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높아지고 또한 연금급여 수급자의 연령집단이 보다 고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노인의 노후소득을 일정수준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가입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또한 이들의 고용안정성이 낮아 연금급여 수급을 위한 의무가입기간(10년 이상)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8년 8월 현재 총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1만 3,000명으로 총 취업자 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2018년 116만 586명), 사학연금(2018년 32만 326명), 군인연금(2018년 18만 3,000명) 가입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수에 크게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는 취업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며 특히 고용안정성이 결여된 집단에서 가입률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통계상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8년 8월 현재 86.2%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6.6%에 머물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낮은 한시적,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들의 가입률도 낮게 나타났다(표 Ⅵ-4).

〈표 Ⅵ-4〉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01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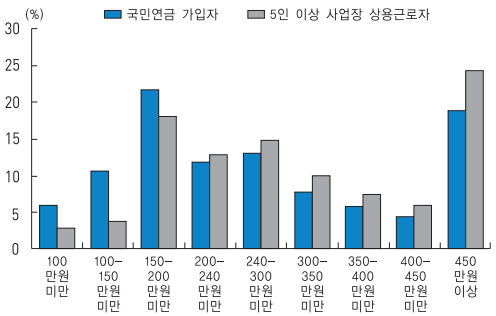
(%)

	2016.08	2017.08	2018.08
임금근로자	67.7	69.1	69.8
정규직	83.0	85.0	86.2
비정규직	36.4	36.6	36.6
비정규직 유형별			
한시적	53.3	52.4	50.6
기간제	55.6	53.2	51.3
비기간제	44.4	49.7	48.0
시간제	15.4	17.3	18.6
비전형	19.9	20.4	19.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근로자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의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임금계층별 분포를 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최저임금계층 비중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상의 분포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Ⅵ-25). 이러한 분포의 유사성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행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근로자

[그림 Ⅵ-25]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2018



주: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임금계층은 그림에서 정의한 구간에 근접하도록 집계하였음.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18.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8.

들인 반면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인 사업장 가입자 중 소규모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소비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기 어려운 이들이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 절실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표 Ⅵ-5).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약 21%이며, 무급가족종사자 약 4%,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약 24%에 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는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절대적인 비중이 낮다고 하기 어렵다(자영업자 7.0%, 무급가족종사자 6.7%,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14.8%). 더욱이 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고용구조 변화는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3년 8월부터 2018년 8월 기간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5%에서 33.0%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율은 31.1%에서 2017년 8월에는 33.1%까지 상승하였다가 2018년 8월에 다소 낮아져 32.3%를 기록하였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또한 연금급여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은

〈표 Ⅵ-5〉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 2016, 2018

(1,000명)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전체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018	26,822	5,638 (21.0)	1,101 (4.1)	13,772 (51.3)	6,311 (23.5)
2016	26,409	5,614 (21.3)	1,126 (4.3)	13,062 (49.5)	6,607 (25.0)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6년 기준)					
전체	17,363	1,219 (7.0)	1,158 (6.7)	12,415 (71.5)	2,570 (14.8)
1-4인	3,213	867 (27.0)	221 (6.9)	1,508 (46.9)	618 (19.2)
5-9인	2,866	275 (9.6)	135 (4.7)	1,936 (67.5)	520 (18.1)
10-49인	4,875	74 (1.5)	457 (9.4)	3,739 (76.7)	606 (12.4)
50-99인	1,692	3 (0.2)	162 (9.6)	1,322 (78.1)	205 (12.1)
100인 이상	4,716	1 (0.0)	183 (3.9)	3,911 (82.9)	622 (13.2)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종사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2018.

근로자 집단이 주요 수혜집단이며 취약계층이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노인빈곤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제도 개편 방향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공적연금 특히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집단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디자인함에 있어 한 두 유형의 외국의 개편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이 공적연금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주요 외국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따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감소는 연금보험료 혹은 조세 징수를 위한 세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급여수준의 상향조정, 보편적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의 상향조정, 혹은 최저연금의 실시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높은 연금보험료 부담 하에서도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2019년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5만 3,750원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임금의 수혜자 범위를 넓히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연금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 혹은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다.

보편적인 연금수급권 허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정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기금이 더욱 큰 규모로 증가할 것이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다소 연기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이 기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민간기업 경영 침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거대 단일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왜곡시키고 전체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건대, 향후의 연금제도와 관련제도의 개편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을 강화하는 한편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의 노후 소비를 위한 재원을 공적연금보다는 민간연금과 여타 자산의 자발적인 축적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민간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를 노년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소득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주요 수혜집단이 되는 현행의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에 부족한 소비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대와 일정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연금재정의 유지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의 노후소득 확충은 민간연금 및 여타 저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민간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현행의 공적연금제도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아. 2015.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HERI Report」 2. 중견기업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재정추계」, 2015.

Korean Social Trends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Culture &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Ⅶ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12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20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정용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9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주 52시간제 도입과 함께 여가시간이 증가하였고, 문화여가지출률도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시설과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과 맞물려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문화예술교육, 창작 및 동아리 등 적극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져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졌다.

문화여가 활동의 여건과 관련한 주요한 변화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문화여가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도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산업적으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으로 K팝 국제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고, 웹소설이나 OTT서비스(Over-The-Top)와 같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문화소비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문화소비 공간으로는 독립서점과 같이 개인의 취향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소규모 복합형 문화공간이 확산되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계의 활력이 증진되는 반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유력 문화예술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미쳤다. 또한 문화여가 활동의 여건이 개선되는 반면,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여가 활동이 위축되기도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모듈에 포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이 수집한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여가의 기반을 살펴본 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여가 만족의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 인프라의 확대가 지속되었다. 특히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미술관이었다. 2018년 251개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문예회관이 2018년 251

개로 전년 대비 6.4%가 증가했다. 박물관은 2018년 873개, 공공도서관은 1,042개로 각각 전년 대비 2.3%, 3.2% 증가하였다(표 Ⅶ-1).

〈표 Ⅶ-1〉 문화예술시설수, 2010-2018

(개)

연도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	등록 공연장	문예 회관
2010	655	141	703	637	182
2011	694	146	759	751	193
2012	740	171	786	826	209
2013	740	190	828	881	211
2014	745	190	865	992	220
2015	780	202	930	991	232
2016	826	219	978	1,024	229
2017	853	229	1,010	1,029	236
2018	873	251	1,042	-	25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등록공연장현황」, 각 연도.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문화산업도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문화산업 매출규모는 2017년 113조 2,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다. 특히 게임산업이 2017년 13조 1,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6%로 가장 크게 성장한데 비해 세부산업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업은 2017년 20조 7,5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Ⅶ-2).

문화여가 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4시간 52분으로 1999년에 비해 22분이 줄었으나 주말에는 6시간 43분으로 1999년에 비해 13분이 늘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표 Ⅶ-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3-2017

(1조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매출액	91.21	94.95	100.49	106.12	113.22
출판	20.80	20.59	20.51	20.77	20.76
만화	0.80	0.85	0.92	0.98	1.08
음악	4.28	4.61	4.98	5.31	5.80
게임	9.72	9.97	10.72	10.89	13.14
영화	4.66	4.57	5.11	5.26	5.49
애니메이션	0.52	0.56	0.61	0.68	0.67
방송	14.94	15.77	16.46	17.33	18.04
광고	13.36	13.74	14.44	15.80	16.41
캐릭터	8.31	9.05	10.08	11.07	11.92
지식정보	10.39	11.34	12.34	13.46	15.04
콘텐츠솔루션	3.44	3.89	4.31	4.58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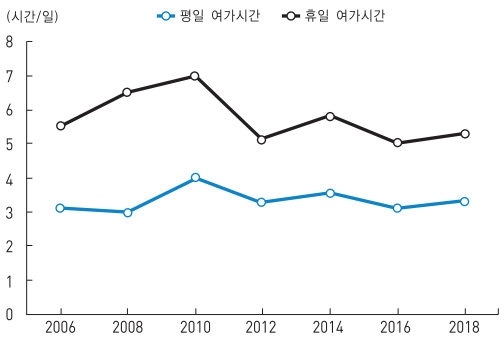
주: 1) 2016년과 2017년 광고 매출액의 경우 정부광고대행기관(아리랑TV, 언론진흥재단)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전 연도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각 연도.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인구 중위 여가시간의 60% 이하 여가시간을 갖는 집단을 시간빈곤층으로 규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해 보면, 주중 시간빈곤 인구는 36.1%로 1999년에 비해 3.7%p 증가한 반면 주말 시간빈곤 인구는 16.4%로 1999년에 비해 5.7%p 감소하였다(차승은, 2016).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은 3.3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평일 0.2시간, 휴일 0.3시간 증가하였다(그림 Ⅶ-1).

「국민여가활동조사」로 파악한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18년 15만 600원으로 2016년 13만 6,000원에 비해 1만 4,600원 증가하였다. 희망 여가비용도 19만 2,200원으로 2016년 18만 8,000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06–2018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가구의 월 평균 오락문화비 지출은 2018년에 19만 1,772원으로 2017년에 비해 1만 7,079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에서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는 문화여가지출률이 2017년 5.3%에 이어 2018년에 5.8%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가활동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이 37.6%로 가장 많고, 수면이나 사우나와 같은 휴식이 19.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8.4%), 스포츠 활동(7.2%), 관광(7.0%),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7.0%), 문화예술 관람(6.1%), 취미 및 자기개발(5.6%) 등의 순이었다. TV 및 비디오 시청과 휴식이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지만, 응답 비율을 보면 TV 및 비디오 시청은 5.3%p 감소한 반면, 휴식은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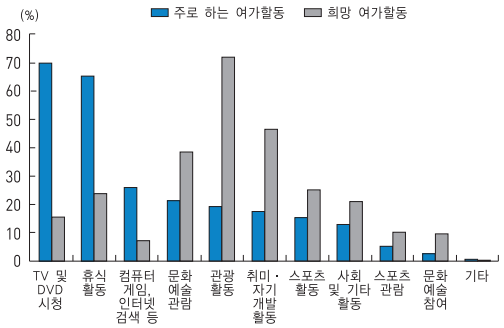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도 비슷한데, TV 시청(69.7%)과 휴식(65.2%)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TV 시청은 2015년 조사결과와 별 차이 없었던 반면, 휴식은 1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5.8%), 문화예술 관람(21.3%), 관광(19.4%), 취미 및 자기개발(17.4%), 스포츠 활동(15.3%),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12.9%) 등의 순이었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관광이 4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취미 및 자기개발(11.1%), 스포츠 활동(10.6%), 문화예술 관람(10.0%) 등이 많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광의 응답 비율이 8.2%p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였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에서도 관광이 72.1%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취미 및 자기개발(46.5%), 문화예술 관람(38.4%), 스포츠 활동(24.9%) 등이 따른다(그림 Ⅶ–2).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광과 취미 및 자기개발이 각기 12.2%p와 12.4%p 증가하여서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가족이 5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20.7%, 혼자 15.6%, 동호회 6.8%의 순이어서 2015년의 조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Ⅶ-2] 주로 하는 여가활동과 희망 여가활동,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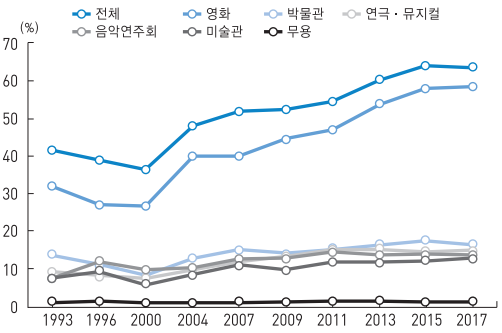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7.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관람에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던 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연, 전시, 영화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측정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1년 54.5%에서 2013년 60.1%, 2015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나, 2017년에는 63.5%로 다소 감소하였다. 문화예술 장르별로 보면, 영화가 5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박물관(16.4%), 연극·뮤지컬(14.8%), 음악연주회(13.6%), 미술관(13.4%) 등이 비슷한 수준이며 무용(1.2%)이 가장 낮다(그림 Ⅶ-3). 대부분의 장르에서 관람률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미술관 관람률만 2015년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 유럽의 27개국이 참여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2013년 문화 분야 연간 관람률 조사 결과를 보면 영화관 52%, 박물관, 미술관 37%, 콘서트 35%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에 차이가 있어서 엄밀한 비교가 어려우나 대체로 유럽에 비해서 영화 관람의 비율은 다소 높은 반면 공연 전시의 관람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그림 Ⅶ-3]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1993-2017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관람률이 2018년 81.5%로 2016년 78.3%에 비해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분야에서 관람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대중음악/연예 분야의 관람률로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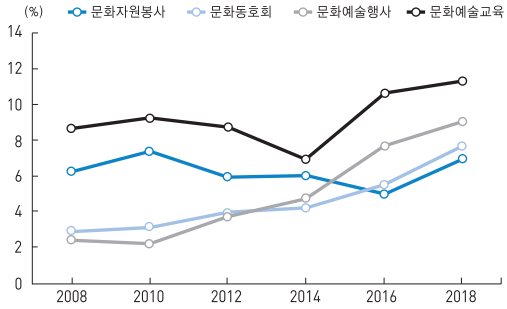
에 비해 6.5%p가 증가한 21.1%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률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6년에 비해 2.5%p가 증가한 75.8%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7.0%로 2016년의 83.8%에 비해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문화향수실태조사」에 의하면, 창작발표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018년 9.0%로 2016년 7.6%에 비해 2.4%p 증가하였다. 앞으로 창작발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도 2016년보다 6.9%p 증가한 16.9%로 나타나서 실제 증가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참여 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2018년 11.2%로 2016년의 10.6%에 비해 0.6%p 증가하였고, 문화동호회 참여율도 2018년 7.6%로 2016년 5.5%보다 2.1%p 증가하였다. 문화자원봉사 참여율도 2018년 6.9%로 2016년 5.0%에 비해 1.9%p 증가하였다(그림 Ⅶ-4).

[그림 Ⅶ-4]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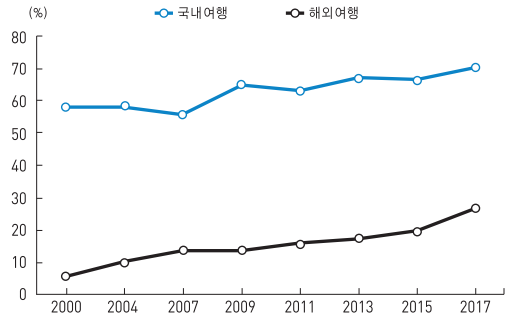


주: 1)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4)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여행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70.4%로 2015년에 비해 3.8%p 증가하였고 해외여행자 비율은 26.6%로 2015년에 비해 6.7%p 증가하였다(그림 Ⅶ-5). 청년층은 국내여행(75.1%)과 해외여행(30.5%)에서 비청년층에 비해 경험률이 6.6%p와 5.6%p 높다.

[그림 Ⅶ-5]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00-2017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은 각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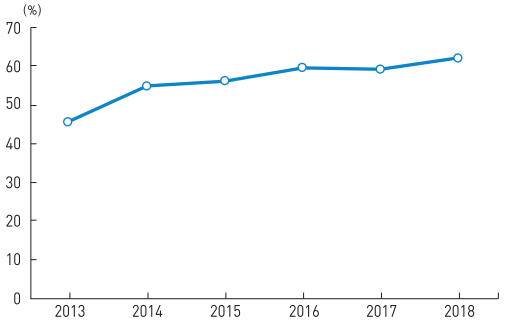
「국민여행조사」 자료로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8년 89.2%로 2017년 90.1%에 비해 0.9%p 감소하였고 해외여행 경험률은 2018년 22.4%로 2017년 20.8%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여행조사」에서도 국민의 해외여행 경험이 확산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

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가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관람률은 2017년 16.6%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는 3년 연속 800만 관중을 넘어선 프로야구의 흥행 성과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스포츠 관람률은 22.9%로 비청년층의 13.9%에 비해서 높다.

「국민생활체육조사」에 의하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8년 62.2%로 2017년의 59.2%에 비해서 3.0%p 증가하였다(그림 Ⅶ-6).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가입률도 2018년에 15.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그림 Ⅶ-6] 생활체육 참여율, 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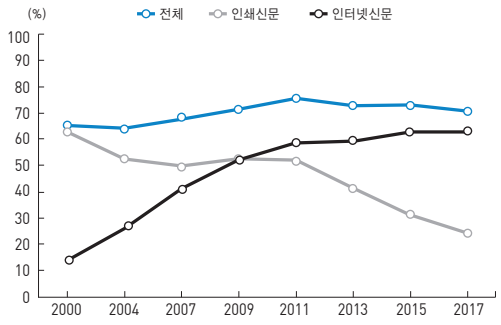
주: 1) 생활체육 참여율은 만 1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규칙적(일주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인 경우)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미디어 이용

미디어 이용에서는 전년에 이어서 스마트폰 이용과 TV시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8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들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8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이용률이 76.6%로 높다. 2017년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률은 3.2%p 증가한 반면, TV 이용률은 0.6%p 감소한 결과, 스마트폰과 TV의 이용률 차이가 더 커졌다.

신문을 읽는 방법의 매체 이용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2015년과 같았으나 2017년에 신문 읽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인터넷신문을 읽는 비율은 2017년에 0.4%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감소세가 줄기는 했으나 2017년에 7.1%p 감소하였다. 그 결과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 중 어느 하나라도 읽는 비율, 즉 신문을 읽는 전체 비율이 70.3%로 2015년에 비해서 2.4%p 줄어들었다(그림 Ⅶ-7).

[그림 Ⅶ-7] 신문 읽는 비율, 200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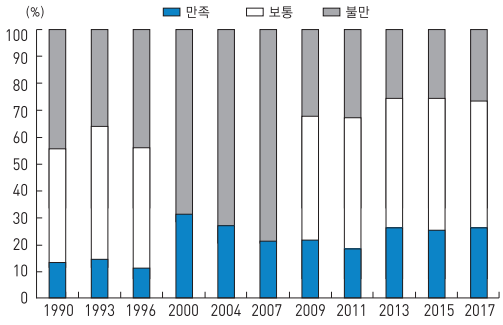
주: 1) 2000년과 2004년 통계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고, 2007년 이후부터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괄한 일반도서를 읽는 비율을 사용하여 연간 독서율을 산출한다. 2017년 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독서율은 62.3%, 초중고학생의 독서율은 93.2%로 나타나서, 2015년에 비해 각기 5.1%p와 2.5%p 감소하였다. 성인과 학생을 종합한 독서율은 2013년 기준 74.4%로 OECD 국가의 평균 독서율인 76.5%에 비해서 다소 낮다.

여가만족

여가만족도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지난 1990년부터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으나 2000년부터 '보통'이라는 응답범주 없이 4점 척도로 조사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다시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고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26.7%와 26.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그림 Ⅶ-8).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하지 않는 인구가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만족하는 인구와 불만족하는 인구가 각각 4명 중 1명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는 인구의 비율이 2.5%p 감소했다.

[그림 Ⅶ-8] 여가만족도, 1990–2017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2000–2007년 조사의 경우 응답범주가 '만족', '불만족' 등 이분형 척도로 조사되었음.
3) 1990–1996년, 2009–2015년 자료의 경우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이며, 불만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 불만족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54.5%)과 시간 부족(24.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

강 문제(10.5%)나 취미 부재(4.3%)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은 4.0%p 줄어든 반면, 시간 부족은 4.1%p 증가했고 건강 문제도 0.7%p 늘었다.

참고문헌

차승은. 2016.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았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복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활동은 즐거움, 만족감, 의미 찾기, 균형적 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복과 관련된다.
-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여가시간·여가비용·여가공간 등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이 필수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일과 여가에 균형을 이루거나 여가에 더 집중할수록, 그리고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할수록 행복하다고 인식하였다.
-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균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최근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국가의 정책이나 새로운 지표로 행복지수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복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여가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에 관련되는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요소들을 밝혀낸다면, 우리 삶의 행복수준은 달라질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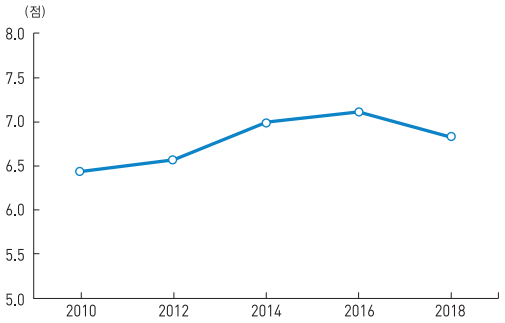
행복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즉,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인지상태가 개인의 행복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비하는 여가시간보다는 그 여가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인지하는지 또는 자유롭다고 인지하는지 등의 인지정도에 따라 행복수준은 다르다고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인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개인의 인지 상태 및 주관적 평가에 근거해서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특성이 개인의 여가시간 분배에 영향을 주고, 부분적으로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결정짓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를 활용할 것이며, 주로 2016년과 2018년 자료를 분석해서 살펴볼 것이다.

개인특성에 따른 행복수준의 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10점으로 묻고 있는데, 이러한 행복점수는 2010년

6.4점에서 2016년 7.1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6.8점으로 나타났다(그림 Ⅶ-9).

[그림 Ⅶ-9] 행복점수,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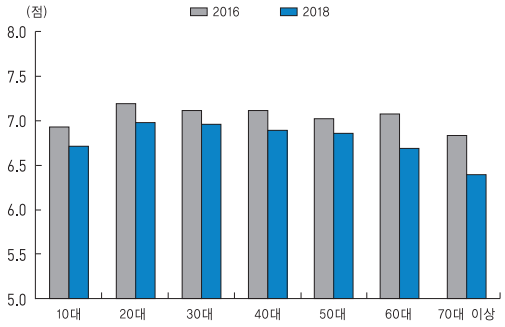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조사된 2016년과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별 행복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연령집단별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Ⅶ-10]과 같이 20대의 행복점수가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점수가 감소하는데 6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70대 이상의 행복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0대(15-19세)의 행복점수는 70대 이상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과 2018년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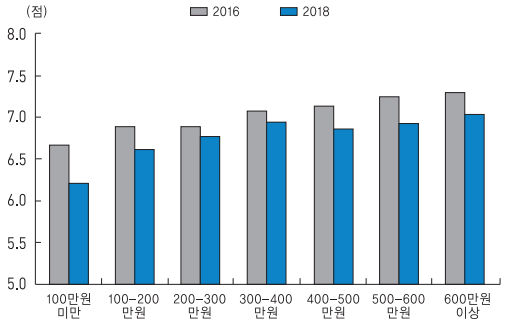
한편, 소득수준은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행동이나 여가비용 지출 등에 영향을 주며, 결국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행복감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Ⅶ-11]을 보면, 2016년에는 소득이 증

[그림 Ⅶ-10] 연령집단별 행복점수,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Ⅶ-11] 가구소득별 행복점수, 2016,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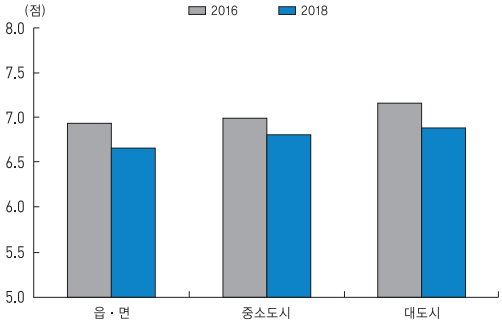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함에 따라 행복수준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2018년에는 300-400만 원 소득집단의 행복점수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600만 원 이상 집단의 행복점수가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행복수준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아 소득이 가

장 높은 집단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았다.

도시규모별로 행복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Ⅶ-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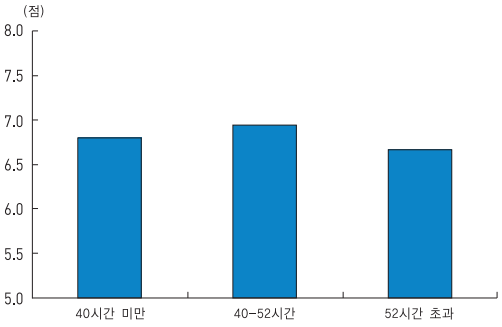
[그림 Ⅶ-12] 도시규모별 행복점수,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Ⅶ-13]에서는 2018년 자료를 이용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행복수준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집단의 행복점수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주당 40시간 미만 집단의 행복점수가 높았으며, 가장 행복점수가 높은 집단은 주당 40-52시간 일한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당 40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들의 주업 기준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6.3%로 40-52시간 일한 취업자 35.3%에 비해 매우 낮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그림 Ⅶ-13]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별 행복점수, 2018



주: 1) 만 15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8.

는 22.4%, 단순노무종사자는 19.7%로 주당 40-52시간 일한 취업자 및 52시간 넘게 일한 취업자에 비해 해당 직업의 비율이 높아 주당 40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들은 직업안정성이 낮은 직업의 종사자로 판단된다. 취업자의 행복수준은 직업안정성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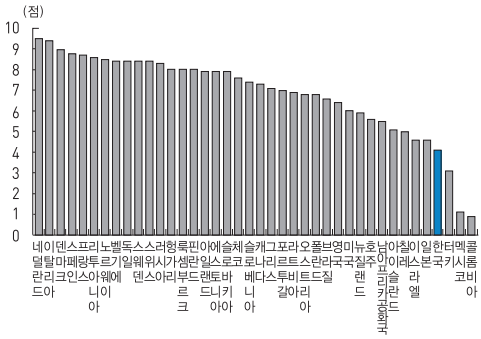
여가활동과 행복의 관계

행복한 생활은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만족스러운 활동에 고도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거나', '보다 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균형 있는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행복은 즐거움, 만족감, 의미 찾기, 균형적 생활과 관련된다. 이러한 행복의 요소는 여가활동과 관련이 깊다. 일이나 학업 등 정해진 시간 이외에 자유로운 시간에 자신이 원

하는 활동을 경험하는 여가활동은 스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제공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집중하고 노력하며 꾸준히 함으로써 개인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일 중심적인 생활에서 일-여가의 균형적인 생활로 변화되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생활을 통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워라밸의 수준이 행복한 삶과 연관되므로, OECD는 '더 나은 생활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일-삶의 균형' 수준을 삶의 11개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일-삶의 균형 수준은 10점 만점 기준 4.1점으로 40개국 가운데 3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네덜란드(9.5점)와 프랑스(8.7점)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며, 캐나다(7.3점), 영국(6.4점), 미국(6.0점), 일본(4.6점)과 비교해도 한국의 일-삶의 균형 영역의 점수는 낮다. 가장 점수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로 0.9점이다(그림 Ⅶ-14).

[그림 Ⅶ-14] OECD 국가별 일과 삶의 균형 지수



주: 1) 일과 삶의 균형 지수는 여가 및 휴가 시간(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 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율(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임. 점수가 10점에 가까울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2019년 10월 검색.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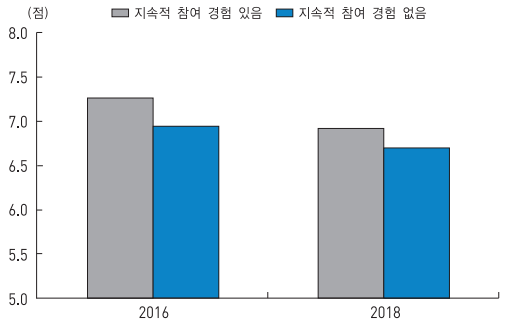
현대 사회에서는 일 이외의 여가시간이 갖는 중요성과 여가활동 참여가 갖는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행복과 긍정적으로 연결되며, 여가활동에 참여한 빈도 또한 행복과 연관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여가활동의 참여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그림 Ⅶ-15]에서 보듯이 여가활동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할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았으며 여가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았다.

전체 행복점수가 2016년 7.1점에서 2018년 6.8점으로 낮아진 영향으로 지속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행복점수도 2016년 7.2점에서 2018년 6.9점으로 낮아졌으나,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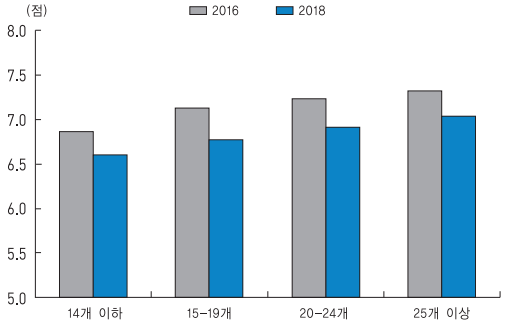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의

[그림 Ⅶ-15] 여가활동 지속 참여 여부별 행복점수,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여가활동의 지속적 참여 여부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있으십니까?"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Ⅶ-16] 여가활동 가짓수별 행복점수,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는 2016년 85개 여가활동, 2018년 87개 여가활동에 대해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개수를 말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짓수에 따른 행복점수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즉, TV보기를 포함하여 많은 여가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한 사람들이 몇 가지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Ⅶ-16).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가짓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행복수준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다. 〈표 Ⅶ-3〉에서는 8개 여가활동 유형별로 각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어떤 행복수준을 보이는가를 확인하였다. 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나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예술관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점수가 더 높았으며, 악기를 연주하거나 사진촬영 등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점수가 더 높았다. 스포츠활동에서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는 활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더 높았다. 국내외 관광지를 다녀오거나 등산, 낚시, 게임, 원예 등 취미오락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더 높았다. 사회봉사활동이나 동호회모임 등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휴식활동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식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Ⅶ-3〉 주요 여가활동 참여 여부별 행복점수, 2016, 2018

(점)

	2016		2018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문화예술관람활동	7.1	6.9	6.9	6.5
문화예술참여활동	7.2	7.0	7.0	6.7
스포츠관람활동	7.1	7.0	6.8	6.7
스포츠참여활동	7.2	6.9	6.9	6.6
관광활동	7.1	6.7	6.8	6.7
취미오락활동	7.1	6.6	6.8	6.7
휴식활동	7.0	7.5	6.8	6.7
사회 및 기타 활동	7.1	7.0	6.8	6.2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여가활동 참여 여부는 '지난 1년간 한번 이상 참여한 활동이 있는 경우'를 말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Ⅶ-4〉 여가자원별 충분도에 따른 행복점수, 2016, 2018

(점)

	2016			2018		
	충분	보통	부족	충분	보통	부족
여가시간(평일)	7.2	6.9	6.8	7.0	6.7	6.6
여가시간(휴일)	7.2	6.8	6.7	6.9	6.7	6.4
여가비용	7.3	6.9	6.7	7.1	6.7	6.5
여가공간	7.3	6.9	6.7	7.0	6.6	6.3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여가자원 충분도는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 여가비용, 여가공간이 충분하였는지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3점을 '부족', 4점을 '보통', 5–7점을 '충분'으로 변환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6년의 경우도 2018년과 비슷하다. 다만, 스포츠관람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휴식활동에서는 오히려 휴식활동을 한 사람들의 행복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떤 여가활동 유형에 참여했는가가 행복의 수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Ⅶ-4〉에서는 대표적인 여가자원인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그리고 여가공간 이용에 대한 충분도에 따라 행복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개인의 행복수준은 객관적인 여가시간이나 여가비 지출, 또는 공간 이용과는 별개로 주관적으로 인식된 시간, 비용, 그리고 공간 이용의 충분도에 영향을 받는다. 2016년과 2018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들은 평일이나 휴일동안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소비한 여가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이용하기에 여가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도 행복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가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으며, 이들의 행복수준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여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으며, 이들 역시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Ⅶ-5).

일과 여가의 균형 정도에 따른 행복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서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행복점수가 낮았다. 특히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

〈표 Ⅶ-5〉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별 행복점수, 2016, 2018

(점)

	2016			2018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7.2	6.3	6.1	7.0	6.0	5.5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7.1	6.2	5.3	6.9	5.9	4.9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1-3점을 '부정', 4점을 '보통', 5-7점을 '긍정'으로 변환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룬 사람들보다 오히려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보다는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표 Ⅶ-6).

〈표 Ⅶ-6〉 일-여가 균형 정도별 행복점수, 2016, 2018

(점)

	2016			2018		
	일 지향적	일-여가 균형	여가 지향적	일 지향적	일-여가 균형	여가 지향적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6.7	7.0	7.4	6.5	6.9	7.1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일-여가 균형 정도는 "귀하는 24시간 중 '자신의 삶에서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 1점,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4점,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 7점 등 7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1-3점을 '일 지향적', 4점을 '일-여가 균형', 5-7점을 '여가 지향적'으로 변환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역시 개인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준다. 〈표 Ⅶ-7〉을 보면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행복점수도 높다. 따라서 여가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수준이나 만족수준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Ⅶ-7〉 여가생활 만족도별 행복점수, 2016, 2018

(점)

	2016			2018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나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7.5	6.6	6.2	7.4	6.4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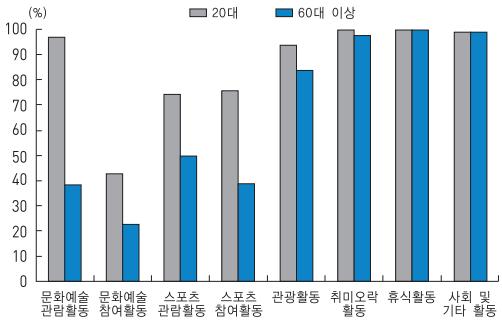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점수는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불행'부터 '행복'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점수임.
3) 여가생활 만족도는 "귀하께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만족 정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1-3점을 '불만족', 4점을 '보통', 5-7점을 '만족'으로 변환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집단별 여가의 질과 행복의 관계

연령집단에서 특히 노년층(60대 이상)의 여가의 질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TV시청이나 산책 및 걷기, 낮잠 등의 휴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종교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98.9%이며, 취미오락활동과 관광활동에 각각 97.7%, 83.6%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활동은 문화예술참여활동(22.8%)과 스포츠참여활동

(38.7%)이다. 20대와 비교해 보면, 휴식활동이나 취미오락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은 문화예술활동이나 스포츠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20대에 비해 크게 낮다(그림 Ⅶ-17).

[그림 Ⅶ-17] 20대와 60대 이상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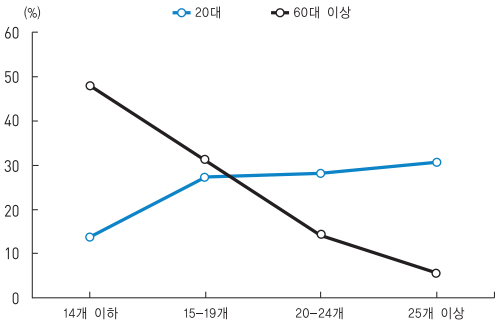


주: 1)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은 해당 연령집단 중 지난 1년간 해당 유형의 여가활동을 한번 이상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8.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가짓수에 있어서 20대와 60대 이상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Ⅶ-18]과 같이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 연령집단의 평균 개수인 19개보다 적은 가짓수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으며, 20대는 20개 이상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58.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주당 근로시간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취업자들이 1년 동안 평균 15-19개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4.4%로 다른 근로시간 집단에 비해

[그림 Ⅶ-18] 20대와 60대 이상의 참여 여가활동 가짓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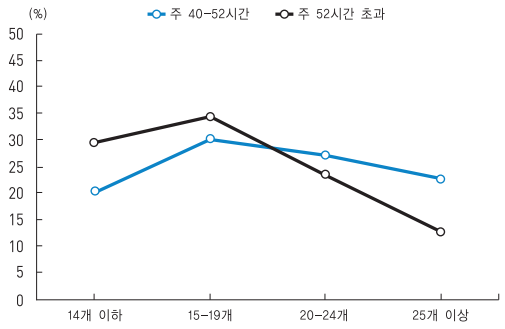


주: 1) 참여 여가활동 가짓수는 2018년 87개 여가활동 중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가짓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18.

가장 많으며, 14개 이하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29.4%나 된다. 그러나 주당 40-52시간을 일한 취업자들은 1년 동안 평균 20개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9.6%나 되며, 특히 25개 이상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22.6%로 나타났다(그림 Ⅶ-19).

결국 앞서 제시된 개인적 특성별 행복수준의 차이는 여가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수준의 차이 등과 같은 여가활동의 질적인 참여수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은 20대 연령집단에 비해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휴식활동이나 취미오락활동, 사회활동 등에 집중되고, 문화예술활동이나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다는 사실이 여가활동을 통한 행복수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Ⅶ-19]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별 참여 여가활동 가짓수, 2018



주: 1) 만 15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2) 참여 여가활동 가짓수는 2018년 87개 여가활동 중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가짓수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

맺음말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일하는 시간 이외의 여가시간동안 스스로 선택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행복한 삶을 위해 개인들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나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맞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가활동과 관련된 자원(시간, 비용, 공간)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고 자신이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가와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것과 함께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서적인 만족, 그리고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일과 여가에 균형을 이루거나 여가에 더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은 여가활동을 통해 균형적 삶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개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윤소영. 2007. 「사회성 여가 발굴 및 확산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 2013.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 2019. 「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The Free Press.
Sirgy, M. J. & Wu, J. 2009. The Pleasant Life, the Engaged Life, and the Meaningful Life: What about the Balance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2): 183-196.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3.8%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 89.4%에 달해 가장 보편적인 개인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가활동인 TV 시청시간은 줄고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활동은 신문/잡지 기사 검색이 67.6%(주 5일 이상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음악 듣기가 21.6%, 기타 동영상 보기가 20.6%, 게임이 13.0%, TV 프로그램 시청이 5.0%였다.
- 10대, 20대는 TV 시청과 음악 듣기, 게임, 기타 동영상 보기 등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스마트미디어 이용률이 높아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주도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은 기존의 여가활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55.2%에 달한다. 특히 TV를 보면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SNS, 문자 보내기, 정보검색을 하는 사람이 68.7%로 스마트미디어가 수동적인 TV 시청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활동 장소로는 이동 중인 교통수단보다 집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집에서 가족이 함께 TV를 시청하던 방식에서 '방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형태로 여가활동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어떤 개인 미디어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다(정용찬, 2015).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MP3플레이어와 PMP, 휴대용 게임기 보유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스마트폰이 개인 매체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급 초기 젊은 층 중심에서 이제는 60대의 보유율도 80%에 달해 국민매체로 불러도 손색이 없으며, 능동형 매체 이용 환경이 고연령층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용찬, 2018).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기사 검색, 음악 듣기, 게임 등이 일상화되면서 스마트미디어가 여가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가장 보편적인 여가활동인 TV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가 통신은 물론 방송프로그램 시청, 음악 듣기, 인터넷 검색, 구매와 결제 등 생활 전반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이용한 여가활동 분석은 여가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미래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개인용 스마트미디어인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태블릿PC) 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분석 데이터로는 국가승인통계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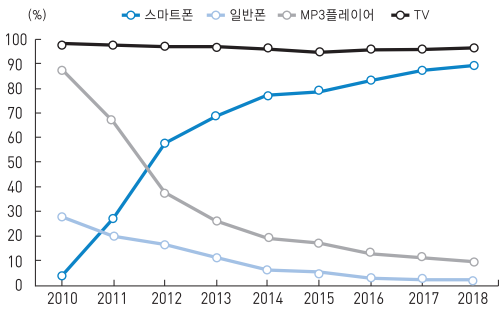
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한다. 여기서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은 TV 프로그램 시청, 라디오 청취, 영화 보기, 신문/잡지 기사검색, 음악 듣기, 게임, e-book, 기타 동영상 보기로 정의한다.

스마트미디어 보유

매체 이용의 '이동화', '개인화'를 상징하는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2010년 3.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89.4%로 나타났다. 음악 듣기와 영상 보기, 검색,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유율 증가의 영향으로 MP3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다른 개인 매체의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Ⅶ-20).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GDP 수준을 감안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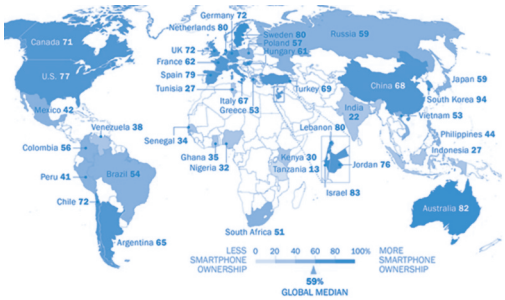
[그림 Ⅶ-20] 가구 및 개인 매체 보유율, 2010-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TV는 가구 기준 보유율, 나머지 매체는 개인 기준 보유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Ⅶ-21]은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을 보유한 성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조사 대상인 3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94%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미국(77%)이나 스웨덴(80%), 독일(72%), 영국(72%) 등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도 10-20%p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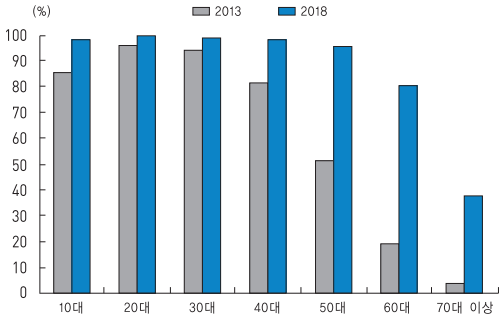
[그림 Ⅶ-21]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보유율, 2018



주: 1)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임.
2)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임. 미국은 2018년 자료, 중국은 2016년 자료임. 그 외 국가는 2017년 자료임.
출처: Pew Research Center, *Social Media Use Continues to Rise in Developing Countries but Plateaus Across Developed Ones*, 2018.

스마트폰 보유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남성 보유율은 91.6%로 여성(87.2%)보다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0-50대의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대의 보유율도 80.3%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50대는 51.3%에서 95.5%, 60대는 19.0%에서 80.3%, 70대 이상은 3.6%에서 37.8%로 증가하여 고연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그림 Ⅶ-22).

[그림 Ⅶ-22] 연령집단별 스마트폰 보유율, 2013,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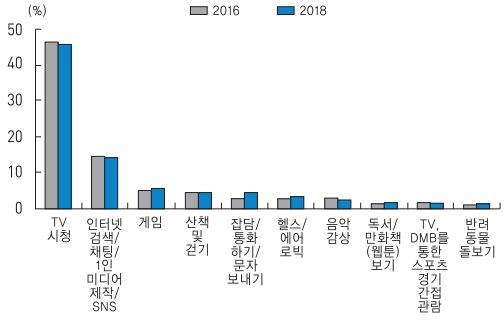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93.4%)과 인천/경기(92.5%) 등 수도권이 충청(87.2%), 전라(82.1%), 경남(89.2%), 경북(86.0%), 강원(80.9%) 보다 높았다. 지역 유형별로도 대도시(92.4%)와 중소도시(91.0%)가 군 지역(80.4%)보다 더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나타냈다.

스마트패드 가구 보유율은 2018년 기준 15.0%로 가구당 0.2대로 나타났다. 스마트패드는 기기 특성상 스마트폰과 달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원이 함께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가구 보급률은 10.7%였으며 2015년 11.6%, 2016년 13.2%, 2017년 15.2%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45.7%), 인터넷 검색(14.1%), 게임(5.5%), 산책 및 걷기(4.3%),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4.3%) 순이었다. 상위 10위에 오른 항목 중에서 산책 및 걷기와 헬스/에어로빅, 반려동물 돌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모두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통해 가능한 활동이다(그림 Ⅶ-23).

[그림 Ⅶ-23] 주로 하는 여가활동, 2016, 2018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주 여가활동(1순위) 기준의 집계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TV 수상기는 2018년 기준 가구 보유율이 96.5%로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시청 시간도 3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여가활동 순위 1위인 TV 시청시간은 줄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이용자 기준)은 2013년 3시간 14분에서 2018년 2시간 57분으로 17분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감소폭이 크

게 나타났는데 10대는 41분, 20대는 1시간 4분, 30대는 42분에 달했다(표 Ⅷ-8).

〈표 Ⅷ-8〉 연령집단별 하루 평균 TV와 스마트폰 이용시간, 2013, 2018

(분)

	TV		스마트폰	
	2013	2018	2013	2018
10대	120	79	134	141
20대	163	99	124	156
30대	186	144	87	125
40대	188	162	69	83
50대	224	196	53	57
60대	247	226	32	43
70대 이상	254	259	34	26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TV 시청시간은 수상기 기준이며,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음성통화시간을 제외한 것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TV 시청시간이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과 달리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음성 통화를 제외한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3년 1시간 32분에서 2018년 1시간 36분으로 증가했다. 20대와 30대의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20대 이용시간은 2시간 36분으로 32분이, 30대는 2시간 5분으로 38분이 증가했다. 반면 40대의 이용시간은 1시간 9분에서 1시간 23분으로, 50대는 53분에서 57분으로, 60대는 32분에서 43분으로 이용시간 증가량은 10분 내외로 나타났다.

TV 시청시간의 감소와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증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미디어 기기의 선호도 변화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TV를 선택한 비율은 2013년 조사에서는 46.3%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응답자(37.3%)보다 많았지만 2018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선택이 57.2%로 TV 선택(37.3%) 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TV 선택이 더 많았고 60대 이상은 대다수가 TV를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선택하여 대조를 보였다. 다만 40대가 2013년 TV 우위에서 2018년 스마트폰 우위로 돌아선 것처럼 고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여가활동 수단으로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Ⅷ-9).

〈표 Ⅷ-9〉 연령집단별 필수 매체 인식, 2013, 2018

(%)

	TV		스마트폰	
	2013	2018	2013	2018
10대	14.8	7.6	61.8	82.5
20대	13.9	11.4	67.3	81.5
30대	25.3	16.6	51.3	76.0
40대	44.5	23.8	38.4	71.7
50대	73.7	50.2	13.4	46.3
60대	90.5	72.8	3.7	22.8
70대 이상	95.5	90.7	0.5	6.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여가활동 수단으로 TV를 대체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현상은 콘텐츠 이용 행태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TV보다 스마트폰 등으로 방송 시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014년 8.8%에서 2018년 12.2%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7%에서 29.9%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10대가 7.0%p, 30대가 4.5%p 증가했다. 또한 TV보다는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2014년 9.7%에서 2018년 12.2%로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의 증가폭이 커 이들 집단이 콘텐츠 이용 변화를 주도하는 연령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Ⅶ-10).

〈표 Ⅶ-10〉 연령집단별 매체이용 행태, 2014, 2018

(%)

	스마트폰 선호		몰아보기 선호	
	2014	2018	2014	2018
10대	15.6	22.6	16.1	17.2
20대	19.7	29.9	15.7	20.8
30대	8.4	12.9	12.2	17.6
40대	6.7	8.6	6.8	10.7
50대	4.4	5.4	6.4	7.8
60대	2.3	4.3	4.4	6.1
70대 이상	1.7	3.8	3.9	5.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선호는 "TV수상기보다는 스마트기기로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3) 몰아보기 선호는 "드라마 시리즈 전체 혹은 일부를 몰아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스마트폰이 여가활동에서 TV를 대체하는 현상과 함께 두 매체가 서로 보완하는 행태도 나타났다. 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률은 스마트폰이 55.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C/노트북의 동시 이용률은 7.1%, 스마트패드의 동시 이용률은 2.4%, 신문이 1.3%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SNS, 문자/메신저, 정보검색을 이용한 경험자는 68.7%로 나타나 TV 프로그램 시청이 과거와 달리 능동적인 행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66.2%)보다는 여성(71.1%)이 높았으며, 10대(72.5%), 20대(75.6%), 30대(76.4%)의 이용률이 40대(66.0%), 50대(60.6%), 60대(53.8%)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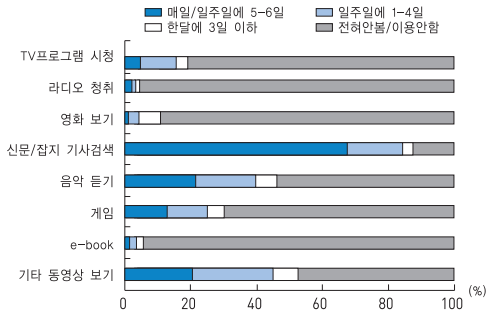
TV 시청 중 타 매체를 이용하는 이유로 '채팅/메신저 이용'이 61.4%로 가장 높았고 '습관적으로'가 44.3%,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싶어서'가 29.8%로 나타났다.

TV 시청 중 타 매체 이용이 TV 시청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4.1%로 나타났는데, 10대의 21.2%, 20대는 22.9%, 30대가 27.2%, 40대가 26.5%인 반면 50대는 40.6%, 60대는 48.3%, 70대 이상이 57.0%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디어 동시 이용이 TV 시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여가활동으로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비율이 67.6%(주 5일 이상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음악 듣기가 21.6%, 기타 동영상 보기가 20.6%, 게임이 13.0%, TV 프로그램 시청이 5.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라디오 청취(2.2%), e-book(1.6%), 영화 보기(1.1%)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Ⅶ-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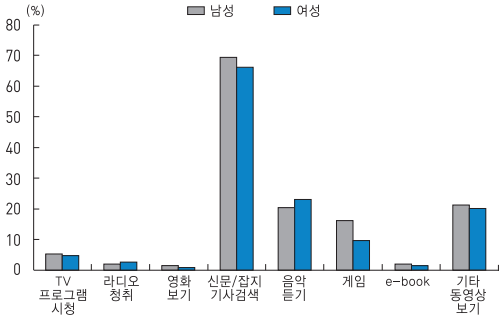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신문/잡지 기사 검색 비율이 69.3%로 여성(65.9%)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게임 이용도 남성이 16.1%로 여성(9.7%)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음악 듣기의 경우는 여성 이용률이 23.0%로 남성의 이용률(20.3%)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Ⅶ-25).

[그림 Ⅶ-24]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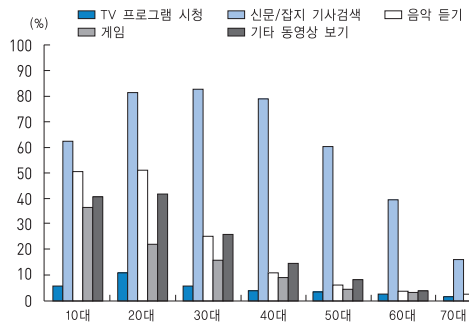
[그림 Ⅶ-25] 성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다기능 복합기기인 스마트폰은 연령별로 쓰임새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 20대는 TV 프로그램 시청과 음악 듣기, 게임, 기타 동영상 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가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세대임을 나타내고 있다. 30대와 40대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음악 듣기나 게임 이용은 10대와 20대 보다는 낮으나 50대 이상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였다. 50대와 60대는 음악 듣기나 동영상 시청보다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 특정 콘텐츠에 편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Ⅶ-26).

[그림 Ⅶ-26] 연령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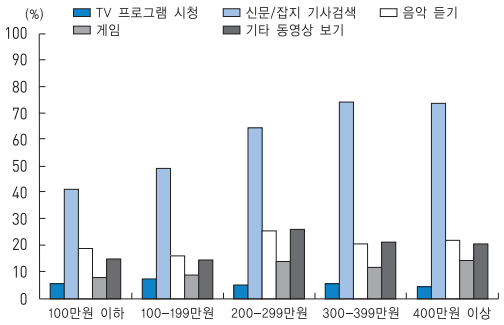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2017년 결과와 비교하면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과 기타 동영상 보기가 늘어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이 각각 57.7%에서 62.3%, 63.7%에서 81.3%로 늘어났고 기타 동영상 보기는 10대가 34.7%에서 40.5%로 20대는 28.5%에서 41.6%로 증가해 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주도층임을 시사한다.

가구소득별로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 이용률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크게 나타난 반면 TV 프로그램 시청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Ⅶ-27).

[그림 Ⅶ-27] 가구소득별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폰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중 동영상콘텐츠 이용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동영상(Over The Top: OTT)제공서비스란, 지상파나 케이블과 같은 기존의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판도라TV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등장하는 등 기존 방송사와 경쟁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률은 2018년 기준 42.7%로 2017년(36.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 이용률은 20대가 78.4%로 가장 높으며, 10대(71.7%)와 30대(6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이용률은 전년에 비해 각각 13.3%p, 15.6%p로 크게 증가했다. 시청 경험이 있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는 유튜브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11.5%), 네이버TV(7.1%), 아프리카TV(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전문 방송제작사가 만든 콘텐츠 이외에도 일반인이 직접 제작하는 1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화, 드라마와 같은 기존 콘텐츠 이외에 생활정보, 푸드, 뷰티 등 다양한 장르를 제공한다.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로 시청한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동영상 중에서는 생활/정보(41.8%)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악(30.0%), 웹예능(23.1%), 푸드(22.0%), 스포츠(18.3%), 토크/캠방(17.3%), 시사/현장(17.1%), 게임(10.7%), 뷰티(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방송프로그램과 달리 일반인이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하고 게임을 하는 짧은 방송콘텐츠를 즐기는 행태는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은 생활정보(35.5%)와 스포츠(28.2%)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여성은 생활정보(49.0%)와 음악(32.4%)을 선호하여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음악(43.5%), 푸드(33.7%), 웹예능(30.6%), 토크(30.1%), 게임(25.5%) 이용이 높았고, 20대는 생활정보(36.5%), 웹예능(33.2%), 음악(32.1%), 푸드(26.8%), 스포츠(25.0%)를 선호했다. 30대는 생활정보(41.4%)와 음악(28.2%)을, 40대도 생활정보(51.3%)와 음악(24.3%)을 선호했으며 50대 이상도 동일하게 생활정보와 음악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이용 장소

로는 이동 중인 교통수단뿐 아니라 집에서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 여가활동의 '이동화'뿐 아니라 '개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 기사검색이나, 게임, 음악 듣기 등의 여가활동도 '이동 중 교통수단'보다는 '집'에서 이용이 더 높았고 특히 TV 프로그램 시청도 '이동 중 교통수단'(33.3%)보다 '집'에서 시청(70.9%)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Ⅶ-11).

〈표 Ⅶ-11〉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 이용 장소, 2018

(%)

	집	회사/학교	이동 중 교통수단	실내 공간	길거리 등 실외
TV 프로그램 시청	70.9	18.1	33.3	17.4	6.6
라디오 청취	46.6	17.4	48.3	16.3	5.2
영화 보기	71.3	13.3	20.5	18.8	2.4
신문/잡지 기사 검색	78.7	37.7	39.6	30.6	11.3
음악 듣기	65.3	24.1	48.5	21.8	11.1
게임	75.6	22.6	32.5	23.2	5.7
e-book	62.1	24.6	32.9	23.7	6.0
기타 동영상 보기	78.1	28.7	32.4	25.4	7.5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미디어 이용 장소는 각 미디어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이며, 복수응답 결과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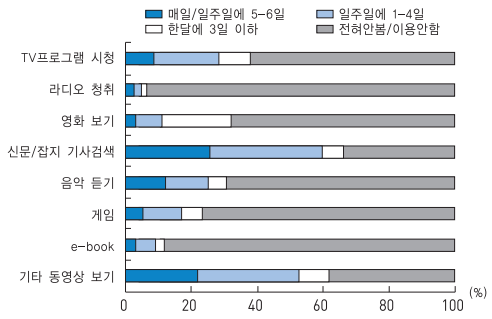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

스마트패드 이용률은 2018년 기준 3.8%로 스마트폰에 비하면 매우 작게 나타났다. 2013년 3.5%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5.4%로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이용률이 다소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이용률이 4.5%로 여성 이용률(3.1%)에 비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이용률이 7.9%로 가장 높았고 20대(6.0%), 10대(5.1%)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7.7%)의 이용률이 높았다. 스마트패드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2분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1시간 28분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패드를 통한 여가활동으로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비율은 25.6%(주 5일 이상 기준)로 가장 높았고, 기타 동영상 보기가 21.7%, 음악 듣기가 12.0%, TV 프로그램 시청이 8.5%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게임(5.1%), e-book(3.1%), 영화(3.0%), 라디오 청취(2.5%) 등도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활동으로 나타났다(그림 Ⅶ-28).

[그림 Ⅶ-28] 스마트패드를 이용한 여가활동,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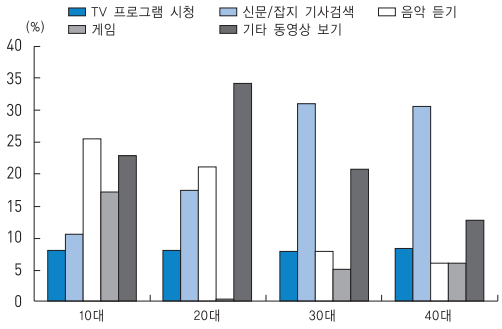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성별로는 남성은 신문/잡지 기사 검색 비율이 29.8%(주 5일 이상 기준)로 가장 높았고, 기타 동영상 보기가 23.1%, 음악 듣기가 14.1%, TV 프로그램 시청이 12.2%, 게임이 8.5%로 나타났다. 여성은 신문/잡지 기사 검색과 기타 동영상 보기가

동일하게 19.5%로 가장 높았고 음악 듣기가 8.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음악 듣기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동영상 보기가 22.9%, 게임이 17.1%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도 기타 동영상 보기가 34.1%로 가장 높았고 음악 듣기가 21.2%, 신문/잡지 기사 검색이 17.4%로 나타났다. 30대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이 3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 동영상 보기(20.7%), TV 프로그램 시청(7.9%), 음악 듣기(7.9%)로 나타났다. 40대는 신문/잡지 기사 검색이 30.6%로 가장 높았고 기타 동영상 보기가 12.7%로 나타났다(그림 Ⅷ-29).

[그림 Ⅷ-29] 연령집단별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 2018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스마트패드 이용 여가활동은 각 콘텐츠 유형별로 스마트패드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3) 50대 이상은 응답자가 30명 이하로 이에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18.

맺음말

스마트폰의 보유율이 90%에 달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ce)'로 표현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The Economist, 2015). 스마트폰 보유율과 이용량의 세대간 격차는 좁혀지고 있지만, 젊은층은 영상 콘텐츠를, 고연령층은 문자 콘텐츠를 선호하여 '호모 스마트포니쿠스'의 세대별 진화 속도와 방향의 차이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용찬, 2019).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여가활동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V의 위상은 위협받고 있다. 젊은 층의 경우 TV 시청시간이 현저하게 줄고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이용이 늘어 세대별 여가활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여가활동을 대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TV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TV 시청이 방송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보는 성격이었다면 스마트폰을 통한 TV 시청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보는 능동형 시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0대와 30대에서 촉발된 여가활동의 '개인화', '능동화' 경향은 고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여가활동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정용찬. 2015.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세대간 미디어 이용 특징 변화.”「KISDI Stat Report」Vol. 15–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_____. 2018. “스마트폰, 능동적 매체 이용의 촉매자.”「KISDI Stat Report」Vol. 18–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_____. 2019.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세대별 진화 속도.”「KISDI Stat Report」Vol. 19–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The Economist. Feb 26th 2015. “Planet of the phones.”

2019

Housing & Transportat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Ⅷ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40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박인권 | 서울대학교 250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261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 서울대학교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 103.3%이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8년 기준 각각 49.2%와 57.7%이다.
- 2018년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31.7㎡로 나타나는 등 주거의 꾸준한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택 만족도는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전체 중위값보다 높아 주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 기준 약 146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2018년 기준 약 107만 가구에게 주거 급여가 지급되었다.
-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 현재 가구당 1.17대에 달한다. 도로망과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2018년 기준 도로연장은 10만 2,465㎞, 철도연장은 4,078㎞에 이른다.
- 2015년 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35.4분이며, 평균 통학시간은 33.3분이다. 2018년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84점으로 조사되어 2012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 2018년 기준 월평균 가구 교통비 지출액은 약 35만 원으로 가계지출 중 10.5%를 차지한다. 한편,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8년 현재 저상버스는 8,038대, 특별교통수단은 3,187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주거 영역에서는 먼저 주택보급률과 점유형태를 통해 주거의 양적 변화를 정리한다. 이어서 1인당 평균 주거면적과 주택 만족도를 통해 주거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불균형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본다. 교통 영역에서도 먼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양적 변화 추이를 정리한다. 이어서 평균 통근·통학시간과 대중교통 만족도 등의 지표를 통해 교통 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른 보편적 이동권과 교통복지 문제를 살펴본다.

주택보급과 점유형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표 Ⅷ-1〉은 2005-2017년 사이 주택보급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주택보급률은 98.3%에서 103.3%로 5.0%p 증가하였다.

주택보급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Ⅷ-2〉의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2006-2018년 사이 단독주택은 11.2%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7.4%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49.2%에 달한다.

〈표 Ⅷ-1〉 주택보급률, 2005-2017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보급률 (%)
2005	15,887	15,623	98.3
2010	17,656	17,739	100.5
2011	17,928	18,082	100.9
2012	18,209	18,414	101.1
2013	18,500	18,742	101.3
2014	18,800	19,161	101.9
2015	19,111	19,559	102.3
2016	19,368	19,877	102.6
2017	19,674	20,313	103.3

주: 1) 가구수는 혈연가구, 1인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임.
2) 주택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임.
3)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표 Ⅷ-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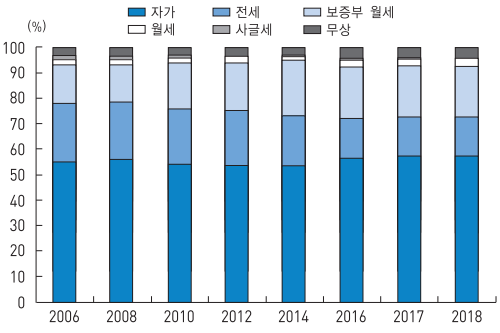
(%)

연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2006	44.5	41.8	3.3	7.4	1.8	1.3
2008	42.9	43.9	3.3	7.2	1.1	1.6
2010	40.4	47.1	4.5	5.6	1.1	1.3
2012	39.6	46.9	3.0	7.2	1.7	1.7
2014	37.5	49.6	3.4	6.2	1.0	2.2
2016	35.3	48.1	2.2	8.9	1.7	3.7
2017	34.3	48.6	2.2	9.2	1.6	4.0
2018	33.3	49.2	2.2	9.3	1.7	4.4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택보급과 함께 자가 가구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그림 Ⅷ-1]은 2006-2018년 사이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자가 가구의 비율은 55.6%에서 57.7%로 2.1%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의 비율은 22.4%에서 15.2%로 7.2%p 감소하였다. 반면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의 비중이 일부 등락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과 이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Ⅷ-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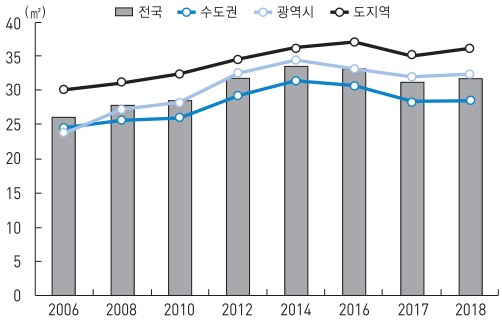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거의 질과 만족도

주거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림 Ⅷ-2]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의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6.2㎡이었으나 2018년에는 31.7㎡로 약 21%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각각 17%, 35%, 20% 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18년 수도

권 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8.5㎡로 조사되어, 도지역 36.1㎡의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Ⅷ-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18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주택 만족도는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표 Ⅷ-3〉은 주택 만족도를 거주지역, 소득계층,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의 평균(전체) 만족도는 2.98점으로 조사되어,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의 평균 만족도 2.83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지역 중에서 수도권의 만족도가 2.96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다. 소득계층별 만족도는 저소득층 2.85점, 중소득층 3.02점, 고소득층 3.14점으로 나타난다.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만족도가 3.03점인 반면 보증금 없는 월세의 만족도는 2.59점이다. 주택유형은 아파트의 만족도가 3.11점으로 가장 높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만족도가 2.73점으로 가장 낮다.

〈표 Ⅷ-3〉 주택 만족도, 2012-2018

(점)

구분	2012	2014	2016	2018
전체	2.83	2.92	2.99	2.98
거주지역				
수도권	2.80	2.88	3.01	2.96
광역시 등	2.87	2.96	2.98	3.02
도지역	2.84	2.96	2.98	2.97
소득계층				
저소득층	2.75	2.80	2.86	2.85
중소득층	2.85	2.95	3.04	3.02
고소득층	2.95	3.08	3.18	3.14
점유형태				
자가	2.93	2.99	3.07	3.03
전세	2.74	2.87	2.93	2.95
보증금 있는 월세	2.72	2.82	2.92	2.91
보증금 없는 월세	2.41	2.63	2.64	2.59
무상	2.69	2.85	2.90	2.87
주택유형				
단독주택	2.75	2.79	2.83	2.84
아파트	2.92	3.04	3.15	3.11
연립주택	2.80	2.78	2.81	2.86
다세대주택	2.72	2.78	2.82	2.88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73	2.87	2.76	2.73
주택이외의 거처	2.77	2.97	3.07	2.79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2)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은 '수도권'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광역시 등'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도지역'으로 구분되었음. 세종의 경우 2018년부터 '광역시 등'으로 구분되었고, 이전은 '도지역'으로 구분되었음.
3) 일세, 사글세,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함.
4)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거비 부담과 주거복지

주거의 양적, 질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에 불균형이 나타난다. 〈표 Ⅷ-4〉와 〈표 Ⅷ-5〉는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RIR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 이후 2018년 15.5%로 다시 낮아졌다. 그러나 2018년 수도권의 RIR은 전체보다 높은 18.6%이며 저소득층의 RIR은 20.3%에 달한다.

〈표 Ⅷ-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18

(%)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18.7	19.9	18.5	17.8	27.6	18.9	16.1
2008	17.5	22.3	19.3	15.9	25.0	17.6	17.4
2010	19.2	20.9	16.4	14.4	28.2	16.6	21.1
2012	19.8	23.3	16.8	14.5	21.8	17.3	22.6
2014	20.3	21.6	16.6	15.8	29.0	17.0	21.6
2016	18.1	17.9	15.4	14.2	23.1	14.9	19.0
2017	17.0	18.4	15.3	15.0	22.2	15.7	20.3
2018	15.5	18.6	16.3	15.0	20.3	16.7	18.3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소득×100.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Ⅷ-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18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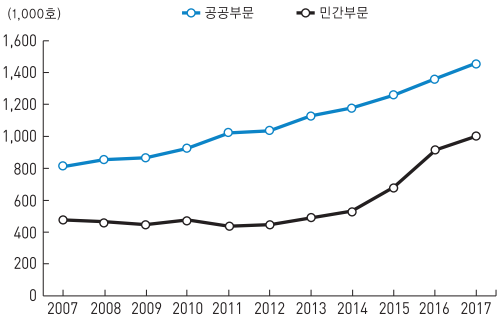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4.2	5.7	4.1	3.3	6.3	3.4	3.6
2008	4.3	6.9	3.3	3.0	6.4	4.3	4.2
2010	4.3	6.9	3.5	2.9	6.1	4.2	4.0
2012	5.1	6.7	5.0	3.6	7.5	4.3	4.4
2014	4.7	6.9	4.7	4.2	8.3	5.0	4.7
2016	5.6	6.7	5.3	4.0	9.8	5.6	5.0
2017	5.6	6.7	5.5	4.0	8.3	5.2	4.8
2018	5.5	6.9	5.6	3.6	9.0	5.2	4.8

주: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PIR은 2006-2018년 사이 4.2배에서 5.5배로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도지역의 PIR은 3.6배인 반면 수도권은 6.9배로 전체 PIR을 웃돈다. 또한 저소득층의 PIR은 9.0배이지만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2배와 4.8배에 그친다. RIR과 PIR의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볼 때, 수도권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영구, 국민, 10년, 장기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Ⅷ-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현재 약 246만 호가 공급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2007년 약 81만 호에서 2017년 약 146만 호로 80%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Ⅷ-3] 공공 및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7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표 Ⅷ-6〉은 2016-2018년의 주거급

여 수급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8년 현재 전체 수급가구 수와 수급권자 수는 약 107만 가구와 약 153만 명으로 전체 가구와 인구의 약 5.3%와 3.1% 수준이다. 수급권자 비율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Ⅷ-6〉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18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수급가구				
수급가구 수(1만 가구)				
2016	94.5	35.7	28.6	50.2
2017	93.6	36.3	28.3	49.3
2018	107.0	42.3	32.4	56.1
전체 가구 중 비율(%)				
2016	4.9	3.8	5.8	4.7
2017	4.8	3.8	5.7	4.6
2018	5.3	4.4	6.4	5.1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1만 명)				
2016	138.8	52.7	43.3	72.4
2017	135.1	52.5	42.1	70.0
2018	153.0	60.8	47.5	79.3
전체 인구 중 비율(%)				
2016	2.8	2.1	3.4	2.6
2017	2.7	2.1	3.3	2.5
2018	3.1	2.5	3.8	2.9

주: 1) 수급 가구 및 인원은 시설수급자 포함,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수치임.
2) 전체 가구와 인구는 각각 내국인 가구 및 인구 기준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교통시설의 확충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Ⅷ-7〉의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을 보면, 2000년 약 1,206만 대에서 2018년 약 2,320만 대로 약 1.92배가량 증가하였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현재 각각 1.17대와 449.6대에 달한다. 이는 2000년 대비 각각 약 41.3%와 75.3% 증가한 수준이다.

〈표 Ⅷ-7〉 자동차 등록 대수, 2000-2018

연도	자동차 등록 대수 (1,000대)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대수(대)
2000	12,059	0.83	256.5
2005	15,397	0.96	319.5
2010	17,941	1.03	362.1
2011	18,437	1.03	369.2
2012	18,871	1.04	375.9
2013	19,401	1.06	384.7
2014	20,118	1.08	396.4
2015	20,990	1.10	411.4
2016	21,803	1.13	425.7
2017	22,528	1.15	438.6
2018	23,203	1.17	449.6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장래가구추계」, 2015.

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표 Ⅷ-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도로연장은 2000년 8만 2,440㎞에서 2018년 10만 2,465㎞로 약 24.3% 증가하였다.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과 국토 1㎢당 도로연장도 2018년 현재 각각 1.99㎞와 1.02㎞에 이른다. 이는 2000년 대비 각각 약 13.7%와 22.9% 증가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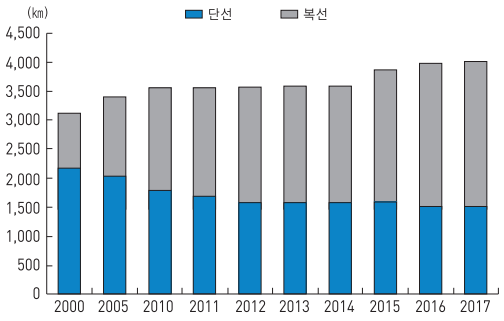
〈표 Ⅷ-8〉 도로연장, 2000-2018

연도	도로연장(km)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km)	국토면적당 도로연장(km/km²)
2000	82,440	1.75	0.83
2005	90,817	1.88	0.91
2010	94,230	1.90	0.94
2011	94,656	1.90	0.95
2012	96,948	1.93	0.97
2013	96,418	1.91	0.96
2014	97,920	1.93	0.98
2015	99,024	1.94	0.99
2016	100,428	1.96	1.00
2017	101,870	1.98	1.02
2018	102,465	1.99	1.02

주: 1) 개통도로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자동차의 보급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림 Ⅷ-4]와 같이 철도 연장은 2000년 3,123km에서 2017년 4,078km로 약 30.6% 증가하였다. 특히, 복선철도 연장이 같은 기간 939km에서 2,506km로 약 166.9% 늘어나 전체 철도 연장의 61.5%를 차지한다.

[그림 Ⅷ-4] 철도연장, 2000-2017



출처: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버스 등록 대수는 〈표 Ⅷ-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4만 609대에서 2018년 4만 5,787대로 5,178대 늘었다. 같은 기간 버스업체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버스업체 종사자 수는 9만 2,292명에서 10만 2,331명으로 1만 39명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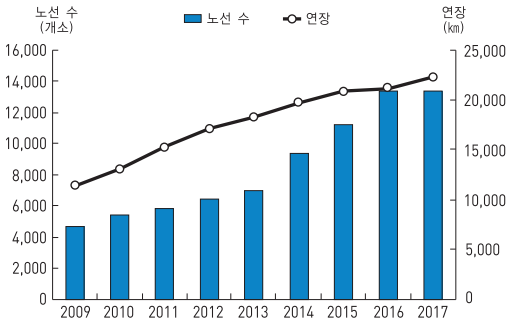
〈표 Ⅷ-9〉 버스업체 수, 보유 대수 및 종사자 수, 2000-2018

연도	업체 수	보유 대수(대)	종사자 수(명)
2000	541	40,609	92,292
2005	538	41,119	91,042
2010	530	44,179	95,441
2011	527	43,974	95,941
2012	530	44,210	96,231
2013	528	44,607	96,509
2014	525	44,758	97,186
2015	524	45,223	97,995
2016	525	45,277	97,649
2017	532	45,714	99,508
2018	534	45,787	102,331

출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 각 연도.

자전거도로도 크게 확충되었다. [그림 Ⅷ-5]에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 노선은 2009년 4,647개소에서 2017년 1만 3,337개소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자전거도로 연장은 1만 1,387km에서 2만 2,315km로 약 96% 증가하였다.

[그림 Ⅷ-5] 자전거도로 노선 수와 연장, 2009-2017



주: 1)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등을 포함함.
출처: 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현황」, 각 연도.

교통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교통시설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정체 국면이다. 〈표 Ⅷ-10〉과 〈표 Ⅷ-11〉은 통근시간과 통학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35.4분으로 2000년의 32.1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43.7분으로 전국 평균 통근시간 35.4분에 비해 23.4%가량 높게 나타난다.

2015년 기준 평균 통학시간은 33.3분으로 이 또한 2000년의 통학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통근시간처럼 통학시간도 수도권이 38.8분으로 전국 평균 33.3분에 비해 17%가량 높다. 통근시간과 통학시간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이 가장 적게 소요된다.

〈표 Ⅷ-10〉 평균 통근시간, 2000-2015

(분)

연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0	32.1	39.7	34.3	27.3
2005	31.1	38.4	31.7	27.2
2010	33.7	41.5	34.2	30.0
2015	35.4	43.7	36.6	31.5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Ⅷ-11〉 평균 통학시간, 2000-2015

(분)

연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2000	33.9	37.9	34.6	30.9
2005	30.1	34.3	30.1	28.0
2010	31.5	36.4	31.1	29.7
2015	33.3	38.8	33.7	31.2

주: 1) 평균 통학시간은 원자료에서 통학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도 큰 변화가 없다. 〈표 Ⅷ-12〉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 추이를 보여준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2012년 4.76점에서 2018년 4.84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지역별 대중교통 만족도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서울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Ⅷ-12〉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18

(점)

연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12	4.76	5.04	4.80	4.65	4.75	4.84	4.75	4.66
2013	4.78	5.07	4.83	4.76	4.76	4.88	4.75	4.75
2014	4.84	5.05	4.80	4.76	4.79	4.79	4.71	4.60
2015	4.78	4.93	4.81	4.64	4.77	4.81	4.76	4.56
2016	4.84	5.00	4.83	4.82	4.72	4.79	4.86	4.63
2017	4.87	5.04	4.91	4.79	4.86	4.86	4.81	4.69
2018	4.84	4.95	4.83	4.74	4.83	4.87	4.80	4.67

주: 1)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교통비 부담과 교통복지

사람들의 교통비 지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Ⅷ-13〉은 소득분위에 따른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과 가계지출 중 교통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2018년 기준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약 35만 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통비 지출액은 커지나 1, 2분위를 제외하면 교통비 지출 비율에 큰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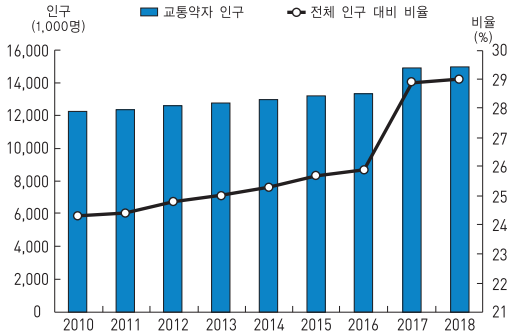
한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인 교통약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Ⅷ-6]과 같이 2010-2018년 사이 전국의 교통약자는 약 1,229만 명에서 1,503만 명으로 274만 명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높아져서 2018년 현재 29.0%, 즉 4명 중에서 1명 이상이 교통약자이다.

〈표 Ⅷ-13〉 소득분위별 교통비 지출액, 2017, 2018

소득분위	2017		2018	
	월평균 교통비 (만 원)	교통비 지출 비율 (%)	월평균 교통비 (만 원)	교통비 지출 비율 (%)
전체	36.9	11.1	34.9	10.5
1분위	8.3	6.5	9.2	7.6
2분위	10.2	7.4	10.7	7.4
3분위	17.0	8.7	18.1	9.5
4분위	23.2	9.9	22.0	9.5
5분위	29.8	10.7	29.4	10.2
6분위	40.8	12.4	33.6	10.2
7분위	44.6	11.8	40.8	11.0
8분위	51.7	12.0	50.8	11.6
9분위	63.1	12.3	57.1	11.1
10분위	80.4	11.6	77.1	11.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교통비 지출 비율은 가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3) 교통비 지출액에는 자동차구입비, 기타운송기구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연료비, 기타 개인 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Ⅷ-6] 교통약자 인구, 2010-2018



주: 1)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표 Ⅷ-14〉와 같이, 저상버스는 2010-2018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하여 2018년 현재 8,038대가 운행 중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23.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꾸준히 늘어나 2018년 현재 3,187대가 운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법정 보급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 118.1% 수준이다.

〈표 Ⅷ-14〉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8

연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대)	보급률 (%)	운행대수 (대)	보급률 (%)
2010	3,206	10.0	1,302	23.5
2011	3,899	12.6	1,476	25.5
2012	4,775	14.5	1,597	57.2
2013	5,447	16.4	1,752	63.0
2014	6,076	18.7	2,298	85.4
2015	6,737	19.9	2,601	95.4
2016	6,447	19.0	2,820	103.3
2017	7,556	22.4	2,932	126.0
2018	8,038	23.4	3,187	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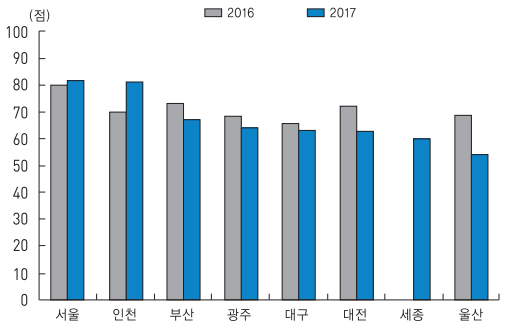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8대 특별·광역시의 교통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그림 Ⅷ-7-1]과 같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만 전년 대비 교통복지수준이 개선되었고, 그 밖의 지자체에서는 교통복지수준이 낮아졌다. 2017년 기준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이 가장 편리한 곳은 서울이고, 가장 불편한 곳은 울산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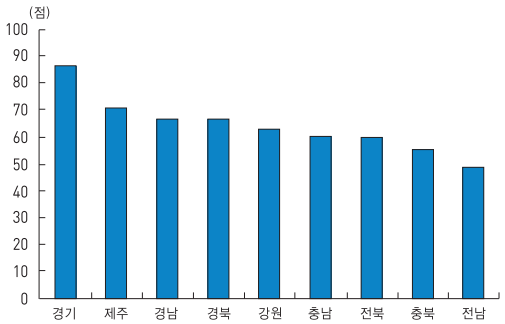
2018년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는 [그림 Ⅷ-7-2]와 같이 9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그림 Ⅷ-7] 시도별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 2016-2018

1) 8대 특별·광역시(2016-2017년)



2) 9개 도 지역(2018년)



주: 1)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는 8개 항목(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저상버스보급률, 특별교통수단보급률, 특별교통수단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최저 40점, 최고 100점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다. 교통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86.3점을 받은 경기이고 전남은 48.7점으로 교통복지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2017년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에서 광주가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호남 지역의 교통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박인권 (서울대학교)

- 우리나라 신도시는 1980년대 말부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개발되어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10% 정도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 우리나라 신도시는 고층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며, 초기에는 고밀도로 개발되다 최근에는 중·저밀도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 신도시는 주거면적은 넓지만 자가 주거 비율과 거주기간의 측면에서 주거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 신도시 거주인구는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층이며 사회활동 참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수도권 신도시 통근자의 서울 의존도는 여전히 높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통근시간은 여전히 길어서 일자리 자족성은 낮은 편이다.
- 제2기 및 제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신도시들은 성장하고 오래된 신도시들 중 일부는 쇠퇴하여 신도시의 분화가 나타날 것이다.

신도시는 기성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 사람들을 정주시킬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개발한 울산신시가지나 1970년대 개발한 창원, 서울의 강남, 대덕연구학원도시, 과천, 1980년대 개발한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주택단지도 당시에는 일종의 신도시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도시라는 말이 일상용어로 사용될 만큼 친숙해지게 된 것은 1989년에 계획되어 1990년대 중반에 완성된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당과 일산 등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은 우리나라 신도시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에게 신도시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주었다. 그 이후 신도시는 30년 넘게 꾸준히 건설되어 사람들의 주거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왔다.

'천당 위 분당'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신도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주거공간으로 다가왔다. 질서 있게 지어진 아파트단지와 잘 정돈된 도로와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신도시는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많은 도시들은 신도시를 일종의 모델로 삼아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신도시는 자족성이 떨어지고 모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비판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대단지 고

층아파트 위주의 주택 개발이 주는 단조로움과 재생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광역교통망 등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일부 신도시는 아파트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글은 신도시의 건설과 확대과정을 개관한 후 신도시 주거의 질과 특성을 살펴보고,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도시 주거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신도시 문화를 이끌어온 수도권 신도시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적 신도시 주거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2년 울산공업특정지구를 지정하고 공업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업 활동에 필요한 항만 등 인프라를 공급하고 노동자 주거를 제공할 공업 배후도시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인구 15만 명을 수용할 신시가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울산에 이어서는 포항이 대규모 공업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도시로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한편 1960년대 수도권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의 이주정착지로 광주대단지(성남)가 개발되었고, 서울에서도 여의도와 영동지구(서울 강남지역)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도 중화학공업 및 수출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의 배후도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었다. 수출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된 구미를 비롯하여, 창원, 여천, 반월(안산) 등 임해공업단지 배후도시가 이 시기 조성된 신도시들이다. 특히 1976년에 계획되어 그 이듬해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반월 신도시는 기성시가지가 아닌 지역에 독립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적 신도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국토연구원, 2012).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수도권에서는 강북 도심의 과밀문제 해결을 위해 영동·잠실 지구 개발을 계속하였다.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과천에도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대덕에 건설된 연구단지의 배후도시로서 대덕학원연구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1980년대에는 주로 서울의 주택 문제해결과 행정기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개발된 개포, 목동, 상계 신시가지는 서울의 시내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된 '도시 내 신도시'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과천 신도시 개발은 1980년대 초 마무리되었고, 1980년대 말 새로 조성된 계룡과 둔산 신도시 역시 서울의 행정기능 분산 차원에서 조성된 신도시들이다. 그러나 이

때까지의 신도시는 주로 공업단지의 부속적 기능을 담당하거나 기존 도시의 확산 과정에서 소규모로 이뤄진 계획지구였다는 점에서 대규모 종합적 정주공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신도시 주거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된 것은 무엇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제1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0년 말 정부가 계획한 주택 200만 호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50.1㎢ 면적에 29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116만 8,0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는 1995년 당시 수도권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당시 폭등하던 주택가격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림 Ⅷ-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20k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규모를 보면 분당과 평촌이 큰 편이고 나머지 신도시들이 유사한 규모이다.

'제2기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 주택수요의 분산과 수도권 지역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10개 지역을 말한다. 총 면적 124.1㎢ 면적에 60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155만 9,000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평균 부지 면적 규모와 평균 주택 호수의 측면에서는 제1기 신도시와 유사하지만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라 수용인구는 훨씬 적게 설계되었다. 규모 면에서는 화성 동탄 2지구와 파주 운정의 수용인구가 크고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가 작은 편이다.

[그림 Ⅷ-8] 제1~3기 수도권 신도시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2019. 5. 7.
(그림: 「주간한국」, 2019. 5. 13. http://m.hankooki.com/m_wk_view.php?m=&WM= wk&WEB_GSNO=6669366).

2021년까지 제2기 신도시가 모두 완성되면 제1기와 제2기 신도시가 수용하는 계획인구는 272만 7천 명(국토교통부, 2010)으로서, 이는 통계청이 2017년에 추정한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2,605만 4,000여 명의 10.5%에 해당한다. 2010년으로 기준으로 제1기 신도시는 계획인구보다 실제 거주인구가 6.7% 더 많은 124만 8천여 명이었다(토지주택연구원, 2010). 이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는 10%를 훨씬 넘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1기 신도시의 경우, 1989년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 30만 호 가까운 주택을 짓고, 12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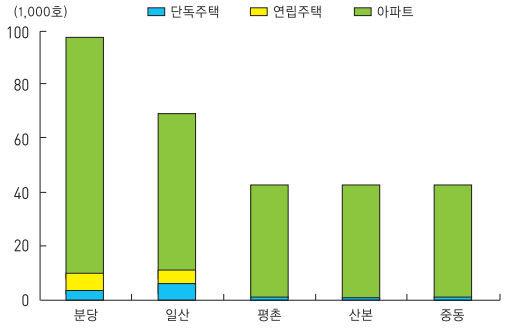
정도의 인구를 모두 이주시키는데 7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된 데에는 1980년에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택촉법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으로써 신속한 개발을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협의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택촉법은 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19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가·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도시 주거의 질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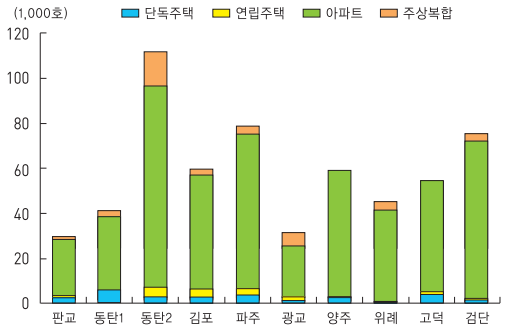
우리나라 신도시는 고층 아파트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개발이 완료된 우리나라 대표적 신도시인 제1기 수도권 신도시를 보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92.2%나 된다. 제1기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일산도 그 비율은 84.1%나 되어 경기도 전체 비율인 58.5%(2015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산본은 그 비율이 98.7%에 이른다(그림 Ⅷ-9-1). 제2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실시계획을 보면 제1기 신도시와 유사한 수준의 아파트 비율을 보인다. 실시계획에 나타난 지구별 주택 구성은 [그림 Ⅷ-9-2]와 같다.

[그림 Ⅷ-9] 수도권 신도시 주택유형별 구성

1) 제1기 수도권 신도시



2) 제2기 수도권 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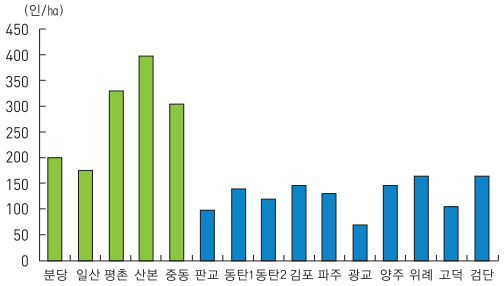
주: 1) 제2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실시계획 기준임. 위례의 경우 2015. 11. 3. 관보에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 내용 반영. 검단의 경우도 2018. 6. 18. 관보에 고시된 실시계획 변경 내용 반영.

출처: 한국토지공사, 「분당 신도시 개발사」, 1997; 「일산 신도시 개발사」, 1997; 「산본 신도시 개발사」, 1997; 「평촌 신도시 개발사」, 1997; 「중동 신도시 개발사」, 1997.
국토교통부, 「신도시개발 편람·매뉴얼」, 2010.

하지만 개발 밀도의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제1기 신도시가 제2기 신도시에 비해 훨씬 더 높다. 실시계획상 제1기 신도시의 전체 인구 밀도는 233인/ha로서 서울 인구 밀도의 1.4배에 달한다. 일산이 가장 낮은 175인/ha, 그 다음 분당

이 199인/ha로 모두 서울 164인/ha(2015년 기준)보다 높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산본은 399인/ha로 서울의 2.4배에 달한다. 반면 제2기 신도시의 경우는 인구 밀도의 측면에서 '중저밀 지향적'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실시계획상 제2기 수도권 신도시 전체의 인구 밀도는 126인/ha로서 서울의 77% 정도 밖에 되지 않게 계획되었다.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인천 검단(164인/ha)과 위례(163인/ha)도 서울과 비슷한 정도이고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광교는 69인/ha로서 서울의 42% 수준이고, 성남 판교도 98인/ha로 서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Ⅷ-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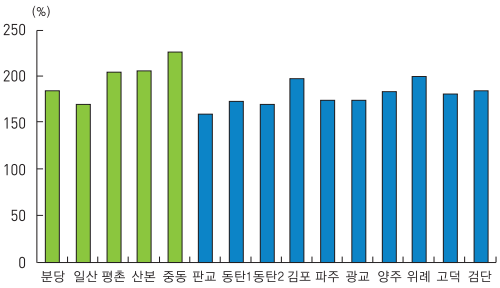
[그림 Ⅷ-10] 수도권 신도시 인구 밀도(실시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제1기 신도시 건설안내」, 201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2017.

또한 주택지의 경우만 봐도 제1기 신도시에 비해 제2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가 낮다. 부지면적 대비 주택연면적 비율, 즉 용적률을 보면 제1기 수도권 신도시는 169-226%인 반면, 제2기 신도시는 159-200%로 계획되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림 Ⅷ-11]에서 보면 제2기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 제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전반적으로 높고, 중동, 산본, 평촌 신도시의 경우 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당과 일산은 제2기 수도권 신도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Ⅷ-11]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실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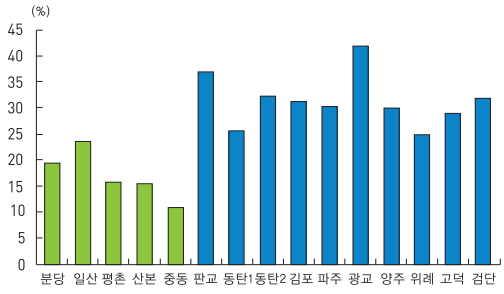


주: 1) 용적률=(주택연면적÷부지면적)×100.
출처: 국토교통부, 「제1기 신도시 건설안내」, 2015; 「신도시개발 편람·매뉴얼」, 2010.

반면 전체 개발 면적에서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제1기 신도시의 경우는 평균 19.0%에 불과하지만, 제2기 신도시의 경우는 31.2%에 달한다. [그림 Ⅷ-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기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 제2기 신도시의 녹지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광교와 성남 판교 신도시의 경우 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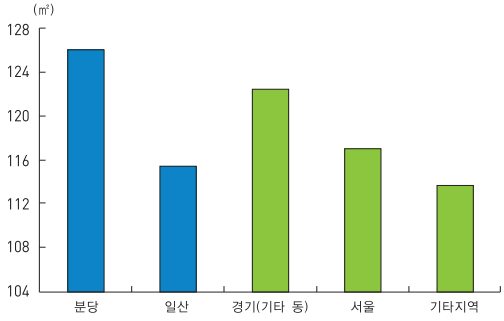
주거의 질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신도시 주택의 평균 주거면적을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면적과 비교해보았다(그림 Ⅷ-13).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대표 지구인 분당과 일산에 대해 각각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의 자료를 기초로 평균 주거면적을 산출해보면, 분당

[그림 Ⅷ-12] 수도권 신도시 녹지율(실시계획)



주: 1) 녹지율=(공원·녹지 면적÷전체 면적)×100.
출처: 국토교통부, 「신도시개발 편람·매뉴얼」, 2010.

[그림 Ⅷ-13] 신도시 주택 평균 주거면적,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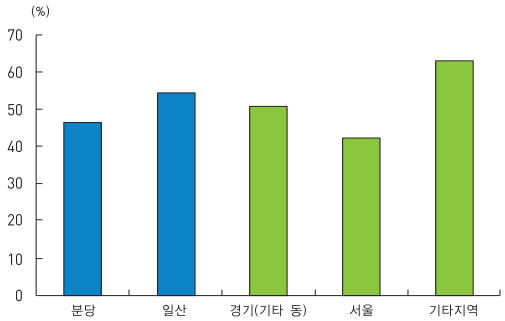


주: 1)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15.

은 126.0㎡이고 일산은 115.4㎡이다. 분당은 서울(117.0㎡)이나 경기도 다른 도시(122.5㎡)의 평균 면적보다 넓은 수준이지만, 일산은 서울보다 약간 작은 규모로 나타났다. 다만 일산이 낮게 나온 것은 자료에 포함된 지역이 신도시 경계 밖에 있는 기성시가지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당구가 신도시 주택의 질을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도시의 주택은 주거면적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주거의 질의 다른 측면은 주거의 안정성 측면으로서 이는 자기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즉 자가 거주율로서 측정할 수 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과 일산의 자가 거주율은 각각 46.4%와 54.2%로서 서울(42.1%)보다 모두 높지만, 경기도의 다른 도시(50.6%)에 비해서 분당은 낮지만 일산은 높다(그림 Ⅷ-14). 이는 신도시의 주거가 서울보다는 안정적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Ⅷ-14] 신도시 자가 거주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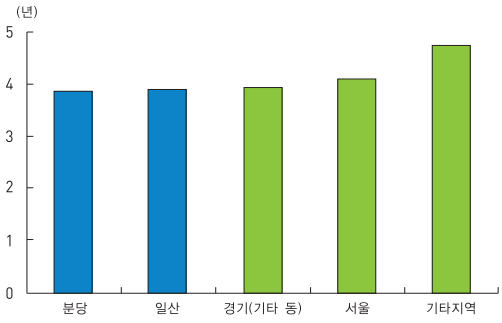


주: 1) 자가 거주율=(자가 거주 일반가구 수÷전체 일반가구 수)×100.
2)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15.

주거 안정성의 또 다른 측면은 거주기간 또는 거주의 이동성 측면으로 드러난다. 분당과 일산의 거주기간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그림 Ⅷ-15]와 같다. 분당과 일산의 주민들은 현 거주지에 평균적으로 각각 3.86년과 3.88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다른 도시(3.94년)나 서울(4.10년)보다 짧은 것이어서,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여타 지역보다 이동성이 다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Ⅷ-15] 신도시 거주자 평균 거주기간, 2015



주: 1)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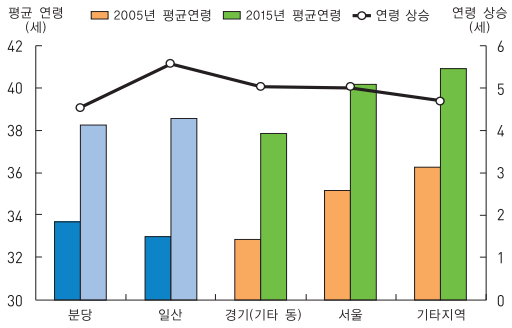
주거의 안정성이 높지 않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런데 신도시의 개발은 임대주택의 공급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22.9%에 해당하는 6만 1,589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한국토지공사, 1997a~e). 제2기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적극적이다.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1기 수도권 신도시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동탄2 지구도 아파트의 21.2%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비율이 가장 높은 판교의 경우 49.5%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2010).

신도시 거주문화

그렇다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1기 수도권 신도시의 대표 지구인 분당과 일산의 거주자들의 특징을 경기도, 서울 등과 비교해보자.

먼저 2005년과 2015년에 이들 두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그림 Ⅷ-16]과 같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농촌지역 또는 지방보다는 젊다. 2015년 기준 분당의 평균 연령은

[그림 Ⅷ-16] 신도시 거주자 평균 연령, 200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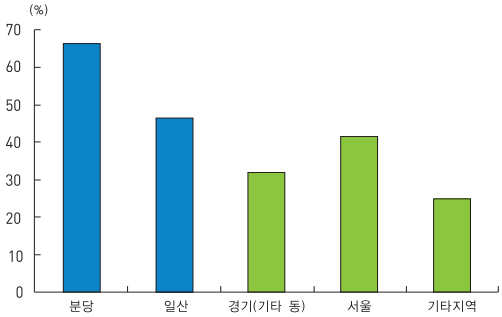


주: 1)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05, 2015.

38.2세, 일산은 38.5세로서 서울의 40.2세보다 젊다. 하지만 평균 37.9세인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보다는 높다. 선 그래프(우측 축)는 2005년과 2015년 사이 각 지역별 평균 연령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특이한 점은 일산의 고령화가 눈에 띄게 빠르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평균 연령이 분당의 33.7세보다 젊은 33.0세였지만 2015년에는 역전이 이뤄졌다. 이는 제1기 신도시 중 일부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더 이상 젊은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학력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그림 Ⅷ-17]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당과 일산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다른 경기도 도시지역이나 서울보다도 높다. 특히 분당은 무려 66.3%로서 서울의 1.6배에 해당한다.

[그림 Ⅷ-17] 신도시 거주자 학력수준, 2015



주: 1) 학력수준은 해당 지역 만 25세 이상의 인구 중 4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임.
2)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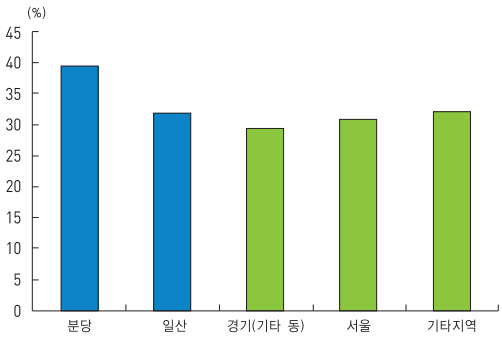
한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와 사회자본의 형성을 나타내는 주민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자. 분당과 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그림 Ⅷ-18-1]과 같다. 분당과 일산에 거주하는 성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각각 39.4%와 31.8%로서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사회자본 형성에서는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사회활동의 참여가 중요한데, 앞의 사회활동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친목,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 단체 참여를 포괄한다. 지역 내 활동만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단체'에 참여하는 비율만 비교해보면 [그림 Ⅷ-18-2]와 같다. 사회활동 참여 비율과 마찬가지로 분당은 2.5%로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일산도 1.8%로서 서울(1.5%)과 경기도 다른 시 지역(1.7%)보다는 높은 편이다.

신도시 주민들의 사회활동 참여, 특히 지역단체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 도시 공동체가 건강하고 사회자본의 형성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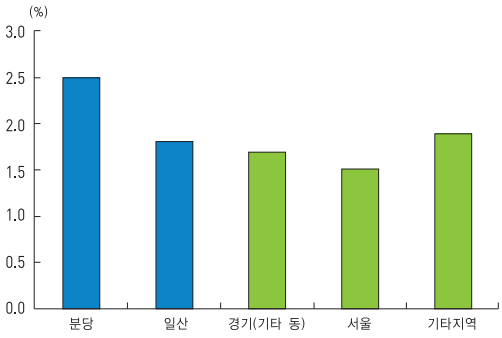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도시의 자족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신도시 거주자의 통근 실태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분당과 일산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통근자들의 비율은 각각 32.9%와 31.1%로서 경기도 다른 도시들의 서울 통근 비율인 20.4%보다 높다. 이는 이들 신도시가 자족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종속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토지주택연구원, 2010).

[그림 Ⅷ-18] 신도시 거주자 사회활동 참여율, 2015

1)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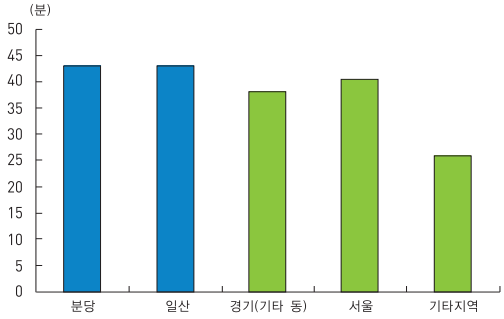
2) 지역단체활동 참여율



주: 1) 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만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단체 및 동호회(사회 모든 분야)에 한 번이라도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3) 지역단체활동 참여율은 만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에 한 번 이라도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4)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15.

통근시간의 측면을 봐도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통근자들이 경기도 다른 도시들의 통근자보다 평균적으로 통근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Ⅷ-19). 분당과 일산 거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각각 42.9분과 43.1분으로서 경기도

[그림 Ⅷ-19] 신도시 통근자의 평균 통근시간, 2015



주: 1) 통근자만을 대상으로 함.
2) 분당은 분당구, 일산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등을 포함하고, 경기(기타 동)는 분당과 일산을 제외한 경기도의 동부 지역임. 기타지역은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15.

다른 도시들의 통근시간인 38.0분보다 5분 가까이 길고, 서울시 통근자들의 통근시간인 40.4분보다도 3분 가까이 길다. 이러한 사실은 신도시의 경우 일자리의 측면에서 자족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신도시 전망

1980년대 말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3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꾸준히 개발해왔다. 제2기 수도권 신도시가 지금도 개발 중에 있고, 지방에서도 아산과 대전 도안 신도시가 함께 개발되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10개 혁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되어 신도시가 전국적

으로 분포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를 조성하여 30만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주거가 갖는 특성과 주거문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향후 우리나라 신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신도시의 쇠퇴 현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적어도 당분간 신도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거주하는 주요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수도권은 10% 넘는 인구가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질의 주택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고학력의 젊은 인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많은 신도시가 건설될수록 많은 인구가 이곳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3기 수도권 신도시와 같이 최근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는 주변의 인구를 흡인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제1기와 제2기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새로 생긴 제2기 신도시가 개발 밀도는 낮고 녹지가 풍부하여 주거의 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보다 주거의 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신도시는 최첨단의 주택과 양질의 도시, 편의시설을 갖춘 계획도시로서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양질의 인적자본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도 활발히 하여 커뮤니티의 질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접지역에 있는 기존의 오래된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과 구도심의 공동화 및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는 신도시 개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존의 신도시는 거주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여 모도시 등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제1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통근자들의 비율은 다소 줄어들고, 이들 신도시로 유입되는 통근자들의 비중도 다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토지주택연구원, 2010). 그러나 이들 도시는 건설된 지 30년이 다 되었지만 통근자들의 통근시간은 타 지역에 비해 길다. 광역교통망 개발로 통근시간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거기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의 신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강화한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일부 신도시들의 정체와 쇠퇴에 따라 신도시들의 분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들을 1960–1970년대에 많이 건설했던 일본 신도시들 중 일부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쇠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개발된 일본 도쿄도의 대표적 신도시인 다마(多摩) 신도시는 한때 우리나라 제1기 신도시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를 건설한지 40년이 다 되

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일자리 등 자족적 기능이 부족하여 도쿄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통근비가 높아 도시의 매력이 점점 더 떨어졌다. 더욱이 지바, 쓰쿠바, 요코하마 고호쿠 등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다마(多摩) 신도시의 정체와 쇠퇴는 가속화되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신도시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들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방의 구도시뿐만 아니라 제1기 신도시와 같이 건설된 지 오래된 신도시의 쇠퇴와 공동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오래되어 안정기에 접어든 신도시 중에는 일산과 같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신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1기 신도시들은 이미 건설된 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주택과 인프라가 노후화되었지만, 고층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개발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청년 세대들은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나 서울로 가고, 오래된 신도시는 과거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서 늙은 도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0.「신도시개발 편람·매뉴얼」.
국토연구원. 2012.「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형 신도시 개발」. 기획재정부.
토지주택연구원. 2010.「수도권 1기 신도시 도시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개발」. 토지주택연구원.
한국토지공사. 1997a.「분당 신도시 개발사」.
_____. 1997b.「일산 신도시 개발사」.
_____. 1997c.「산본 신도시 개발사」.
_____. 1997d.「평촌 신도시 개발사」.
_____. 1997e.「중동 신도시 개발사」.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서울대학교)

-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2008년 1만 7,937톤에서 2016년 1만 596톤으로 40.9% 감소하였다. 초미세먼지도 2011년 1만 1,988톤에서 2016년 9,748톤으로 18.7%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기 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차 생성원인 질소산화물 배출은 2008년 42만 8,204톤에서 2016년 45만 2,995톤으로 5.8% 증가하였다.
- 미세먼지 2차 생성원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유 소비량이 휘발유나 LPG에 비해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소비는 2008년 1억 162만 3,000배럴에서 2018년 1억 3,636만 7,000배럴로 34.2%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8.4%에서 55.0%로 증가하였다.
- 경유 차량의 주행거리는 최근 6년 동안 35% 가량 증가하였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유 차량은 총 997만여 대로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에 이른다. 특히 경유차는 화물차의 93.5%, 승합차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등록대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53만 대까지 늘어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 정책, 신차에 대한 배출저감 규제 강화, 교통수요 관리 등을 통해 미세먼저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가 도로교통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리한다. 이어서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인으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의 비중을 주행거리, 차량등록대수, 차령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개관한다.

미세먼지의 심각성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늘어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1–5월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_{2.5}$)의 평균 농도는 2015–2017년 기간 동안 세계보건기구

〈표 Ⅷ–15〉 겨울·봄철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및 발령 시간, 2015–2017

	2015	2016	2017
초미세먼지($PM_{2.5}$)			
농도($\mu g/m^3$)	28	29	30
주의보 · 경보 발령 횟수(회)	72	66	92
24시간 초과 주의보 · 경보 발령 횟수(회)	14	8	27
최고 발령 시간(시간)	65	50	72
미세먼지(PM_{10})			
주의보 · 경보 발령 횟수(회)	190	195	183
24시간 초과 주의보 · 경보 발령 횟수(회)	47	36	25
최고 발령 시간(시간)	73	59	74

주: 1) 1~5월을 기준으로 함.
출처: 이수형, 2018.

(WHO) 기준인 10㎍/㎥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횟수도 2015년 72회에서 2017년 92회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미세먼지(PM_{10})는 주의보나 경보 발령 횟수가 같은 기간 190회에서 183회로 소폭 감소하였다(표 Ⅷ-15).

도로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은 미세먼지(PM_{10})와 초미세먼지($PM_{2.5}$)를 직접 배출한다. 〈표 Ⅷ-16〉의 도로교통 부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미세먼지(PM_{10})는 2008년 1만 7,937톤에서 2016년 1만 596톤으로 40.9% 감소하였다.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도 2011년 1만 1,988톤에서 2016년 9,748톤으로 18.7%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기 중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_x)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_x)의 경우 2008년 42만 8,204톤에서 2016년 45만 2,995톤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2차 생성원인 황산화물(SO_x)은 2008년 690톤에서 2016년 231톤으로 66.5%나 감소하였으나, 전체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도로교통 부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비중을 살펴보면 〈표 Ⅷ-17〉과 같다. 2016년 기준 미세먼지(PM_{10}) 발생량 중에서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이며 초미세먼지($PM_{2.5}$)는 9.7%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_x)은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황산화물(SO_x)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미미하다.

〈표 Ⅷ-16〉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2008-2016

(톤)

연도	PM_{10}	$PM_{2.5}$	NO_x	SO_x
2008	17,937	-	428,204	690
2009	15,397	-	368,048	845
2010	15,255	-	382,226	798
2011	13,030	11,988	322,307	366
2012	12,969	11,932	345,666	211
2013	12,103	11,135	335,721	189
2014	10,019	9,218	361,230	183
2015	9,583	8,817	369,585	209
2016	10,596	9,748	452,995	231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https://airemiss.nier.go.kr/mbshome/mbs/airemiss/index.do).

〈표 Ⅷ-17〉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별 구성비율, 2016

(%)

배출원	PM_{10}	$PM_{2.5}$	NO_x	SO_x
에너지산업 연소	1.7	3.2	11.7	25.5
비산업 연소	0.6	1.0	6.9	6.7
제조업 연소	30.8	36.7	14.0	24.1
생산공정	2.9	5.2	4.5	31.4
에너지수송 및 저장	0.0	0.0	0.0	0.0
유기용제 사용	0.0	0.0	0.0	0.0
도로이동오염원	4.5	9.7	36.3	0.1
비도로이동오염원	6.7	14.3	24.8	11.5
폐기물처리	0.1	0.3	1.1	0.6
농업	0.0	0.0	0.0	0.0
기타 면오염원	0.1	0.3	0.0	0.0
비산먼지	46.2	17.2	0.0	0.0
생물성 연소	6.3	12.1	0.7	0.0

주: 1) 비도로이동오염원은 항공, 선박, 건설기계 등 배출 오염원.
2)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 (https://airemiss.nier.go.kr/mbshome/mbs/airemiss/index.do).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은 미세먼지(PM_{10})의 경우 비산(飛散)먼지 부문(46.2%)과 제조업 부문(30.8%)이며, 초미세먼지($PM_{2.5}$)는 제조업 부문(36.7%)과 비산먼지 부문(17.2%)이다.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도로교통 부문의 배출 기여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대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수도권의 경우 2014년 기준 초미세먼지($PM_{2.5}$) 배출 기여도 1위는 경유차(27%)이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경유차의 비중은 11%로 사업장(38%), 건설기계(16%), 발전소(15%) 등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관계부처합동, 2017).

경유차의 높은 미세먼지 배출계수

경유차는 휘발유 및 LPG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_x)을 훨씬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차종별, 사용 연료별, 주행속도, 도로주행여건에 따라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환경부가 2009년에 고시한 차종 및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Ⅷ-18〉을 보면 휘발유 및 LPG 차량은 사실상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으며, 경유 차량은 연식에 따라 배출량에 차이가 있다. 가령 2012년 이후 차량은 km당 0.005g을 배출하고 2009-2011년 차량은 km당 0.025g을 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최근 생산된 경유 차량일수록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오염원 배출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표 Ⅷ-18〉 차량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지수 산정 기준치

유종	적용연도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휘발유 및 가스	2009-2011년	CO: 1.31g/km HC: 0.034g/km NO_x: 0.044g/km	CVS-75
경유	2009-2011년	CO: 0.5g/km HC+NO_x: 0.3g/km PM: 0.025g/km	ECE 15 + EUDC
	2012년 이후	CO: 0.5g/km HC+NO_x: 0.23g/km PM: 0.005g/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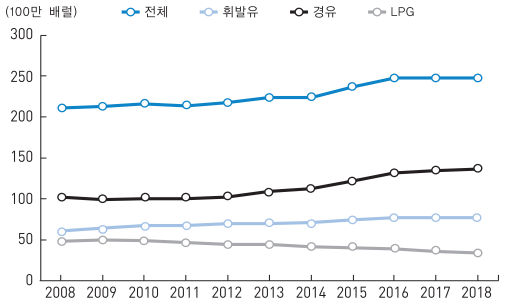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9-250호, 2009. 10. 9.

도로교통 부문 경유 소비량 증가와 비중 확대

도로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_{10})와 초미세먼지($PM_{2.5}$)의 총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생성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유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Ⅷ-20]의 한국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도로교통 부문의 유류 소비량은 2억 1,016만 배럴에서 2억 4,772만 배럴로 11년 동안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종별로는 경유 소비가 34.2%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는 27.5% 증가했고 LPG는 오히려 2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료별 사용량 비중이 휘발유는 2008년 29.0%에서 2018

년 31.3%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경유의 비중은 48.4%에서 55.0%로 늘어났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부문에서 경유 소비량은 3.2%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림 Ⅷ-20] 도로교통 부문 유류 소비량,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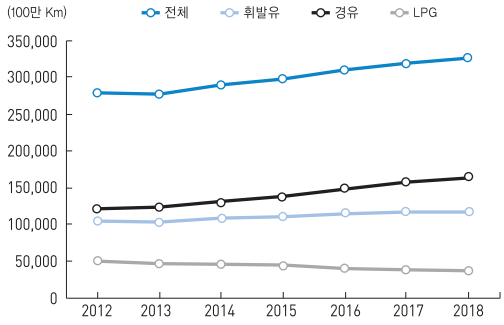
출처: 한국석유공사(http://www.petronet.co.kr/).

경유 차량의 주행거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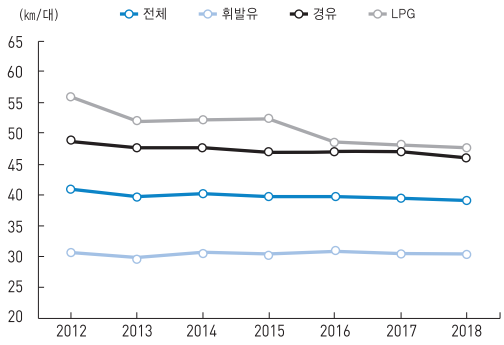
차량의 유종별 연간 총주행거리 역시 [그림 Ⅷ-2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유 차량의 주행거리는 최근 6년 동안 35.5% 증가한 반면 휘발유 차량은 11.7% 증가하였고 LPG 차량은 27.2% 감소하였다. 다만 차량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는 감소하고 있다. [그림 Ⅷ-21-2]에서 승용차의 비중이 높은 휘발유 차량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2012년 30.9km에서 2018년 30.5km로 큰 차이가 없지만 LPG 차량은 55.9km에서 47.6km로 낮아졌다. 경유 차량은 2012년 48.8km에서 2018년 46.1km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자동차의 총주행거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차량등록대수도 크게 증가하여 차량 1대당 총주행거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Ⅷ-21] 차량 유종별 주행거리, 2012-2018

1) 연간 총주행거리



2) 차량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



주: 1) '전체'에는 '기타 연료'가 포함됨.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주행거리통계」, 각 연도.

화물차의 높은 경유차 비중과 노후화

우리나라의 경유 차량은 2019년 6월 기준 총 997만여 대로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이른다. 특히 경유차는 화물차의 93.5%, 승합차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 경유

차가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7% 수준이다(표 Ⅷ-19).

〈표 Ⅷ-19〉 차종별 경유차 등록대수와 비율, 2019. 6.

차종	경유차 총 등록대수 (1,000대)	전체 자동차 총 등록대수 (1,000대)	경유차 비율 (%)
전체	9,975	23,444	42.5
승용차	5,808	18,918	30.7
승합차	703	829	84.9
화물차	3,372	3,604	93.5
특수차	91	93	98.0

주: 1) 경유차 비율=(경유차 총 등록대수÷전체 자동차 총 등록대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9. 6.

화물차는 노후화 비율이 높다. 〈표 Ⅷ-20〉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차령이 15년 이상인 화물차 비중은 20.6%로 다른 차종에 비해 가장 높으며 차량 대수도 74만여 대에 이른다. 승합차의 15년 이상 차량 비중은 15.6%이며 13만여 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승용차는 15년 이상 된 차량 대수가 156만여 대이지만 비중은 8.2%에 그친다. 노후 차량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므로 이들 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높은 경유 화물차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가령 노후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차령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업용 화물차의 비중은 전체 화물차의 11.4%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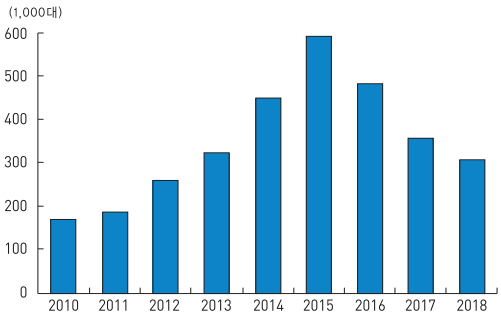
〈표 Ⅷ-20〉 차종별 노후 차량 비율, 2019. 6.

차종	차량 대수(1,000대)		노후 차량 비율(%)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전체	2,445	6,431	10.4	27.4
승용차	1,557	4,796	8.2	25.4
승합차	129	264	15.6	31.9
화물차	744	1,341	20.6	37.2
특수차	14	30	15.2	32.0

주: 1) 노후 차량 비율=(해당 차종 및 차령 등록대수÷해당 차종 전체 등록대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9. 6.

그러나 승용차 부문에서 경유차 등록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유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Ⅷ-22]에서 경유 승용차 순(純) 등록대수는 2010년 17만 대 수준에서 2015년 59만 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이후 2018년에는 3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경유 승용차의 신규 판매는 감소한 반면 폐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Ⅷ-22] 경유 승용차 순(純) 등록대수의 변화, 2010-2018



주: 1) 매년 12월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12월.

친환경 차량 보급의 확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친환경 차량

의 판매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표 Ⅷ-21〉에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의 등록대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53만 대까지 늘어났다. 특히 2019년 5월 기준으로 1년 동안 신규로 등록된 전기차는 4만 8,000대가 넘어설 정도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등록대수가 2.4배 늘어났으며 전기차는 3배 정도 늘었다.

〈표 Ⅷ-21〉 친환경 차량 신규 등록대수, 2014-2019

(대)

연도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합계
2014	29,530	11,856	-	41,386
2015	35,515	19,655	18	55,188
2016	45,911	18,552	54	64,517
2017	66,291	29,152	65	95,508
2018	90,899	34,825	173	125,897
2019	99,550	48,459	1,065	149,074
누적대수	367,696	162,499	1,375	531,570

주: 1) 매년 5월 기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각 연도.

한편 〈표 Ⅷ-22〉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차량의 대부분은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기준 전체 친환경 승용차 중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비중은 각각 69.2%와 30.5%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승합차의 경우 전기차 비중이 44.3%로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화물차도 전기차가 78대나 등록되었다.

〈표 Ⅷ-22〉 차종별 친환경차 대수, 2019. 5.

(대)

차종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합계
승용차	367,691	162,175	1,373	531,239
승합차	301	237	2	535
화물차	-	78	-	78
특수차	-	9	-	9

주: 1) 2019년 5월 기준 누적 대수임.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9.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

정부는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먼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늘려가고 있다. 또한 2019년 초에는 장애인 차량 및 택시에게만 허용된 LPG 차량 구입을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 구입 및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신차에 대한 배출량 기준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는 서울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서울 도심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유차의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서울시, 2019).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7.「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_____. 2018.「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서울시 보도자료. 2019.4.6.「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생활 속에서 촘촘히…10대 그물망대책」.
이수형. 2018.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 분야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6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n Social Trends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Ⅸ 환 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70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김정훈 | 서울대학교 279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이원재 | 한국과학기술원 286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세먼지(PM_{10})와 초미세먼지($PM_{2.5}$)의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17년에 각각 25.1%, 8.6%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뚜렷하게 상승하였으며,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정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환경소음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환경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밤 시간대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2012년부터 떨어지다가 2018년에 다소 높아졌는데, 대기(영역별), 도시(지역별), 청년층(연령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환경영역별, 지역별, 연령별로 환경상태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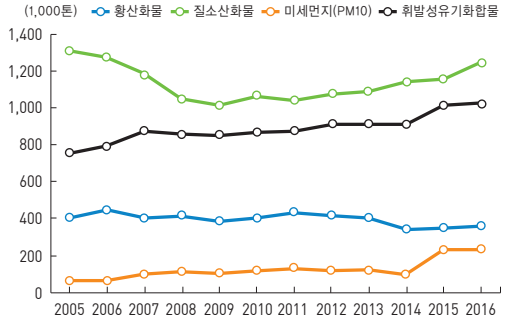
대기환경

대기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데,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있다.

산성비를 야기하는 황산화물은 정부의 저황유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에 비해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 산성화 물질이면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은 2000년대 후반까지 배출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_{10})의 배출량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특히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Ⅸ-1).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

[그림 Ⅸ-1]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05-2016



주: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생물성연소로 인한 배출량을 제외하였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꾸준히 개선되어 2010년 이후에는 주요 대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PM_{10})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2007년의 이산화질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69.0% 수준이었는데, 2016년에는 처음으로 80%대를 넘어섰다. 미세먼지(PM_{10})의 경우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7년 24.4%에서 2017년 79.9%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여전히 30%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표 Ⅸ-1). 2015년에 전국 단위의 공식적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 2017년 연평균 및 일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은 각각 60.9%와 8.6%로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표 Ⅸ-1〉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달성률, 2007-2017

(%)

연도	이산화질소(NO_2)		미세먼지(PM_{10})	
	연평균	일평균	연평균	일평균
2007	69.0	64.6	24.4	3.1
2008	63.5	63.9	28.7	1.3
2009	70.9	63.5	40.2	2.6
2010	71.5	62.6	48.1	3.4
2011	72.8	68.2	55.6	1.7
2012	78.9	72.9	76.8	38.6
2013	73.9	66.0	62.5	7.9
2014	71.9	65.6	61.2	8.2
2015	76.9	71.8	65.6	10.7
2016	82.3	82.7	71.6	10.3
2017	85.8	82.0	79.9	25.1

주: 1) 환경기준 달성률은 전국 유효측정소 중 환경기준을 100% 달성한 측정소의 비율임.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200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권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초미세먼지($PM_{2.5}$)의 건강 피해가 부각되면서, 2015년부터는 기존의 미세먼지(PM_{10}) 외에 초미세먼지($PM_{2.5}$)를 포함해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경보기준이 마련되었다. 2017년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PM_{10}) 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188회와 17회가 발령되었는데, 주의보와 경보 모두 경기, 인천, 경북,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 경보는 1회만 발령되었으며, 주의보는 미세먼지 주의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경북, 강원 등에서 많이 발령되었다(표 Ⅸ-2).

〈표 Ⅸ-2〉 지역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 및 횟수, 2017

지역	미세먼지(PM_{10})				초미세먼지($PM_{2.5}$)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일수 (일)	횟수 (회)
전체	25	188	4	17	42	128	1	1
서울	10	6	-	-	10	5	-	-
부산	5	12	-	-	6	4	-	-
대구	4	3	-	-	4	2	-	-
인천	14	25	1	4	17	19	-	-
광주	8	5	-	-	12	7	-	-
대전	3	9	3	2	2	2	-	-
울산	2	2	-	-	2	2	-	-
세종	6	6	1	1	5	3		
경기	22	40	1	4	23	30	-	-
강원	18	23	1	2	21	17	1	1
충북	10	11	-	-	11	10	-	-
충남	8	6	1	1	2	1	-	-
전북	9	4	-	-	10	6	-	-
전남	4	7	2	1	-	-	-	-
경북	5	23	2	2	18	18	-	-
경남	4	3	-	-	-	-	-	-
제주	4	3	-	-	3	2	-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7」,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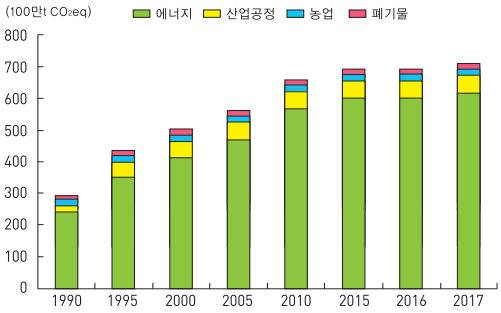
기후변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그 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80%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OECD 회원국 중 6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1년부터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었다. 1990–20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25.1% 증가하였으나(연평균 증가율 4.1%), 2010–2017년 동안에는 7.8%만 증가하였다(연평균 증가율 1.1%).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0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다(그림 Ⅸ-2).

[그림 Ⅸ-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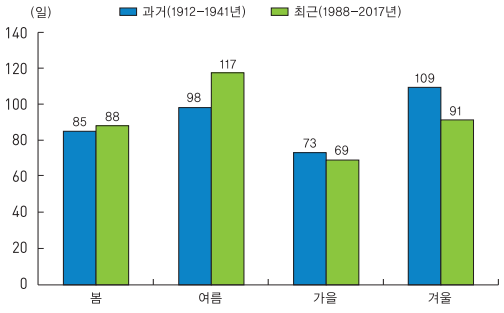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9.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외에도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의 예가 기온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30년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 보다 1.4℃ 상승하였으며, 이를 반영하듯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그림 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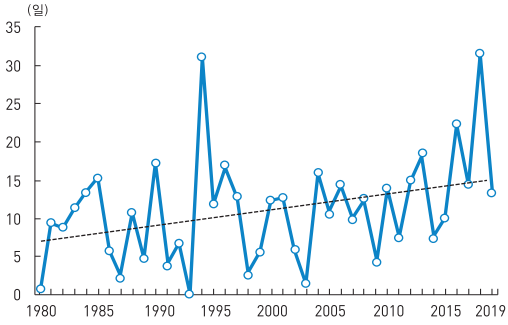
[그림 Ⅸ-3] 계절길이 변화, 1912-2017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

특히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최고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기온이 25℃ 이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Ⅸ-4). 열대야 일수도 1980-1989년 평균 3.5일에서 2009-2018년에는 평균 9.6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Ⅸ-4] 폭염 일수, 1980-2019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각 연도.

물환경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요인은 통상 생활하수, 분뇨, 산업폐수 및 축산분뇨로 분류된다. 생활하수 발생량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분뇨 발생량은 2014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통계가 안정화되는 2007년부터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일일 500만㎥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2년에 급증한 후 일일 17만㎥ 대에 머물러 있다(표 Ⅸ-3).

〈표 Ⅸ-3〉 하수, 분뇨, 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2007-2016

(1,000㎥/일)

연도	하수	분뇨	산업폐수	가축분뇨
2007	16,745	45	5,352	154
2008	17,113	46	4,557	128
2009	16,681	49	4,622	136
2010	16,111	46	5,229	136
2011	18,661	42	5,269	129
2012	15,722	42	5,662	177
2013	15,148	38	5,299	173
2014	14,401	36	4,966	176
2015	14,975	38	4,951	173
2016	14,393	41	4,621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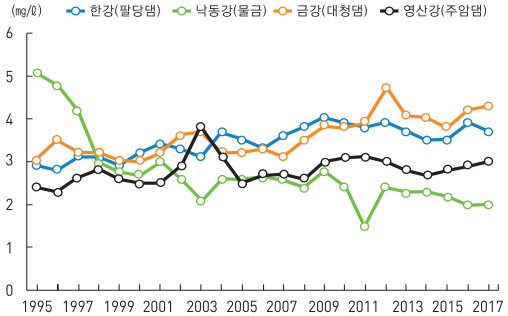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2019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2019.

지난 1991년과 1994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ℓ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ℓ에서 2017년 2.0㎎/ℓ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주암댐)의 COD는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에 더 악화되었다(그림 Ⅸ-5). 총인 농도의 경우에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낙동강(물금)이 2010년부터 뚜렷하게 개선되어 2017년에는 0.033㎎/ℓ로 좋음 수준에 달했다.

[그림 Ⅸ-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7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ℓ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ℓ 이하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2013년 0.94㎏에서 2017년 1.01㎏으로 증가).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Ⅸ-4).

생활폐기물은 물질성상에 따라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2017년에 각각 일일 9,345톤 및 8,164톤이 배출된다. 그런데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양보다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유리류나 금속류의 경우에는 분리배출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표 Ⅸ-5).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생활폐기

〈표 Ⅸ-4〉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7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487
2013	48,728	148,443	183,538	12,408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2
2015	51,247	155,305	198,260	13,402
2016	53,772	162,129	199,444	13,783
2017	53,490	164,874	196,262	14,905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표 Ⅸ-5〉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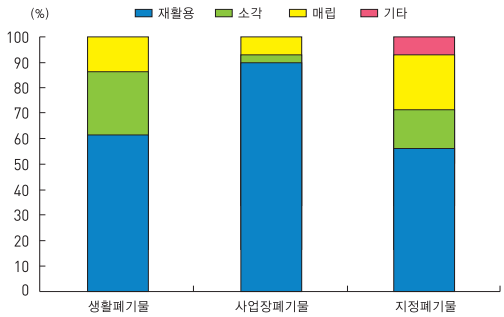
(톤/일)

연도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2007	5,586	5,476	405	2,280	2,859	2,378	570	2,455
2008	5,136	5,250	390	2,340	2,703	2,395	439	2,679
2009	4,915	5,164	425	2,264	2,817	2,336	376	2,998
2010	4,783	4,810	411	2,035	2,641	2,234	337	2,793
2011	4,940	4,301	430	1,908	2,644	2,338	330	2,706
2012	5,247	4,486	444	1,866	3,010	2,664	335	2,973
2013	5,383	4,128	499	1,797	3,127	2,574	346	2,890
2014	5,410	4,485	536	1,792	3,370	2,667	392	2,681
2015	5,445	4,514	623	1,693	3,739	2,654	448	2,440
2016	5,632	4,603	561	1,663	4,312	2,960	434	2,487
2017	5,194	4,151	608	1,572	4,601	3,563	399	2,161

주: 1) 종량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해 배출된 것을 의미하며,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것을 의미함.
출처: 환경부, 「2017 환경통계연감」, 2018.

물의 61.6%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4.9%)되거나 매립(13.5%)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90.1%)되며 소각(3.0%) 또는 매립(6.9%)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56.2%)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5.1%) 또는 매립(21.8%)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Ⅸ-6).

[그림 Ⅸ-6]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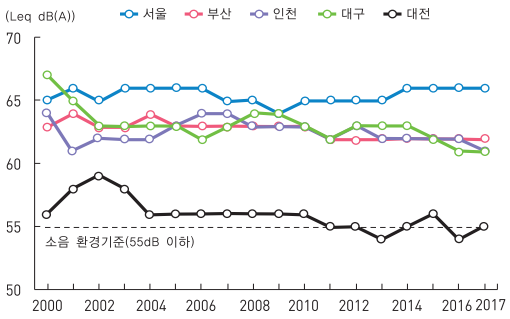


주: 1)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출처: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그림 Ⅸ-7).

[그림 Ⅸ-7]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7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분쟁조정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약 85%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층간소음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진동의 비중이 85.8%이다(표 Ⅸ-6). 그리고 소음·진동 분쟁의 주된 원인은 층간소음이 아니라 공사장 소음·진동이다(전체 소음·진동 분쟁의 70~80%를 차지).

〈표 Ⅸ-6〉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1991-2018

(건)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	기타
1991-2001	366	52	35	0	9
2002	229	26	4	0	4
2003	264	19	8	0	1
2004	206	8	3	5	1
2005	151	11	5	6	1
2006	150	8	3	1	3
2007	142	7	3	15	5
2008	173	8	3	22	3
2009	241	13	2	21	6
2010	150	3	6	12	5
2011	163	7	3	6	5
2012	214	14	6	17	4
2013	154	12	3	19	3
2014	203	5	4	18	7
2015	177	10	2	13	9
2016	122	10	2	25	3
2017	136	3	1	18	2
2018	208	2	4	16	8

주: 1)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 · 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통계자료」, 2018.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2.82%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 동 비율은 2011년에 2.1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1.99%로 하락하였다(표 Ⅸ-7).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

〈표 Ⅸ-7〉 환경분야 예산, 1995-2017

연도	예산액(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1995	17,801	2.39
1997	27,747	2.82
2000	30,581	2.44
2005	35,578	2.12
2006	33,978	1.94
2007	32,837	1.86
2008	36,568	1.87
2009	42,101	1.94
2010	46,740	2.07
2011	49,741	2.11
2012	51,496	2.07
2013	54,458	2.07
2014	56,119	2.04
2015	59,389	2.07
2016	59,695	2.02
2017	60,232	1.99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표 Ⅸ-8〉 환경보호지출, 2004-2016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55	15.5	38.6	26.4	19.5
2005	24,017	2.6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74	17.4	38.4	24.7	19.6
2007	28,675	2.75	18.9	37.7	23.9	19.5
2008	30,188	2.73	19.0	37.4	24.3	19.3
2009	32,629	2.83	17.2	37.9	24.6	20.3
2010	32,880	2.60	17.4	36.8	25.8	20.0
2011	33,784	2.54	17.3	36.5	26.4	19.8
2012	34,547	2.51	18.0	38.8	23.0	20.2
2013	35,169	2.46	16.6	39.2	23.3	20.8
2014	35,586	2.39	17.2	39.9	22.6	20.3
2015	37,025	2.37	17.3	40.8	22.4	19.5
2016	39,931	2.43	17.2	41.5	21.7	19.6

주: 1) 기타에는 토양 ·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 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8).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의 지출은 기업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 2.83%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6년에 소폭 상승하였다(표 Ⅸ-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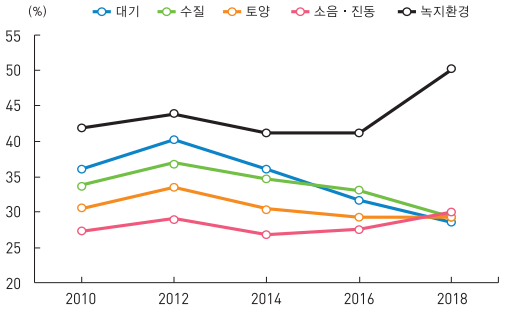
환경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 예산 비중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만족도

환경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인 만큼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객관적인 측정 수치 못지않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의 5개 체감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영역별로 만족도(거주지역의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

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변화 모습에 차이가 있다. 대기, 수질, 토양의 경우 2012년을 정점으로 만족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음·진동과 녹지환경은 2018년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만족도 수준 자체는 녹지환경에 대해서가 항상 가장 높다. 그리고 2012년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던 대기 영역은 2018년에는 최하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Ⅸ-8).

[그림 Ⅸ-8]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한편, 5개 영역을 종합한 전반적 만족도(5개 영역 만족도의 단순 평균)는 2010년 33.9%에서 2012년 36.7%로 올라갔다가 2014년 33.9%, 2016년 32.6%로 떨어졌다가 2018년에 33.5%로 다시 올라갔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농어촌(읍면부) 지역의 만족도가 도시(동부) 지역의 만족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성별로는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의 만족도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표 Ⅸ-9).

〈표 Ⅸ-9〉 지역 및 성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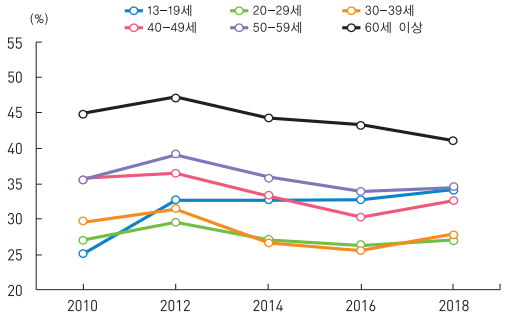
(%)

연도	전반적 만족도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2010	33.9	29.5	54.1	34.3	33.5
2012	36.7	32.0	58.5	36.9	36.4
2014	33.9	29.4	55.6	34.4	33.5
2016	32.6	29.2	49.0	33.1	32.1
2018	33.5	29.9	50.2	34.0	33.1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녹지환경 등 5개 영역별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연령별 전반적 만족도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타 연령층에 비해 확연히 높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와 30대인데, 2018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만족도는 각각 27.2%와 27.8%로 60대 이상의 만족도 41.0%에 비해 10%p 이상 차이가 난다(그림 Ⅸ-9).

[그림 Ⅸ-9] 연령집단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1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 진동, 녹지환경 등 5개 영역별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김정훈 (서울대학교)

- 국민의 90% 이상은 10년 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미세먼지 관련 뉴스도 2010년 3,400여 회에서 2019년 39만여 회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 우리나라의 연평균 미세먼지(PM_{10}) 농도는 2001년에 60μg/m^3대 수준에서 2018년에 40μg/m^3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초미세먼지($PM_{2.5}$)의 연평균 농도도 2015년 약 26μg/m^3에서 2018년 약 23μg/m^3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그러나 초미세먼지($PM_{2.5}$)의 일평균 농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76μg/m^3이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파악된 동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_x) 농도는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
- 국내 질소산화물(NO_x)의 배출량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한반도 주변의 풍속은 1980년대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풍속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이후부터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정체되는 대기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겨울철과 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미세먼지(PM_{10}) 및 초미세먼지($PM_{2.5}$)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이슈는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환경문제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과 함께 건강에 끼치는 위해가 알려지면서 우울한 전망이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최근에 문제화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관측 및 최근 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PM_{10}) 및 초미세먼지($PM_{2.5}$) 발생 현황과 추이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특히, 기상학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및 강도 변화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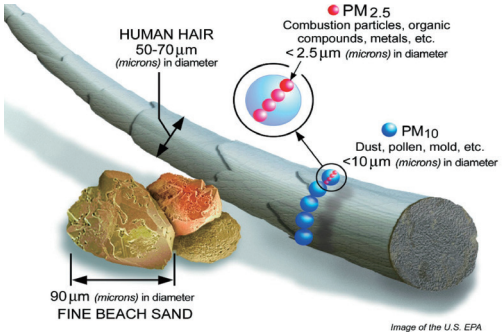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와 이슈

지구에 존재하는 공기는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례로 인간의 생존 기준에서 식량(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50일까지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5일까지도 살 수 있지만, 공기를 마시지 않으

면 겨우 5분 정도까지만 버틸 수 있다. 하루 평균 성인이 소비하는 공기 섭취량은 약 13.5kg으로 음식 섭취량 1.2kg과 물 섭취량 2kg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양이다. 따라서 인간 활동에서 공기의 존재는 가장 중요한 생존 필수 요소라 하겠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 알갱이들이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시정을 악화시키며, 인간 및 생물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머리카락 크기인 50–70㎛보다 10배 또는 20배 이상 작은 매우 작은 크기이며, 그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10㎛보다 작은 크기; PM_{10}) 또는 초미세먼지(2.5㎛ 보다 작은 크기; $PM_{2.5}$)로 구분된다(그림 Ⅸ–10).

[그림 Ⅸ–10]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크기 비교



출처: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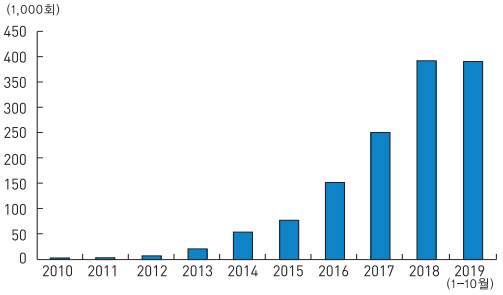
미세먼지의 인위적 발생 원인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는 불완전 연소에 의한 것이다. 주로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SO_x)과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_x)이 대표적인 인위적 초미세먼지들이다. 이들의 크기는 기관지나 호흡기에서 필터가 가능한 크기들이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 및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되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의 크기가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노약자,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 성인 및 건강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겨울철과 봄철만 되면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은 일반 국민에게는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방송 및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그림 Ⅸ–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관련 뉴스 횟수가 최근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종합하자면 미세먼지 이슈는 비교적 최근에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그 위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Ⅸ-11] 미세먼지 관련 뉴스 횟수, 2010-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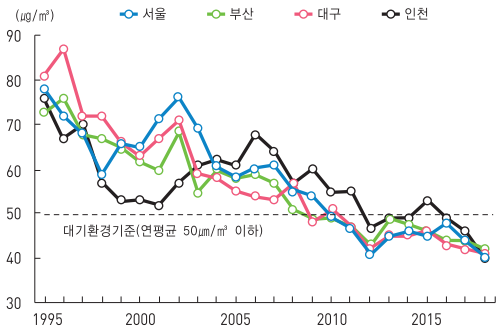


주: 1) '미세먼지'를 키워드로 뉴스 검색한 결과임.
2) 2010-2018년은 연간 집계결과이며, 2019년은 1-10월말까지 집계한 결과임.
출처: NAVER(https://www.naver.com/).

미세먼지 발생 현황

[그림 Ⅸ-12]는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요 관측 지점들(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 관측한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된 값에서 알 수 있듯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분의 도시에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2년 76μg/m³에 이르던 연평균 농도는 2010년 대기환경기준(연평균 50μg/m³이하) 이하로 낮아진 후 2018년 현재까지 40μg/m³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도 2010년을 기점으로 40-50μg/m³대 수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정책이 적절히 잘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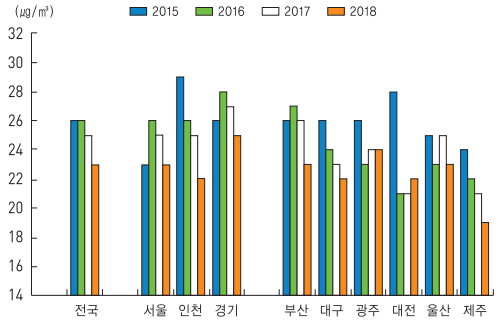
[그림 Ⅸ-12]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18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초미세먼지($PM_{2.5}$)에 대한 관측은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측을 시작했다. [그림 Ⅸ-13]은 관측을 시작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도시들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부산, 경기 등은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크게 증가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Ⅸ-13] 주요 도시별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18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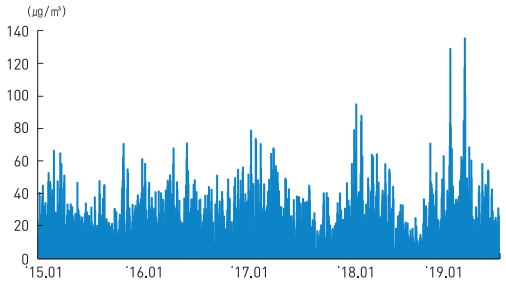
이상의 미세먼지(PM_{10})와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의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우리 사회의 미세먼지 이슈화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일반인들은 최근 들어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이슈가 심각한 수준과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이슈 증가 경향과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의 감소 경향 사이의 간극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앞서 살펴본 초미세먼지($PM_{2.5}$)의 연평균 농도 변화가 아니라 일평균 농도 변화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Ⅸ-14]는 서울시의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초미세먼지($PM_{2.5}$) 일평균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Ⅸ-14]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의 '매우 나쁨' 수준인 76μg/m³를 넘는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는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림 Ⅸ-13]에서 살펴본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에 도달하는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Ⅸ-14]에서와 같이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습이 최근에 점차 빈번해 지는 경향과 함께 이러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그림 Ⅸ-11]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언론에 노출되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Ⅸ-14] 서울시 초미세먼지($PM_{2.5}$) 일평균 농도, 2015-20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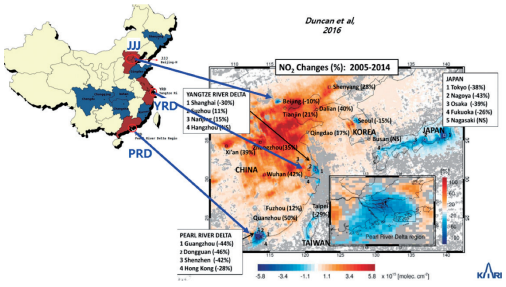
주: 1) 도시 대기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각 연도.

정리하면 2001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미세먼지(PM_{10})의 연평균 농도 변화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5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초미세먼지($PM_{2.5}$)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6μg/m³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일급 발암 물질로 정의 내렸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미세먼지 현황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발 미세먼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도 중국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과 비슷하게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림 Ⅸ-15]는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한 동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_x)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2005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2005년보다 2014년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중국 중북부 산업도시 지역들을 중심으로 높게(붉은색 계통)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대도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그 지역에 국한되어 감소했다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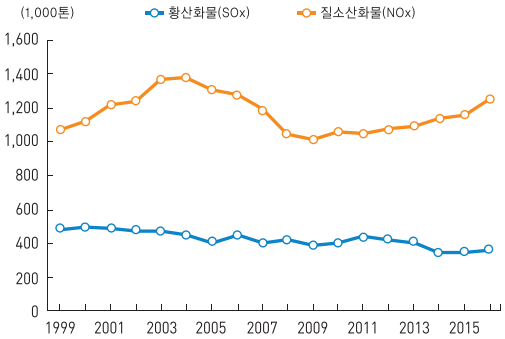
[그림 Ⅸ-15] 동아시아 지역의 질소산화물(NO_x) 농도 변화, 2005-2014



출처: Duncan et al., 2016.

[그림 Ⅸ-16]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황산화물(SO_x) 및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질소산화물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추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Ⅸ-16] 황산화물(SO_x) 및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 1999-2016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각 연도.

특히 환경부의 자동차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험 결과를 보면, 입자상물질(PM) 배출량은 휘발유차나 경유차 모두 1㎞당 0.002g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은 도로주행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경유차가 0.560g/km, 휘발유차가 0.020g/km로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약 28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Ⅸ-10). 이러한 결과에 비춰 볼 때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표 Ⅸ-10〉 자동차 유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험 결과, 2009, 2015

(g/km)

배출가스	LPG차	경유차	휘발유차
입자상물질(PM)			
실내 시험	0.0020	0.0021	0.0018
질소산화물(NOx)			
실내 시험	0.005	0.036	0.011
실외 도로시험	0.006	0.560	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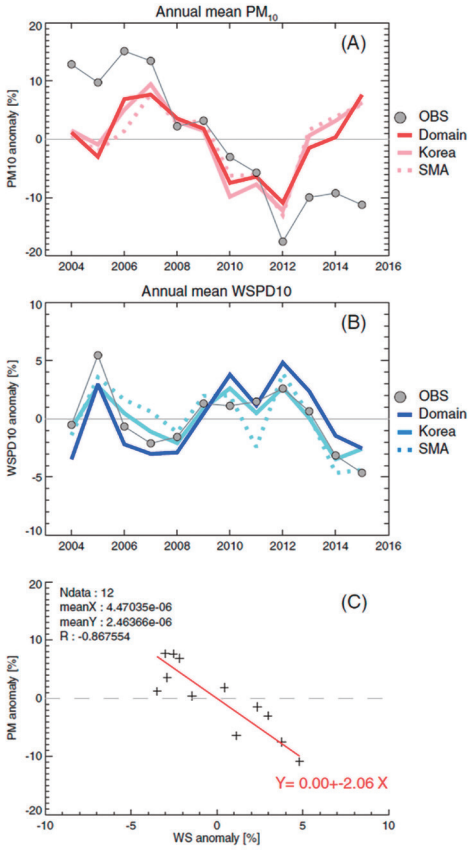
주: 1) 입자상물질(PM) 배출량은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로 차종별 3대 평균값임.
2)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휘발유차 9종, 경유차 32종, LPG차 4종 평균값임.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경유차 감축 적극 추진」, 보도 설명자료, 2019. 1. 11.

한반도 주변 기상학적 환경 변화

앞서 [그림 Ⅸ-16]에서 보았듯이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 국내 황산화물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Ⅸ-14]에서처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기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Ⅸ-17]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미세먼지(PM_{10}) 발생(A)과 풍속의 변화(B)를 기후학적 평균(30년)으로부터의 편차로 나타냈고, 이를 통한 둘 사이의 상관관계(C)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를 통해 지표면 풍속이 감소할수록 미세먼지 소산과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Ⅸ-18]은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북반구 및 동아시아 영역에서의 관측된 지표면 풍속에 대한 변화를 1979년부터 시작해 비교적 최근인 2008년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살펴본 것으로,

[그림 Ⅸ-17] 미세먼지와 풍속의 상관관계, 200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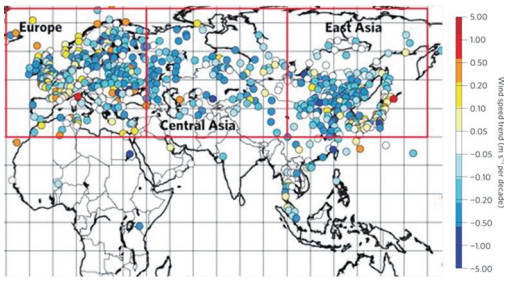


출처: Kim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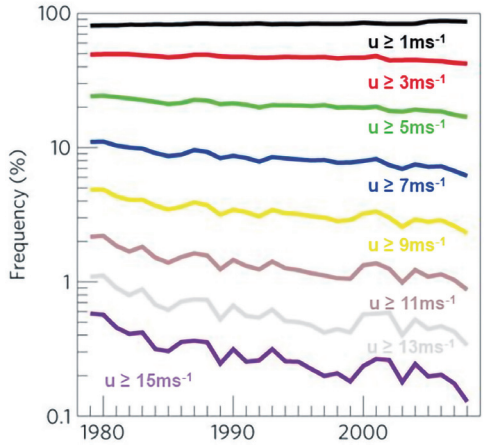
북반구에서는 주로 동아시아 영역에서 지표면 풍속의 감소 경향이 잘 나타났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동서바람의 풍속의 강도(u)가 강해지면 감소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지표 근처에서 풍속의 감소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정체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Ⅸ-18] 북반구 및 동아시아 영역 지표면 풍속 변화 경향, 1979-2008

1) 북반구



2) 동아시아 영역 풍속 강도별 발생 빈도 변화



출처: Vautard et al., 2010.

맺음말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 및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인식과 객관적인 관측 자료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수치와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조금이나마 규명하고자 미세먼지 연평균, 일평균 변화량 및 미세먼지 국내외 배출원 차이 및 환경적(기상학적) 요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원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09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한반도 주변의 풍속이 약화됨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잘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써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인 진단 및 전망을 위한 기상학적, 기후학적인 연구들이 더욱 더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
Duncan et al., 2016. "A space-based, hight resolution view of notable changes in urban NOx pollution around the world (2005 - 2014)",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Kim et al., 2017. "Recent increase of surfac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Scientific Reports,* 7(1410).
Vautard et al., 2010. "Northern hemisphere atmospheric stilling partly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surface roughness", Nature Geoscience, 3, 756-761.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

- 온라인 공론장에서 '원자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의미화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빅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네트워크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 온라인 사용자들은 원자력 자체의 기술적 내용보다 원자력이 건강, 안전, 문화향유, 정치적 입장 등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 온라인 여론은 구조상 양극화의 추세를 피할 수 없다. 온라인 여론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는 '비독립적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온라인 여론을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온라인 여론은 개인의 독립적인 의견의 평균이 아니다. 온라인 여론은 다양한 의견들의 소통과 갈등을 통해 빚어지는 비독립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온라인 여론에서 다루어지는 이슈들은 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에는 평균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 여론 공간은 크게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첫 번째 영역은 개인이 스스로, 온라인 혼자(independently) 만드는 여론이다. 두 번째 영역은 공론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dependently) 만드는 여론이다. 독립적 여론은 전통적 여론조사와 투표 과정에서 포착되는 반면, 비독립적 여론은 SNS, 온라인 게시판-댓글 등에서 형성된다. 비독립적 여론은 폐쇄된 공간에서 끼리끼리 모여 같은 정보를 주고 받다보면 특정한 정보에 갇히게 되는 소위 '울림통 효과(echo-chamber effect)'라고 불리는 '자기 편향 강화 현상(confirmation bias)'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시대, 지역, 사안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의견 대립을 곧 사회 일반의 갈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양극화된 온라인 여론을 무의미하다고만 볼 수 없다. 온라인 여론의 갈등 구조가 물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 시민의 일반적 삶과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1]에서는 2016년 11월에서 2019년 5월 동안에 SNS, 블로그, 포털 언론기사, 포털기사 댓

1) 이 글은 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의 지원(20182336)을 받아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이 연구에는 3개년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소속 김정민, 곽진아, 위형석, 최지정, 박홍석, 김병준, 이규현, 김건식, 김홍영, 심상협, 이제원이 참여하였다.

글 중 원자력이 언급된 텍스트 전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온라인 공론장에서 '원자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의미화 되는가를 탐색한다.[2] 분석은 세 시기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시기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후쿠시마 6주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트위터 33만 838건, 온라인 커뮤니티 문서 1,305건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6개월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트위터 1,385만 5,845건과 온라인 커뮤니티 문서 150만 9,342건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점이다. 이 시기에는 포털 언론기사 2만 9,238건과 포털 언론기사 댓글 52만 5,697건을 분석하였다.[3]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정형화' 단계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글은 일상적인 구어체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문어체에 비해 유행어, 줄임말, 비속어도 많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수집된 텍스트에서 유의미하고 분석 가능한 단어들을 추출하는 정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정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어 사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의 최신 단어 사전을 사용하되, 기존 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원자력 관련 여론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단어들을 선별하여 단어 사전을 갱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용례 분석' 단계이다. 한 가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는 함께 쓰이는 구문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용례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일일이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어들 사이의 의미 접합, 맥락 등을 고려한 분석을 따로 수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중심성 계산' 단계이다. 단어들은 사용된 문장 내에서의 거리를 통해서도 그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단어를 사용한 사람, 혹은 기사에 따라서도 그 관계를 볼 수 있다.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나 기사를 매개로 단어들 사이의 거리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고 그 안에서 각 단어들이 갖는 중요도를 '중심성'이라는 수치로 계산하였다.

2) 블로그와 포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각 온라인 서비스(국내 대형 포털 A사, 국제 SNS 서비스 B사)는 데이터 포맷과 API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는 통합 스파이더링(spidering) 모듈 프로그램을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세 번째 시기에 포털 언론기사와 댓글을 분석한 것은 온라인 여론 형성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이후 대형 포털 A사가 자사의 '실시간 검색'에 댓글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댓글은 온라인 여론 형성의 주된 무대로 부상하였다. 이에 온라인 여론장의 새로운 무대로 포털기사 댓글을 포함시켰다.

시기1(2016. 11.–2017. 5.):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기

원자력과 생활 안전

여론을 구성하는 개별 주제들은 다양한 배경 사건들과 연결된다. 원자력에 대한 여론 또한 원

〈표 Ⅸ-11〉 원자력 관련 트위터 주요 이슈와 글을 많이 작성한 상위 10개 계정 속성, 2016. 11.-2017. 5.

날짜	이슈	속성별 계정 수(개)						
		일반 시민	자동화 알고리듬 (bot)	시민 단체	정부/ 산하기관	연예인/팬	언론	공인
2016. 11. 22.	후쿠시마 강진	4		1		5		
2016. 12. 11.	신고리/세월호	7	2	1				
2016. 12. 14.	판도라	6	3		1			
2017. 01. 10.	체르노빌 방사성 분유	5	5					
2017. 01. 20.	핵폐기물	7	2	1				
2017. 02. 01.	방사능/삼중수소	7	1	1		1		
2017. 02. 04.	아이돌/후쿠시마	3		1		6		
2017. 02. 18.	방사능 안전	6	1	2		1		
2017. 03. 11.	후쿠시마 6주기	6		4				
2017. 03. 18.	일본 원전사고 국가책임	5				5		
2017. 03. 21.	공기청정기 방사능필터	6	1	2		1		
2017. 04. 02.	월성원전/삼중수소	4		5		1		
2017. 04. 04.	방사능급 미세먼지	8	1	1				
2017. 04. 23.	문재인 비핵평화	3		7				

출처: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인공지능형 빅데이터 기반 원자력 관련 국민 여론 추이 판단 시스템 연구」, 2017.

자력 자체가 가지는 기술적, 산업적 이유가 곧바로 여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과 연관된 배경 이슈들이 선택적으로 동원되어 여론으로 형성된다. 이 기간 원자력에 대한 트위터 여론의 상위 영향력자는 정부부처나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이다. 일반 시민은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식별 가능한 ID를 공개한 계정을 말한다. 동일계정이 3초 이내 간격으로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10회 이상 작성한 경우는 자동화 알고리듬을 뜻하는 봇(bot)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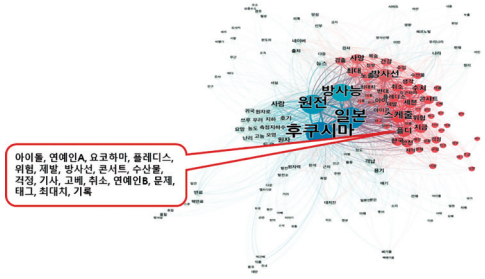
〈표 Ⅸ-11〉의 분석 기간 중, '체르노빌 방사능 분유'(2017년 1월 10일), '안전 급식'(2016년 12월 14일), '곤약젤리'(2017년 1월 20일), '후쿠시마 산수산물'(2017년 2월 1일)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안전 이슈가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은 원자력 여론이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6년에 있었던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이슈가 1년이 넘게 리트윗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시판중인 공기청정기에 장착된 '방사능 필터'의 실효성 여부, '방사능급 미세먼지'의 은유적 표현 등은 일상생활에 원자력 안전 우려가 뿌리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문화와 원자력

이 기간 영화 '판도라'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이슈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아이돌 걸그룹이 참여한 원자력 관련 연극 '안녕 후쿠시마'가 주목받았으며, 해당 연극을 관람한 해당 걸그룹 팬들이 원자력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특정 아이돌 그룹의 후쿠시마 인근 지역 콘서트 개최에 대한 반대 서명이 나타났다(그림 Ⅸ-19). 이는 평소 원자력에 대해 발언하지 않던 일반인이 영화 또는 연극 등의 문화콘텐츠를 접하고, 해당 연예인에 대한 호감과 원자력을 결부시키는 현상의 한 예이다.

[그림 Ⅸ-19] '후쿠시마, 아이돌, 방사선' 이슈 키워드 네트워크



출처: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인공지능형 빅데이터 기반 원자력 관련 국민 여론 추이 판단 시스템 연구」, 2017.

시기2(2017. 12. – 2018. 5.):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종료 직후

이 기간 원자력 키워드를 포함한 온라인 담론은 전년 대비 약 30배 정도 그 양이 급증하였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각종 원자력 정책을 입안하였고, 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논쟁이 가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탈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UAE 원전' 등 각종 이슈에 대해 자동화된 메세징을 수행하는 봇(bot)의 개수와 활동량이 증가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분석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원자력 관련 글을 작성한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약 6만 건에서 약 8만 건)하는 사이 메시지 수는 3,500% 증가하였다(약 17만 건에서 약 660만 건).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사용자 개인의 활동량 증가로만 설명할 수 없다.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증가는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기계적인 자동 작성, 복제를 수행하는 자동화 알고리듬, 봇(bot)에 의한 것이었다(표 Ⅸ-12).

자동화 알고리듬, '봇(bot)' 주도로 만들어진 여론 양극화

봇(bot) 주도의 메시지 증가는 원자력 담론의 대칭 구조를 강화시켰다. 이는 찬/탈핵을 둘러싼 여론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여론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이 상징적 경쟁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2018년 2월 6일 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관련 의회 풍경이 온라인에서 1만 건 이상의 메시지로 다뤄진 것이 한 예이다. 사안 자체의 내용이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며, 언론에 의해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봇(bot) 활동을 통해 대량의 메시지가 발생함으로써 원자력 자체에 대한 특정 입장을 인위적으로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 이슈의 산발성과 다양성

원전 사고 및 안전 이슈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슈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어도 원자력

〈표 Ⅸ-12〉 트위터에 원자력 관련 글을 많이 작성한 상위 10개 계정 속성 및 트윗 수, 2017. 12.-2018. 5.

날짜	속성별 계정 수와 총 트윗수					
	일반시민	정치성향A 시민	정치성향B 시민	정당인	자동화 알고리듬(bot)	삭제 계정
2017. 12. 29.		5개 계정 (7,997건)		1개 계정 (1,371건)	1개 계정 (1,928건)	3개 계정 (5,274건)
2018. 01. 10.		5개 계정 (3,525건)		2개 계정 (2,755건)	1개 계정 (1,519건)	2개 계정 (1,399건)
2018. 02. 06.					10개 계정 (22,483건)	
2018. 02. 12.		6개 계정 (6,738건)	3개 계정 (2,033건)		1개 계정 (938건)	
2018. 03. 04.		8개 계정 (7,647건)		2개 계정 (1,832건)		
2018. 03. 27.	1개 계정 (908건)	3개 계정 (2,240건)	5개 계정 (3,312건)		1개 계정 (959건)	

출처: 이원재, 2018. 6.

안전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촘촘해진 탓도 있지만 사회적 공론장 안에서 원자력 자체가 하나의 소재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동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원전 수주 의혹', 'UAE 특사 파견', '전력수급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이 원자력 산업 자체의 기술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이슈였다. 나아가 '일본 록밴드 피폭', '일본항공 후쿠시마산 캐러멜', '한수원 비리', '포항 지진 여파' 등이 일제히 원자력 산업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세부 이슈들은 정치권 담론 이슈와 달리,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거나, 해당 군집 내에 종속된 작은 군집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이해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정치 이슈와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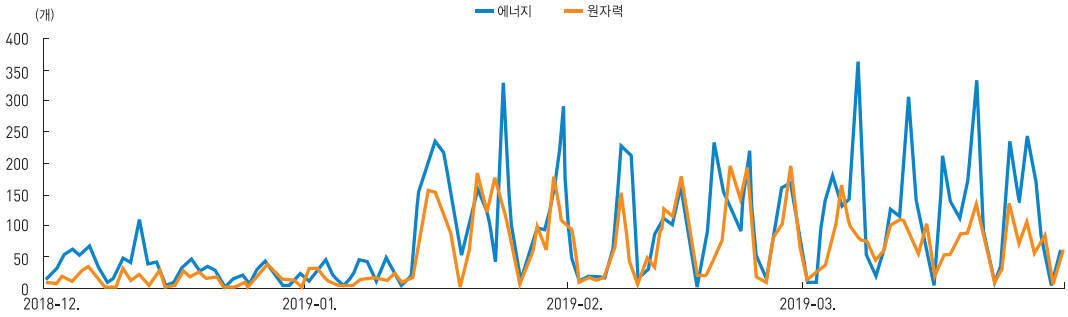
시기3(2018. 12. - 2019. 5.): 미세먼지 악화 시기

이 기간 동안 원자력 관련 온라인 여론은 환경을 매개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이슈가 결부됐다는 특징을 가진다. 분석 기간 내 연관 언론 보도와 댓글 여론 이슈들은 2019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2019년 1월 13일) 이후, 원자력과 신재생을 둘러싼 에너지 관련 보도가 비등하였다(그림 Ⅸ-20).

원자력 여론 양극화의 한 축으로서의 미세 먼지 이슈

댓글 여론에서 미세먼지와 원자력이 연결되기 시작한 때는 미세먼지가 극심해진 1월 중순 이후이다. 이후 월성3호기 사고나, 정부/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결정과 같은 탈핵 친화적 사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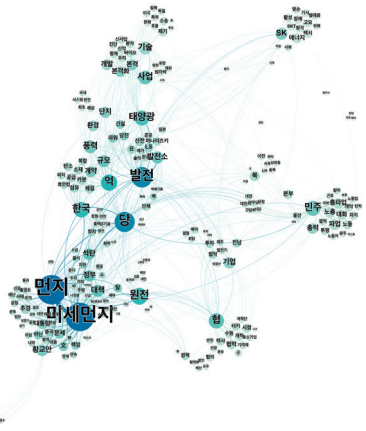
[그림 Ⅸ-20] 원자력 포함 에너지 관련 이슈 언급량, 2018. 12.–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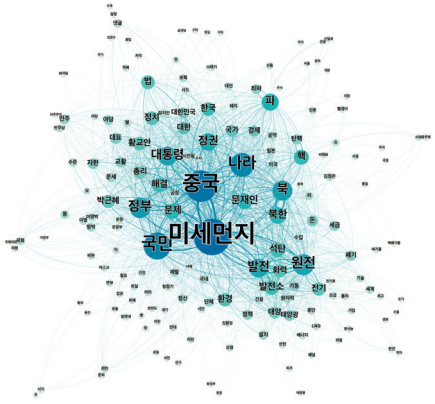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Ⅸ-21] 2019년 3월 6일자 원자력 관련 언론보도 및 뉴스 댓글에 나타난 미세먼지 이슈의 네트워크 중심성

1) 언론보도



2) 뉴스 댓글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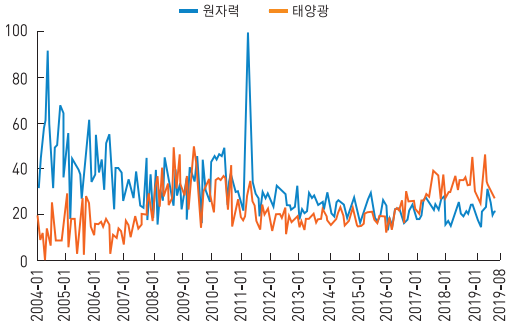
등장한 날에서조차 미세먼지 이슈가 정부의 탈핵 기조의 반대 이슈로 부각되었다(그림 Ⅸ-21). 미세먼지 이슈는 원자력을 둘러싼 양극화 된 온라인 여론 지형에서 찬핵 측의 논리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원자력에 대한 언론 기사의 댓글에서 미세먼지는 가장 큰 중심성을 보여 왔는데, 특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투자 소개가 있던 날 미세먼지가 가장 큰 중요도를 보였다.[4)]

4) '중요도'는 단어들 사이의 네트워크 상의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으로 측정하였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연결돼 있는 단어들의 중심성도 높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은 또 다른 여러 단어들과 연결됨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중심성을 더욱 높인다. 이 분석에서 미세먼지의 시기별 중요도 변화는 미세먼지와 함께 거론되는 단어들의 중요성이 변화한 것과 상관이 있다.

온라인 여론의 양극화

지금까지 2017년 이후 온라인 여론이 원자력을 어떤 의미로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여론이 탈핵과 찬핵이라는 양대 진영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여론의 양극화 현상은 그 기간을 확장해서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림 Ⅸ-22]는 2004년 이후 구글 트렌드에 나타난 원자력과 태양광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여준다. '원자력'과 '태양광'이 구글에서 검색된 상대 빈도를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 Ⅸ-22] 원자력 및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2004-2019. 8.



출처: Google Trends(https://trends.google.co.kr/trends/).

원자력이 가장 많이 검색된, 그래프 가운데 솟음(peak)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이다. 이를 100으로 할 때 원자력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태양광에 대한 검색량이 붉은 색으로 표시되었다.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원자력 수준으로 비등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구호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2007년 말부터이다. 소위 '녹색성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킨 최초의 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두 정부 동안 태양광은 항상 원자력 수준의 관심을 받았으며, 같은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상보적인 대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있어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당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됐다. 원자력 이상의 관심을 태양광이 가져오게 된 2017년 이후, 태양광과 원자력은 탈핵과 찬핵이라는 양극화된 구조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맺음말

온라인 여론은 상대방의 의견을 보고 나의 의견을 정하는 '상호작용성' 때문에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를 두고 나타난 여론을 사실로 간주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물론 양극화된 온라인 여론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양극화된 논의 구조가 원자력과 환경을 둘러싼 기술 합리적 정보의 확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에 우리가 온라인 여론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즉, 양극화된 온라인 여론에서 소비되는 극단적 언어들이 정책과 제도에 스며들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원재. 2018. 6. “인공신경망 분석 기반 원자력 관련 국민 온라인 여론 심층 판단 연구.” 2018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Korean Social Trends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안 전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류현숙 | 한국행정연구원 306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민수홍 | 경기대학교 313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외인 사망률은 1997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으로, 2018년의 경우 운수사고는 감소하였으나 자살률은 증가하였다.
-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는데,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다.
- 최근 들어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건축물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였다.
-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산업재해율은 낮고, 산재사망률은 높은 수준이다.
-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모두 감소했고, 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범죄 증가로 인해 강력범죄(흉악)만 증가하였고, 폭력, 재산, 교통범죄는 모두 감소하였다.
- 경찰력과 소방력은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고,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교도소 수감율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OECD 국가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다.
- 야간보행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OECD 평균 수준이다. 특히 2018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 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향상되었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며,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표적으로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있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 테러, 자살 등이 있고, 이 글에서는 범죄의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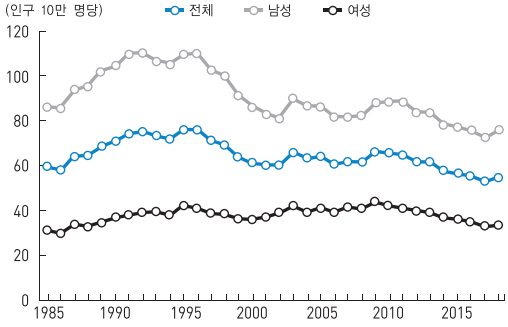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

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외인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은데,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10만 명당 54.7명으로 전년도 53.0명에서 소폭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76.1명으로 전년도 73.1명보다 3.0명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33.3명으로 전년도 33.0명에 비해 0.3명 증가해 남성의 증가폭이 여성보다 더 컸다(그림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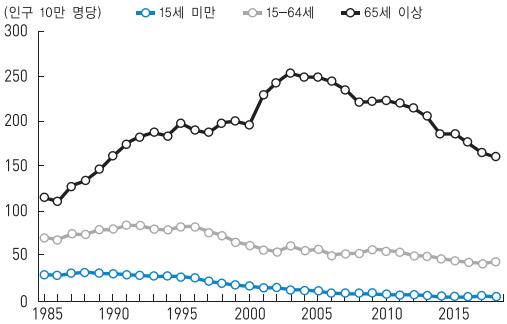
[그림Ⅹ-1] 성별 외인 사망률, 1985-2018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 보면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3.8명으로 나타났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43.0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 역시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8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59.6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Ⅹ-2).

[그림Ⅹ-2]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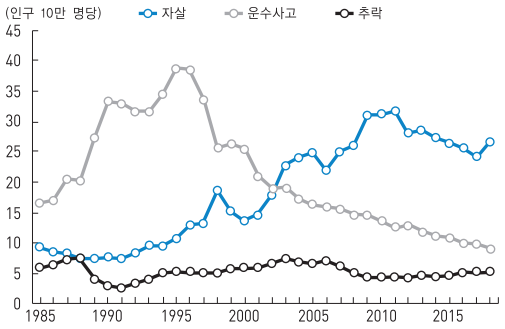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난 3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1992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전년 24.3명에 비해 증가한 반면, 운수사고는 9.8명에서 9.1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그림X-3).

[그림X-3]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5-2018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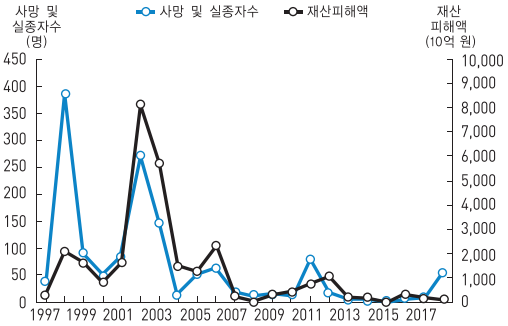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에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7년 7명에서 53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액은 2017년 1,91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사망 및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48명)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1997-2018



주: 1) 재산피해액은 2018년 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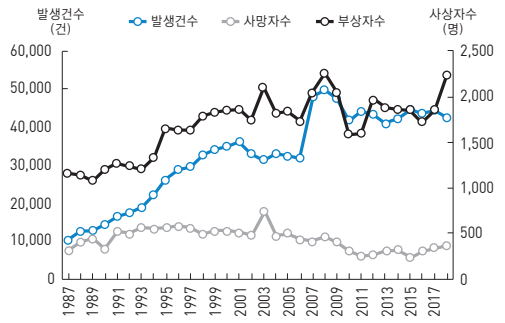
인적 사고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07년에 화재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화재 발

생 건수는 매년 약 4만여 건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다(그림X-5).

[그림X-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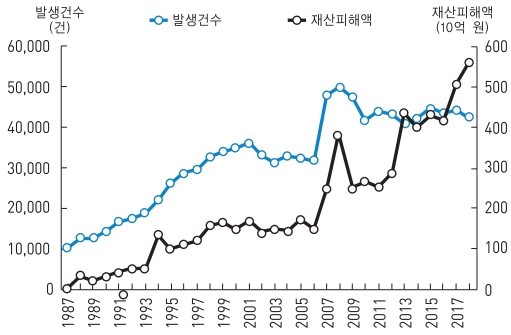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각 연도.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특히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후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최근 들어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1,800명 내외를 보이고 있다(그림X-5).

최근의 흐름과 달리, 2018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42,338건)가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음에도, 사망자 수(369명)는 7.0%, 부상자 수(2,225명)는 20.1% 증가하였는데, 이는 '밀양 화재 참사'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림X-5).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도 화재 발생 건수(4만 2,338건)가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음에도 재산 피해액(5,597억 원)은 10.4% 증가하였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 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X-6).

[그림X-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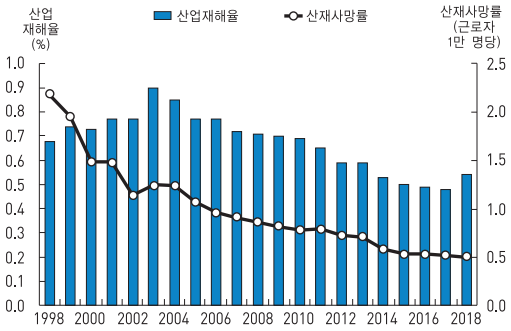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각 연도.

산업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최근 20여 년간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그림X-7).

[그림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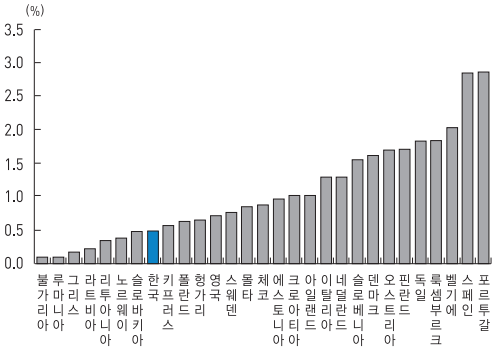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사고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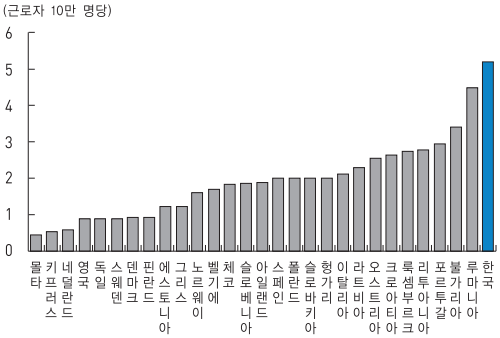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산업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은 나라이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2017년 기준 0.48%로 29개국 평균인 1.05%에 비해 낮고, 불가리아(0.08%), 루마니아(0.08%), 그리스(0.16%), 라트비아(0.21%), 리투아니아(0.33%), 노르웨이(0.36%), 슬로바키아(0.47%)에 이어 하위 8번째이다. 반면, 산재사망률 면에서는 유럽 평균인 근로자 10만 명당 1.95명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5.2명이다. 2016년까지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사망자가 5명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룩셈부르크 뿐이었으나, 2017년 룩셈부르크가 2.7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29개국 중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그림X-8). 그러나 이는 산업재해통계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즉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이 발달하고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따라서 한국도 산재사고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산재보상 수준을 높이고 산재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X-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7

1) 산업재해율



2) 산재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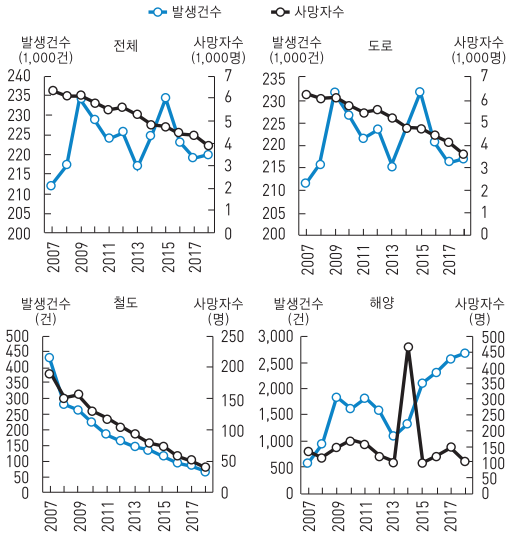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유럽과 비교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만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7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8.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소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그림Ⅹ-9).

[그림Ⅹ-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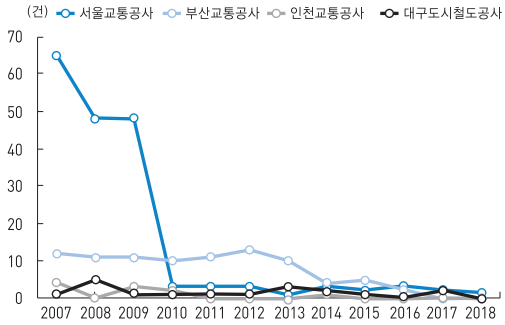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도로사고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Ⅹ-9). 해양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상사고 발생 건수는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2018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1건 발생하였고, 부산, 인천, 대구 모두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2007년 65건이었으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2010년부터 사상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부산 역시 2007년 12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10건 미만으로 떨어졌고 최근 2년간은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자살이나 안전사고를 막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림Ⅹ-10).

[그림Ⅹ-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7-2018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사회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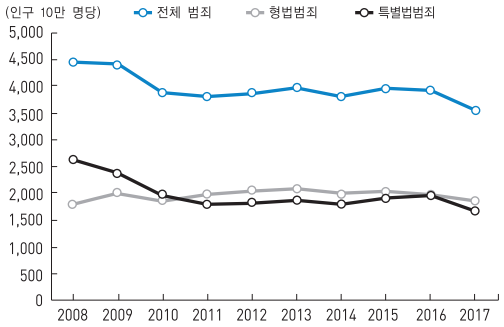
범죄발생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8–2009년을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3,8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08–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X–11).

2017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82만 4,876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55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9.4%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10년간 20.4%가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95만 8,865건(인구 10만 명당 1,867건)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86만 6,011건(인구 10만 명당 1,686건)으로 13.9% 감소하여, 특별법범죄의 감소폭이 더 크다(그림X–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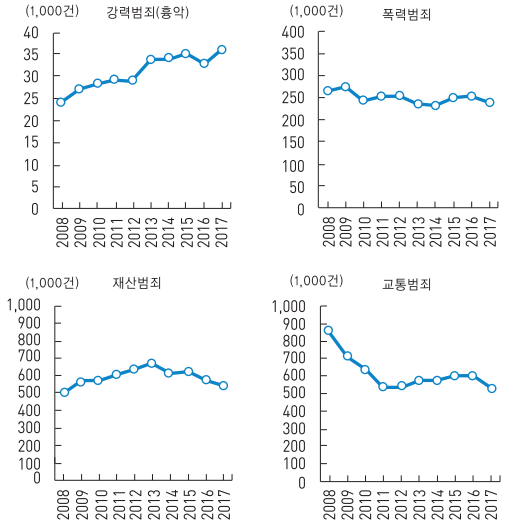
범죄유형별로 지난 10년간 발생 추이가 상이하다. 강력범죄(흉악)는 2008년 2만 4,023건에서 2017년 3만 6,030건으로 50.0% 증가하였고, 재산범죄는 50만 3,404건에서 54만 2,336건으로 7.7%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

[그림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8–2017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인구×100,000.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그림X–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8–2017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안 85만 8,340건에서 52만 9,950건으로 38.3% 감소하였고, 폭력범죄는 26만 5,787건에서 23만 8,789건으로 10.2% 감소하였다(그림Ⅹ-12).

2017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강력범죄(흉악)만 9.3% 증가하였고, 폭력(5.2%), 재산(5.4%), 교통범죄(11.8%)는 감소하였다(그림Ⅹ-12).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유형인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의 최근 10년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 범죄는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5-2016년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화범죄는 지난 10년간 완만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유형 모두 감소했다(표Ⅹ-1).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건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건에 비해 낮다. 이는 영국(0.2건), 일본(0.2건), 노르웨이(0.4건), 독일(0.5건), 프랑스(0.5건), 스위스(0.6건)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멕시코(18.1건), 미국(5.5건), 라트비아(4.8건), 칠레(4.2건) 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림Ⅹ-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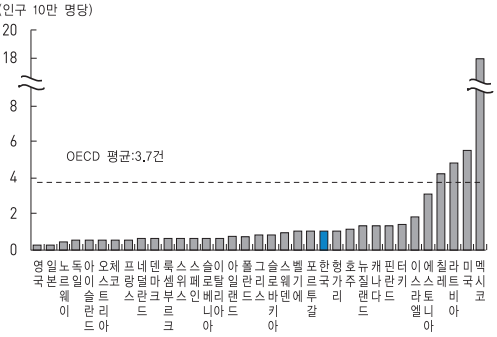
〈표Ⅹ-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08-2017

(건)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08	1,120	4,828	16,129	1,946	247,641
2009	1,390	6,381	17,377	1,866	250,537
2010	1,262	4,402	20,584	1,886	224,300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65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0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그림Ⅹ-13] OECD 국가의 살인범죄율, 2016



주: 1)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homicide) 발생건수를 말함.
2) 국가별 살인범죄율은 2016년 기준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임.
출처: OECD, *OECD Better Life Index 2017*, 2017.

소방력, 경찰력, 교도소 수감인구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4년 9만 3,271명에서 2018년 11만 8,651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16명에서 435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4년 2만 7,604명에서 2018년 5만 2,245명으로 증가하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742명에서 98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Ⅹ-2).

우리나라의 교도소 수감율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7명으로 35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47명 보다 적은 편이다. 한국은 아이슬란드(45명), 일본(47명), 스웨덴(55명), 핀란드(57명) 등에 비해 많은 편이나, 미국(698명), 이스라엘(256명), 칠레(242명), 라트비아(239명) 등에 비하면 훨씬 적다(그림Ⅹ-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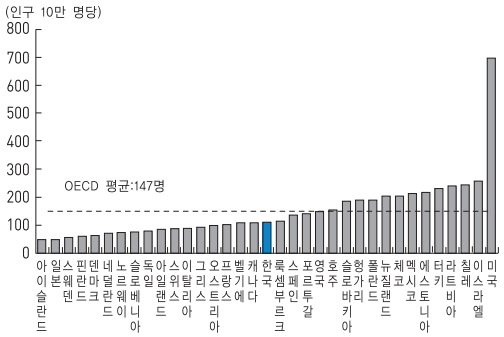
〈표Ⅹ-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4-2018

(명)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4	93,271	516	27,604	1,742
2005	95,336	505	29,362	1,641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8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그림Ⅹ-14] OECD 국가의 교도소 수감율, 2016



주: 1) 수감율은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 수감 인구임.
출처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 OECD Social Indicators*, 2016.

안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8.2%에 머물렀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18년 2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마다 차이를 보이는

〈표Ⅹ-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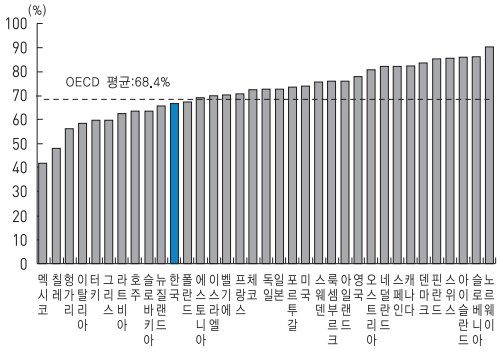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8	9.5	13.2	20.5
자연재해	17.2	18.7	23.2	15.1	20.7	22.7
교통사고	5.7	8.0	9.3	7.3	10.3	13.1
화재	9.9	16.6	17.7	14.2	19.1	21.0
범죄위험(치안)	-	8.2	9.1	8.9	9.2	17.2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단, 2008년과 2010년 자료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08년에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데, 전반적으로 2008년과 2014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8년에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2014년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표 X-3).

야간보행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응답자의 66.6%가 야간에 길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평균 68.4%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90.1%), 슬로베니아(86.1%), 아이슬란드(86.0%), 스위스(85.3%)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1.8%), 칠레(47.9%), 헝가리(56.3%), 이탈리아(58.4%)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5).

[그림 X-15]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6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OECD Better Life Index 2017*, 2017.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어린이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이 하향추세에 있다. 그러나 운수 및 질식사고 등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노인의 경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은 운수사고가, 손상(입원 등)은 낙상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운수·낙상사고 중 노인 비중이 높은 유형의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일반인의 10배에 달하고, 특히 운수, 추락, 익사 사망률이 높다.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9의 3)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늦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인명 피해도 크다. 한국 사회의 어린이 인구(0–14세)는 2018년 현재 658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7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통계청, 2019). 201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 인구는 총 267만 명이고 전체 인구에서 법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장애 출현율은 5.39%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장애 출현율이 매우 높다. 향후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 출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향후 안전취약계층의 규모 확대 전망은 이 집단의 안전 문제가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기본이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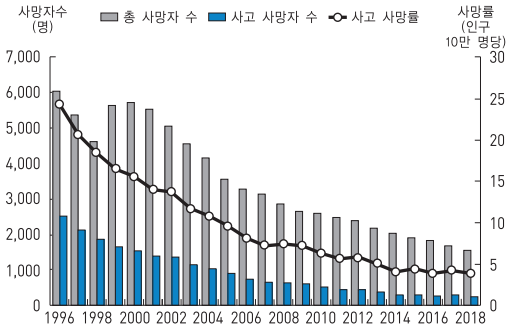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만 678명의 어린이 사망자 중, 사고 사망자 수는 2만 1,357명(26.5%)이었다(그림 X–16).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1996년에는 2,521명이었는데, 2007년 650명, 2018년에는 253명으로 20여 년 동안 1/1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1]. 소비자

1) 1일 평균 사망자 수의 경우에도 1996년의 6.9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 1.8명, 2018년에는 0.7명이었다.

위해감지시스템(CISS)[2]의 자료를 이용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현재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택(1만 6,343건, 67.8%)에서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1,474건, 6.1%),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1,309건, 5.4%), 도로 및 인도(789건, 3.3%)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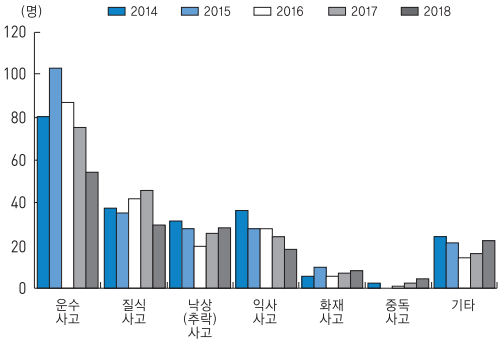
[그림X-16] 어린이 사망자 수 및 사망률, 1996-2018



주: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2018년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과 타살 등 의도적 사고가 35.6%, 운수, 추락, 익사, 질식, 화재, 중독 등에 의한 비의도적 사고가 64.4%를 차지한다. 2018년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163명의 어린이 사망자 중 33.1%에 해당하는 54명이 운수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질식사고 29명(17.8%), 낙상(추락)사고 28명(17.2%), 익사사고 18명(11.0%), 화재사고 8명(4.9%) 순이다(그림X-17).

[그림X-17] 어린이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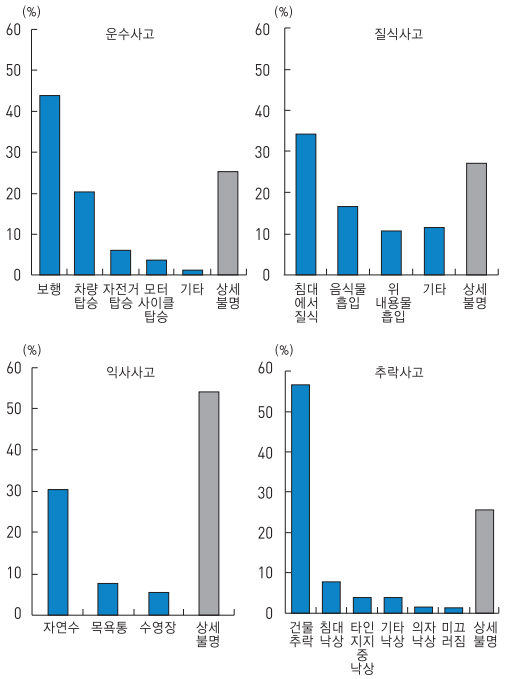
주: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개년간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27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보행사고가 118명(43.7%)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차량 탑승사고 55명(20.4%), 자전거 탑승사고 16명(5.9%), 모터사이클 탑승사고 10명(3.7%) 순이다. 같은 기간 질식사고에 의해 희생된 어린이는 총 114명이었으며, 이 중 39명(34.2%)은 침대에서 질식, 19명(16.7%)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사망, 12명(10.5%)은 토사물에 의해 질식(위 내용물 흡입)하여 사망했다. 익사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9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냇가나 강 등의 자연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0.4%, 목욕통 7.6%, 수영장 5.4% 순으로 나타

2) 소비자위해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은 전국의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안전사고 관련 기관과 자체 소비자상담센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났다. 나머지 54.3%는 상세불명의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이다. 추락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총 78명이었으며,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56.4%, 침대 낙상 7.7%, 타인 지지 중 낙상 3.8%, 의자 낙상 1.3% 순이다(그림Ⅹ-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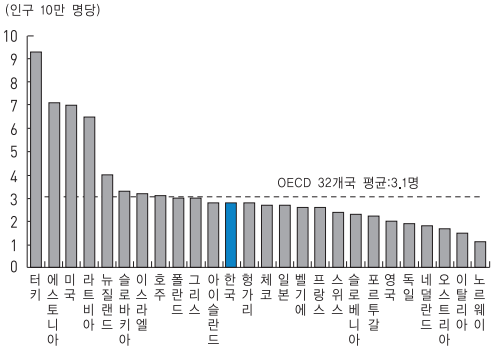
[그림Ⅹ-18] 어린이 주요 사망사고의 세부 유형별 사망자 구성 비율, 2014-2016



주: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2) 3개년도(2014-2016년) 합산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 보도자료, 2018. 5.

[그림Ⅹ-19]는 OECD 주요국의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을 나타내는데 한국은 2.8명(12위)으로 OECD 평균인 3.1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를 세분화해 비교해 보면, OECD 국가의 경우 운수사고 1.1명, 질식사고 0.5명, 추락사고 0.2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운수사고 1.2명, 질식사고 0.6명, 추락사고 0.3명으로 나타난다.

[그림Ⅹ-19] OECD 국가의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 2015



주: 1) 어린이는 0-1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 보도자료, 2018. 5.

노인의 안전사고 동향

2018년 현재 60대 이상 고령층의 사고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을 살펴보면, 비의도적 사고에서는 운수사고(24.7명), 추락사고(17.2명), 익사사고(2.8명) 순으로 높고, 의도적 사고로는 자살(43.6명)이 가장 높다. 특히 고령자의 사고 사망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다(표Ⅹ-4).

노인의 사망사고에서 자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7%가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자살 충동 이유로는 건강문제(34.5%), 경제적 어려움(34.4%), 가정불화(13.1%),

외로움(12.9%) 등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한국 10대 자살률의 13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OECD, 2019).

〈표 X-4〉 연령집단별 사고 사망률, 2018

(인구 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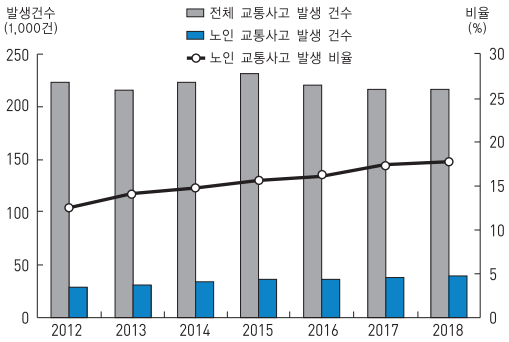
	전체	비의도적 사고					의도적 사고	
		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
전체	54.7	9.1	5.2	1.1	0.6	0.6	26.6	0.8
0세	12.7	0.3	0.9	0.3	-	-	-	2.7
1-9세	3.1	0.9	0.6	0.3	0.1	0.1	0.0	0.7
10-19세	9.3	2.3	0.2	0.4	0.1	0.1	5.8	0.1
20-29세	25.0	4.3	0.5	0.4	0.2	0.3	17.6	0.4
30-39세	35.6	4.0	0.9	0.3	0.3	0.4	27.5	0.6
40-49세	45.3	5.2	2.6	0.8	0.4	0.7	31.5	0.8
50-59세	60.3	9.9	5.5	1.4	0.8	1.0	33.4	1.2
60세 이상	131.6	24.7	17.2	2.8	1.6	0.9	43.6	1.0
60-69세	76.0	16.8	9.3	1.6	0.8	0.8	32.9	0.8
70-79세	138.4	31.2	17.8	3.5	1.4	0.9	48.9	1.1
80세 이상	311.2	38.9	43.4	5.1	4.4	1.5	69.8	1.4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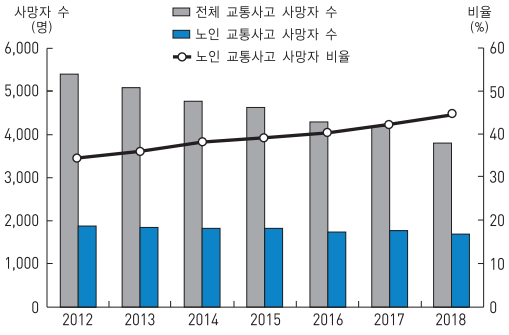
노인의 비의도적 사고로 인한 사망 중에서는 운수사고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8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21만 7,148건 중 노인 교통사고는 38,647건으로 17.8% 수준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 3,656건에서 21만 7,148건으로 2.9% 감소하였지만,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2만 8,185건에서 3만 8,647건으로 37.1%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5,392명에서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했으나, 이 중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6%에서 2018년 44.5%로 9.9%p 증가하였다(그림 X-20). 고령자는 운수사고 유형 중 보행자의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X-20]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 2012-2018

1) 교통사고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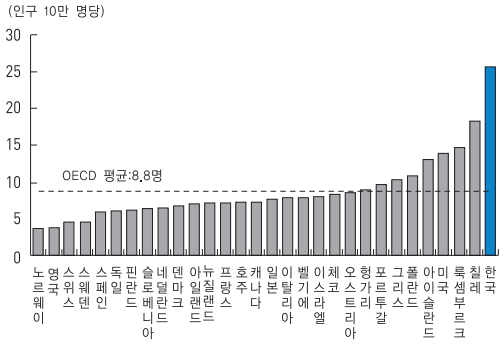
2) 교통사고 사망자 수



주: 1)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노인 인구 10만 명당 3.6명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25.6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OECD 평균인 8.8명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그림 X-21).

[그림X-21] OECD 국가의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2016



주: 1)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운수사고에 이어 낙상(추락 등) 역시 노인 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일면과 침대 등에서의 낙상사고는 70대 이상 노인에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계단, 사다리, 비계발판, 건물 등에서의 낙상 사망사고는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한다(표X-5).

〈표X-5〉 연령 및 낙상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16

(명)

	동일면	침대	계단	사다리	비계 발판	건물	다른면	기타	합계
전체	214	56	288	49	50	376	146	1,424	2,603
10대미만	0	0	0	0	0	5	0	10	15
10대	0	0	0	0	0	12	0	5	17
20대	0	0	8	0	1	15	1	19	44
30대	4	0	8	2	2	31	8	34	89
40대	11	1	27	5	8	66	25	118	261
50대	14	4	65	13	23	103	56	255	533
60대	20	6	69	17	12	96	21	275	516
70대	53	13	68	9	4	39	21	332	539
80대이상	112	32	43	3	0	9	14	376	589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17」, 2018.

장애인의 안전사고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 하나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과 장애 출현율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이유는 노화에 따른 시력저하, 청력저하 등 신체능력의 감소가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인은 신체능력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장애를 얻을 가능성 또한 청·장년층에 비해 높다. 장애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보면, 2012년 기준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은 0.7%로 집계된 반면 장애인의 경우는 7.7%로 집계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건·사고의 위험에 10배 이상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표X-6).

〈표X-6〉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사고 발생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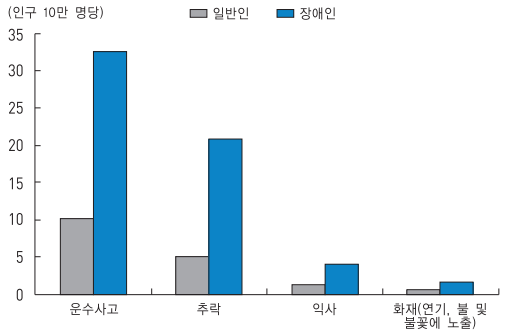
	장애인	전체 인구
인구(1,000명)	2,646	50,747
사고자 수(1,000명)	205	360
사고발생률(%)	7.7	0.7

주: 1) 사고 발생률=(해당 사고자 수÷해당 인구)×100.
출처: 보험연구원,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2018.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로 장애인과 일반인의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2016년 기준 운수사고의 경우 일반인의 사망률은 10.1명인 반면 장애인은 32.5명으로 약 3배 이상 높다. 추락사고 사망률 역시 일반인은 5.1명, 장애인은 20.8명으로 4배가량 높다. 익사사고의 경우 일반인은 1.3

명, 장애인은 3.9명이고, 화재사고의 경우 일반인은 0.6명, 장애인은 1.6명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생활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X-22).

[그림X-22] 일반인과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출처: 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통계」, 2018.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6.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 비율은 57.4%로 12.1%인 비장애인의 사망 비율보다 약 5배가량 더 높다(보험연구원, 2018). 이는 거동상의 제약, 감각상실(청각, 시각 등) 등의 장애로 인해 신속한 화재 발생 인지가 어렵거나 대피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X-7〉에서 제시된 장애인이 119구조대에게 도움을 받은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갇힘사고가 전체의 30.6%(474건)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안전조치 23.9%(369건), 문개방 6.6%(102건)의 순으로 높다. 교통사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4건(0.3%), 화재사고는 17건(1.1%), 산악사고 22건(1.4%)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들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비상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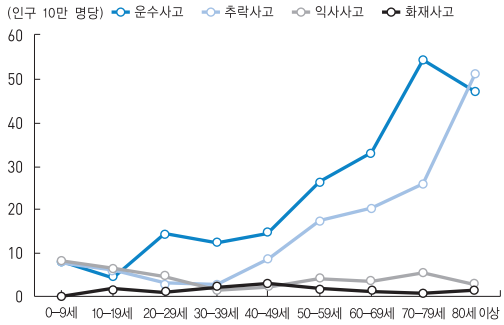
〈표X-7〉 장애인 대상 사고유형별 구조 건수, 2009-2013

	장애인 구조 건수(건)	비율(%)
갇힘사고	474	30.6
안전조치	369	23.9
위치추적	234	15.1
문개방	102	6.6
자살기도	95	6.1
시설조치	82	5.3
동물위협	51	3.3
거동불편	37	2.4
끼임사고	30	1.9
산악사고	22	1.4
화재사고	17	1.1
자연재해	15	1.0
수난사고	9	0.6
추락사고	5	0.3
교통사고	4	0.3
붕괴사고	1	0.1
합계	1,547	100.0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2014.

[그림X-23]은 장애인의 연령별로 비의도적 사고 유형별 사망률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 사망률은 70-79세의 장애인이 54.3명으로 가장 높다. 추락사고 사망률은 연령 증가와 함께 높아지지만, 익사와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

[그림Ⅹ-23] 장애인의 연령집단 및 비의도적 사망사고 유형별 사망률, 2016



출처: 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통계」, 2018.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6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자살 사망률(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포함)인 25.6명보다 2.6배 이상 높다(국립재활원, 2016).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장애인 가구의 만성적 빈곤 문제와 직장문제, 신병에 대한 비관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맺음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높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도 훨씬 높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 인구의 절대적 수와 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립재활원. 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보험연구원. 201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한국소비자원. 2019.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장애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례연구」.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9-en.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민수홍 (경기대학교)

- 2008–2017년 사이에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모두 감소했으며,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서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여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일정 범위(15–20%) 안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 2008년 개정된 소년법 시행 이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19세 범죄자들의 형법범죄자율은 지난 1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강화된 처벌의 범죄 억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은 낮아지기보다 높아졌고, 소년부에 송치된 10–13세의 촉법소년 수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여서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08–2017년 사이에 흉악범죄 중 성폭력과 살인에서만 청소년 범죄자의 증가 추세가 나타났으며,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전과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살인과 성폭력에서의 청소년 범죄자 수 증가와 청소년 전과자 비율의 증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의 높은 공범률 때문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보호처분 위주의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지향하며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답변 1호 안건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소년법 개정 건이었다. 말하자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소년법에 대한 불만은 이후에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48호 답변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청원에 각기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법감정을 읽을 수 있다. 상당수의 국민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등 잔인하고 혹독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사법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10여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소년법이 개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07년 말에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당시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서 19세 범죄자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하여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됨)의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하여 범죄를 저

질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던 10세와 11세의 소년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

상당수의 국민이 이미 강화된 소년법에 대해 법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과 불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소년법 개정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식통계를 가지고 살펴보겠다. 분석을 위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를 활용해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의 추이를 살펴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통계를 활용해 촉법소년 수의 변화도 살펴보겠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이와 성별 차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사법당국의 개입이 강화된 개정 소년법이 2008년 6월에 시행된 이후 10여 년이 흘렀고, 이 기간 중에 청소년 범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표 X-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형법과 특별법을 위반한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8년 13만 4,992명에서 2017년 7만 2,759명으로 46.1% 감소하였다.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도 같은 기간 2,030명에서 1,584명으로 21.9%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범죄라고 부르는 형법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지난 10년간 상대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자주 반복되었다. 소년 형법범죄자 수는 2008년 7만 9,766명에서 2017년 5만 8,255명으로 27.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소년 형법범죄자율은 소폭(5.8%) 증가했지만 어떤 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X-8〉 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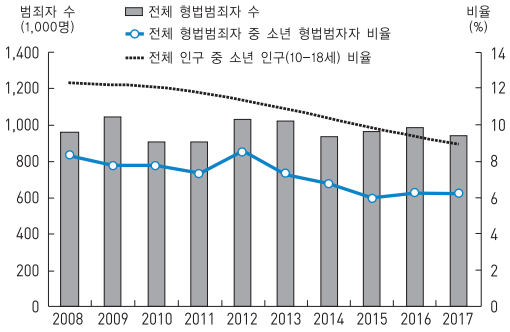
연도	전체 범죄		형법범죄	
	범죄자 수 (명)	범죄자율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 (명)	범죄자율 (인구 10만 명당)
2008	134,992	2,030	79,766	1,199
2009	113,022	1,877	81,378	1,352
2010	89,776	1,499	70,045	1,170
2011	83,068	1,411	66,240	1,125
2012	107,490	1,888	87,779	1,541
2013	91,633	1,673	74,509	1,361
2014	77,594	1,474	63,145	1,199
2015	71,035	1,415	56,962	1,135
2016	76,000	1,587	61,162	1,277
2017	72,759	1,584	58,255	1,269

주: 1) 소년 범죄자의 연령기준은 10-18세임.
2) 2008년 소년 범죄자 수의 경우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3) 소년 범죄자율={소년 범죄자 수÷소년 인구(10-18세)}×100,000. 단, 2008년의 경우 범죄자 수에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됨에 따라 소년 인구를 10-19세로 정의하여 산출하였음.
4) 전체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지난 10년간 전체 형법범

죄자 수('연령 미상' 제외)가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17년의 전체 형법범죄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0% 감소하였다.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서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8.3%에서 2017년 6.2%로 낮아졌다. 이것은 10–18세에 해당하는 소년 인구의 감소 추세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X–24).

[그림X–24] 전체 형법범죄자 중 소년 형법범죄자 비율, 2008–2017



주: 1) 전체 형법범죄자 수는 '연령 미상'을 제외한 수치임.
2) 2008년 소년 범죄자 수는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합한 전체 범죄에서 모두 상당히 감소했고, 형법범죄만을 보면 소년 형법범죄자 수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형법범죄자율은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형법범죄자 중에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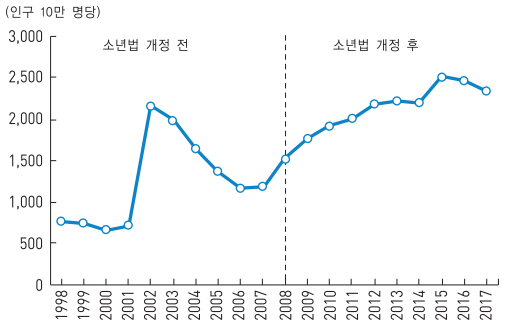
청소년 범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난 10년간의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다.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청소년 범죄자 수와 범죄자율이 모두 감소해서 오히려 2008년에 강화된 개정 소년법 시행이 범죄 억제효과(처벌의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범죄발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 소년법은 19세 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가하게 했고, 형법을 위반한 10세와 11세 청소년에게 개정 전에 없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개입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소년법의 범죄 억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19세 범죄자의 형법범죄자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은 19세 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이 주어졌고,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은 이들에게 형사처분이 주어졌다. 범죄 억제효과는 소년법 개정 이후로 형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게 되는 19세 청년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X–25]를 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9세의 형법범죄자율은 감소–급증–감소의 추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약한 증가 추세가 관찰된다. 한편 개정 소년법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9세의 형법범죄자율은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 결국,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19세의 형법범죄자율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서 처벌의 범죄 억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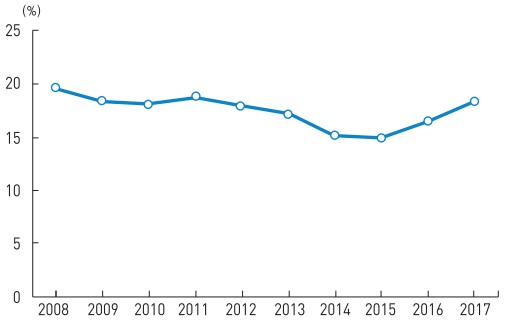
[그림Ⅹ-25] 19세 형법범죄자율, 1998-2017



주: 1) 19세 형법범죄자율=(19세 형법범죄자 수÷19세 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범죄에서도 성별 차이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림Ⅹ-26]에서 보듯이 전체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여자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 19.6%에서 2017년에는 18.3%로 소폭 감소했다. 여자 소년 형법범죄자 비율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낮아졌고 2016년부터 조금 높아졌다. 정리하자면 범죄의 영역에서 대다수의 소년 범죄자는 남자 청소년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에서 성별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Ⅹ-26] 여자 소년 형법범죄자 비율, 2008-2017



주: 1) 여자 소년 형법범죄자 비율=(여자 소년 형법범죄자 수÷전체 소년 형법범죄자 수)×1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소년 형법범죄자를 6개의 연령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Ⅹ-9〉에는 연령별 소년 형법범죄자율이 제시되어 있다. 2008-2009년에는 15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았

〈표Ⅹ-9〉 연령별 소년 형법범죄자율, 2008-2017

(인구 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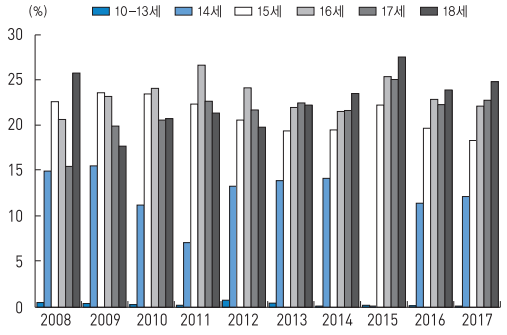
연도	10-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8	13	1,716	2,574	2,387	1,919	1,649
2009	9	1,829	2,759	2,685	2,338	2,214
2010	6	1,147	2,382	2,425	2,046	2,084
2011	4	703	2,164	2,570	2,161	1,998
2012	25	1,818	2,730	3,104	2,771	2,487
2013	11	1,694	2,245	2,475	2,441	2,401
2014	1	1,443	2,015	2,111	2,060	2,154
2015	2	1	2,050	2,368	2,215	2,354
2016	4	1,362	2,028	2,269	2,231	2,256
2017	2	1,486	2,091	2,175	2,156	2,350

주: 1) 연령별 소년 형법범죄자율=(해당 연령 형법범죄자 수÷해당 연령 인구)×100,000. 단, 2008년의 경우 범죄자 수에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연령 인구를 10-19세로 정의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다가, 2010–2013년 그리고 2015–2016년에는 16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14년과 2017년에는 18세의 형법범죄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형법범죄자율이 증가한 연령은 17세와 18세뿐이고 다른 연령의 형법범죄자율은 감소해서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각 연도별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 구성을 봐도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X-27]을 보면, 2009–2010년에는 소년 형법범죄자 가운데 15세와 16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2011–2012년에는 16세와 17세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3년에는 17세와 18세, 그 이후는 18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7세나 16세가 높았다.

[그림 X-27]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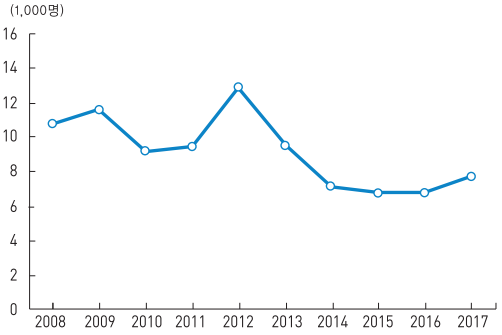


주: 1) 2008년 18세 구성비율의 경우 19세 범죄자가 포함된 수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청소년 범죄자 중 가장 어린 연령대가 촉법소년에 해당된다. 만 10세에서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이들은 대부분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직접 송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현황은 대검찰청 자료인 「범죄분석」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서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림 X-28]을 통해 지난 10년간 경찰서장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를 분석해 보면, 2008년에 1만 781명에서 2017년에 7,743명으로 28.2%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촉법소년 수는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림 X-28] 경찰서장에 의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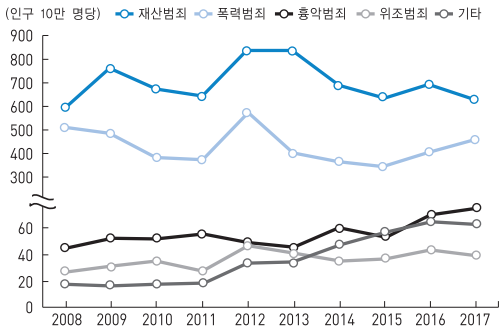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자료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10–13세의 촉법소년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주장은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소년 형법범죄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의 범죄자율을 살펴보았다. [그림Ⅹ-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범죄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자, 흉악범죄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소년 재산범죄자율의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 폭력범죄자율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하지만 전체적으로 약한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반면에 소년 흉악범죄자율은 2008년의 45.4명에서 2017년에는 75.4명으로 66.3% 증가하여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그림Ⅹ-29] 범죄유형별 소년 형법범죄자율, 2008-2017



주: 1) 소년 형법범죄자율={해당 범죄 소년 범죄자 수÷소년 인구(10-18세)}×100,000. 단, 2008년의 경우 범죄자 수에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됨에 따라 소년 인구를 10-19세로 정의하여 산출하였음.
2) 기타에는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 등을 포함시켰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증가 추세를 보인 소년 흉악범죄자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강도, 방화, 살인의 순이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소년 강도범죄자와 방화범죄자는 각각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살인범죄자에서 약한 증가 추세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다(표Ⅹ-10).

〈표Ⅹ-10〉 흉악범죄유형별 소년 형법범죄자 수, 2008-2017

(명)

연도	전체	살인	강도	성폭력 (강간 포함)	방화
2008	3,016	12	1,226	1,589	189
2009	3,182	18	1,414	1,574	176
2010	3,106	19	819	2,107	161
2011	3,289	12	1,082	2,021	174
2012	2,790	26	877	1,686	201
2013	2,521	23	623	1,735	140
2014	3,158	33	405	2,564	156
2015	2,713	16	432	2,207	58
2016	3,343	19	317	2,860	147
2017	3,463	18	244	3,083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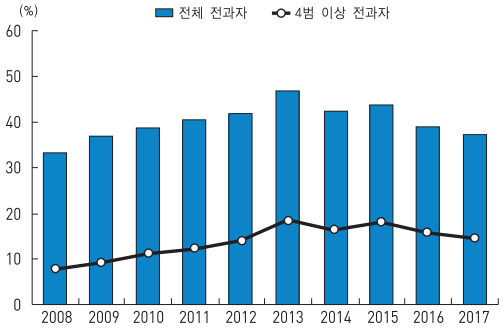
주: 1) 2008년 자료의 경우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자율에서 관찰된 변화는 소년 흉악범죄자율의 증가 추세이고, 이것은 2008년에 비해 1.9배 증가한 성폭력범죄자와 1.5배 증가한 살인범죄자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난 10년간 살인의 증가 추세는 매우 약하다는 점, 그리고 소년 성폭력범죄자 수의 증가가 관찰되지만 이것이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피해사실 공개와 고발로 인해 숨은 범죄가 가시

화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여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과 공범 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Ⅹ-30]을 보면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은 2008년 33.3%에서 2017년 37.4%로 소폭 증가하였다. 더욱이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4범 이상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7.9%에서 2017년 14.7%로 크게 증가해 청소년 재범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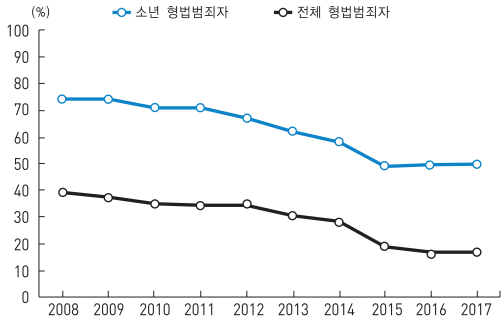
[그림Ⅹ-30] 소년형법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2008-2017



주: 1) 전과 횟수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였음.
2) 2008년 자료의 경우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일반인이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 범죄의 높은 공범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 범죄는 단독범이 주를 이루는 반면 청소년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2017년도의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공범률은 49.8%로 같은 해 전체 형법범죄자의 공범률 16.9%보다 3배가량 높았다(그림Ⅹ-31).

[그림Ⅹ-31] 소년 형법범죄자의 공범률, 2008-2017



주: 1) 공범률은 전체 소년 형법범죄자 중 공범 관계가 있는 소년 형법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공범 관계 '미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2008년 자료의 경우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재범과 공범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죄자 중에서 전과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고, 4범 이상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형법범죄자는 단독 범행보다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아서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청소년 범죄가 거칠고 사납게, 즉, 흉포화 되어 간다고 느끼는 것 같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의 증가 추이, 저연령화 및 흉포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에 표출된 불만 중 하나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보호처분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형사사법기관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년 범죄자의 기소율, 구속률, 보호처분을 위한 송치율을 살펴보았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이들 중 10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10–13세의 소년 범죄자(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근거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한다. 14세 이상의 소년 범죄자에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이 주어진다.

먼저 검사가 법원에 청소년 범죄자의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를 살펴보았다. 〈표 X–11〉에 따르면, 2008년도에 기소된 소년 형법범죄자는 7,565명에서 2017년에는 5,106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 범죄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이유에서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도 2008년에 1,864명이던 것이 2017년에는 722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 형법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보내는 보호 송치도 2008년 2만 2,252명에서 2017년 2만 398명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의 경우 검사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범죄소년 중 일부를 소년부에 송치하는 검사 송치 인원만 집계된다. 따라서 보호 송치된 전체 소년 범죄자 수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X–32]를 보면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을 위해 접수 된 소년보호사건 수는 2008년 4만 1,754건에서 2017년 3만 4,110건으로 줄어들어 지난 10년간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인원이 감소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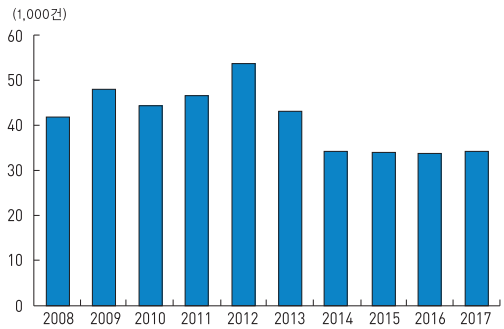
〈표 X–11〉 소년 형법범죄자의 처분 결과, 2008–2017

(명)

연도	전체	기소		보호 송치	불기소	기타
			구속			
2008	79,765	7,565	1,864	22,252	48,151	1,797
2009	81,378	5,037	1,568	26,804	48,212	1,325
2010	70,045	3,808	1,323	25,153	39,823	1,261
2011	66,237	3,717	1,265	25,327	35,868	1,325
2012	84,033	6,285	1,503	30,955	45,222	1,571
2013	71,673	7,045	1,348	25,109	37,606	1,913
2014	59,631	5,845	1,077	20,419	31,126	2,241
2015	53,028	5,532	1,087	17,596	28,494	1,406
2016	58,276	5,258	895	20,135	31,195	1,688
2017	56,496	5,106	722	20,398	30,668	324

주: 1) 기타에는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미상' 등이 포함됨.
2) 2008년 자료의 경우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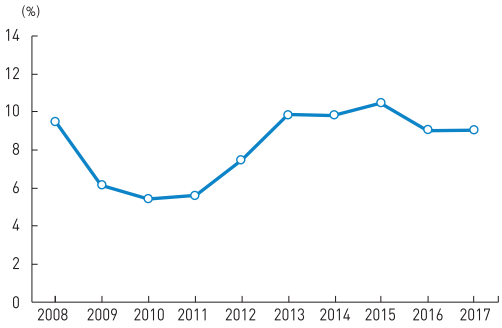
[그림 X–32]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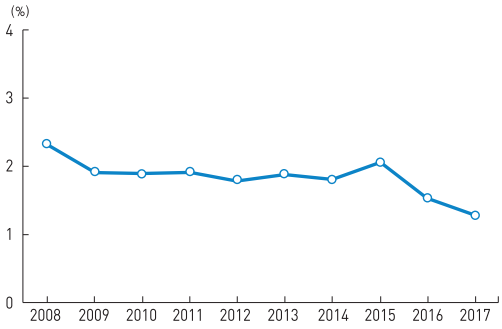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그림Ⅹ-33] 소년 형법범죄자의 기소율, 구속률 및 보호 송치율, 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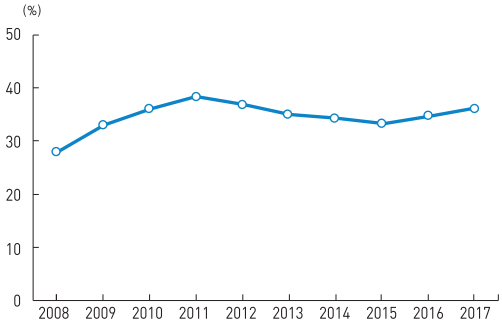
1) 기소율



2) 구속률



3) 보호 송치율



주: 1) 기소율, 구속률 및 보호 송치율은 각각 전체 소년 형법범죄자 중 해당 처분을 받은 소년 형법범죄자의 비율임.
2) 2008년 자료의 경우 19세 범죄자 수가 포함되어 집계되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지난 10년간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소년 형법범죄자 수도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기소율, 구속률, 보호 송치율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Ⅹ-33]을 보면 지난 10년간 청소년 형법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기소율과 보호 송치율은 일정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약간의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결국, 지난 10년간 청소년 형법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은 기존 보호처분 위주의 정책에서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형사처분을 위한 기소율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앞에서 본대로 청소년 흉악범죄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와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 및 형사사법당국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범죄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분석해본 결과, 청소년 범죄자가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했고 저연령화되기보다는 고연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흉포화 주장은 부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흉악범죄 중에서 성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는 증가했고, 청소년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도 높아졌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처벌과 보호의 논쟁에 끼어들기보다는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초범의 청소년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준법 시민으로 훈육할 가정과 학교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는 가정과 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찾고, 부모와 교사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2019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24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 준 | 연세대학교 337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석호 | 서울대학교 347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는 2010년대 들어 연고적 조직을 제외하면 위축되었으며, 특히 20대에서 낮은 참여를 보인다.
-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도 점점 더 소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 효능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준법 수준에 대한 본인과 타인의 평가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며, 도로 및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질서 준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교육기회 및 과세와 납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는 반면, 법 집행, 취업기회, 성별 대우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악화되어 왔다.
- 정부에 대한 부패 인식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정부에 대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신뢰와 관련된다.
- 정부와 지방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제도 및 다수의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으며, 낯선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 역시 하락했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사회 속의 개인과 개인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행사하는 상태와 조건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은 시민성과 참여, 신뢰와 협력, 포용과 관용 등을 강조한다(한준 외, 2017). 시민성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면 참여는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며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력의 기본 조건과 전제가 되는 신뢰는 타인이나 제도와 기관에 대해 나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과 관용은 사회적으로 약자나 상이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최근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주요 동향을 여기에서는 사회, 정치적 참여와 제도 및 타인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조사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첫해인 2013년과 가장 최근 연도인 2018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참여와 신뢰를 살펴보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준법 의식에 대한 「사회조사」의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년 조사 자료 및 공정성에 대한 2013년과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시민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비교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의 국제비교와 부패에 대한 인식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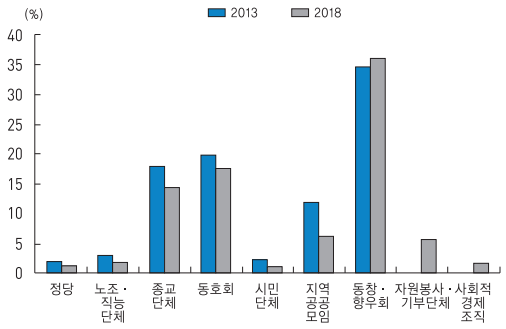
를 OECD에서 활용하는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볼 것이다.

사회·정치적 참여의 변화와 영향 요인들

19세기 중반 프랑스 정치사상가 토크빌이 활발한 자발적 결사체 결성과 참여를 미국의 참여적 시민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이후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은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져 왔다. 20세기 말 미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퍼트남 역시 미국인들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하락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회단체 참여는 어느 수준이며 추세는 어떠한가?

[그림 XI-1]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각 사회단체 종류별로 참여 및 활동 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해 '회원이면서 가끔 혹은 자주 활동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2013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종류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사회단체 참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2013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2018년 참여 비율만 제시되었다. 여러 사회단체들 중에서 동창회와 향우회에 대한 참여만이 34.6%에서 36.0%로 조금 늘었다.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크게 줄어든 사회단체는 지역사회 공공모임으로 11.9%에서 6.2%로 5.7%p가 줄었다. 연고적 성격을 지닌 단체에 참여가 늘어나고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단체에 대한 참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에 가장 참여가 많은 단체는 동창회와 향우회, 동호회, 그리고 종교단체의 순이었으며 2018년에도 그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가장 참여가 낮은 단체는 2013년에는 정당과 시민단체 순이었으나, 2018년에는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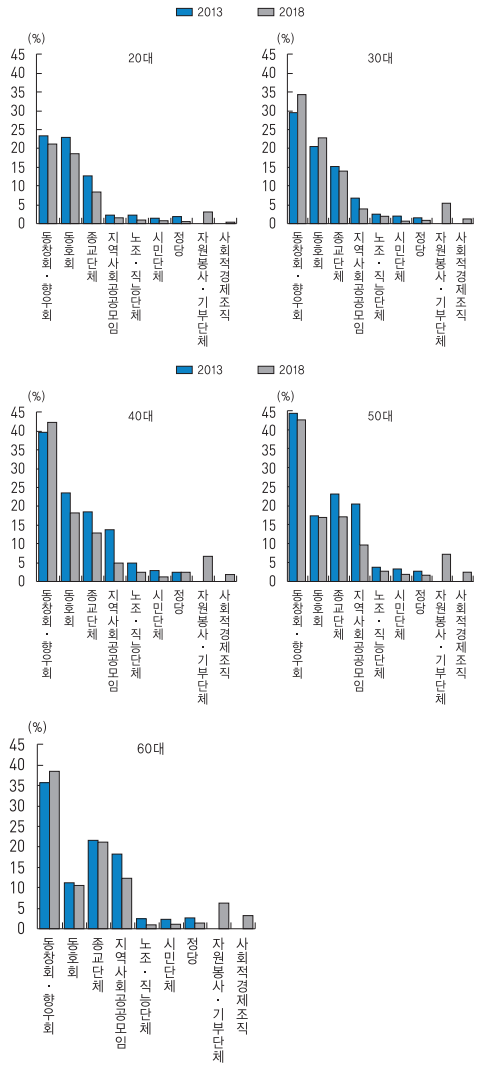
[그림 XI-1]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율의 경우 2013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연령대별로 나누어 2013년과 2018년의 사회단체 참여를 비교한 [그림 XI-2]를 보면 사회단체 참여 비율 및 변화에서 연령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사회단체 참여가 활발한 연령대가 40대와 50대인 반면, 가장 참여가 저조한 연령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2] 연령집단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3,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대에는 19세가 포함되어 있음.
3)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율의 경우 2013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모든 종류의 단체에 대한 참여가 줄어든 연령대는 5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는 지역사회 공공모임에 대한 참여가 20.3%에서 9.5%로 10.8%p, 종교 단체에 대한 참여가 23.0%에서 17.0%로 6.0%p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20대의 경우 동호회에 대한 참여가 23.1%에서 18.7%로 4.4%p, 종교 단체에 대한 참여가 12.7%에서 8.4%로 4.3%p 줄었다. 사회단체 참여가 늘어난 경우는 30대의 동호회 참여가 20.3%에서 22.7%로 2.4%p, 동창회 및 향우회에 대한 참여가 30대의 경우 29.3%에서 34.2%로 4.9%p, 40대의 경우 39.5%에서 42.1%로 2.6%p, 60대에서 35.6%에서 38.4%로 2.8%p 늘었다.

사회적 참여가 개인 및 공동체의 관심과 필요를 모두 반영한다면, 정치적 참여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운영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질문을 이용해 정치적 효능감을 거꾸로 즉, 비효능감으로 측정한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2013년과 2018년 모두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부정적 응답의 비율보다 높아 정치적 효능감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2013년 39.8%에서 2018년 43.1%로 늘어난 반면, 부정 응답 비율은 2013년 30.0%에서

2018년 23.1%로 줄어들었다.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탄핵과 정권 교체가 있었던 2017년을 포함해서 비교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정치적 비효능감이 높은 수준이고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XI-1〉은 연령대별로 정치적 효능감 수준 및 변화를 비교한다. 2018년 정치적 비효능감에 대해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48.2%) 부정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19.6%) 것은 60대인 반면, 부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26.5%) 긍정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은(39.8%) 것은 30대이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아서 정치적 효능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치적 비효능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늘어났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20대로 35.1%에서 40.6%로 5.5%p 늘었으며, 그 다음은 40대로 4.0%p 늘어났다. 부정 응답이 가장 많이 줄어든 연령대는 50대로 30.0%에서 20.7%로 9.3%p 줄었다.

〈표 XI-1〉 연령대별 정치적 비효능감, 2013, 2018

(%)

	긍정		중립		부정	
	2013	2018	2013	2018	2013	2018
20대	35.1	40.6	33.8	36.3	31.1	23.0
30대	38.7	39.8	34.1	33.7	27.2	26.5
40대	38.9	42.9	28.2	31.9	32.9	25.2
50대	41.8	44.7	28.1	34.6	30.0	20.7
60대	48.6	48.2	24.0	32.1	27.4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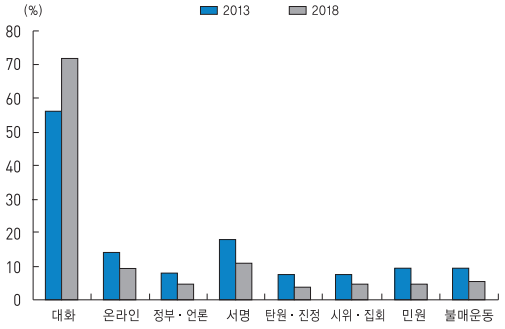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대에는 19세가 포함되어 있음.
3) 설문문항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4) 긍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중립은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이며, 부정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정치적 효능감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참여의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정치적 참여가 줄어들었는가? 현대 민주주의의 주요 참여방식인 투표율만 갖고 본다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 모두에서 투표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반전을 보여 최근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의 상승세는 완만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2016년 국회의원 선거(58.0%), 2017년 대통령 선거(77.2%), 2018년 지방자치 선거(60.2%)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참여의 전부는 아니며, 다양한 정치적 참여 방식이 있다.

[그림 XI-3]은 다양한 참여방식에 따른 정치참여 수준의 변화를 2013년과 2018년 사이 조사한 결과이다. 정치참여는 지난 1년간 해당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했다. 그림을 보면 한국의 시민들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적인 경험이 2013년 56.4%에서 2018년 72.0%로 15.6%p 증가해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의 의견 표명,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나 진정서, 청원서 작성 및 제출, 시위나 집회참여,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민원 전달, 불매운동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공적인 참여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시위나 집회참여는 2017년 14.4%로 2013년 7.5%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2018년에는 4.9%로 다시 크게 낮아져서 2017년이 예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XI-3]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시위와 집회 참여가 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직접 행동, 의견제시 또는 전달 등을 통해 공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것은 복잡해지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늘어난 오늘날의 상황에서 중요하다. 낮은 정치적 효능감은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 참여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정치적 논의와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에 대해 냉소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효능감이 계속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효능감과 낮은 정치적 참여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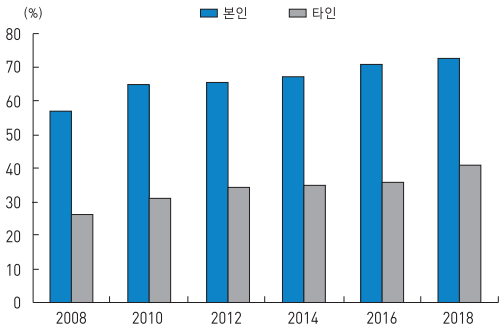
시민의식의 변화

시민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사회가 원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민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민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로 정한 규칙과 규범을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고 동시에 다른 시민들이나 사회지도층이 규칙을 어기거나 공정치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고 있는가?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는 2008년 이후 격년으로 법을 잘 지키는지, 공공질서를 잘 유지하는지 묻고 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민적 역할의 수행 정도를 살펴보자.

[그림 XI-4]는 「사회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본인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대해 '매우 잘 지킨다' 혹은 '약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을 비교하였다. 본인

준법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08년 56.9%인 반면 타인의 준법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2008년의 경우 본인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준법 수준이 높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준법 수준이 높다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후 2년 마다 동일 질문에 대한 반복된 응답 결과를 보면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나 타인들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 모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증가한 결과 2018년 조사에서는 본인 준법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72.4%, 타인들의 준법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41.0%로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에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XI-4] 본인과 타인의 준법 수준 평가,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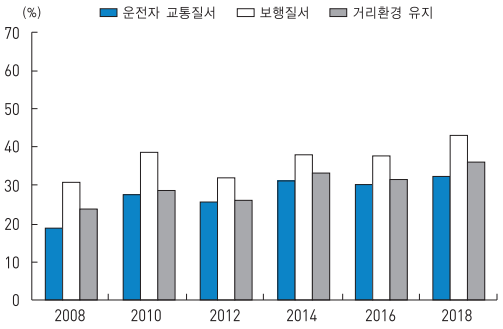


주: 1) 전국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임).
2)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는 해당 문항에 대해 '아주 잘 지킨다' 또는 '비교적 잘 지킨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주관적 평가로 살펴본 준법 수준이 지난 10년간 높아졌다고 한다면 공공질서 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었는지 「사회조사」 응답결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사회조사」에서는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 보행자의 보행질서 준수, 그리고 침을 뱉지 않는 거리환경 질서 준수 등 도로 상에서의 질서 준수 여부를 묻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유지하는지, 금연을 지키는지, 그리고 차례를 지키는지 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준수 여부를 묻는다.

도로에서의 공공질서 준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XI-5]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보행질서를 준수한다는 응답은 30.9%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앞서지만, 운전자 교통질서를 지킨다는 응답과 거리환경 질서 유지 응답은 18.9%, 23.9%로 모두 부정적 응답에 못 미친다. 그런데 2018년에는 운전자 교통질서를 지킨다는 응답이 32.3%로 13.4%p 증가했고, 거리환경 질서를 지킨다는 응답은 36.0%로 12.1%p 증가했으며, 보행질서를 지킨다는 응답은 43.1%로 12.2%p가 증가했다.

[그림 XI-5] 도로에서의 공공질서 준수 평가,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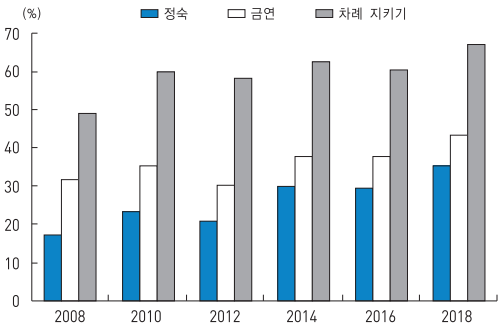
주: 1) 전국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임).
2) 도로에서의 공공질서 준수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항목에 대해 '아주 잘 지킨다' 또는 '비교적 잘 지킨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 결과 2018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거리환경 질서 모든 면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준법 수준만이 아니라 도로 질서 면에서도 시민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관적 응답이고 본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 XI-6]은 도로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지키고, 금연을 하는지, 그리고 차례를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8년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차례를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은 48.7%로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앞선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금연한다는 응답 비율은 2008년 31.6%로 금연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비슷하고, 정숙을 지킨다는 응답은 2008년 17.1%로 정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다.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차례를 지키고, 금연을 하고, 정숙을 지킨다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서 2018년 차례를 지킨다는 비율이 66.7%, 금연한다는 비율은 43.2%, 정숙을 지킨다는 비율은 35.1%로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을 앞선다. 이 결과는 앞서 도로에서의 공공질서 준수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응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0년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유지가 개선되었으며 이를 시민의식의 제고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XI-6]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준수 평가, 2008-2018



주: 1) 전국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2008-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임).
2) 공공질서에서의 질서 수준에 대한 평가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항목에 대해 '아주 잘 지킨다' 또는 '비교적 잘 지킨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로서 공정성 차원에서 사회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정성이 얼마나 지켜지는가를 응답자들에게 물어본다. [그림 XI-7]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 여러 사안별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약간 공정하다' 혹은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변화한 내용을 보여준다.

[그림 XI-7-1]은 2013년과 2018년 사이 공정성이 개선된 사안들을 보여준다. 공정성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공정치 못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에 비해 교육기회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교육기회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2013년 60.8%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우세했는데 2018년에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65.7%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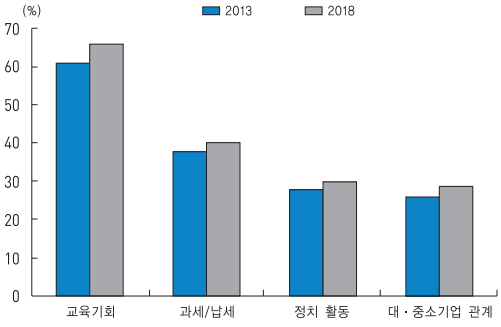
4.9%p가 늘어났다. 사교육이 활발하고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에 대해서는 노력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늘어난 셈이다. 과세와 납세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2013년 37.6%에서 2018년 40.1%로 2.5%p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와 납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더 우세하다. 정치활동의 기회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2013년 27.7%로 낮은 편인데, 2018년에는 30.0%로 2.3%p 늘어나서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공정하다는 응답 역시 2013년 26.0%로 낮은 편이었는데 2018년에는 2.6%p 늘어나서 28.6%이다.

[그림 XI-7-2]는 2013년과 2018년 사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경우들을 보여준다. 공정성 인식이 나빠진 대표적인 경우는 성별 대우에 대한 인식이다. 성별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50.5%에서 2018년 44.2%로 6.3%p 낮아졌다. 법 집행에 대해서 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38.9%에서 2018년 4.8%p 낮아져 34.1%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법 집행을 담당한 법원의 공정성 인식 또한 함께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법원 운영이 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38.1%에서 36.6%로 낮아졌다. 한편 취업기회가 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38.4%에서 2018년에 4.0%p 낮아져 34.4%이다. 복지혜택의 경우 큰 변화 없이 2013년과 2018년 공정 응답 비율이 45.8%과 45.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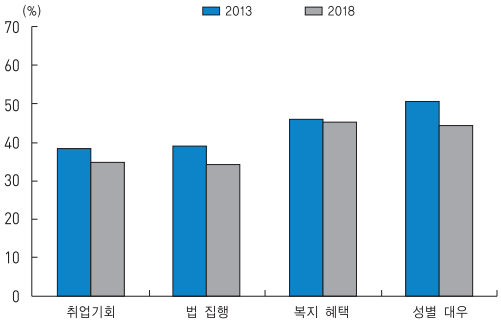
공정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평가하는 것이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로서 부패이다. 과거 권력 집중이 심했던 권위주의 국가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 부패는 늘 쟁점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부패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개선되었는가 아니면 악화되었는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편인가 아니면 낮은 편인가?

[그림 XI-7] 주요 분야별 사회 공정성 인식, 2013, 2018

1) 사회 공정성 인식이 개선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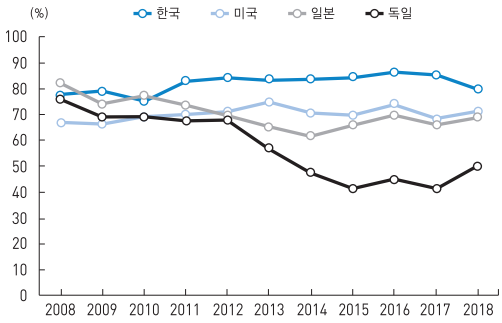
2) 사회 공정성 인식이 악화된 분야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공정성 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항목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부패 인식(perception of corruption)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을 한국, 미국, 일본, 독일에 대해 비교한 것이 [그림 XI-8]이다. 이 그림에서 부패 인식은 '정부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2018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으로 79.7%의 응답자들이 부패가 정부에 널리 퍼져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낮은 것은 독일로 49.6%였다. 한국과 독일은 약 30%p의 차이가 있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68.7%와 71.0%로 한국과 독일 중간의 수준을 보인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2008년 75.8%에서 2018년 49.6%까지 부패 인식 비율이 26.2%p나 낮아졌다. 일본도 부패 인식 비율이 81.6%에서 68.7%로 12.9%p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부패 인식 비율이 2008년 77.1%에서 2018년 79.7%로 2.6%p 높아졌으며, 미국도 2008년 66.8%로부터 2018년 71.0%로 4.2%p 높아졌다.

[그림 XI-8] 주요 국가별 정부에 대한 부패 인식 수준,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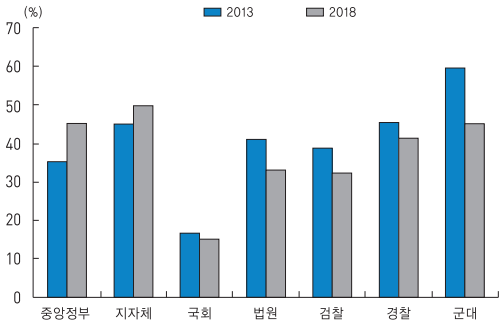
주: 1) 부패인식 수준은 각국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정부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Gallup, *Gallup World Poll*, 각 연도.

사회적 신뢰의 변화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또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주된 기관이나 제도들이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신뢰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신뢰,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림 XI-9]는 시민들이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는 해당 기관이나 제도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다' 혹은 '별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 대신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여러 공공기관들 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은 국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16.7%와 15.0%의 응답자들만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I-9] 공공 제도들에 대한 신뢰, 2013,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공공기관들 중에서 입법부인 국회를 제외하면 행정부인 중앙과 지방 정부,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상반된 변화를 보여준다. 행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35.3%에서 45.3%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44.9%에서 49.8%로 각각 10.0%p와 4.9%p 높아졌다. 반면 사법부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는 41.0%에서 33.0%로 8.0%p 낮아졌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행정부인 중앙정부 부처보다 높았던 반면, 2018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역전되었다. 앞서 법 집행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악화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법원이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믿음에 손상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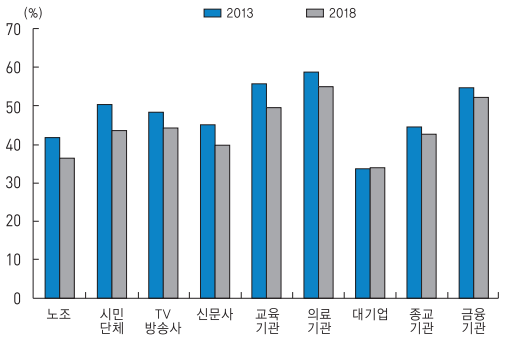
공공질서와 시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 군대 모두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신뢰도의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38.6%에서 32.2%로 6.4%p 줄었고, 경찰은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45.4%에서 41.2%로 4.2%p 줄었다. 또한 군대의 경우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59.6%에서 45.1%로 14.5%p나 줄었다. 공공기관 및 제도들 중에서 신뢰도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은 군대이며 그 결과 군대는 2013년 공공기관 및 제도들 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신뢰를 받았지만 2018년에는 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 및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다음이 중앙정부 부처로 바뀌었다.

[그림 XI-10]은 민간기관 및 제도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공공기관 및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질문하여 '매우 신뢰한다' 혹은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관 및 제도별로 보여준다. 민간기관 및 제도들에 대한 신뢰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제도들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는 민간기관 및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민간기관 및 제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 비율을 보이는 대기업은 2013년과 2018년에 각각 33.6%와 3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밖의 모든 민간기관과 제도들은 신뢰 비율이 하락했다.

신뢰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민간기관 및 제도들로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이 각각

58.8%에서 54.9%로 3.9%p, 55.8%에서 49.6%로 6.2%p, 54.7%에서 52.2%로 2.5%p 신뢰 비율이 낮아졌다. 언론기관으로는 TV 방송사가 48.4%에서 44.3%로 4.1%p 신뢰 비율이 낮아졌고, 신문사는 45.1%에서 39.7%로 5.4%p 신뢰가 하락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역시 각각 42.0%에서 36.5%로 5.5%p, 50.5%에서 43.6%로 6.9%p 신뢰 비율이 낮아졌다.

[그림 XI-10] 민간 제도들에 대한 신뢰,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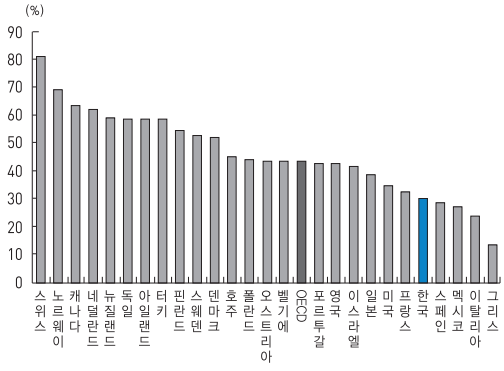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행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제도 및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은 최근 각 기관들의 과거 문제점들이 정치 및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 다수 분야에서 공정성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한다던지, 투명성 면에서 여전히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깊다.

한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림 XI-11]은 OECD에서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사회 2019(Society at a Glance 2019)」에 제시된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제시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2016년과 2017년 평균하여 국가별로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 30.0%의 응답자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29위를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국가는 81.0%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스위스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룩셈부르크(71.0%), 노르웨이(69.0%), 캐나다(63.5%) 등의 순이다. OECD

[그림 XI-11] OECD 주요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6-2017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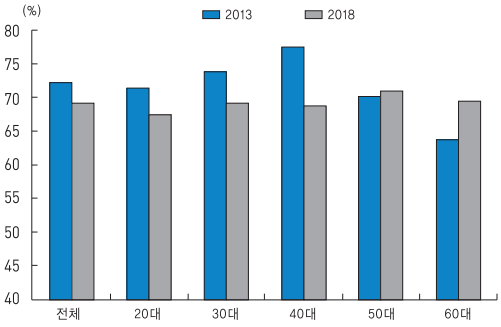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정부 신뢰도는 조사대상자 중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2019.

국가들의 평균은 4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일본은 38.5%이고 미국은 34.5%으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한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 비율이 낮은 OECD 국가들로는 라트비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멕시코, 칠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와 달리 일반화된 신뢰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화된 신뢰가 낮으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고 협력이 어려우며 사회적 참여가 위축되는 반면, 일반화된 신뢰가 높으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용이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사회적 참여도 활발하다. [그림 XI-12]는 일반화된 신뢰의 정도 및 연령대별 비교를 2013년과 2018년에 대해 보여준다. 일반화된 신뢰는 대상의 특성이나 본인과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인 타인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며, 여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와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쳐 일반화된 신뢰의 정도로 본다.

[그림 XI-1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반화된 신뢰의 정도는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72.2%로부터 69.2%로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2013년에는 40대가 77.5%로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60대가 63.7%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지만, 2018년에는 50대가 71.0%로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고 20대가 67.4%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 수준의 하락이 큰 연령대는 40대로 2013년 77.5%에서 2018년 68.7%로 8.8%p 신뢰 수준의 하락을 보이며, 대부분 연령대에서 신뢰 수준의 하락이 있었지만 60대는 2013년 63.7%에서 2018년 69.5%로 신뢰 수준이 5.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12] 대인 신뢰, 2013,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대에는 19세가 포함되어 있음.
3)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8.

앞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성의 표현으로서 준법 수준이나 질서 준수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았다. 이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질서가 보다 잘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소극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규칙을 지키는 것은 시민으로서 사

회통합에 기여하는 최소이지 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낮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한준 외. 2017.「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Ⅲ: 교육, 문화, 사회통합」. 통계개발원.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준 (연세대학교)

-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거나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19–69세 인구의 14.1%가 가족과, 3.0%가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으며, 18.3%가 목돈을 빌릴 사람이, 9.3%가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6.5%가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없다.
- 국제비교 결과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편이다.
- 한국은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2006–2014년 평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30대 이하가 6.7%인데 비해 50대 이상이 39.1%로 연령대별 격차가 OECD에서 가장 높다.
- 한국에서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모두 2016–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사회적 고립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는 고립이 완화되는 반면 20대에서는 고립이 늘어나고 있어서 연령대별 격차 역시 201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고립이 심하지만 학력별 격차 역시 최근 줄고 있다.
-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주관적으로 고립감이 높을 뿐 아니라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소외와 고립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사회적 신뢰의 하락, 사회적 참여의 위축과 함께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자본의 위기를 나타내는 증상으로 많이 언급된다. 한국에서도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혼밥(혼자 하는 식사),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여(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한편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늘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돈과 시간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구조적 제약의 결과인 측면도 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개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가 됨"으로 규정한다. 타인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개인 선택인지 구조적 제약인지 통계 자료 분석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결과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는 알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는 사회적 욕구의 미충족과 함께 위험에 대처 곤란을 가져와 삶의 질을 낮출 것이다. 또한 사회 입장에서 관계 단절과 지원 부족은 신뢰와 협력의 하락, 사회적 위험의 증가를 통해 사회통

합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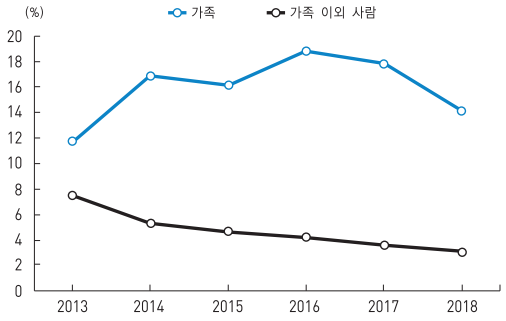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주변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관계 단절의 경우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지원 부족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심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접촉과 교류 측면에서 본 사회적 고립

사회적 관계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한 반복해서 확인과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교류나 대화가 중단되면 결국 사회적 관계도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한가의 여부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가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적 교류와 대화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XI-13]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한 명과도 접촉이 없었던 사람의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 타인과의 접촉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귀하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 결과를 보면 가족과의 연락이나 접촉이 없었던 사람의 비율은 2013년에 응답자의 11.7%로부터 2016년 18.8%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낮아져서 2018년에는 응답자의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외의 사람과 연락이나 접촉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2013년 응답자의 7.4%로부터 2018년에 3.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은 늘었다가 2016년 이후 줄어든 반면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줄어 적어도 2016년 이후 사회적 고립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13]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항목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인구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적 고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 및 학력수준에 따라 사회적 접촉이 없는 비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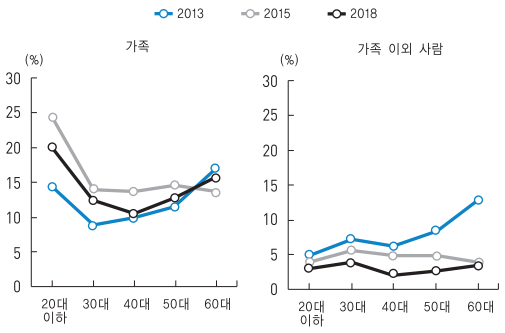
[그림 XI-14]는 하루 중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 사회적 접촉이 없는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족과 접촉이 없는 비율은 2013년 30대가 8.8%로 가장 낮고 60대가 17.0%로 가장 높았는데, 2015년에는 20대가 24.5% 까지 높아졌고 60대는 13.7%까지 낮아졌다. 2018년에는 20대는 19.9%로 다소 낮아지고, 60대는 15.7%로 높아져 20대와 60대가 높고 40대가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인다.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은 2013년 20대가 4.9%로 가장 낮고 60대가 12.7%로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고립이 증가하는데, 2015년에는 60대가 3.9%로 크게 낮아져 20대의 3.8%와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8년에는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이 전 연령대에 걸쳐 더욱 낮아지는데 특히 40대와 50대가 각각 2.1%와 2.6%로 가장 낮다.

위에서 살펴본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노년층의 고립이 완화되어 연령대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을 이용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2년과 2016년 자료를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가 [그림 XI-1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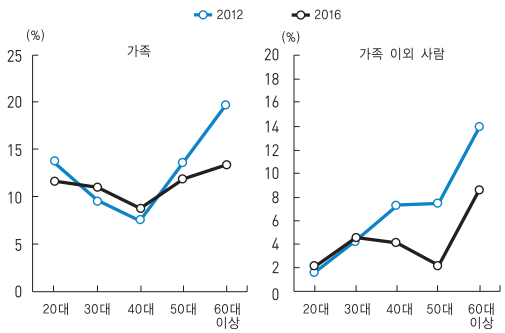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도 왼편의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이나 오른편의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 모두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에는 60대 이상에서 가족과 접촉이 없는 비율이 19.7%, 가족 이외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그림 XI-14] 연령대별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대에는 19세가 포함되어 있음.
3)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항목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5] 연령대별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 2012,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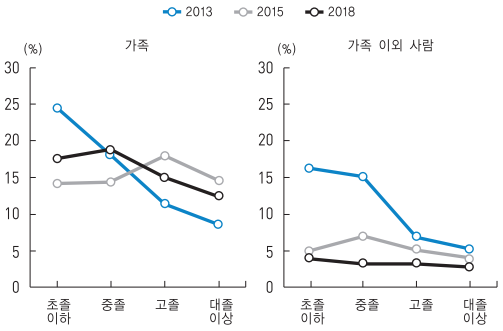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항목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율이 13.9%로 매우 높아 다른 연령대와의 차이가 5%p 이상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에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10% 내외로 비슷한 가운데 40대가 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20대에서 50대까지 2%에서 4%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60대 이상만 8.6%로 다소 높은 편이다. 사회적 접촉이 없는 관계적 고립의 연령대별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드는 것은 「한국종합사회조사」나 「사회통합실태조사」 모두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림 XI-16]은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의 학력별 차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학력에 따른 가족과의 접촉 결여 비율의 차이를 보면, 2013년에는 가족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24.4%(초졸 이하)에서 8.5%(대졸 이상)까지 낮아지는 것이 뚜렷한 반면, 2015년과 2018년에는 가족과 접촉이 없는 비율이 초졸 이하에서 줄어들고 대졸 이상에서 늘어서 학력별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의 학력별 차이의 변화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초졸 이하와 중졸이 각각 16.2%와 15.0%로 높은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6.8%와 5.1%로 낮아서 고졸을 기준으로 10%p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반면 2015년과 2018년에 초졸 이하와 중졸에서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이 크게 줄어 2018년에는 3% 정도에서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XI-16] 학력별 가족 및 가족 이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비율,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비율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항목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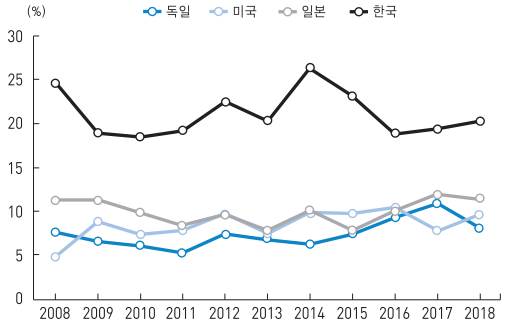
지원 측면에서 본 사회적 고립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 도움을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라고 부른다. 어려울 때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되었건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되었건 평소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또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적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바로 호의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호혜성(reciprocity)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XI-17]은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국제비교하기 위해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자료를 이용해 한국과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에 제시된 것은 "만약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한국과 나머지 나라들 간의 사회적 지지가 없는 비율의 절대적 수준 차이이다. 한국이 대체로 20%를 넘는 것에 비해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는 10%에 대체로 못 미치는 정도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못 받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한국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일본이 일정한 변화추세가 없는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완만하게 사회적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면, 한국은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사회적 지지를 못 받는 비율이 26.2%까지 높아졌다가 2015년 이후부터 20% 정도로 낮아져서 사회적 지지의 악화와 회복이 연속되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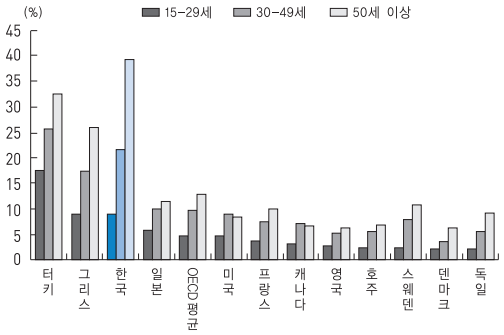
[그림 XI-17] 주요 국가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08-2018



주: 1)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만약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100%에서 차감한 수치임.
출처: Gallup, *Gallup World Poll*,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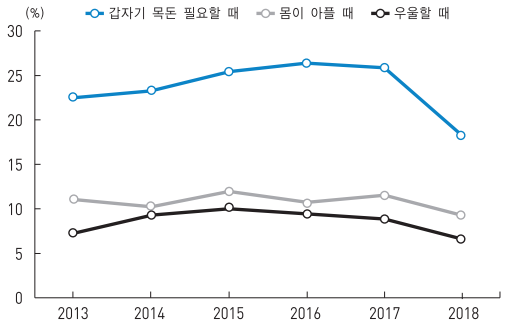
[그림 XI-18]은 앞에서 살펴본 「갤럽세계여론조사」의 사회적 지원 결여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를 국제 비교한 결과이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갤럽세계여론조사」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합쳐서 국가별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15-29세, 30-49세,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두드러진 점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가 한국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15-29세에서는 지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6.7%인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39.1%나 돼서 무려 32.4%p 차이를 보인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원을 못 받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OECD 전체 평균도 15-29세가 4.8%, 30-49세가 9.7%, 50세 이상이 12.9%로 가장 낮은 연령대와 높은 연령대 간 차이가 10%p가 안 된다. 국제비교에서 한국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함께 연령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지원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이 한국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XI-18] OECD 주요 국가의 연령집단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06-2014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그림 XI-19] 사회적 위기 상황별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위기 상황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질문하여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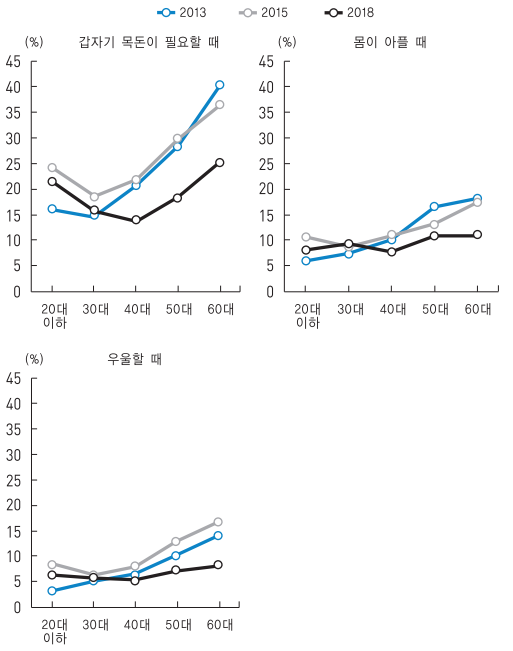
사회적 지원을 보다 상세하게 구분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하였다. [그림 XI-19]는 이들 세 경우 각각에 대해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들을 비교하면 우울할 때 함께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기가 그나마 용이했으며, 그 다음이 몸이 아파 거동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가장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은 갑작스레 필요한 목돈이 필요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비율은 2013년 22.5%에서 2016년 26.4%까지 증가하지만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8년에는 18.3%까지 줄었다. 또한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2013년 11.1%에서 2017년 11.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2018년에는 9.3%로 2.2%p 줄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는 비율도 2013년 7.3%에서 2015년 10.1%까지 늘어나지만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8년 6.5%로 줄었다.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사람의 비율은 대체로 201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한국의 사회적 지원에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결여의 높은 비율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인 사회적 지원의 높은 연령별 격차는 최근 들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그림

XI-20]은 앞의 세 경우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XI-20]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대에는 19세가 포함되어 있음.
3)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질문하여 '없다'고 응답한 해당 연령집단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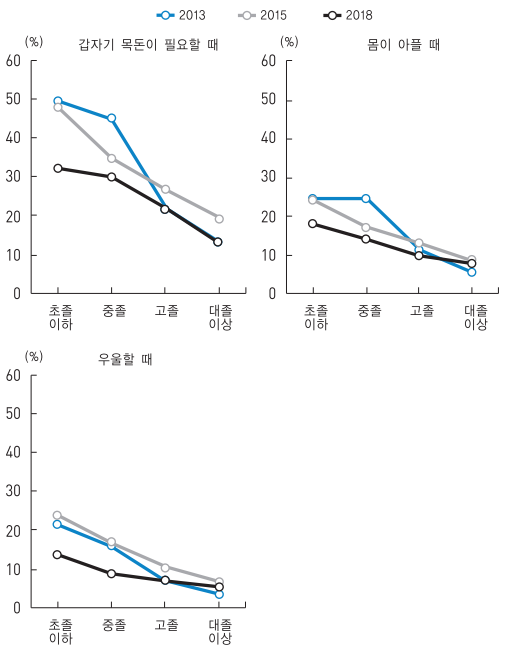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세 경우 모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가 최근 들어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는 2013년에 최저 16.0%(20대)와 최고 40.3%(60대)로 24.3%p나 되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최저 13.8%(40대)와 최고 25.0%(60대)의 차이가 11.2%p로 줄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 역시 2013년에는 최저 5.9%(20대)와 최고 18.1%(60대)의 차이가 12.2%p인 반면, 2018년에는 최저 7.8%(40대)와 최고 11.0%(60대)의 차이가 3.2%p에 불과하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비율 역시 2013년 최저 3.3%(20대)와 최고 14.0%(60대)의 차이가 10.7%p인 반면, 2018년에는 최저 5.5%(40대)와 최고 8.2%(60대)의 차이가 2.7%p로 크게 줄었다.

[그림 XI-20]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연령별 차이 규모가 줄어든 외에도 연령별 차이의 패턴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와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모두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40대에서 60대까지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줄어든 반면, 20대는 반대로 늘어났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60대에서 목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은 40.3%에서 25.0%로,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은 18.1%에서 11.0%로,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비율은 14.0%에서 8.2%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에서는 목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이 16.0%에서 21.3%로,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은 5.9%에서 7.9%로,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비율은 3.3%에서 6.3%로 늘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세 경우 모두 20대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면, 2018년에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40대로 바뀌었다.

[그림 XI-21]은 목돈을 빌릴 사람,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비율의 학력별 차이를 보여준다. 연령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차이 역시 세 경우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차이 규모가 줄어들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패턴은 변함이 없다. 목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비율의 학력별 차이는 2013년 최저 13.2%(대졸 이상)와 최고 49.6%(초졸 이하)로 36.4%p에서, 2018년에는 최저 13.3%(대졸 이상)와 최고 32.2%(초졸 이하) 간의 18.9%p로 줄었다.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비율의 학력별 차이 역시 2013년 최저 5.5%(대졸 이상)와 최고 24.4%(초졸 이하) 간의 18.9%p에서 2018년 최저 7.7%(대졸 이상)와 최고 18.1%(초졸 이하) 간의 10.4%p로 줄었다. 마지막으로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비율의 학력별 격차는 2013년 최저 3.5%(대졸 이상)와 최고 21.5%(초졸 이하) 간의 18.0%p에서 2018년 최저 5.3%(대졸 이상)와 최고 13.7%(초졸 이하) 간의 8.4%p로 줄었다.

[그림 XI-21] 학력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2013-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학력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질문하여 '없다'고 응답한 해당 학력별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사회적 고립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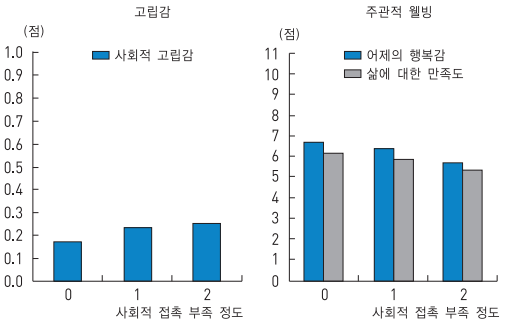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이 개인 차원에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 차원에서 사회의 질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낳는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개인 삶의 질이 낮아지는가는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의 질이 낮아지는가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XI-22]에서 [그림 XI-24]는 사회적 접촉

의 결여와 사회적 지원의 결여라는 두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이 고립감과 주관적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고립감은 "나는 외롭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세 진술 각각에 대한 4점 척도의 동의 여부 응답을 합쳐서 0점으로부터 1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한 것이다. 세 문항에 대해 응답자 34.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은 0.18이다. 또한 주관적 웰빙은 어제 경험한 긍정적인 주관적 정서 경험으로서 행복감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각각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이다. 행복감의 경우 72.5%의 응답자가 보통(5점)보다 높게 응답했으며 평균은 6.62이다. 삶의 만족도는 63.7%의 응답자가 보통(5점) 이상으로 응답했고 평균은 6.09이다. 사회적 접촉의 결여는 하루 중 가족과 접촉이 없는 경우와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경우 모두 해당되면 2,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1, 둘 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간주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결여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없는 경우,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모두 해당되면 3, 이들 중 두 개가 해당되면 2, 하나만 해당되면 1, 어느 것도 해당이 없으면 0으로 간주하였다.

하루 중 가족이나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정도에 따라 고립감과 주관적 웰빙을 비교한 [그림 XI-22]를 보면, 고립감의 경우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 중 하나라도 접촉이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립감이 0.17에서 0.2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웰빙의 경우 가족과 가족 이외 사람과의 접촉이 모두 없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에 비해 행복감이 6.68에서 5.68로, 삶의 만족도가 6.15에서 5.3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차이는 모두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XI-22] 사회적 접촉 결여 정도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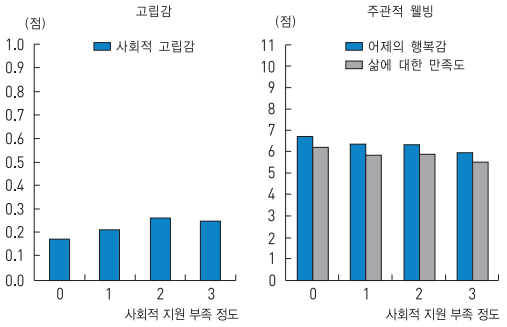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고립감은 "나는 외롭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세 진술 각각에 대한 4점 척도의 동의 여부 응답을 합쳐서 0점으로부터 1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한 수치임.
3) 주관적 웰빙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수치임.
4) 사회적 접촉 결여 정도는 "가족 또는 친척" 및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의 접촉에 모두 '없다'고 응답한 경우 2,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1, 둘 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전환한 수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그림 XI-23]은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이 결여된 정도에 따른 고립감과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보여준다. 세 측면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고립감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17에서 0.2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웰빙은 세 측면 모두 지원을 갖춘 경우에 비해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각각 6.72에서 5.95로, 6.19에서 5.5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의 결여에 따른 고립감 증가와 주관적 웰빙의 하락 모두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마지막으로 [그림 XI-24]는 사회적 접촉이 없는 관계에서의 고립과 사회적 지원이 없는 지원에서의 고립을 교차시켜 고립감과 주관적 웰빙에 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관계와 지원에서 전혀 고립되지 않은 경우(응답자의 67.2%)에 비해 지원의 고립(16.9%)과 관계의 고립(9.9%)의 경우에는 고립감은 0.17로부터 0.21과 0.20으로 증가하고, 행복감은 6.75로부터 6.37과 6.47로 감소하며, 삶의 만족도는 6.23으로부터 5.82와 5.8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측면에서 모두 고립된 경우(응답자의 5.9%)에는 고립감은 0.28로 크게 증가하고, 행복감은 6.06으로, 만족도는 5.68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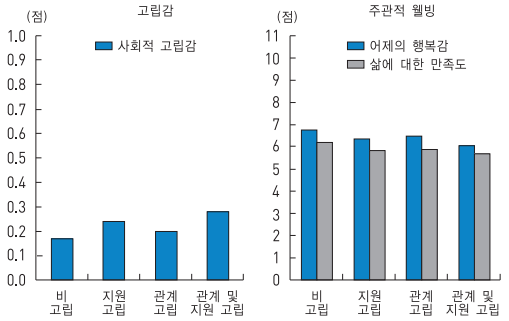
[그림 XI-23] 사회적 지원 결여 정도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고립감은 "나는 외롭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세 진술 각각에 대한 4점 척도의 동의 여부 응답을 합쳐서 0점으로부터 1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한 수치임.
3) 주관적 웰빙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수치임.
4) 사회적 지원 결여 정도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에 모두 해당되면 3, 이들 중 두 개가 해당되면 2, 하나만 해당되면 1, 어느 것도 해당이 없으면 0으로 전환한 수치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그림 XI-24] 사회적 관계 및 지원 고립 유형에 따른 고립감 및 주관적 웰빙, 2018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고립감은 "나는 외롭다",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세 진술 각각에 대한 4점 척도의 동의 여부 응답을 합쳐서 0점으로부터 1점까지의 척도로 전환한 수치임.
3) 주관적 웰빙은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0에서 10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수치임.
4) 사회적 관계 및 지원 고립 유형 중 '사회적 관계 고립'은 가족/친족 및 가족/친족 외 사람과의 접촉이 모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한 가지 경우만 있거나 모두 없는 경우)로 전환하였고, '사회적 지원 고립'은 목돈을 빌리거나, 아플 때 도움을 청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모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모두 없거나 한, 두 경우의 상대가 있는 경우)로 전환하였음. 이 후 '사회적 관계 고립'과 '사회적 지원 고립' 유형을 교차하여 두 유형의 고립이 모두 없는 경우를 '비고립', 사회적 관계 고립만 있고 사회적 지원 고립이 없는 경우를 '지원 고립', 사회적 지원 고립만 있고 사회적 관계 고립이 없는 경우를 '관계 고립', 그리고 두 유형의 고립이 모두 있는 경우를 '관계 및 지원 고립'으로 정의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김석호 (서울대학교)

-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8년과 2018년 두 시기 모두에서 한국인은 미국인과 유럽인에 대해 가장 수용적이고,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을 가장 멀게 생각한다.
-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그 속도는 더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 젊은층인 20대에서 중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한 배타성이 관찰되며, 외국인 출신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본인, 유럽인, 미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면,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 외국인 밀집 지역과 그 인근에 사는 한국인의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전체 한국인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다.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은 다(多)인종사회에서 집단 간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서로 다른 인종·민족 집단 간 관계는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좌우할 요인이 되었다. 특히, 최근 난민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류집단인 한국인이 소수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문화사회로의 안정적 전환과 미래 사회통합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다른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태도와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도 다룬다. 이는 소수집단인 이주민의 주류집단인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인종집단 간 관계를 상호적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함이다. 소수집단의 다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가까워졌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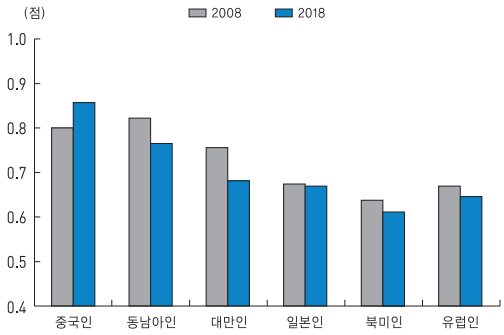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 학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할 때는 미국의 보가더스(Bogardus) 교수 연구팀이 50여 년에 걸쳐 정립한 개념과 측정법을 따른다. 보가더스는 1900년대 초 인종 간 긴장 상태를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회현상으로 지목하고, 과학적 조사방법론을 동원해 인종 간 편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보가더스

는 반복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약 40여 년만인 1966년에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미국 사회의 문화적 코드에 맞게 완성한 바 있다. 그 후 미국을 비롯한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인종/민족 집단 간 편견과 사회통합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유입되고 사회조사가 발전하면서, 인종적 편견, 다문화주의, 국가정체성 등의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 척도가 쓰이고 있다.

[그림 XI-25]는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인의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2008년과 2018년 두 시기 모두 한국인이 가장 멀게 생각하는 집단은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이다. 그 다음으로 대만인, 일본인, 유럽인, 북미인의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인, 그리고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많이 보내는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등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에 대해 덜 수용적이다.

반면 한국인의 인식에서 선진국 백인의 이미지로 자리 잡은 미국인과 유럽인에 대해서는 매우 수용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과 비교해 2018년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졌으나, 유독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오히려 높아졌거나 그대로라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 일본과 안보와 역사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일본의 일본군 성노예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한국인의 뇌리에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백인이 주류인 국가 국민에 대한 호감은 변함없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인이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출신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와의 역사, 정치, 안보, 경제적 갈등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림 XI-25]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08,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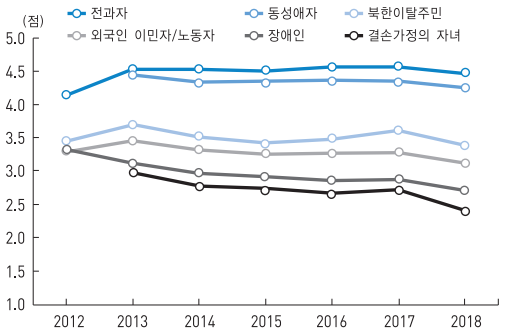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동료', '동네 이웃', '친척' 등으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8, 2018.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자. 먼저 [그림 XI-26]은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한국인이 한국 사회 내 소수집단 각각을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준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전과자 등보다 낮고 결손가정의 자녀와 장애인보다는 높다.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반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장애인, 결손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림 XI-26]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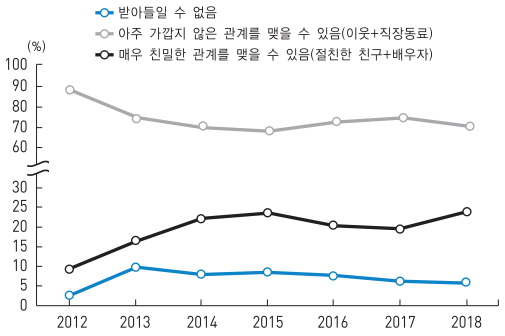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소수집단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1점,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2점,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3점,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4점, '받아들일 수 없음'에 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2012년의 경우 '동성애자'와 '결손가정의 자녀'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화만을 살펴보면, 소수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그림 XI-27]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외국인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지난 6년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약간 증가했다. 이웃과 직장동료처럼 생활공간을 공유하지만 아주 가깝지는 않은 관계를 맺어도 좋다는 답변의 비율은 2012년에 88.1%, 2013년에 74.1%, 2014년에 70.2%, 2015년에 68.2%, 2016년에 72.2%, 2017년에 74.4%, 2018년에 70.4%로 완만하게 하락해 왔다. 반면 절친한 친구가 되거나 배우자와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의 비율은 2012년 9.2%에서 2018년 23.9%로 대폭 증가했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와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거리감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극화(polarization)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에 2.7%에 불과했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반감의 비율이 10% 가까이 높아졌다가 증감을 반복하며 5.8%인 것과 반대로,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1.1%에서 3.9%로 증가한 긍정적 방향의 태도 변화 또한 존재한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강한 호감의 범위를 가까운 친구라는 관계까지 확장하면 그 호감의 증가는 대폭 커진다. 따라서 한국인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어느 한 방향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호감을 상징하는 절친한 친구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의 증가폭이 극단적 반감의 표현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조심스럽게나마 한국인의 외

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XI-27]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인식,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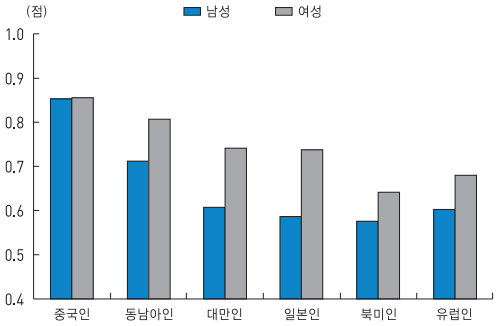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 '나의 이웃이 되는 것',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5개 응답범주로 조사되었음.
3) '아주 가깝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나의 이웃이 되는 것'과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을 합한 응답률이고,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과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누가 더 가까워졌나: 사회계층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각자의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절에서는 한국인의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등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국가 국민 및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초입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인종/민족 집단을 누가 더 잘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XI-28]은 성별에 따른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모든 대상 집단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국가 출신 사람들에 대해 덜 수용적이다. 특히 일본인과 대만인에 대해 여성의 사회적 거리감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림 XI-28] 성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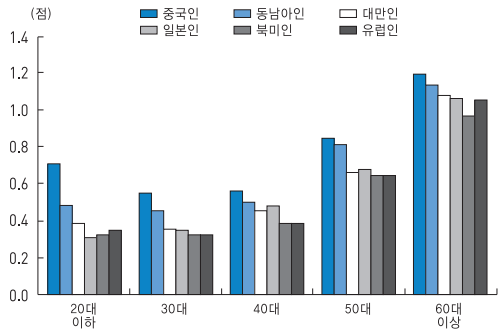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동료', '동네 이웃', '친척' 등으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8.

[그림 XI-29]는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대체로 한국인의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낮다. 물론 20대 이하에서 일반적 경향과 다른 흐름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연령대에서는 중국인에 대해 심한 배

타성이 나타나며, 일본인, 북미인, 유럽인에 대한 강한 호감이 드러난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대에 의해 더 두드러지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결과를 다른 견지에서 보면, 20대에서는 대상 집단 출신국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다. 20대 외에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도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거리감과 유럽인과 미국인에 대한 강한 호감이 보이지만, 출신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20대만큼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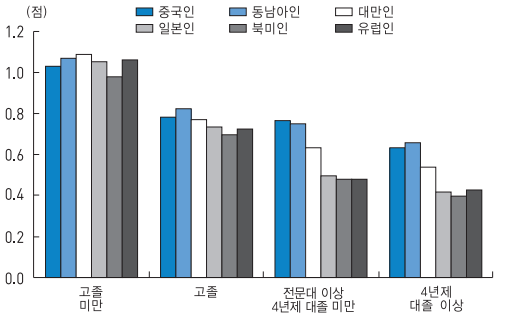
[그림 XI-29] 연령집단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동료', '동네 이웃', '친척' 등으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8.

[그림 XI-30]은 교육수준에 따른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보여준다. 모든 대상 집단들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호의적인 태도를, 낮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 유럽인,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교육수준별 차이는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대만인에 대해서보다 월등히 크다. 일본인, 유럽인, 미국인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이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그림 XI-30] 교육수준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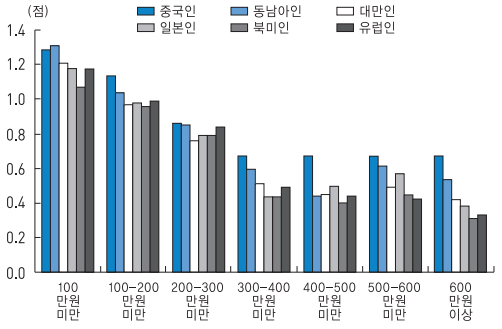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동료', '동네 이웃', '친척' 등으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8.

소득수준에 따른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 비슷하다(그림 XI-3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대만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일본인, 미국인, 유럽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 즉, 소득수

준이 높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외국인이 부유한 국가이건 가난한 국가이건 관계없이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림 XI-31] 소득수준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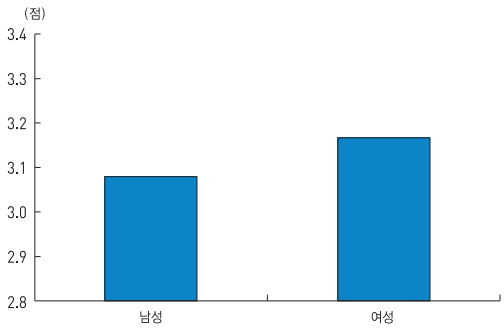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동료', '동네 이웃', '친척' 등으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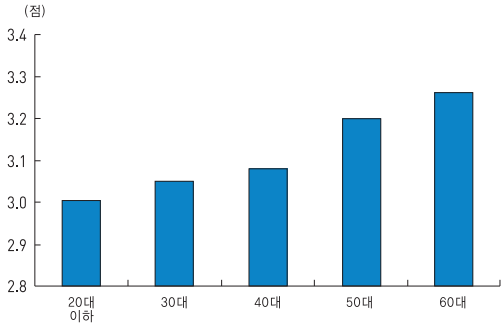
이제 한국인이 가진 한국 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자. [그림 XI-32]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은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멀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위에서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 일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별, 연령별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XI-32] 성 및 연령집단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1) 성별



2)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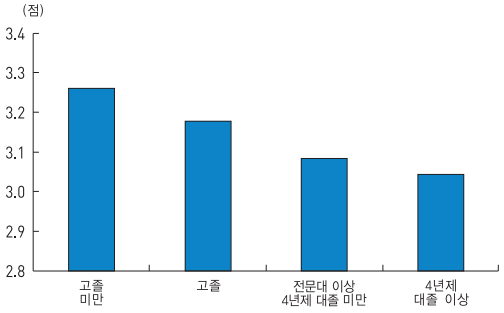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들을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1점,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2점,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3점,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4점, '받아들일 수 없음'에 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그림 XI-33]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더 가깝게 느낀다. 특히 4년제 대졸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사회적 거리감이 발견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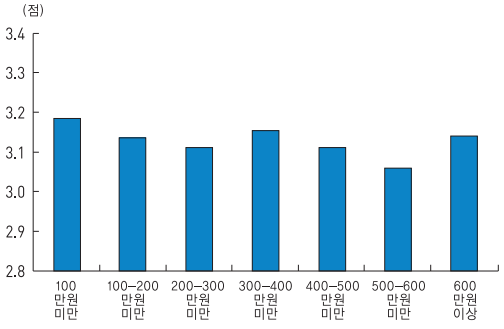
떤 확고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과 매우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낮은 수용성이 존재하는 결과는 흥미롭다. 즉,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들과 6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해 가장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그림 XI-33] 교육 및 소득수준별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8

1) 교육수준별



2) 소득수준별



주: 1) 전국 만 19-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들을 어느 정도의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1점,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2점,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에 3점, '나의 이웃이 되는 것'에 4점, '받아들일 수 없음'에 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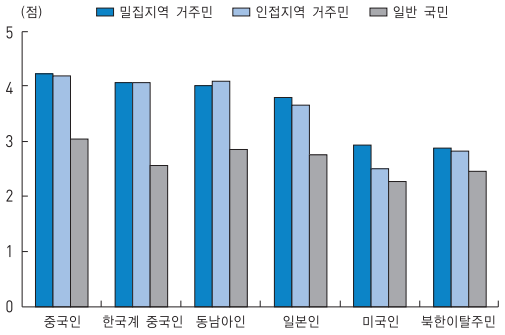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18.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도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은 사회적 거리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접촉이 증가할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어 편견이 감소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리란 기대에 기초한다. 사회심리학은 이 기대를 '접촉가설'로 이론화되고 검증해 왔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 검증결과는 대체로 이 접촉가설을 지지한다. 즉, 다른 집단(외국인/이주민)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함께 지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고 가깝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와 실험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하지만 [그림 XI-34]는 이러한 기대와 주장이 한국인과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한국에서 외국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실제로 일상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및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자주 접했을 사람들, 그들과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장 멀게 느낀다. 특히 이들이 주로 만나고 같이 생활했을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

사실 접촉가설도 단순히 접촉만으로 인종/민족 집단 간 편견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그림 XI-34]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내 내국인의 이주민/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0, 2015.



주: 1) 분석대상은 서울 서남권, 시흥시 및 안산시 등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내국인임.
2)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과 '인접지역'은 행정안전부의 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의 동지역 수준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상위 13개 동을 '밀집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2개 동을 '인접지역'으로 구분하였음.
3)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 되는 것', '내 직장동료가 되는 것',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7가지 항목에 각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면 0점, 받아들일 수 없다면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일반 국민(전국 만 18세 이상) 자료의 경우 준거집단으로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2010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조사」, 원자료, 2015.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10.

점을 강조한다. 접촉가설에 따르면, 상호 이해와 호감의 상승은 접촉의 맥락이 매우 중요한데, 접촉 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위계적인지 아닌지), 집단 간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지, 또는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이 접촉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교훈은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이 다른 지역에 사는 한국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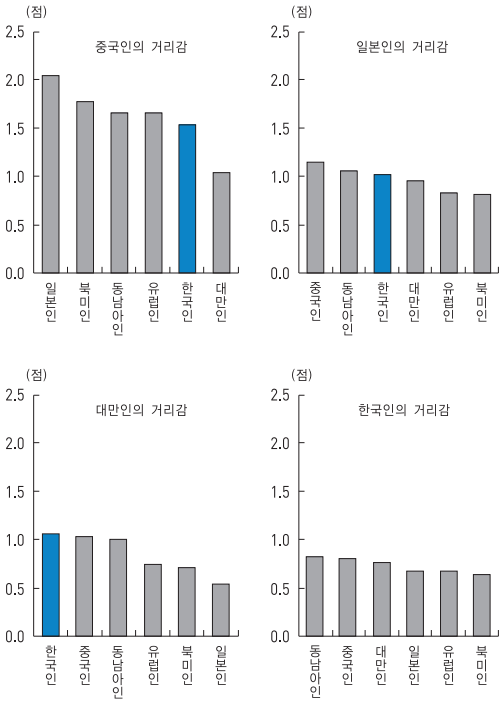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나

지금까지는 한국인이 다른 국가 국민과 한국사회 내 이주민과 외국인을 얼마나 멀게 또는 가깝게 느끼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반대로 다른 국가 국민과 이주민이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가깝게 또는 멀게 느끼는가를 살펴보자.

[그림 XI-35]는 2008년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n Social Survey)」에서 드러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 국민의 상호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먼저 중국인은 대만인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한국인을 그 다음으로 가깝게 인식한다. 중국인이 가장 멀게 생각하는 대상은 일본인이다. 일본인도 중국인을 가장 멀게 느낀다. 일본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대상은 대만인이다. 마찬가지로 대만인도 일본인에 대해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대만인은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인의 이들 세 나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대상 국가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림 XI-36]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한족)의 한국 사회 내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준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은 조선족을 가장 친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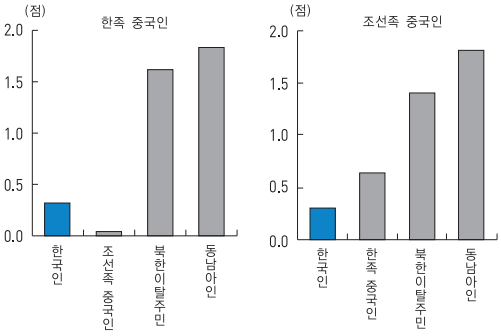
[그림 XI-35]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08



주: 1) 각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을 '직장동료', '동네 이웃', '친척' 등으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East Asian Social Survey Data Archive(EASSDA), *East Asian Social Survey, 2008: Culture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2011, (http://www.eassda.org).

[그림 XI-36]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중국 출신 이주민의 국내 인종/민족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6



주: 1)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일대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함.
2)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해당 인종/민족 집단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 직장동료가 되는 것', '내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3가지 항목에 각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면 0점, 받아들일 수 없다면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한 점수임.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출처: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 조사, 2016」, 원자료, 2016.

느끼며, 한국인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멀게 느낀다. 반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중국 한족이 아닌 한국인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 조선족은 한족 중국인, 북한이탈주민, 동남아시아인 순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밀집지역 내 한족은 조선족에 대해, 조선족은 한국인에 대해 가장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족의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낮다.

맺음말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들이 한 사회에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며 이조차도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이주민과의 갈등을 일찍이 경험한 서구 사회들에서조차 아직도 인종 갈등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분석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과 타 인종/민족 집단 간 관계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감 그 자체로 인종/민족 집단 간 관계가 왜 좋거나 나쁜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이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 사회통합의 연구와 정책의 영역에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 사회통합(또는 갈등)의 원인과 대책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의 설계를 시작해야 할 때다.

2019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19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I 인구

고령화지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고령(65세 이상) 인구임.

$$\text{고령화지수}(\%)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유소년인구(0–14세)}} \times 100$$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임.

노년구성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생산연령인구(15–64세)}} \times 100$$

대체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임. 이 수치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보고서에 따른 것임.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아수임.

유배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인구절벽: 넓게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속히 감소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좁게는 소비의 주요 연령대인 40대 중후반 인구가 감소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함.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이혼 가능 연령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text{일반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이혼가능연령인구(16세이상)}} \times 1{,}000$$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임.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학령인구: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 인구를 의미함. 보통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21세 인구를 지칭하는데 각급 학령인구를 모두 합한 수를 전체

학령인구(6–21세)라 함.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ASFR)_i}{1{,}000}$$

Ⅱ 가족과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친척)임.

1인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임.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임.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임.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자(남자)가구주 비율} = \frac{\text{여자(남자)가구주 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0$$

기러기가족: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임.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비혈연 가구: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임.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임.

유배우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 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 가구원수}}{\text{총 일반가구수}}$$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임.

혈연가구: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임.

Ⅲ 건강

1차 보건의료: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기본적 의료를 말함. 최근에는 1차적인 접촉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함.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 문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

걷기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 수치.

국민의료비: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비용.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장치를 사용해 연초를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허혈성심장질환: 일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음.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함.

Ⅳ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임.

다문화가정: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을 말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①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함.

다문화가정 학생: 국제결혼가정 학생(중도입국 학생 포함)과 외국인가정 학생.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방과후학교: 2006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함.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서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대로 졸업시키는 제도임.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수목적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 · 농수산 · 해양 · 과학 · 외국어 · 예술 · 체육 · 국제 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이란 학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공부의 실패나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압력에 대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에 높은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학교 내 규범을 성실히 따르는 능력을 의미함.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의 일환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임.

V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불안(질병, 사고, 실직 등)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한 국가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소정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 위험 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 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함.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중위임금: 근로자를 임금수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정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

초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함.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플랫폼 노동자: 앱이나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를 맡기면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함.

Ⅵ 소득과 소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이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뉨.

국민연금: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구입이 아닌 지출을 말함.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임.

소비지출: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 경제적 불평등(소득 불균형)을

계수화 한 것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 · 적금이자, 주식배당금,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출함.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음.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Ⅶ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 문화시설로 구분됨.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조사대상 인구 중 한 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임.

스마트미디어: 미디어와 ICT 인프라가 결합해 시공간이나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 중인 매체를 뜻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 미디어, 소셜 미디어 등을 말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여가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그리고 노동 관련 이동시간) 그리고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섭식, 위생 및 치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함.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희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 문화여가생활 지출을 말함.

OTT(Over The Top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 영화 ·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Ⅷ 주거와 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보증부월세: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월세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

보편적 이동권: 사회구성원 누구나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복지택시(바우처택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영업용 콜택시.

사글세: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평균통근시간 :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Ⅸ 환경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노케미족: 화학물질(Chemical)을 거부(No)한다는 의미의 노케미(No-Chemi)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족(族)이 합해져 만들어진 신조어로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되도록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임.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임.

아황산가스(SO_2):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함.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임.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됨.

질소산화물(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황산화물(SOx):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 · 도료 · 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 속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 B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kcal임.

X 안전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살인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함.

인적 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로 시설물이나 기계기구의 비정상적 작동, 인간에 의한 오작동, 화학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임.

특별법: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

폭력범죄: 협박 · 폭행 · 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됨.

XI 사회통합

대인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 일반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 부패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수로 0–10점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을 의미함.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함.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친밀감 혹은 장벽을 물리적 거리처럼 개념화한 것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된 행동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선거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임.

* 선거인: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주관적 웰빙: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2014	계봉오/김두섭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2014	이희연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2014	전광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2015	계봉오/김두섭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2015	김주현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2016	변미리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16	최율/김두섭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2017	김근태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2017	유정균/김두섭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2018	유정균/김두섭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2018	정경희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경혜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색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2014	한경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2014	한경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14	홍승아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2015	한경혜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2015	정경희
	가족가치관의 변화	2016	한경혜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2016	성미애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2017	한경혜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2017	진미정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2018	차승은/한경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8	손승영
건 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건 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흡연율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2014	조홍준
	의약품 사용양상	2014	변진옥
	사회자본과 건강	2014	조병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5	조병희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2015	조영태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2016	조병희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2016	조성현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2017	신동천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2017	조병희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2018	조병희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2018	이윤경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헌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교 육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2014	김경근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2014	황여정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2015	김성식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2015	채창균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2015	황여정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6	김경근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2016	황여정
	대학교육의 성과	2017	김경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2017	황여정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2018	김경근
	중 · 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2018	황여정
노 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노 동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권현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근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2014	김영옥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2014	권혜자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2015	권현지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2015	권혜자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2016	전병유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2016	권현지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2017	장지연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2017	권현지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2018	권현지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8	정흥준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정수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2014	홍기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2014	홍석철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15	유경원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2015	이정민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2016	유경원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6	문성만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2017	김기호/박정수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2017	유승동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8	박정수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8	송헌재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샛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서우석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샛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2014	이훈/박정숙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2014	심미선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2015	서우석
	여가활동의 동반자	2015	윤소영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2016	차승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2016	배 영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2017	전인식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2017	서우석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2018	서우석/이주현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2018	김 진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장수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주거와 교통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전월세 시장의 변화	2014	정의철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2014	박천규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2014	김회경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2015	전상인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2015	장수은/정동재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2016	이영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2016	장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2017	이영성/유현지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2017	장수은/한상진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2018	김준형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2018	장수은/한상진
환 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종호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환 경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미세먼지와 건강	2014	권호장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2014	박창석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2015	김종호/추장민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2015	신상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2016	이미숙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2016	공성용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2017	신용승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2017	조영탁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2018	이희선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2018	김성길/박준건/박미옥
안 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강은영/박두용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안 전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2014	김지선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2014	정지범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2015	민수홍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	설재훈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2016	박두용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2016	민수홍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2017	이희일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2017	강은영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2018	탁양주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2018	강은영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 준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노년층의 사회통합	2014	김지범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2014	박형민
	세대 간 격차의 수준	2015	한 준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2015	가상준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2016	김희삼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2016	김석호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2017	박원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	박 준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2018	한 준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2018	장미혜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둘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환석** (통계개발원 사무관) **최성은** (통계개발원 주무관)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최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교육연구실장) **이상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편집담당 연구원	**반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한아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허혜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간사	**김혜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원	**홍리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안솔비** (통계개발원) **김유정** (통계개발원)